

2024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해양수산부

2024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해양수산부

2024년도 해양수산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4.3.

해양수산부 혁신행정담당관 (☎ 044-200-5197, 6175)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555호

목 차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4년도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3
2. 2024년도 정책 추진방향	8
II.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1
1. 해양수산부 일반 현황	13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6
III. 세부 추진계획	21
전략목표 I.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물류강국으로 도약한다.	23
전략목표 II.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해양·항만을 조성한다.	101
전략목표 III.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행복을 키우는 해양공간을 구축한다.	141
전략목표 IV.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활력넘치는 어촌을 조성한다.	231
IV. 협업과제	325
V. 환류 등 관련계획	341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343
2. 평가결과 환류체계	346
【붙임】	
1-1. 성과지표 현황	349
1-2. 관리과제와 국정과제·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362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4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가. 해운·항만 분야

- (해상운송능력 확대) 해양진흥공사 설립('18.7) 이후 총 131개 선사에게 10조원 지원 → '23년 국가해상운송능력 1억톤 진입
 - * ('18) 79백만 DWT → ('20) 89백만 → ('22) 99백만 → ('23) 105백만
- (원양선복량) 한진해운 파산 사태('16) 이후 급감한 국적 원양선사 (2개사)의 수송능력은 한진사태 이전수준을 넘어 1124만 TEU 달성
 - * ('15) 101.3만 TEU → ('17, 한진사태 직후) 41.6만 → ('23.9) 112.4만(신조발주 포함)
 - ** HMM 초대형선 20척('20~'21), 13K 대형선 12척('23.10) 신조 추진
- (연안해운) 국가보조항로(29개) 운영, 민간선사 운항결손 지원('18~) 및 소외도서 항로 지원('23~)* 섬 주민 여객·차량 운임보조 확대** 등 항로단절을 방지
 - * 준공영제 확대('18년 3개 → '24년 12개) 소외도서 항로 지원('23년 10개)
 - ** 섬 주민 대상 여객·차량 운임의 최대 50% 보조
- (해운인력) 외항선원 비과세 한도 확대(3→5백만원), 선내 괴롭힘 방지 제도 마련, 선원 최저임금 인상* 등 선원의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확대
 - * ('18) 198만원 → ('19) 215 → ('20) 221 → ('21) 225 → ('22) 248 → ('23) 256
- (항만경쟁력) 부산항을 세계 2위 환적 허브항만('23년 2,315만TEU 중 환적물량 54%), 광양항을 세계 11위 종합항만('22년 2억 4,060만톤)으로 육성
 - 친환경연료 공급망 구축을 통한 녹색항로지원, 신시장 개척기반 마련
- (스마트물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20~'25), 스마트물류센터 2개소 건립(부산항·인천항) 등 스마트 해운물류 전환 착수
 - * '25년까지 IMO level 3(선원없이 원격제어), '30년까지 level 4(완전자율) 수준 개발

나. 해양 분야

- (창업·투자) 해양수산 기업 성장 전주기별 지원체계 완비, 민간 투자 생태 기반 조성, 창업투자 지원 전담기관 운영
 - 해양수산 기업에 집중 투자(의무비율 60%)하는 정책펀드를 지속 조성*하여 '23년 해양자펀드 규모 1,236억원 달성
 - * 자펀드 규모(억원) : ('19) 295 → ('20) 298 → ('21) 143 → ('22) 300 → ('23) 200
- (원천기술) 국내 그린수소 생산량 목표 10%(12만톤) 생산이 가능한 기술 확보('23.8), 전기추진차도선 개발('23.3)
 -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하고(총 9,339종), 해양바이오뱅크 구축·운영*을 통해 유용 바이오소재 1만 9천여건 발굴 및 제공
 - * 화장품, 항생제 소재 뱅크 등 6개 뱅크 운영, 소재 분양 총 1,351건('18~'23)
- (R&D)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 대외 환경변화 속에서 정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을 수립, 투자 정비
 - 세계수준 전략기술 확보('27, 5개), 기술 창업기업 확대('21. 135개 → '27. 300), R&D 분야 핵심인재 1만명 양성 전략 마련·추진
- (해양관광) 크루즈 입항 중단('20.2) 이후 신속한 입항 재개, 외국관광객 27여만명* 방한, '18년 이후 최대실적 달성
 - * 크루즈선박 외국인 관광객(만명): ('18) 20.2 → ('19) 26.7 → ('20~'22)실적없음 → ('23) 27
 - 해양치유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해양치유센터 조성 중,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국내 최초 개관*('23.11)
- (해양문화)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해양문화 시설 구축*으로, 해양문화체험기회 확대 및 지역활력 도모
 - * ('22) 2개소(부산·울진) → ('24) 3개소(+인천) → ('25) 4개소(+청주)
 - 해양교육 전담기관 지정·운영 및 해양박물관 사회공헌 확대 등을 통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문화 향유기회 다변화
- (해양영토) 무인도서법 일부개정('23.8)*, 영해기점 도서 관리유형 변경**, 해양과학기지 구축 설계('23.7)*** 등 해양영토 관리기반 강화
 - * (준보전·이용가능) 공공시설물 설치 허용, (이용가능) 토지소유자 시설물 설치 허용 등
 - ** 영해기준점 표지 설치가 완료된 17개 도서 관리유형 변경(개발가능→절대보전)
 - *** (추가) 동해 울진 왕돌초 과학기지, (기존운영) 웅진 소청초, 신안 가거초, 이어도

다. 수산·어촌 분야

- (방사능검사) 전년(5,441건) 대비 2배 이상인 12,012건 검사 결과 부적합 없음, 검사장비 지원·확충으로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 검사(건): ⁽²¹⁾3,498 → ⁽²²⁾5,441 → ⁽²³⁾12,012 / 장비(대) : ⁽²¹⁾17 → ⁽²²⁾29 → ⁽²³⁾54
- (소비활성화) 과거 오염수 유출 인정(^(13.7)) 시 수산물 소비가 최대 22.1%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소비 위축 신호 없음
- (물가안정) 물가안정책임관(차관) 지정 및 물가안전대응반 운영, 정부 비축예산* 확대 및 적기 방출 등으로 물가 안정** 도모
 * 정부비축예산(억원) : ⁽²²⁾1,081 → ⁽²³⁾1,750 → ⁽²⁴⁾2,065
 ** 수산물 CPI(전년비, %) : ^(23.2.)8.2 → ^(23.4)6.2 → ^(23.6)6.1 → ^(23.9)3.5 → ^(23.11)2.1 → ^(23.12)1.8
- (어업선진화) 어획량 중심으로 수산자원 관리는 강화하되 복잡하고 중복된 규제는 간소화·완화하는 ‘어업 선진화 추진 방안’ 마련(^(23.9))
- (조업질서강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국회 제출(^(23.12))
 * 어선위치·어획·양륙보고, 한국형 어획증명제 도입 등
- (첨단양식산업) ‘제5차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24~28))(^(23.12)), ‘양식산업 전략품목 육성방안’(^(23.12)) 등 수립
- (수산공익직불금) 소규모어가 약 2.0만호(전체 어가의 44%)와 어선원 약 7천명을 대상으로 수산공익직불금 신규 지급(연 120만원)
- (경영안정 지원) 동해 오징어 업계 지원방안* 발표(민·당·정 협의회, ^(23.12))
 * (단기)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담보력 보강, 정책자금 무이자 전환 및 상환 유예, 수산 자원보호직불금 지급기준 완화, 어선원 보험료 납부 유예 / (중기) 감척, 해외어장 개척 등
- (어촌신활력) 어촌 300개소에 총 3조원을 투입하여 경제·정주·안전을 개선하는 ‘어촌신활력증진’을 65개 어촌을 시작으로 본격 착수
- (어촌관광 활성화) 어촌휴가 캠페인, 어촌마을 ‘위케이션’ 등 시행으로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객 수가 전년 대비 17.9% 증가

라. 해양환경 · 안전 분야

-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 감시·예측법」 제정('23.10) 및 기후 전담조직 설립 등 해양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기반 확보
 - 2050 해양수산 탄소 네거티브 달성을 위한 '블루카본 추진 전략'을 수립('23.5)하고, 갯벌·식생 복원사업 지속 확대
- (수질오염 대응) 해양방사능 조사정점을 대폭 확대(52→127)하고, 감시해역도 공해로 확대하여 빈틈없는 감시체계 구축
- (해양이용 영향평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23.12)으로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규제 합리화 등 평가 제도 재정립
 - 해양이용영향평가제도 전면 개편을 위한 해양이용영향평가팀 신설('23.1) 및 전문 검토기관(수과원) 인력 보강
- (해양쓰레기 저감) 해양쓰레기 순발생량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해양폐기물 저감 혁신대책」을 수립('23.4)·이행하고,
 - * 어구보증금제 시범운영('23.6), 해양폐기물 정화운반선 7척 신규 취항(전남, 전북, 경남, 경북, 인천 등),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개최('23.12) 등
 - 하천쓰레기의 해양 유입 저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적기 수거를 위한 「하천폐기물 해양유입 저감대책」 마련('23.12)
- (해양생태계 보전) 행위제한 등 그간의 규제적 보호 정책에서 벗어나 생태체험·관광 등과 연계한 수용성 높은 정책*으로 전환
 - *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추진(가로림만, 호미반도 등)
 - 전국 5개 지자체에 걸친 '한국의 갯벌'* 통합관리를 위한 세계유산 보전원 건립(전남 신안) 및 바닷새 모니터링 추진
 - * 한국의 갯벌 :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총 면적 1284.11km²)
 -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지속 확대* 및 갯벌(9개소), 식생(5개소) 복원사업 지속 추진
 - * 목표 : ('12) 18개소 360km² → ('32) 29개소 1,798.7km² / ('23) 사천 광포만, 제주 오조리 갯벌 총 2개소 신규 지정 / 누적 1,865.6km²

- (해사안전관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19.7),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제정('20) 등 촘촘한 안전정책* 추진으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전년(99명) 대비 5% 감소**('23년 94명)
 - * 최근 5년 인명피해('18~'22, 545명)는 종전 대비('13~'17, 931명) 41.5%(386명) 감소
-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통해 연안선박 대상으로 시행 중('21.1~)인 바다내비 서비스(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등) 이용자 증가* 추세
 - * 단말기·앱 사용 선박 2.4만여척으로 증가('21.1월, 720척 → '23.12월, 2.5만척)

2. 2024년도 정책 추진방향

□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 구축

- 저탄소·무탄소선박 기술을 개발·상용화하고, 공공·민간부문 친환경선박 보급을 확대하여 선도적인 해운부문 탄소중립 실현
- 연안해역 교통환경 변화대비, 실시간 모니터링, 빅데이터 기반 기상·안전 정보 분석·제공 등 디지털 해상교통관리체계 구축
- 민간과 공공부문이 함께 해운산업의 친환경·ESG 전환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과 스마트항만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혁신 선도
-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등 해운산업의 저시황기 극복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입 공급망 구축
- 해운분야 친환경·탈탄소화 전략을 추진하고,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촉진하는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환

□ 지속가능한 수산업, 돌아오는 연안·어촌 구현

- 어촌 생활공간을 혁신하고,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해 일자리·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어촌에 새로운 활력 창출
-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하도록 하고, 안전사고, 기후 재해 피해 등으로 인한 어업인 불안감 해소
- 수산식품산업, 어선어업,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및 스마트·친환경 전환 추진
- 지역별 항만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연안지역의 활력 제고

□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 조성

- 해양 기후변화 대응체계 정비, 탄소배출 저감 및 탄소흡수원 적극 발굴을 통해 2050년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 해양폐기물 ‘예방-수거-처리-재활용’의 전주기 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해양쓰레기 저감 범국민 캠페인 및 국제협력 공고화
- 공유수면의 공유재로서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실수요 및 정책여건에 맞게 제도의 합리화·유연화 추진
 - 해양 개발사업의 다양화·대형화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공간·환경관리 분야 정보 지원체계 고도화 추진
- 어선사고 저감, 연안·항만의 안전관리 강화, 촘촘한 해양방사능 유입 감시체계로 해양수산 전분야 안전관리 강화 추진

□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 해양산업의 디지털·스마트 전환을 위한 R&D 및 정책펀드 확대, 해양 바이오 등 유망 신산업 육성 제도지원 등 과학기술·신산업 역량 제고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등을 통한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확대 및 연안지역 경제 활력 제공

□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를 위한 대외정책 추진

- (ODA 확대) 기후변화 등 글로벌 가치실현에 기여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ODA 사업 대폭 확대
- (국제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22.12)에 따라 미국·일본·태평양도서국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추진
- (협상 대응강화) WTO, FTA 등 수산통상협상 및 지역수산기구 규범 협상 등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전문가 역량을 강화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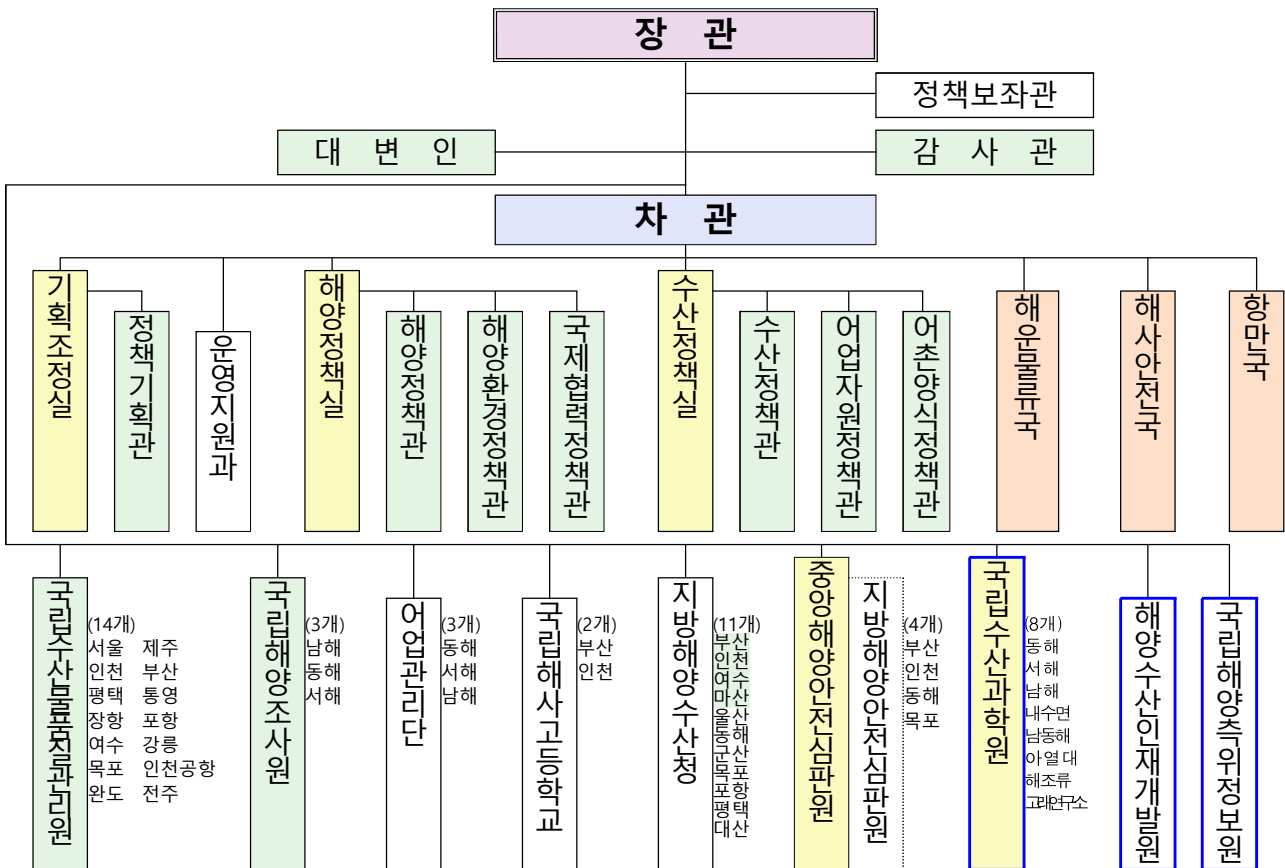
1. 해양수산부 일반 현황

(1) 조직

◆ (본부) 1차관 3실 3국 9관 (51과 6팀, 자율기구 포함)

◆ (소속) 68개 (1차 22개, 2차 41개, 3차 5개)

* **책임운영기관** : 3개(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2) 인원

(단위 : 명, 운영정원 기준)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9급	연구직		교원직	전문직
										연구관	연구사		
합 계	4,281	2	2	39	17	82	77	457	3,122	99	265	111	8
본 부	621	2	2	15	13	37	55	219	272	2	2	-	2
소속기관	2,953	-	-	17	3	41	20	212	2,481	8	54	111	6
책임기관	707	-	-	7	1	4	2	26	369	89	209	-	-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3	'24	'25	'26	'27
□ 재정사업 합계					
○ 총지출	64,333	66,879	90,878	90,258	90,772
(전년대비증가율, %)		(4.0)	(35.9)	(△0.7)	(0.6)
○ 총계	79,643	82,905	114,791	120,173	113,515
(전년대비증가율, %)		(4.1)	(38.5)	(4.7)	(△5.5)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3,551	3,635	3,890	4,162	4,453
(전년대비증가율, %)		(2.4)	(7.0)	(7.0)	(7.0)
○ 기본경비	450	434	447	460	474
(전년대비증가율, %)		(△3.6)	(3.0)	(2.9)	(3.0)
○ 주요사업비	60,332	62,809	86,542	90,636	85,845
(전년대비증가율, %)		(4.1)	(37.8)	(4.7)	(△5.3)
□ 예산					
○ (총)지출	64,333	66,879	90,878	90,258	90,772
(전년대비증가율, %)		(4.0)	(35.9)	(△0.7)	(0.6)
○ 총계	79,643	82,905	114,791	120,173	113,515
(전년대비증가율, %)		(4.1)	(38.5)	(4.7)	(△5.5)
【일반회계】					
○ (총)지출	21,848	18,778	27,522	29,557	27,597
(전년대비증가율, %)		(△14.1)	(46.6)	(7.4)	(△6.6)
○ 총계	35,503	34,471	48,972	52,529	49,169
(전년대비증가율, %)		(△2.9)	(42.1)	(7.3)	(△6.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총)지출	14,553	16,799	22,637	21,851	20,947
(전년대비증가율, %)		(15.4)	(34.8)	(△3.5)	(△4.1)
○ 총계	14,553	16,799	22,637	21,851	20,947
(전년대비증가율, %)		(15.4)	(34.8)	(△3.5)	(△4.1)
【교통시설특별회계】					
○ (총)지출	15,888	17,531	22,600	24,157	22,792
(전년대비증가율, %)		(10.3)	(28.9)	(6.9)	(△5.7)
○ 총계	15,888	17,531	22,600	24,157	22,792
(전년대비증가율, %)		(10.3)	(28.9)	(6.9)	(△5.7)

구 분	'23	'24	'25	'26	'2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총)지출	663	633	1,289	1,886	1,968
(전년대비증가율, %)		(△4.5)	(103.6)	(46.3)	(4.3)
○ 총계	663	633	1,289	1,886	1,968
(전년대비증가율, %)		(△4.5)	(103.6)	(46.3)	(4.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총)지출	4,681	5,038	7,651	9,257	8,882
(전년대비증가율, %)		(7.6)	(51.9)	(21.0)	(△4.1)
○ 총계	4,681	5,038	7,651	9,257	8,882
(전년대비증가율, %)		(7.6)	(51.9)	(21.0)	(△4.1)
□ 기금					
○ (총)지출	6,699	8,100	9,179	8,551	8,585
(전년대비증가율, %)		(20.9)	(13.3)	(△6.8)	(0.4)
○ 총계	8,354	8,434	11,641	10,493	9,756
(전년대비증가율, %)		(1.0)	(38.0)	(△9.9)	(△7.0)
【수산발전기금】					
○ (총)지출	6,699	8,100	9,179	8,551	8,585
(전년대비증가율, %)		(20.9)	(13.3)	(△6.8)	(0.4)
○ 총계	8,354	8,434	11,641	10,493	9,756
(전년대비증가율, %)		(1.0)	(38.0)	(△9.9)	(△7.0)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 ☐ '2022 ~ 2026년 성과관리 전략계획'('22.8)을 토대로 2024년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시행계획을 마련
- ☐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따라 4대 전략목표, 15대 성과목표 설정
 - (해운물류강국 도약) 해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입물류 활성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규제개선,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제공 및 신산업 육성, 양질의 국적선원 공급 및 두터운 선원복지 제공 등을 관리과제로 선정
 - (안전·친화적인 해양·항만 조성) 부산항 북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비 등을 위한 안전항만 구축 추진, 해양수산 재난관리체계 선진화 등을 관리과제로 선정
 - (경제활력·국민행복 해양공간 구축)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해양관광 명소 조성 및 콘텐츠 확산, 해양쓰레기 전주기 대응, 개발과 보전의 상생 및 공존을 위한 해양공간관리 체계화 등을 관리과제로 선정
 - (경쟁력 있는 수산업 및 활력 넘치는 어촌) 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기반 확보, 수산자원 조성 및 자원관리체계 고도화, 첨단 친환경 양식 산업 육성,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등을 관리과제로 선정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임무

해양영토(44만km², 육상면적의 4.4배)의 **보전·이용·개발**을 통해 해양산업을 진흥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통합 해양행정 구현**

비전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

전략목표 · 성과목표

전략 목표		성과 목표
I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 물류강국으로 도약한다.	1. 국적 선대 확충 및 선화주 상생을 통해 안정적인 해상 수송망을 구축한다. 2.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물류서비스 고도화하고 항만 경쟁력을 제고한다. 3.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시장을 주도한다. 4.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해상물류인력을 양성한다.
II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해양항만을 조성한다.	1. 연안·항만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2. 재해·기후위기에 안전한 연안·항만을 조성한다. 3. 해상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III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행복을 키우는 해양공간을 구축한다.	1. 해양 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여 해양선도경제를 조성한다. 2. 국민 행복을 위해 해양레저관광·해양문화 강국으로 도약한다. 3.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경제영토 확장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4. 해양환경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및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이용 기반을 마련한다.
IV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활력넘치는 어촌을 조성한다.	1.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 2.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어업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3. 친환경·스마트양식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생산 환경을 조성한다. 4. 신선수산물 유통·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5	15	15	50	94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전략목표 I.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물류강국으로 도약한다.		
1. 국적 선대 확충 및 선화주 상생을 통해 안정적인 해상 수송망을 구축한다.		
	①[민생]해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입물류 활성화	국정 40-1,2
2.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물류서비스 고도화하고 항만경쟁력을 제고한다.		
	①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규제개선	국정 40-4
	②[민생]물류거점 항만개발과 스마트항만 구축으로 항만경쟁력 강화	국정 40-3
	③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항만 실현	국정 40-3
	④[민생]항만 물류서비스 경쟁력 강화	국정 40-2
	⑤[민생]민간참여를 통한 항만 고부가가치 창출 및 해외협력 기반 마련	국정 40-3
	⑥항만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항만운영의 안정성 확보	국정 40-4
	⑦선진형 항만안전 및 항만보안시스템 구축	
3.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시장을 주도한다.		
	①디지털 해상교통정보(바다내비) 제공 및 신산업 육성	국정 40-4
	②차세대 해양 위치정보(PNT) 및 디지털 위치정보 제공	국정 40-4
	③그린 SHIPPING(Green Shipping) 생태계 기반 확충	국정 40-4
4.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해상물류인력을 양성한다.		
	①양질의 국적선원 공급 및 두터운 선원복지 제공	국정 40-5
전략목표 II.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해양·항만을 조성한다.		
1. 연안·항만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①[민생]항만 및 연안공간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조성	국정 41-5
	②[민생]부산항 북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정 102-3
2. 재해·기후위기에 안전한 연안·항만을 조성한다.		
	①기후변화 대비 등을 위한 안전항만 구축 추진	국정 41-5
3. 해상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①국가 해양수산 재난관리체계 선진화	업무 3-2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②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범정부 해사안전대책 시행	국정 40-4
	③연근해어선 안전관리 체계화	국정 41-7
전략목표 Ⅲ.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행복을 키우는 해양공간을 구축한다.		
1. 해양 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여 해양선도경제를 조성한다.		
	①해양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	국정 41-1, 73-6
	②해양신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한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국정 73-6
	③해양산업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국정 73-6
2. 국민 행복을 위해 해양레저관광·해양문화 강국으로 도약한다.		
	①권역별 해양관광명소 조성 및 해양관광 콘텐츠 확산	국정 73-7
	②해양교육문화 콘텐츠 확충 및 향유기회 확대	업무 6-3
3.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경제영토 확장 및 관리역량을 강화한다.		
	①독도 등 섬 관리강화 및 대국민 인식제고	국정 41-1
	②해양영토의 과학적 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	국정 41-1
	③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분야 통상협상 대응	
	④해양수산 ODA 확대 및 양자협력 증진	업무 7-1
	⑤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상력 강화	
4. 해양환경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및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이용기반을 마련한다.		
	①해양쓰레기 전(畵)주기 대응 및 보전개발이 조화로운 해양 관리 강화	국정 41-6,7
	②지속가능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해양환경안전망 구축	국정 41-6, 7, 73-3
	③개발과 보전의 상생 및 공존을 위한 해양공간관리 체계화	국정 41-6
	④해양자산 관리 강화 및 해양생태계 보전	국정 41-7
	⑤해양 기후변화 대응 강화	국정 41-7
전략목표 Ⅳ.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활력넘치는 어촌을 조성한다.		
1.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		
	①어촌·어항 개발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	국정 73-4
	②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기반 확보	국정 73-4
	③어업인의 생활·복지 지원 강화 및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	국정 73-4,5
	④수산업·어촌 공익증진과 연계한 어가 소득 기반 강화	국정 73-5
	⑤[민생]연안해운 공공성 및 안전관리 강화	국정 41-4
2.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어업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①수산자원조성 및 자원관리체계 고도화	국정 41-7, 73-1
	②어선어업 구조개선 추진	국정 41-7
	③[민생]어업 안전 보장 및 조업질서 유지 역량강화	국정 41-1, 73-1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④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국정 41-7
	⑤지속가능한 국제 수산물 공급 여건 조성	업무 7-1
3. 친환경·스마트양식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생산 환경을 조성한다.		
	①첨단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국정 73-1,5
	②고부가 양식품목 전략적 개발 육성 및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국정 73-1,5
	③지속가능한 양식산업 경쟁력 확충	국정 73-4
	④깨끗하고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기반 조성	국정 41-7
4. 신선수산물 유통·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①수산물 수급·물가위기 관리체계 구축 및 안심 유통환경 조성	국정 73-3
	②[민생]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국정 73-2
	③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정책 지원 강화	국정과제 73-5,6

Ⅲ.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I.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물류강국으로 도약한다.

1. 국적 선대 확충 및 선화주 상생을 통해 안정적인 해상 수송망을 구축한다.
2.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물류서비스 고도화하고 항만경쟁력을 제고한다.
3.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시장을 주도한다.
4.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해상물류인력을 양성한다.

기 본 방 향

◇ 배경·필요성(중요성)

-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해운산업은 국가 경제의 기간 산업으로 항만인프라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국적선사 육성 필요
- IMO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연료·비용규제 도입 등 국제해운의 탈탄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친환경선박 관련 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 표준 선점을 통한 국내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 연안해역 이용 증대 및 新 교통수단 도입 등 환경 다변화에 따라 공간 중심 디지털 해상교통관리체계(교통망) 구축으로 해양사고 예방 필요

◇ 그간의 성과

- 해운업 금융 지원체계 구축·고도화하고, 국적선사 선박신조 및 유동성 제공 등 지원 확대 및 친환경선박·설비 설치 지원으로 조선·해운 상생 도모
- 선화주 상생을 통한 수출애로 해소, 중소기업 등 대상으로 전용 선적 공간 제공 등으로 국가 수출입물류를 안정적으로 지원
-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이행, 선제적 기술표준 마련, 수소·전기 추진선 등 첨단기술 육성을 포함한 「국제해운 탈탄소 추진전략」을 수립·발표하여 으로 탄소중립 이행기틀 마련('23.2, 탄녹위)
- 첨단 해양모빌리티 개념을 세계최초로 정립·공론화('23.7, IMO 이사회), 관련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시장선점을 위한 범정부 대책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을 발표('23.11, 비경장회의)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기여

◇ 주요 내용

- 국적선박 발주량 확대, 해외물류기지 추가 확보로 수출기업에 안정적으로 선적공간을 제공하고, 국적선원 확충 및 선원 근로여건·복지 개선
- 자동화항만 도입 인프라 조성, 친환경·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 기반 구축
- 전국 연안에 유형별 해상 교통로 지정, 디지털 항해·통신장비 고도화 등을 통해 디지털 해상교통관리체계로 전환

◇ 임무와의 상관관계

- 해운재건을 통해 수출입 물류비용 절감, 규모의 경제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해운산업 및 지역경제 지원을 위해 항만인프라 적기 확충 추진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4	4	12	23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전략목표 I.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물류강국으로 도약한다.		① 원양 선박량(만TEU)
1. 국적 선대 확충 및 선화주 상생을 통해 안정적인 해상 수송망을 구축한다.		①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실적(백억원)
①[민생]해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입물류 활성화		① 정책금융기관 금융지원을 통한 해운·항만자산 확보 실적(건) ② 수출입 물류지원 추진율(%)
2.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물류서비스 고도화하고 항만경쟁력을 제고한다.		①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별 하역능력 합산(만TEU)
①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규제개선		① 자율운항시스템을 탑재한 선박 실증운항
②[민생]물류거점 항만개발과 스마트항만 구축으로 항만경쟁력 강화		① 신항만 인프라 확충률(%) ② 스마트항만 도입 추진율(%)
③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항만 실현		① 중장기 항만정책 수립 및 국제협력 ② 탄소중립 항만구축 기본계획 수립
④[민생]항만 물류서비스 경쟁력 강화		① 항만물류 활성화 추진율(%) ② 해외물류인프라 지원 만족도(점)
⑤[민생]민간참여를 통한 항만 고부가가치 창출 및 해외협력 기반 마련		① 항만 민자사업 추진율(%) ② 해외항만개발 협력 지원체계 구축추진율(%)
⑥항만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항만운영의 안정성 확보		① 친환경 선박연료 병커링 실증 실적 달성률(%) ② 선박 저속운항 참여율(%)
⑦선진형 항만안전 및 항만보안시스템 구축		① 민간의 자율적 항만안전관리 능력 강화 ② 항만보안사고 저감율(보안사고 건수, 하향)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시장을 주도한다.		① 공공선박·친환경선박 전환 실적
	① 디지털 해상교통정보(바다내비) 제공 및 신산업 육성	①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신산업 육성 및 지원(%) ②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② 차세대 해양 위치정보(PNT) 및 디지털 위치정보 제공	① 고정밀 위치정확도 제공 달성도(%) ② 스마트 항로표지 실효율 실증 및 해로드 앱 활성화(%)
	③ 그린 SHIPPING(Green Shipping) 생태계 기반 확충	① 친환경선박 전환척수(%) ②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계획 수립 추진율(%)
4.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해상물류인력을 양성한다.		① 국적 해기사 양성 및 취업 연계(명)
	① 양질의 국적선원 공급 및 두터운 선원복지 제공	① 임금체불 예방 특별근로감독 임금체불 해소율(%) ② 선원복지수혜자 만족도(점)

(1) 주요내용

- **국적선대 확충 및 선화주 상생을 통해 글로벌 선사와 경쟁하고, 안정적인 해상 수송망을 구축**
 - 해양진흥공사를 통한 **종합적**(산업·경영·금융 등) 지원과 민간의 **친환경 선박투자 확대** 등을 통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제공, 장기운송계약 확대 추진 등 **국적선사-수출기업 상생기반 마련**
- **미래 항만인프라 선제 확충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해 물류서비스를 고도화하여 항만경쟁력 제고**
 - 글로벌 물류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술기반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관련 기술·산업 활성화
 - 항만배후단지의 기능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항만배후 단지를 고부가가치 물류플랫폼으로 육성**
 -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여 해외물류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안전재고 확보 등 **안정적 물류 기반 확보**
-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 시장을 주도**
 -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신산업을 육성하고, 차세대 해양 위치 정보(PNT)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
 - 저탄소·무탄소 선박기술 등 **혁신기술개발** 및 관공선·민간 선박의 **친환경선박으로 전환**을 촉진
- **외국인 선원을 국적 선원으로 대체하고, 선원복지 개선 등을 통해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해상물류인력 양성 추진**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23				
원양 선복량 (만TEU)	51	78	105	105	112	130	시황변동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방안('22.11) 의 선복량 목표를 고려해서 설정 * 경쟁력강화방안 ('27) 130만 TEU	연도별 원양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	Alphaliner社의 선사별 선복량 (12월 기준)

(3) 기타

□ 친환경·스마트化 : 친환경선박 전환, 디지털 물류전환 가속화

- (친환경)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선박 전환 불가피 → 글로벌 선사 중심 LNG·메탄올 등 친환경선박 도입 가속화*

* 국내 신조선의 78.4%(820척/1046척)가 친환경연료 선박으로 발주('24.1, 클락슨 리서치)

- IMO는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채택('23.7)하고 연료·비용규제* 등 강화된 규제 도입 예정('27~)

* 화석연료를 점진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거나, 탄소부담금 등 부담금을 부과하는 규제

- 미국, 영국, EU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탈탄소 항로인 “녹색해운항로” 구축 논의 활발**, 우리나라도 적극 참여*

* 국제적으로 총 44개의 녹색해운항로 구축 발표(Global Maritime Forum)

** VIP께서 정상급 국제회의에서 선도적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여 의지 표명('23.9/23.11)

- (스마트) 자율운항시스템을 탑재한 1800TEU 컨테이너 선박(팬오션)으로 실증운항, 항만배후단지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등 혁신 추진

□ 글로벌 물류거점 확보 : 공급망 위기 속 해외 물류네트워크 내재화

- 국내 기업의 해외물류 인프라(물류센터, CY 등) 구축 수준은 물동량 창출 잠재력과 글로벌 기업 대비 저조한 수준으로 확대 필요

* 수출 52백억 달러 수출 세계 8위('23), (UNCTAD) '컨 항만물동량 처리량 2천 850만 TEU, 세계 4위('22)

- ▶ (글로벌기업 해외거점) 독일 DHL(220개국, 854개), 미국 UPS(220개국, 1,801개)
- ▶ (우리기업 해외거점) LX판토스(39개국 360개), CJ대한통운(34개국 249개), 현대글로벌(35개국 84개)

(1) 주요 내용

□ 해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적선사의 선대 확충 및 경영혁신 지원

-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충을 위해 선박도입 투자 및 보증지원('24년 11,260억원, 해진공)을 추진하고, 중소선사 지원 강화* 및 공공 선주사업 개편 등을 차질없이 이행

* (규모) 2,500→5,000억 / (지원대상) 외항선사 → 외항 및 내항선사

- 해운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물류시설에 대한 금융·투자지원을 강화하고, 선화주 상생 투자모델 마련 등 추진
- 해운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선대확충 및 항로 다변화, 친환경 선박 확보 등 HMM 경쟁력 강화와 투자지원 추진
-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친환경 선박투자 등 국적선사의 ESG 전환 지원을 위해 지원체계 구축 및 금융지원 확대*

* 2개 정책펀드 규모: (現) 21억불 → ('25~) 최대 36억불

□ 국적선사-수출기업 상생을 통해 수출입 물류 지원

- 홍해 통항중단에 따른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대응 방안 수립 및 비상대책반 구성·운영, 전용선적공간 제공 항로 확대 등 지원
- 중소기업 및 농수산물식품 수출지원을 위해 전용선복 제공 및 장기계약 지원 지속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실적(백억원)	64	127	186	1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진흥공사의 사업계획 및 국내 기업의 지원 수요 등을 반영하여 해운·항만 자산 투자 유인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연간 지원실적을 목표로 설정 특히, 이례적으로 지원 수요가 높았던 '23년 실적 대비 상향된 목표치를 설정하여 정책금융 지원 확대 노력 추진 	국내 해운·항만기업의 선박 발주, 터미널 확보 등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투자, 보증 등) 실적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실적 취합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국내 선박금융시장 활성화 필요

- 국내 선박금융 시장은 높은 투자리스크 등으로 정책금융 및 외국계금융 의존도가 높은 상황

* 선박금융 중 정책금융·외국계 비중 : ('19) 83% → ('20) 66% → ('21) 80%

- 민간 투자 인센티브 마련과 더불어, 정책펀드는 위험도가 높은 후순위 투자에 집중하여, 민간 투자의 마중물로 활용할 필요

□ 글로벌 경기침체 지속, 금리·환율 상승 등 경영부담 가중

-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물동량 수요 감소 ↔ '24년 대규모 신조 인도에 따라 운임 하방 압력 전망 및 저시황기 지속 우려

* '컨' 물동량 / 선복량 증가율(MSI 분기보고서): ('23e) -0.5% / 8.1% → ('24e) 4.1% / 7.2%

- 선사별 맞춤형 지원체계 운영 등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원화금융 확대, 한국형 운임지수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 경영 지원 필요

□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폭 강화 및 경제적 규제 도입 가시화

- IMO는 국제해운 탄소저감 목표 대폭 상향*('23.7)하고 '27년 경제적 규제 도입 추진, EU는 배출권 거래제 등을 선제적 도입·시행('24~)

* IMO, '50년까지 '08년 기준 대비 50% 감축 → 100% 감축

- 해운정책 패러다임을 '친환경 해운'으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해 정책·금융지원 확대 필요

(4) 기타

□ 주요 글로벌 해운분석기관들의 향후 글로벌 해운경기 전망

<전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수요, 공급 전망>

(단위 : 백만TEU)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수요	물동량	203.8	215.8	212.6	211.4	220.0	230.0
	증감률(%)	-1.9%	5.9%	-1.1%	-0.5%	4.1%	4.5%
공급	선복량	23.7	24.7	25.8	27.9	29.9	31.3
	증감률(%)	3.5%	4.2%	4.4%	8.1%	7.2%	4.7%

출처 : MSI(영국 시황분석 전문기관) 분기보고서('23.4분기)

- '24년 수요(물동량) 증가율 4.1% 대비 공급(선복)은 7.2%로 예상되어 수급 불균형 심화에 따른 운임하방 압력 가중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해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입물류 활성화(I -1-①)

해운정책과 (044-200-5716 / 5720 / 5725)

□ 추진배경 (목적)

- 정부는 시황 급락, 친환경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22.11)」 수립·이행
 - *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 조성(23.6),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3천억원) 운영 등 해운산업 경영안전판 마련
- 운임급락이라는 ‘일시적 위기’ 속 생존안전판은 구축되었으나, 선대확충, 물류시설 확보 등 장기적 관점의 투자유인 부족
 -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친환경 해운이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친환경 선박 투자 등 ESG 경쟁력은 낮은 상황

- ▶ 세계 경기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선대확충, 친환경 선박투자 등 국적선사의 ESG 전환 지원을 통해 중장기 경쟁력 강화 도모
- ▶ 국적선사의 단단한 해상공급망을 바탕으로 선화주 상생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 및 ‘수출 플러스’ 달성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① **(국적선사 경영지원)** 중소·연안선사에 대한 경영 지원을 확대하고, 선주사업 다변화 및 외화투자 확대 등 국적선사에 대한 다각적 지원 추진
 - (중소선사 지원확대) 선박도입 특별지원의 규모 및 대상을 확대하고, 선박 담보부보증 대출 신설로 유동성 공급 확대(24.3)
 - * (규모) 2,500→5,000억 / (지원대상) 외항선사 → 외항 및 내항선사

- (공공선주사업) 선사 수요 등을 감안하여 '컨'선 중심에서 대상 선종을 다변화하고, 임대방식 다양화를 위해 전문 선주회사 설립 추진*

* 출자방식, 법인 형태 등 선주사업 전문회사 설립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24.上)

- (외화채권 발행) 국적선사의 환변동리스크 저감을 위해 연내 해진공 외화채권 최대 11억불 추가 발행으로 외화투자 확대(24.4)

* 해진공 외화채권 3.8억불 최초 발행 완료('23.4)

② **(친환경 해운전환)** 해운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 선박 도입 및 ESG 경영 촉진 상품 도입 추진

- (정책펀드 개편) 정책금융기관(산은, 해진공 등) 공동으로 조성한 친환경 선박 펀드 활성화를 위해 체계 개편* 및 재원 확충** 추진(24.上)

* 정책금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마련, LTV 확대 추진

** 2개 정책펀드 규모: (現) 21억불 → ('25~) 최대 36억불

- (One-Stop 통합지원) 친환경 전환 TF를 구성하여 규제대응 진단부터 컨설팅, 금융까지 한번에 지원하는 One-Stop 지원체계* 구축(24.上)

* 선박금융(투자보증) + 친환경 펀드(정책금융기관) + 저탄소선박 지원(보조) + 비금융 지원 등

- (ESG 전환) 국적선사의 ESG 경영 촉진을 위해 녹색채권 인수, 해운 ESG 대출이자 지원(200억 규모)* 등 금융상품 개발(24.下) 및 지원

* 선사-해진공-금융기관 간 협업을 통해 ESG 우수선사의 대출금리 인하 지원

③ **(HMM 경쟁력 제고)** 해운얼라이언스 재편, 대외 불확실성 증가 등에 대응하여 HMM 경쟁력 강화와 과감한 투자지원을 위해 「2030 중장기 로드맵」 수립·발표('23.5)

- 150만 TEU 규모 선대확충(~'30), 항로 다변화, 친환경 선대 확보, 항만터미널 확보 등 사업다각화 추진

④ **(항만물류 투자 확대)** 국적선사·기업이 물류비 절감을 위해 물류시설 확보 시 금융·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국외 주요거점 항만에 물류시설 확보 등을 통해 국가 공급망 관리 강화

- ⑤ **(전략물자 적취율 제고)** LNG 적취율 제고를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24.1분기), 운송방식 다변화 및 공급망 안정성 강화 추진

* 우리부, 산업부, 해운협회, KOGAS 등 참여

- ⑥ **(수출입 물류애로 해소)** 수출입물류 애로해소를 위해 주요 항로에 중소기업 전용선복 제공 및 장기계약 지원 지속(~'24.12), 운임 공표제 이행 실태점검을 통해 공정한 해운질서확립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예멘 반군 사태에 따른 수출입 물류 영향 및 대응방안 수립	'24.1월	국정 40-2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확대	'24.3월	국정 40-1
	공공선주사업 계약체결	'24.3월	국정 40-1
2/4분기	해양진흥공사 외화채권 발행	'24.4월	국정 40-1
	중소·중견선사 친환경선박 금융지원 패키지 마련	'24.5월	국정 40-1
	중견 및 중소선사 친환경 선박 도입 지원을 위한 채권인수	'24.6월	국정 40-1
3/4분기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24.7월	국정 40-1
	중소선사 CEO간담회 개최	'24.9월	국정 40-1
	국적선사 '컨'박스 경쟁력 강화 세미나 개최	'24.9월	국정 40-1
4/4분기	항만물류 인프라 투자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24.10월	국정 40-1
	전문 선주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준공	'24.11월	국정 40-1
	해운선사 컨설팅 사업 완료	'24.12월	국정 40-1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민관소통 강화)** 국적선사, 유관 업·단체, 전문가 등 민관소통 강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 수렴 및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추진
- **(선화주 상생협력)** 안정적 해운 수송망 구축을 위해 선사와 수출 기업(화주) 간 협의를 통해 적취율 제고 및 수출애로 해소 지원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1/4분기	간담회	국적선사 간담회 개최	'24.1월
	현장방문	HMM 13K '컨'선 명명식 개최	'24.1월
2/4분기	간담회	공공선주사업 민관협의체 개최	'24.5월
	간담회	LNG 적취율 제고를 위한 선화주 협의회	'24.5월
3/4분기	간담회	선박연료공급업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유관업체 간담회 개최	'24.8월
	간담회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 협의회 개최	'24.9월
4/4분기	설명회	항만물류 인프라 투자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24.10월
	간담회	선사 공표운임 관련 간담회 개최	'24.12월

□ 기대효과

- 선대확충, 물류시설 확보 등 투자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시황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입 공급망 구축
- 친환경 선박전환 등 국적선사의 ESG경영 촉진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친환경 해운국가 도약

□ '23년도 미흡부진과제 개선계획 : 해당없음

- * '23년도 과제 평가 결과 : I-1-① 저시황기 국적선사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우수)
I-1-② 국적선사-수출입기업 간 상생 촉진(다소우수)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해운물류지원(Ⅲ-4-일반재정③)				
①	해운물류지원(6133)		130	226.24
	■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6133)	에너지 특별회계	130	226.2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정책금융기관 금융지원을 통한 해운·항만자산 확보 실적(건) (가중치 50%)	19	38	37	37	- 해양진흥공사의 사업계획 및 국내 기업의 지원 수요 등을 반영하여 정책금융 (투자, 보증) 지원을 통한 해운·항만 관련 자산(선박 터미널 등) 확보 실적을 목표로 설정 - 특히, 국내 기업의 자산확보 투자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경쟁력 유지를 위해 '23년 실적과 유사한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금융 지원을 통한 자산 확보 투자 유인 노력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정책금융(투자, 보증 등) 지원을 통한 국내기업의 해운·항만 관련 자산(선박, 터미널 등) 확보 실적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실적 취합
② 수출입 물류지원 추진율(%) (가중치 50%)	100	100	100	100	중소화주 및 화주협회와 장기운송계 약 체결 등 국적선사의 수출입 물류 지원 지속 추진을 목표로 설정	{(중소화주 전용선적공간 75TEU 이상 제공(항차별)×0.5)+ (장기운송 60TEU 이상 제공(항차별)×0.5)} × 100	국적선사 지원실적 및 내부보고자료

(1) 주요 내용

□ 스마트 해운물류시스템 도입 촉진

- (자율운항선박) 시험선 건조, 실험역 실증 등 상용화 시스템 및 입출항 관제 등 스마트항만 연계시스템 개발(~'25)
 - 민·관 협업으로 자율운항 핵심기술을 1,800TEU급 컨테이너선에 탑재하여 동남아 항로 등에서 실증운항 추진('24下~)*
 - * 건조(~'24.3, 팬오션·현대미포조선) → 자율운항시스템 탑재(~'24.9) → 실증('24.下~, 1년)
 -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실증,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개발·상용화 촉진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
- (스마트물류) 인천항·부산항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고, 수출입 해운물류 플랫폼 통합 방안 마련('24)
 - * (인천항) 설계 및 착공('22) → 완공('24) / (부산항) 설계 및 착공('22~'23) → 완공('25)

□ 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 등 항만 인프라 혁신

- (스마트항만) 부산항 '컨' 물동량 증가 등에 대비, 한국형 스마트 메가पोर्ट로 개발 예정인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 사전절차 실시*
 - * 예타 통과('21.12)에 따라 '22년 기초조사 등을 시작으로 '31년까지 '컨' 부두 9선석 개발(1단계)
- 우리 스마트항만 기술 적용·실증을 위한 광양항 테스트베드 하역장비(QC) 도입 착수('24.12), 기반시설 공사 발주('24.6)
 - * 안정적 국내 스마트항만 장비산업 시장확보를 위해 자동하역장비 국내 발주 추진
- 진해신항을 스마트 메가पोर्ट로 개발하기 위한 외곽시설 단계별 착공('24.12)

- (스마트항만 산업육성) 스마트항만 인프라, 하역장비 등에 대한 국내기술 확보를 위해 R&D*·연구용역** 추진, 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

* (R&D) 자율협력주행기반 화물운송시스템 개발(61.5억), 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자동화 안전모듈 개발(8.5억), ICT 기반 항만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개발(6.6억)

** (연구용역) 스마트항만 이송장비 기술개발(25억), 부산항 스마트화 추진방안 마련(6억), 항만분야 BIM 적용지침(6.5억)

- '항만기술산업 육성법' 하위법령을 마련('24.12.)하고,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전략* 이행방안 연구용역 착수('24.9)

*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확대 전략'('23.1, 관계부처 합동)

- (항만인프라) 부산항·인천항·광양항 등의 부두 증설 및 신규 터미널 개장*, 중장기 운영 로드맵 수립을 통해 항만물류·운영 효율화

* (부산신항) 서'컨' 부두 2-5단계(3선석, '24년), 2-6단계(2선석, '27년) 등 5선석 개장 (인천신항) '컨' 부두 3선석('27년 개장)

-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여 적정 하역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산업과 지정학적 여건 등을 고려한 권역별 특화된 항만 개발*

* (부산항) 가덕도 신공항 연계 교통체계 등 인프라 확대방안 연구 추진(6월)
(동해신항) 체선율 개선을 위한 기타광석·잡화(착공), 석탄부두(설계완료) 추진(12월)
(광양항) 특정해역 암초제거 준공(7월), 묘도수도 직선화 발주(12월), 낙포부두 개축 착공(4월)

□ 항만배후단지 및 해외 물류거점 확충

- (항만배후단지) '30년까지 약 33km² 규모의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하기 위한 제4차('22~'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22.12)

- 인천항 특화구역(콜드체인·이커머스) 및 부산항 배후단지(복합물류·제조)에 우수기업 유치, 자유무역지역 확대 추진으로 투자 확대 도모(인천, 평택항)

-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임대체계 및 고용환경 개선 추진, 지원 인프라(화물차 휴게소 등) 확충 등 입주기업 및 종사자 지원 내실화

- 민간개발·분양방식 도입으로 '30년까지 배후단지 463만㎡ 단계별* 확보,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도모

* (인천신항) 1단계 189만㎡, (인천남항) 2단계 53만㎡, (평택당진항) 2단계 136만㎡, (부산항신항) 웅동2단계 85만㎡ 등 민간개발 추진

- (해외 물류거점) 국내 기업의 물류서비스 수요가 많은 해외 주요 항만 배후지역 현지물류 기업과 해외물류센터 합작법인 설립 및 운영 추진('24.下)
- 美 주요거점(LA롱비치, 뉴욕) 및 베트남(호치민) 인근 배후단지 내 물류센터를 확보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

□ 항만연관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 (서비스 다변화) 수리조선소 건립, 양곡부두 조성 등 서비스 확대
- (정량공급제도 도입)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제도 기반 마련
- (선용품산업 육성) 선용품 상품코드 개발('22) 등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선용품 시장 질적·양적 확대 추진
- (정책금융 지원) 친환경 연료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수요 대응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 발족
- (실증 지원) 친환경연료 병커링 안전관리계획 마련 등 제도기반 마련을 통한 세계최초 초대형 '컨'선 그린메탄을 STS 병커링 수행

□ 항만에서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 (안전인력) 지방해양수산청 안전사고예방 전담인력인 항만 안전점검관 증원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 (안전투자) 민간의 안전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22~'25, 국비 95억원)

* 추락 및 협착 방지시설, 작업자 대피시설, 하역장비 후방감지센서, 이동식 조명탑 등

- (안전의식) 자율적 안전관리 지원 위한 「항만안전특별법」 개정* 및 항만안전대상 개척로 항만안전 유공자 격려 및 안전의식 고취

* 항만운송참여자 관리범위 및 의무 명확화,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 수단 마련 등

□ 체계 개편을 통한 항만보안 효율성 제고

- (보안인프라 강화) 주요 무역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항만 하역장비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신종 보안위협 대응방안 마련

* 부산·인천·울산항 등 3개 항만에 52개 장비 구축 / '24년 / 국비 32.4억원(1차년도)

** 항만 사이버보안 국내외 사례조사, 실태조사 및 사이버보안 강화방안 마련 등

- (항만보안료 현실화) 제도 도입('10)이후 현재까지 미인상된 보안료 단계적 인상(방안마련 용역 중) 추진 및 보안료 징수 체계 개선

* 선박·화물보안료 통합, 임대 부두 외 민자·민영부두 대징수 등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항만 보안정보(보안위험·시설현황 등)를 체계적(비온라인→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추진

- (항만 출입관리 강화) 현행 항만출입관시스템(PSS)의 인식을 저하(50%↓)에 따라 지문인식, QR코드(단말기) 등 인증체계 강화 추진

□ 해외항만개발협력을 통한 신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맞춤형 지원 및 다각적 지원체계 구축

○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항만개발 사업 수주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기반 조성

* 최빈국 대상 인도적 차원의 ODA형 사업과 우리 기업 수주 지원을 위한 성과창출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유형별 개도국 마스터플랜(M/P), 타당성 조사(F/S) 수립 지원

○ 민·관 협력 지원체계 및 다양한 진출기업 지원기반을 마련하여 민간수요를 반영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민간기업 주도 해외항만시장 개척을 위한 수주 활동 지원(민간경상보조금, 정부지원을 70%)

○ 국내 중소·중견 물류기업 대상 사전 재무타당성 조사 및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 후 사업화 단계까지 전방위적 해외진출 지원 강화

* (예산규모/지원대상) 年 5.4억원 규모/年 10개 내외 해외진출 물류기업

** (지원범위)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는 총비용의 50%에서 지원한도 8천만원,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은 물류기업 총비용의 50%에서 기업 단독 3천만원, 화주기업과 컨소시엄 4천만원

○ 인도적 차원의 ODA형 사업과 우리 기업 수주성과 달성을 위한 성과창출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유형별 맞춤형 지원 확대(연중)

○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국제기구(MDB 포함) 등과의 협력사업 추진*, 해외사업 정보 제공** 등 다각적 지원체계 구축

* WB, AfDB(아프리카), CABI(중미) 등 MDB와 항만, 연안방재, 어항 사업 등에 대한 개도국 차관 제공과정에 우리 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협의

** 해외항만개발 정보망(coscop.or.kr)을 통해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에게 동향, 입찰정보 제공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별 하역능력 합산(만TEU)	1,913	2,108	2,303	2,131	부산항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어 '24년 연내 컨테이너 부두 기능의 종료에 예정되어 있는 북항 자성대부두의 폐쇄 및 항만 재배치 등 현안을 적기 추진하기 위해 자성대부두의 하역능력인 172만 TEU를 감산하여 목표 설정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 하역능력	부산항만공사 산출자료 취합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사상 최대의 물량 처리 등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항만의 급격한 성장으로 우리 항만의 순위(물동량 기준) 하락*

* 부산항 순위 : ('01) 3위(791만TEU) → ('10) 5위(1,419만TEU) → ('22) 7위(2,207만TEU)

- 높은 선박 입항빈도, 정기항로 확대 등으로 글로벌 연계성은 우수하나, 중국 항만과의 가격 경쟁으로 고비용·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한계
- 피더서비스 제공, 대형 컨테이너 선박 기항 등 환적화물은 증가하였으나, 하역·보관 중심의 물류서비스 제공으로 부가가치 창출 부족
- 물류 처리와 함께, 선박수리, LNG병커링(연료공급), 배후시설을 활용한 물류 가공·제작 등 서비스·산업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주요 항만은 자동화·지능화를 통해 안정적·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스마트항만 개발을 가속화, 관련 항만장비 시장 확대*

* 자동화 항만장비시장: ('19) 38억\$ → ('27) 57억\$로 연평균 6.4% 성장 전망

- 국내 스마트항만은 높은 초기투자비, 일자리 감소 이슈 등으로 주요 항만 대비 도입이 늦으며, 전영역 자동화터미널은 금년들어 개장
- 항만기술산업 확보를 통한 시스템 고도화가 항만경쟁력 확보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나 선진국 대비 스마트항만 기술력도 뒤쳐진 상황*

* 자동이송장비 기술 미확보 등 선진국 대비 3.8년(이송장비)~1.8년(운영시스템) 격차를 보임

- 이에 대응하고자, 우리 기술로 만드는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광양항) 구축에 착수하고('22), 진해신항을 스마트 메가पोर्ट로 개발하기 위한 기반시설 착공

-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항만기술산업육성법 하위 법령 마련)과 함께, 산업 육성전략* 이행을 위한 연구 착수('24.9)
- *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확대 전략'('23.1, 관계부처 합동)
- '24.3월 개장 예정인 부산항 신항 서'권' 2-5단계 부두*는 완전 자동화 설비(AGV 등)를 도입하여 운영 예정
- * 3선석 1,050m / 하역능력 195만TEU/年 / 국내최초 안벽-이송-야드 쏘구간 자동화

(4) 기타

- 세계 주요 항만은 4차 산업혁명, 친환경 등 미래 항만시장 주도를 위해 스마트 항만, 허브항만 육성 등 경쟁적 정책 추진中
 - * 향후 21세기 선박대형화 추세에서 유일한 해답은 항만의 스마트 자동화(Dynamar)
- 물류기술 혁신과 해운·항만 여건변화에 따라 주요국들도 중장기 항만계획을 수립하여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中
 - * (상) TUAS 신항은 '45년까지 자동화터미널을 포함한 컨테이너부두 65선석 개발 추진
 - (중) 상해 양산항, 청도항 자동화 등 11개 스마트항만 시범사업 추진
 - (일) 전략항만 허브기능 강화, 항만스마트화 등을 포함한 'PORT2030' 정책 발표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규제개선(I-2-①)

스마트해운물류팀 (044-200-6202)

☐ 추진배경 (목적)

-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자율운항선박 개발 경쟁이 치열하며, 상용화에 대비한 IMO 기준 제정 등 국제표준화 논의도 본격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우리나라도 자율운항선박 R&D를 통해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운항선박법」을 제정하여 지원제도 마련 중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자율운항선박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관계기관 협의	'24.1월	국정 40-4
2/4분기	자율운항선박 통합워크숍	'24.6월	국정 40-4
3/4분기	자율운항선박 실증선 출항	'24.9월	국정 40-4
4/4분기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성과홍보	'24.12월	국정 40-4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자율운항기술 실증대상 선박 명명식 참석

구 분	내용	세부일정
1/4분기	현장방문 자율운항기술 실증대상 선박 명명식 참석	'24.3

☐ 기대효과

- 실증운항을 통해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입증해 미래 해양 모빌리티 신시장 창출 계기 마련

□ '23년도 미흡부진과제 개선계획

○ 정책효과 강화 등 정책추진 노력 개선방안 제고

- (정책추진) 보도자료 배포 등 정책효과 홍보 강화 노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I -2-일반재정①)			
① 항만물류기술개발(4149)		100.9	105.4
■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304)		100.9	105.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① 자율운항시스템을 탑재한 선박 실증운항	-	-	-	100	자율운항시스템을 탑재한 선박 출항	자율운항시스템 을 탑재한 선박 출항 -자율운항 선박 건조 완료(50%) -국제항로 시험운항 1회 (50%) * 측정방법 : (실적건수/목표건 수)× 100%	출항기록

② 물류거점 항만개발과 스마트항만 구축으로 항만경쟁력 강화(I-2-②)

항만개발과 (044-200-5930 / 5931 / 5932)

□ 추진배경 (목적)

○ (물류거점 항만개발) 항만은 수출입화물의 99.7%를 처리하며 석유화학·제철 등 주요 산업단지는 항만 주변에서 발전하는 등 경제·산업의 중요 거점

- 최근 발생한 국제 이슈*에도 불구하고 국내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수출입 물류 등 적정 처리를 위한 항만개발 필요

* COVID 19,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충돌사태 등

** '총' 물동량(억톤): ('22) 15.5 → ('23) 15.5 → ('24) 15.8 → ('30) 18.9

'컨' 물동량(만TEU): ('22) 2,882 → ('23) 2,957 → ('24) 3,029 → ('30) 3,854

- 그간 부산항을 '컨' 물류중심 항만으로 개발하였으나 중국 등 주변 항만의 성장으로 경쟁력 약화*, 부산항신항 이후의 항만 개발 필요 확대

* 부산항 순위 : ('01) 3위(791만TEU) → ('10) 5위(1,419만TEU) → ('22) 7위(2,882만TEU)

○ (스마트항만 구축) 주요 항만은 자동화·지능화를 통해 안정적·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스마트항만 개발을 가속화, 관련 항만장비 시장 확대*

* 자동화 항만장비시장: ('19) 38억\$ → ('27) 57억\$로 연평균 6.4% 성장 전망

- 국내 스마트항만은 높은 초기투자비, 일자리 감소 이슈 등으로 주요 항만 대비 도입 늦으며, 전영역 자동화터미널은 금년들어 개장
- 항만기술산업 확보를 통한 시스템 고도화가 항만경쟁력 확보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나 선진국 대비 스마트항만 기술력도 뒤쳐진 상황*

* 자동이송장비 기술 미확보 등 선진국 대비 3.8년(이송장비)~1.8년(운영시스템) 격차를 보임

☞ 항만물동량 증가와 선박 대형화에 대비하고, 중장기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권역별 특화항만을 적기 개발하고 스마트항만 구축과 관련 기술산업 육성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항만물동량 지속적 증가에 대응하여 적정 하역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산업과 지정학적 여건 등을 고려한 권역별 특화된 항만 개발
(부산) 동북아 물류중심, (광양) 종합물류, (서해) 대중국 교역거점, (동해) 신북방 에너지·물류

- (부산항) 글로벌 허브항 발전을 위한 진해신항 외곽시설 단계별 착공('24.12), 가덕도 신공항 연계 교통체계 등 인프라 확대방안 연구 착수('24.6)
 - 기존 신항 서'컨'부두와 진해신항의 연계성 강화 개발을 위한 송도제거 사업 기초조사용역 착수('24.7.)
- (광양항) 순환형 안전항로 구축을 위한 묘도수도 직선화 발주('24.12.), 특정해역 암초 제거공사 준공('24.7.)
 - 노후화된 위험물 취급시설인 낙포부두 개축사업 착공('24.4.), 산업용지 공급을 위한 북측배후단지 준공('24.12.)
- (인천항) 신항 '컨'부두(1-2단계) 운영에 대비하여 항로준설 지속(~'25.6), 협소한 계류지 확장을 위한 남항 계류지 정비사업 착공('24.3)
- (울산항) 에너지허브 육성을 위한 오일허브 2단계 남방파제 2-3 공구 지속('25.9), 북항 방파호안(2단계) 공사 발주('24.12.)
- (거점항) 산업원자재 공급,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권역별 항만 개발
 - (동해신항) 기타광석·잡화부두 착공('24.12), 석탄부두 설계 완료('24.12.)
 - (새만금신항) 진입도로(2.3km) 착공('24.7), 방파제 연장공사 발주('24.8)
 - (포항영일만신항) 남방파제 2단계 공사 발주('24.4.)
 -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24.4.) 및 국제여객터미널('24.10.) 준공
 - (목포신항) 연안여객부두 개축 착공('24.6), 북항 어업지도선부두 확장('24.2)

◆ 국정과제*인 스마트항만 구축 자칫없는 추진으로 항만경쟁력을 강화하고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을 통한 신산업 육성·지원

* (국정과제 40-3)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글로벌 허브항만 구축

- (스마트항만 구축) 우리 스마트항만 기술 적용·실증을 위한 광양항 테스트베드 하역장비(QC) 도입 착수('24.12), 기반시설 공사 발주('24.6)
 - * 안정적 국내 스마트항만 장비산업 시장확보를 위해 자동하역장비 국내 발주 추진
- 진해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개발하기 위한 외곽시설 단계별 착공('24.12)
- 전영역 자동화터미널인 부산항 신항(2-5단계) 개장('24.12.)
- (기술개발) 안정적 국내 스마트항만 도입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하역장비 등에 대한 국내기술 확보를 위해 R&D·연구용역 추진
 - * (R&D) 자율협력주행기반 화물운송시스템 개발(61.5억), 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자동화 안전모듈 개발(8.5억), ICT 기반 항만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개발(6.6억)
 - ** (연구용역) 스마트항만 이송장비 기술개발(25억), 부산항 스마트화 추진방안 마련(6억), 항만분야 BIM 적용지침(6.5억)
- (산업지원) '항만기술산업 육성법' 하위법령을 마련('24.12.)하고,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전략* 이행방안 연구용역 착수('24.9)
 - *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확대 전략'('23.1, 관계부처 합동)
- 정책자금 대출·보증 지원('23, '24년도 반영) 프로그램 유지 추진

◆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19~'40) 변경계획을 수립·고시하고, 효율적인 항만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추진

- (신항만기본계획 수립)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른 개발·운영 성과를 재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변경계획 수립 고시('24.12.)
- (제도개선)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공고 절차 신설, 기본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등 신항만건설촉진법 하위법령 개정('24.12.)
- 어업피해영향조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어업피해 범위, 조사 방법 등 어업피해조사 표준화 매뉴얼 마련('24.12.)

- (소통강화)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에 대한 지자체·어업인·지역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민관협의체 지속 운영(연중)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부산항 스마트화 추진전략 연구용역 발주	'24.2월	국정 40-3
	부산항 신항 송도개발사업 기초조사 발주	'24.3월	국정 40-3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준공	'24.3월	
2/4분기	광양항 낙포부두 개축사업 착공	'24.4월	국정 40-3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기반시설 공사 발주	'24.6월	국정 40-3
	연평도항 외곽시설 및 기타시설 축조공사 착공	'24.6월	국정 41-1
3/4분기	광양항 특정해역 준설공사 준공	'24.7월	국정 40-3
	새만금신항 진입도로 건설공사 착공	'24.9월	국정 40-3
	신항만건설촉진법 하위법령 개정	'24.9월	
4/4분기	부산항 진해신항 남방파제 실시설계 적격 심의	'24.10월	국정 40-3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자동하역장비 도입 착수	'24.11월	국정 40-3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 수립·고시	'24.12월	국정 40-3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항만개발·R&D 수행기관 의견 수렴) 대규모 항만개발 및 주요 R&D 사업 추진상황 점검, 종사자 의견 청취 및 현안 해소 논의 등
 - * (참여) 해수부, 지방해양수산청, 건설회사, 감리회사, R&D 연구기관 등 종사자
- (부산항 진해신항 민관협의체) 대규모 신규 항만개발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으로 개발 공감대를 형성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여건 마련
 - * (참여) 해수부, 경상남도, 창원시, 수협(진해수협, 의창수협), 부산항만공사 등
- (스마트항만 전문가 자문회의) 성공적인 국내 스마트항만 구축에 필요한 정책 발굴을 위해 SOC·항만장비·항만운영의 전문가 의견 수렴
 - * (참여) 해수부, 설계·시공·항만장비·운영시스템 등 분야별 전문가

구 분	내용	세부일정
1/4분기	현장방문	동해신항 건설공사 현장방문
2/4분기	현장방문	광양항 낙포부두 개축공사 현장방문
3/4분기	현장방문	부산항 진해신항 남방파제 현장방문
4/4분기	회의	스마트항만 전문가 자문회의
	회의	부산항 진해신항 민관협의체

□ 기대효과

- 항만인프라 적기 확충으로 고부가 항만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항만 배후 국가 핵심 기간산업 지원기능 강화
-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를 통해 안정적인 스마트 항만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로 스마트항만으로 도약
- 국내 항만 터미널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항만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환적화물을 유치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23년도 미흡부진과제 개선계획 : 해당없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신항만 개발(I -2-일반재정②)				
① 신항만 개발(5050)			7,892	10,925
▪ 부산항 신항만(1단계)(303)			258	379
▪ 부산항 진해신항(305)			1,298	4,047
▪ 부산항 신항만 남컨배후단지(308)			279	208
▪ 광양항(3단계)(316)	교특회계		1,656	1,761
▪ 평택·당진항(317)			83	273
▪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318)			426	218
▪ 인천신항(320)			102	268
▪ 목포신항(321)			210	142
▪ 포항영일만신항(322)			268	187
▪ 포항영일만신항(1단계)(323)			70	102
▪ 새만금신항(324)			1,682	1,628
▪ 울산신항(325)			1,194	1,388
▪ 동해신항(326)			366	324
주요항 개발(I -2-일반재정②)				
② 주요항 개발(5058)			1,185	772
▪ 부산항(307)			84	94
▪ 인천항(309)			135	162
▪ 인천남항(310)			145	94
▪ 목포항(311)			220	109
▪ 목포북항(312)			181	71
▪ 군장항(2단계)(314)			420	24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신항만 인프라 확충률(%) (가중치 50%)	신규	신규	105.5	100	- 신항만(12개) 인프라 확충률 5.3% 달성 ('23 : 22.0% → '24 : 27.3%) * '21~'23년 인프라 확충 증가율(5.1%) 고려하여 5.3% 증가목표 설정	-신항만인프라 확충률(%) = 신항만인프라 투자(누적) / 신항만기본계획상 필요 투자(16.1조 원)('19~'40) × 100	- 디브레인 자료
② 스마트항만 도입 추진율(%) (가중치 50%)	신규	신규		100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자동화역장비 사업 착수(3건) -부산항 진해신항 외곽시설 착공(4건)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자동화역장비 사업 착수율 = 착수 건수 / 3건 장비사업* × 100 * QC, TC, AGV (가중치 30%) -부산항 진해신항 외곽 시설 착공률 = 착공 건수 / 4개 사업* × 100 *남방화제, 투기장호안12공구, 방파호안2공구(우선사업) (가중치 20%)	- 관련 문서 - 관련 문서

③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항만 실현(I -2-③)

항만정책과 (044-200-5911 / 5912)

□ 추진배경 (목적)

- 국내 항만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KMI, '23.12)
 - '총' 물동량은 최근 10년간('13~'23) 연평균 1.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컨'물동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2.3%로 '총' 물동량 대비 높은 수준
 - * '총': ('22) 15.5억톤 → ('23) 15.5억톤 → ('24) 15.8억톤 → ('30) 18.9억톤
 - ** '컨': ('22) 2,882만TEU → ('23) 2,957만TEU → ('24) 3,029만TEU → ('30) 3,854만TEU
- 2050 국가 탄소중립, 수소경제 활성화 등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항만의 역할과 기능을 준비할 필요성 증대
 - * (항만 여건) ① LNG, 해양재생에너지 등 수소생산 원료 확보용이, ② '30년 이후 수소 수입 및 내륙유통 필요, ③ 물류 모빌리티, 배후산업단지 등 수소 소비 잠재력 高
- 세계 해운·항만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연관 산업 육성 등 항만부가가치 제고 추진
 - 선박 대형화, '컨' 물동량 증가 등에 대비한 진해신항 개발, 단순 물류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산업과 연계해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배후단지 공급 등 고부가가치 항만정책전략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탄소중립) 2050 국가 탄소중립, 수소경제 활성화 등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항만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위해 탄소중립 항만 구축 기본계획 수립
 - 항만 내(운영시설·장비, 선박 등) 탄소저감 방안 마련 및 신재생 에너지 도입방안 마련과 함께, 국가 전체의 친환경에너지 수요 증가를 고려한 안정적인 수입·저장 시설 도입 추진

- (항만기본계획) 선박 초대형화, 글로벌 얼라이언스 강화 등 해운·항만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다양한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유치·연계(무역항)와 지방 소멸위기 대응, 국가 해양영토 수호를 고려한 접근성 제고·정주여건 개선(연안항)등을 목표로 항만별 특성화 전략에 맞는 인프라 확충 방안 수립
- (연안항 추가 확충) 신규 연안항으로 지정된 격렬비열도항(충남 태안)과 진촌항(경남 통영)의 항만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서해중부 영해기점에 위치한 격렬비열도항을 해군, 어업관리단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계획 수립
 - 진촌항의 접근성 개선 및 관광객·도서민 편의증진 등을 위한 시설보강·확충계획을 수립하여 관광특화 연안항으로 발전
- (적정하역능력) 선박 대형화, 항만 자동화 등 항만·물류 여건 변화, 부두별 운영전략 등을 고려한 적정하역능력 산정방법 개선을 통하여 항만개발규모 및 시기에 대한 신뢰성 제고
 - 부두별 하역 장비, 운영실적 등을 분석하고 기존의 산출방식을 입체적(시뮬레이션 방식과 산정식 병식 조합)으로 개선
- (항만배후단지) 항만배후단지 구역별(단계별) 사업시행방식 (공공개발, 민간개발) 결정 기준 마련
 - 항만배후단지 발전방안 연구 성과로 도출된 평가지수를 적용하고, 임대수요 및 항만공사의 추진의향 등을 고려하여 마련
- (제도개선)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투자의지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항만법령」 개정(규제 완화)

- 2종 항만배후단지에 위험시설, 장례시설 등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허용하여 입지시설 확대
- (항만관리체계 고도화) 기존 항만시설에 대한 활용성 제고 및 항만운영 현황을 고려한 항만 분류체계(처리화물, 관리주체별) 개선
 - 부두별 화물 혼재처리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복합기능 부여 등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
 - * 혼재 비중이 높은 품목의 통합 또는 추가 화물 기능 부여(일시적) 등 부두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현행 항만 분류체계(국가관리항 ↔ 지방관리항)의 타당성 검증과 합리적인 국가관리무역항 지정·해제 기준 마련
- (국제협력) 항만분야 국제협력을 통해 동북아(한·중·일)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생 발전 및 국가위상 제고
 - 한·중·일 3국 간 항만 분야 정책 및 기술교류 협력(탄소중립, 스마트항만 정보화 협력 등)을 통해 동북아 국가의 항만 공동 번영 및 상생 발전 방안 논의
 - * '24.2월 국제협력 용역 착수, '24.11월 한·중·일 항만국장회의 참석 추진(중국 개최)
 - 전세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PIANC(국제수상교통 시설협회), IAPH(국제항만협회) 등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확충 및 국가위상 제고
 - * '24.5월 PIANC 총회, '24.10월 IAPH 컨퍼런스 및 총회
- (집행관리) 항만SOC사업 집행을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 회의 개최(분기별) 및 현장점검(연1회 이상) 실시
 - 재정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원인분석 및 집행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가 집행 가능 사업발굴로 집행 제고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항만적정하역능력 착수보고회 개최	'24.1월	국정 40-3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 방침	'24.1월	국정 40-3
	항만시설 추가소요 확인을 위한 지자체·관계기관 수요조사 실시	'24.3월	국정 40-3
2/4분기	신규 연안항 기본계획(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24.5월	국정 41-5
	주요항만별 신규 친환경에너지 관련시설 배치계획(안) 수립	'24.6월	국정 40-3
	스마트 메가포트 미래비전 수립	'24.6월	국정 40-3
3/4분기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24.8월	국정 40-3
	신규 적정하역능력 개정방안 보고(내부)	'24.9월	국정 40-3
	탄소중립 항만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24.9월	국정 40-3
4/4분기	동북아 한·중·일 항만국장회의 참석 및 공동연구과제 발표	'24.11월	국정 40-3
	주요항만 대상 신규 적정하역능력 시범적용 및 수급분석	'24.12월	국정 40-3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사업모델 마련	'24.12월	국정 40-3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개발·운영주체, 지자체 등으로부터 항만시설 신규 반영, 변경 등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 쟁점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 후 관계기관, 지자체 등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의 지속
 - * 지방청, 지자체, 항만공사, 해군, 해경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지속 수행 예정
- 항만의 적정하역능력은 신규 항만의 개발 여부, 시설 규모 등을 판단할 때 핵심적인 요소로 활용되므로,
 - 관련 업·단체 전문가 세미나, 관계기관 협의 등 이해관계자 부두운영사, 항만공사 등)와 충분한 소통 추진
-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의 공급 부족에 따라 인근 내륙부지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해 관계기관 TF 구성·운영
 - 부산항 신항·진해신항 주변지역의 규제구역(GB 등)을 항만배후 단지 용도로 지정·활용하기 위한 정부·지자체 공동 협력 필요
 - * 해수부, 경남도, 창원시, BPA, 경남개발공사 등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1/4분기	설명회	신규 연안항 기본계획 관련 지자체·지역주민 설명회	'24.1월
	간담회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관련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4.3월
2/4분기	간담회	항만적정하역능력 재산정 관련 의견수렴 및 간담회 개최	'24.6월
3/4분기	설명회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관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	'24.7월
	현장방문	항만배후단지 지정 후보지 방문	'24.9월
4/4분기	공청회	항만적정하역능력 재산정 관련 공청회 개최	'24.11월

☐ 기대효과

- 대내외 여건 변화 및 전망에 대응하여 국내 항만의 양적·질적 성장을 통한 대외 경쟁력 제고
- 단순 화물처리에서 벗어나 처리화물 및 항만기능을 전략적으로 다양화하고, 항만입지와 지역별 산업 특성에 따라 신산업을 육성하여, 부가가치·일자리 창출
-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배출 완화, 소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등 항만과 인접 도시가 협력하여 환경·안전 문제에 대비

☐ '23년도 미흡부진과제 개선계획 : 해당없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중장기 항만정책 수립 및 국제협력 (가중치 50%)	-	-	-	100%	중장기 항만정책 수립을 위한 항만시설 추가소요 판단기준 개정안 마련, 규제개선 등을 반영한 제도개선 및, 항만관련 국제협력 달성여부를 목표치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시설 추가소요 판단기준(적정하역 능력) 개정 자체안 확정 (20%) - 규제개선 등 수요자 관점의 항만법 하위 법령 개정(20%) - 항만 분야 국제적 이슈 대응을 위한 동북아 협력 프로젝트(10%) 	관련문서 등
② 탄소중립 항만구축 기본계획 수립 (가중치 50%)	-	-	-	100%	항만 분야의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 하고 친환경에너지 시설 도입 방안 및 평면계획 마련을 위한 목표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의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발표(20%) - 친환경에너지 도입 등 주요항만별 평면배치계획 마련 (30%) 	자체자료

□ 4항만 물류서비스 경쟁력 강화(I-2-④)

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3, 5755, 5757)

□ 추진배경 (목적)

○ 국가 수출입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항만의 물류 경쟁력**을 지속 제고하고,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 지원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추진

- ('컨' 터미널) 중동전쟁, 홍해 사태 등 대내외 변동 대응을 위한 **항만 수출입 물류 지원 정책 적기 이행**

- (항만배후단지) 항만배후 물류 기능의 복합·다양화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 기업 유치가 가능한 전략 거점 육성

* 근거 : 「항만법」 및 「물류정책기본법」, 「자유무역지역법」

- (해양산업클러스터) 유향 항만시설의 고부가 가치 **新해양산업** 집적·융복합화 및 입주기관, 기업유치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

* 근거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 (해외물류 인프라) 미·중 디커플링, 소비시장 인근 생산기지 이전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리스크에 대응해 **공공 주도의 해외물류거점 다변화** 추진

*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61조(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컨' 항만 경쟁력)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부두 상업 운영* 개시 및 국내 최초 컨 터미널 기능 재배치**로 항만 운영 효율화 제고

* 사람이 직접 장비에 탑승하여 조작하지 않고 무인·자동제어를 기반으로 "안벽(선박↔안벽), 이송(안벽↔야드), 야드(적재·보관)"의 모든 영역이 자동화가 된 항만

** (동원) 북항 신감만 → 부산항 신항, (허치슨) 자성대 → 신감만, 감만부두 1번 선석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항만 물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수립(‘24. 下)하고, 주요 항만 운영 상황 및 물동량 추이 점검 등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수출입 물류 지원 적기 이행
- (항만배후단지) 기업 경제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우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 제고
 - 배후단지 내 부가가치 창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전대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추진
 -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추진, 특화구역 내 연관 산업 집적화 등 기업 투자유치 기반 확대 및 마케팅, 우수물류기업 인증제 실시
- (해양산업클러스터) 부산항,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기업 유치를 위한 핵심산업 재검토 및 기업 지원에 관한 활성화 방안 마련
 - 부산, 광양의 지역별 연계산업 특성을 감안한 클러스터 TF를 각각 구성하여 핵심산업* 재검토 및 인센티브 확대 방안 논의
 - * 부산항 : 해양레저기기/장비제조, 선박·해양플랜트 부품제조업
 - 광양항 : 해운항만물류R&D산업(연구개발업 : 테스트베드)
- (해외물류 인프라) 해외 유망거점 물류인프라를 추가 확보하고,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강화
 - 기업의 물류 수요가 많은 미주, 베트남 등 주요 거점에 물류 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고, 홍보 마케팅 활동 및 협력 강화**를 통해 해외 공동물류센터 활성화 도모
 - * 미주 LA, 베트남 호치민 (‘24.下)
 - ** 세미나, 해외사업 투자설명회, 현지 기업대상 타겟마케팅, 물류기업 간담회
 - 해수부, 국토부 주관 민관합동 국제물류 실무TF를 구성·운영하여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방안 마련
 - * 대륙별 산업과 물류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여, 단기·중장기 확보 지역 및 대상, 우선순위 등을 정한 마스터플랜 수립(‘24. 下)

-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컨설팅* 및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 해외물류사업의 타당성 조사·분석 및 화주-물류기업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 해외유망 물류시장 사전 분석, 유망 물류시장 투자환경·유망사업 분석, 사업화 및 현지안착 지원 등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3년도 전국 주요 항만 '컨' 물동량 분석	'24.1월	
	1종 항만배후단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24.3월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대상기업 선정	'24.3월	국정 40-2
2/4분기	부산항 신항 7부두 상업운영 실시	'24.5월	
	로테르담 콜드체인 물류센터 사업타당성 조사 실시	'24.6월	국정 40-2
	글로벌 리스크에 따른 항만 적체율 점검	'24.6월	
3/4분기	컨테이너 항만 물류 통계책자 발행	'24.8월	
	인니 프로볼링고 물류센터 운영 개시	'24.9월	국정 40-2
	글로벌 컨퍼런스 내 항만배후단지 합동 투자유치 활동	'24.9월	
4/4분기	항만물류 경쟁력 제고방안 수립	'24.12월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24.12월	
	베트남 복합물류센터 및 미국 LA 물류센터 운영 개시	'24.12월	국정 40-2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컨터미널) 글로벌 리스크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수출입 항만 물류를 든든하게 지원하고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해 현장 회의 추진
- (배후단지) 2024년 항만별 항만배후단지 제도개선 및 기업 유치활동 추진사항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회의 및 현장방문 실시
- (해양산업 클러스터) 클러스터 TF운영을 통한 지역별 경제·산업 특성과 연계한 새로운 정책방향 설정 및 기업지원 등 활성화 방안 마련
- (해외물류 인프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및 친환경·디지털 전환 시대 정부정책 마련, 해운·항만·물류·조선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투자 협력 확대 및 추가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수렴 등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1/4분기	간담회	공급망 리스크 대응 물류기업 CEO 오찬 간담회	'24.2월
2/4분기	토론회	해운·항만·물류·조선 산업 토론회	'24.5월
	회의	중동전쟁, 홍해사태 등 불안정한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항만물류 관계기관 운영상황 점검회의	'24.6월
3/4분기	설명회	해외물류 투자 설명회	'24.9월
4/4분기	현장방문	전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운영·관리 현장 방문(만족도 조사 병행)	'24.12월

□ 기대효과

- **(항만 경쟁력 강화)** 컨테이너 물류의 안정성·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가 컨테이너 항만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성장 도모
 - ※ 부산항 완전 자동화 부두 개장으로 기존 터미널 대비 생산성 최대 20% 향상, 약 3,400억 규모의 국산 장비 도입으로 국내 스마트 항만산업 기반 확충 등
-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 물류·제조 기업의 신규 투자, 기업 활동 확대로 지역 생산 유발 및 일자리 창출 등 항만 인근 지역 경제 활성화
- **(물류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우리 중소·중견 해운물류기업의 수입원을 다변화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회 제공
 - * (글로벌 물류기업) 독일 DHL(220개국, 854개), 미국 UPS(200개국, 1,801개)
 - ** (우리 물류기업) LX판토스(39개국 360개), CJ대한통운(34개국 249개), 현대글로벌로지스(35개국 84개)

□ '23년도 미흡부진과제 개선계획

- 중장기 해운물류 인프라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 국제물류 체계 구축
 - 공급망 리스크 대응 및 민관협력 강화 물류기업 CEO 오찬 간담회 개최('24.2.6)
 - 민관합동 국제물류 실무 TF를 통한 국제물류 종합대책 마련('24.7)
 - * 해외 복합물류운송체계, 스마트항만·물류, 핵심광물 물류네트워크 구축 등
- 정책효과 증진을 위해 사업 재구조화 및 신규사업 추진
 - KMI 지원센터 개편 추진('24.上)
 - *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가칭) 국제물류기본법」 제정 검토, 화주-물류기업 동반진출 시스템 구축, AI 기반 통계시스템 개편 등

- 공공·민간의 물류인프라 수요 발굴 및 이차전지, 반도체, 광물자원 등 현지 생산거점에 대한 물류인프라 투자 추진('24.下~)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민자유치 및 글로벌기업유치(Ⅲ-3-일반재정⑩)				
① 민자유치 및 글로벌기업 유치(5066)				
	▪ 물류기업 유치지원(301)		교특회계	3,845
	▪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302)		교특회계	2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① 항만물류 활성화 추진율(%) (가중치 60%)	-	-	-	100	<p>㉠ '24년 주요 항만 '컨' 물동량 목표치는 최근 5개년 평균 증가율 수치인 0.9%보다 소폭 상향된 1% 증가율을 반영하여 2,632TEU로 설정 후 달성률을 목표치로 설정(70%)</p> <table><tr><td></td><td>19</td><td>20</td><td>21</td><td>22</td><td>23</td></tr><tr><td>물동량</td><td>2,513</td><td>2,492</td><td>2,582</td><td>2,498</td><td>2,607</td></tr><tr><td>증가율</td><td>1.0</td><td>△0.8</td><td>3.6</td><td>△3.3</td><td>4.4</td></tr></table> <p>* 물동량은 다음 월 20일경 집계되며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서 제출시기를 고려하면 12월 물동량은 적용 불가('19~'23실적치 역시 1-11월 집계 결과)</p> <p>㉡ 업무처리 내용·과정·결과 만족도 (점) 70점 이상 달성 시 달성률 을 100%로 목표치 설정(30%)</p> <p>-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대상 최 초로 진행하는 만족도 조사임을 감안하여 보통(60점)과 우수(80점) 사이인 70점 이상을 목표치로 산출</p>		19	20	21	22	23	물동량	2,513	2,492	2,582	2,498	2,607	증가율	1.0	△0.8	3.6	△3.3	4.4	<p>㉠ 주요 항만 컨물동량(TEU) (1~11월) 목표 대비 달성률 (70%)</p> <p>* '24년 목표 : 2,632TEU</p> <p>㉢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만족도 조사 결과 목표 대비 달성률 (30%)</p> <p>* '24년 목표 : 70점</p>	<p>㉠ 항만 물동량 통계 시스템(port-mis) 확인</p> <p>㉢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p>
	19	20	21	22	23																				
물동량	2,513	2,492	2,582	2,498	2,607																				
증가율	1.0	△0.8	3.6	△3.3	4.4																				
② 해외물류인프라 지원 만족도(점) (가중치 40%)	-	-	-	70점	<p>해외물류센터 이용기업 및 해외물류 시장 개척지원 사업 지원기업 대상 만족도 실시</p> <p>* 기존 해외물류센터(4개소)를 이용한 국내 물류기업과 '24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대상</p>	<p>기업대상 설문조사 시 100점 만점의 70점 기준</p>	<p>KMI 지원센터 주관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p> <p>* 공신력 있는 제3의 전문기관 의뢰</p>																		

㉔ 민간참여를 통한 항만 고부가가치 창출 및 해외협력 기반 마련(Ⅰ-2-㉔)
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3/5964)

□ 추진배경 (목적)

- (민간개발) 민간투자를 통해 재정부족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창의와 경영기법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항만시설을 확충·운영하기 위함
 - (민자부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민간투자법」 제1조)
 - (배후단지) 항만배후단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능력을 갖춘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항만법」 제50조제1항)
 - (비관리청) 부족한 재정 여건에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재정 부담 완화 및 항만시설의 적기 확보 도모(「항만법」 제9조제2항)
- (해외항만개발) 국내 항만 및 항만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증진 및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항만법」 제103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민간개발) 민간자본을 활용한 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통한 항만시설 적기 확충 추진
 - (민자부두)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에 따라 양곡부두*를 신항으로 적기 이전 추진**하고, 운영중인 민자사업 현장점검(반기 1회) 추진
 - * 5만톤급 1선석, 부지 75천㎡ / 1,910억원 / 공사 36개월, 운영 30년
 - ** 협약 체결('24.4) → 공사 착공('24.12) → 공사 준공('27.下)
 - (배후단지) 인천신항(1-1단계 3구역& 1-2단계)* 등 6개 사업**에 9,406억원을 투입하여 항만 배후단지 463만㎡ 확보 추진(~'30년 이내)
 - * 협상 재개('24.4) → 협상 완료('24.9) → 실시협약 체결('24.12.)
 - ** (개발) ①부산신항 웅동(2단계), ②인천신항(1-1단계 2구역), ③평택·당진항(2-1단계), ④평택·당진항(2-3단계) / (신규) ⑤인천신항(1-1단계 3구역& 1-2단계), ⑥인천남항 2단계

- (비관리청) 연간 176건, 2조 1,378억원(최근 3년 평균)* 허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렴도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

* ('21) 1조 7,069억 원(202건) → ('22) 2조 5,420억(171건) → ('23) 2조 1,645억(156건)

○ (해외항만개발) 사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및 체계적인 사업 관리와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사업 추진동력 확보

- (지원전략) ① 기업 수요조사, ② 수원국 요청, ③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협력사업을 발굴·선정하고 차별화된 지원 추진

* 인도적 차원의 ODA형 사업과 국내기업 수주 지원을 위한 성과창출형 사업

- (수주지원) 국내기업의 해외항만사업 수주 활동 및 조사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21년) 7억원 / 2건, ('22년) 7억원 / 2건, ('23년) 9억원 / 3건, ('24년) 6억원 / 2건

- (컨소시엄) 실질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만+물류+운영' 등 항만 연관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 동반 진출 견인

* 관심 기업의 투자 및 수주성과 창출을 위해 재외 공관을 적극 활용하여 외교활동 지원

- (네트워크) 해외 항만관계관 초청 연수, 국제기구 공동세미나, 민관 정기협의회 개최 등을 통한 국내·외 네트워크 저변 확대

* 협력국과 우호협력 증진 및 수주외교, 정보공유 및 소통을 통한 민관협력 진출방안 모색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관리·운영 개선 및 청렴 워크숍 개최	'24.1월	
	해외항만개발 시장진출 지원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공모	'24.2월	
	인천신항 1단계(2구역)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준공	'24.2월	국정 40-3
	우크라이나 항만 재건 협력을 위한 우크라이나 항만관계관 초청 연수	'24.3월	
2/4분기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24.4월	국정 40-3
	인천신항(1-1단계 3구역& 1-2단계)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협상 재개	'24.4월	국정 40-3
	평택·당진항(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실시계획 승인	'24.6월	국정 40-3
3/4분기	아태지역 해양연계성 강화를 위한 UNESCAP 협력 포럼 개최	'24.7월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관리·운영 개선 및 청렴 워크숍 개최	'24.9월	
	인천신항(1-1단계 3구역& 1-2단계)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협상 완료	'24.9월	국정 40-3
4/4분기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24.10월	국정 40-3
	평택·당진항(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착공	'24.12월	국정 40-3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민간개발) 운영중 민자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부두 운영 종사자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등 의견 청취를 통해 부두 운영여건을 개선
- (해외항만개발) 민관협력 진출방안 모색을 위한 전략회의 및 협의회,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해외 관계자 초청 워크숍 추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1/4분기	회의	해외항만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회의	'24.3월
2/4분기	워크숍	해외항만시장 개척을 위한 다자개발은행 관계자 초청워크숍 개최	'24.5월
	현장방문	상반기 항만민자사업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24.6월
3/4분기	회의	항만분야 민자사업 관리운영 개선 의견수렴	'24.9월
	회의	해외항만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회의	'24.9월
4/4분기	협의회	해외항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회 개최	'24.12월
	워크숍	아태지역 지속가능한 항만 개발을 위한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개최	'24.12월
	현장방문	하반기 항만민자사업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24.12월

□ 기대효과

- (민간개발) 양곡부두 확보, 항만배후단지 463만m² 공급과 연간
2조 1천억원 규모 비관리청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경제적 파급
효과 기대
 - 또한, 민간개발을 위한 민간 참여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본부,
지방청)의 청렴도와 공정한 업무능력 향상으로 국민신뢰도 제고
- (해외항만개발) 국내기업의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및 수주
성과 창출로 국내 항만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단순 항만개발뿐만 아니라, 물류·운영 등 연관기업 동반 진출을
통한 물류거점 확보 및 글로벌 물류 공급망 구축 기여

□ '23년도 미흡부진과제 개선계획 : 해당없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평택·당진항(I -2-일반재정⑥)				
①	신항만 개발(5050) - 평택·당진항(317)	교특회계	- (83)	2 (273)
	▪ 평택·당진항 최소운영수입보장(MRG)(320)		-	2
인천북항(I -2-일반재정⑥)				
①	신항만 개발(5050) - 인천북항(319)	교특회계	300 (300)	110 (110)
	▪ 인천북항 민간운영수입보장(MCC, MRG)(320)		300	110
목포신항(I -2-일반재정⑥)				
①	신항만 개발(5050) - 목포신항(321)	교특회계	89 (210)	95 (142)
	▪ 목포신항 민자사업운용수입보전금(MRG)(320)		89	95
포항영일만신항(I -2-일반재정⑥)				
①	신항만 개발(5050) - 포항영일만신항(322)	교특회계	64 (268)	78 (187)
	▪ 포항영일만항 최소운영비용보전(MCC)(320)		64	78
울산신항(I -2-일반재정⑥)				
①	신항만 개발(5050) - 울산신항(325)	교특회계	108 (1,194)	110 (1,388)
	▪ 울산신항 최소운영수입보장(MRG)(320)		108	110
항만 민자유치 및 글로벌 기업유치(I -2-일반재정⑥)				
①	민자유치 및 글로벌기업유치(5066)	교특회계	73 (123)	74 (133)
	▪ 항만민자유치 및 해외개발협력사업(300)		73	7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① 항만 민자사업 추진율(%)(공통) (가중치 50%)	100	100	10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 민간투자사업은 계획부터 운영까지 장기간 소요됨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절차별*로 당해연도 목표를 설정 * 민간제안사업 절차 : 제안서 접수 → 적격성 조사 → 심의회 심의 → 제3자 제안공고 → 제안서 평가 → 협상 대상자 지정 및 협상 → 사업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 실시설계 → 관계기관 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 → 착공 → 준공 → 운영 등 최소 5~10년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민자사업 추진(100%) -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1건) - 민자부두 착공(1건) * 측정방법 : (실적건수/목표건수)× 100% 	협약서, 착공계 등
② 해외항만개발 협력 지원체계 구축추진율(%)(공통) (가중치 50%)	100	100	10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은 사업발굴 단계부터 상대국과의 협의 등 사업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사업완료 후 실제 사업화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 등 사업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연간 4건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추진 * 사업발굴(협력국, 국제기구, 민간기업 등) → 사업검토(전문가 자문 등) → 사업내용협의(수원국 협의 및 협약 체결) → 사업수행 ** EDCF(수은), ODA(KOICA), 다자개발은행 재원 등을 통해 수원국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투자설명회 및 각종 홍보 등 직간접적으로 국내기업의 수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추진(100%) - 해외항만개발 타당성조사 착수(4건) * 측정방법 : (실적건수/목표건수)× 100% 	용역계약서, 착수계 등

⑥ 항만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항만운영의 안정성 확보(I-2-⑥)

항만운영과 (044-200-5771 / 5773 / 5775)

□ 추진배경 (목적)

- (항만서비스)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연료로 선박연료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친환경연료 공급 여부가 항만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
- (정량공급)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을 통해 면세유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국내 선박연료공급산업의 선진화 기반 마련
- (선박저속운항)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항만 저속운항해역에서 선박의 연료사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저속운항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적선사·물류기업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항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만 연관 산업 역량 제고, 신시장 개척기반 마련 및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추진

가. 항만운송(관련) 산업 역량제고를 통한 항만경쟁력 강화

- (정량공급) 선박연료공급 업계의 만성적인 면세유 불법 유통, 낮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
 - * (법령 개정) 연료공급업자가 정량 측정장비와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하는 정량공급 도입법안(항만운송사업법 정부안) 국회 제출('23.12)
 - (시범사업 추진) 정량 측정장비의 시범 설치·운영을 통해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장비의 선정, 운영, 검사 등 제도 세부 규정 마련
 - * 급유선 업계는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선박당 약 25억원)을 우려하는 상황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병커링 운송료를 현실화하고 측정장비 구입을 위한 정부 보조도 검토
 - ** 정량공급 제도 도입을 위한 '질량유량계 설치, 효과 검증 시범사업' 예산 12억원 확보 추진 중

- (항만운송사업 등록·신고기준 재정립)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신고 기준의 개정을 통해 현장업무의 현실화 추진

* (항만운송사업) 항만하역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항만용역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선용품공급업

- (제도개선) 항만별 물동량, 입출항 척수·선박톤수, 하역장비·선박 가액·크기 변동 등을 고려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신고기준 재정립

나. 친환경 선박연료 해운항만 공급망 구축을 통한 신시장 개척기반 마련

-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항만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을 위한 공급망 구축, 실증을 통한 제도 기반 마련, 국제 항만 협력 등
- (공급망 구축) 투자수요 대응을 위해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편드를 신설하고 글로벌 선사 및 해외 항만과의 공급망 협력
- (제도 마련) 친환경 연료 병커링시 안전·기술 기준 마련 등 병커링 실증을 통한 관련 제도 기반 구축
- (LNG병커링 고도화) LNG병커링 R&D를 통해 하역+병커링 동시작업 절차서를 마련하고 관련 기술·제도 고도화

다. 이용자 중심의 항만서비스 개선·운영

- (예선 운영 개선) 예선운영협의회 개편*을 통한 예선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고, 국적선사의 부담감소를 위해 운영 중인 예선사용 면제기준을 개선해** 선사 비용부담 완화

* (기존) 위원 중 1명 도선사 포함 → (변경) 예선사용자와 예선업자가 합의해 추천한 전문가

** 도선과 동일하게 예선사용을 면제받은 선장이 3개월 내 재승선시 지속 면제

- (도선사 교육강화) 선박 대형화에 따른 도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추가교육, 사고예방 안전교육 강화 등을 통해 도선 품질 제고

- (선박저속운항 참여율 제고) 4대 대형항만 인근에 저속운항 해역을 지정하여, 항비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한 선박의 저속 운항* 유도

* 10~12 knot('컨'선·자동차운반선 12노트, 액체화물운반선 10노트)

- (적용대상)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에서 운영 중이며, 3천 톤 이상 외항선 중 입출항 비중 및 저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항만별로 지정
- (인센티브) 기준을 달성한 선박의 선사에게 입출항료 감면(15~30%)* 및 저속운항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액체화물선(울산항) 저속운항 업무를 대행하는 해운대리점에 신규 인센티브** 제공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기간 선박입출항료 감면을 10%p 상향(25~40%)

** '23.1~3월까지 시범운영 결과 참여율 24% 상승, '24년부터 인센티브 제공(건당 3만원)

- (항만물류정보) PORT-MIS 고도화, 관계기관 정보연계*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 노후된 재해복구(DR)시스템 재구성을 통한 안정적 환경 구축

* 선박입출항정보, 관제정보, 시설신청정보, 선박제원정보 등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울산항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그린 메탄올 병커링 실증	'23.2월	국정 40-4
	부산항 LNG 병커링 실증	'23.2월	국정 40-4
	메탄올 병커링 표준작업절차 등 마련 연구용역 발주	'23.2월	국정 40-4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고도화 사업 용역 발주	'24.2월	
	'23년 참여선사 인센티브 지급	'24.3월	
2/4분기	선박연료공급업 정량공급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협무 협약	'23.4월	국정 40-4
3/4분기	친환경 연료(LNG, 메탄올)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 개정 및 합리화	'23.9월	국정 40-4
	저속운항 참여율 저조 항만 점검	'24.9월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개정	'24.9월	
4/4분기	메탄올 병커링 표준작업절차 등 마련 연구용역 준공 및 표준안 업계 배포	'23.12월	국정 40-4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고도화 사업 용역 준공	'24.12월	
	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 관련 관계기관 회의	'23.11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친환경 연료별 수급 관리, 현장의 공급여건을 점검, 금융·기술 지원, 항만 운영 협력 등을 위한 **친환경 연료 벙커링 컨퍼런스 개최**

* (주최) 해양수산부 (주관) 울산항만공사

** (참석대상) 해양수산부, 4대 항만공사, KR, 해진공, 해운협회, 해운조합, HMM, 머스크라인, CMA-CGM, H라인해운, 가스공사, 현대중공업 등 **관계기관 30개사 내외**

- **저속운항 참여도 제고**를 위해 **4대 항만공사** 및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선사대리점 담당자 간담회**를 통해 홍보 및 현장 의견수렴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1/4분기	간담회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협의체 구축 및 컨퍼런스 개최	'24.1월
	회의	해수부 항만물류정보 중계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회의 개최	'24.3월
2/4분기	점검회의	해수부 항만물류정보 중계망 사업자 현장점검	'24.6월
3/4분기	간담회	항만공사 및 선사대리점 등 간담회	'24.9월
4/4분기	간담회	항만공사 및 선사대리점 등 간담회	'24.11월

□ 기대효과

- 정량공급제도 도입을 통해 정체된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성장** 및 **항만의 경쟁력 강화**
- 항만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선사와 수출입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국제 탄소중립 규제에 선제적 대응
- **항만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요인인 선박의 저속운항을** 통해 연료 사용량 절감에 따른 **미세먼지 및 탄소배출 저감**

□ '23년도 미흡부진과제 개선계획 : 해당없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항만운영 및 관리(Ⅲ-4-일반재정③)				
①	해운물류지원(6133) ³⁾	일반	25	19
	■ 항만하역장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353)	일반	25	1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① 친환경 선박연료 병커링 실증 실적 달성률(%) (가중치 60%)	-	-	-	100	LNG, 메탄올 등 항만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을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선박에 병커링 실증을 통해 제도를 검증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	①친환경 선박연료 병커링 실증 건수(3척) (50%) ②친환경 선박연료 병커링 관련 제도 개선 건수(2건)(50%)	방침자료, 관련공문 등
② 선박 저속운항 참여율(%) (가중치 40%)	59.8	68.3	73.5	73.5	미세먼지 종합관리 계획('24) 및 최근 추세치 고려 설정	대상 항만 및 선종에 해당하는 입항선박 중 저속운항 참여선박 (저속운항 참여척수/입항 척수)*100%	PORT-MIS에 등록된 자료 활용

7 선진형 항만안전 및 항만보안시스템 구축(가칭)(I -2-⑦)

항만안전보안과 (044-200-5791 / 5778 / 5795)

□ 추진배경 (목적)

- (항만안전) 물동량 증가, 항만 자동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민간의 항만안전관리 역량 향상 및 수출입 물류 경쟁력 강화
- (항만보안) 선사 및 수출입기업들이 무역항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무역항 보안사고 예방 및 항만 테러 방지 역량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제도 개선) 「항만안전특별법」 및 '24년 개정된 「국제선박항만 보안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항만안전) 자체안전관리계획 미준수자 제재 규정, 항만안전 점검관 업무범위 명확화* 등 내용의 「항만안전특별법」 개정 추진

* (現) 하역장만 지도점검 가능 → (改) 배후단지까지 확대하여 항만구역 전체 안전관리 수행

- 부두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시설·장비 기준안을 마련해 부두별 사고 예방 및 민간 자율 항만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항만보안) 개정 법령 시행 대비 신설된 제도*의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처분 유예, 항만시설 촬영결과물 발간·복제·배포 허가 등

- (점검관 확충) 안전업무 공백 해소를 위한 항만안전점검관 증원 추진

* '23년 국정감사 시 항만안전점검관 정원 부족 지적에 따라 '24년 행안부 정기 직제 대응

- (보안인프라 강화) 주요 무역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항만 하역장비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신종 보안위협 대응방안 마련

* 부산·인천·울산항 등 3개 항만에 52개 장비 구축 / '24년 / 국비 32.4억원(1차년도)

** 항만 사이버보안 국내외 사례조사, 실태조사 및 사이버보안 강화방안 마련 등

- (보안계획) 제2차 국가항만보안계획('18~'27)의 이행사항 점검 및 새로운 항만 보안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정계획* 수립 추진

* 보안사각지대 해소, 시설·장비 고도화, 보안인력·보안료 등 추진과제 재검토

- (보안역량 강화) 전국 항만 합동보안훈련* 및 항만보안 우수 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항만 보안인력 전문성 강화 지원

* 전국 항만시설 보안담당자,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보안 관계기관 등 참여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및 통합관제 조사분석컨설팅 용역 발주	'24.3월	
	2024년도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24.2월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 방안(안) 마련	'24.3월	
2/4분기	제2차 국가항만보안계획 수정계획 시행	'24.4월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우수사례집 배포	'24.4월	
3/4분기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 개정	'24.7월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실태 점검	'24.7월	
	항만 하역장비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안) 마련	'24.9월	
	항만안전점검관 증원 추진	'24.9월	
4/4분기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용역 발주	'24.11월	
	전국 항만 합동보안훈련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24.11월	
	제2회 대한민국 항만안전대상 개최	'24.11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중대산업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재해예방시설·장비 수요 및 적절성 판단을 위한 국비보조사업 현장 점검

* (참석) 해양수산부, 항만물류협회, 항만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장소) 11개 무역항 항만사업장

- 항만안전 제도 개선에 대하여 항만 안전 관계자들의 의견 교환 및 항만현장 안전 개선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참석) 해양수산부, 항만안전점검관, 항만공사 항만안전점검요원, 안전 분야 교수 등

- 민간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항만 위험성 평가 표준안 및 안전시설 기준안 마련 연구용역 회의

* (참석) 해양수산부, 항만물류협회,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종사자 등

- **항만시설 침입탐지장비**(지능형 CCTV, 감지기) 현장 실증테스트
용역 결과에 따라 합리적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 (참석) 해양수산부, 한서대학교(용역진), 항만공사, 한국선급
- **‘항만경비일원화 등 효율적 항만보안 운영체계 마련 검토용역’**
결과 설명, **노조 의견 청취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
* (참석) 해양수산부, 보안공사 및 항만관리 노조 대표
-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운영사의 **항만 사이버보안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 (참석)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PNC, DGT 및 용역진
- **무역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드론 탐지·식별·무력화
장비와 통합관제시스템 등 관련 **기초 교육 및 워크숍** 실시
* (참석)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보안공사 및 항만관리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1/4분기	간담회	항만시설 침입탐지장비의 합리적 설치기준 마련 간담회	’24.2월
	현장방문	컨테이너터미널운영사 사이버보안 현장점검	’24.3월
	현장방문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보조사업장 현장 방문	’24.3월
	간담회	항만경비일원화 등 효율적 항만보안 운영체계 마련 검토용역 간담회	’24.1~3월
2/4분기	회의	안티드론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교육 및 워크숍	’24.6월
	간담회	항만안전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24.6월
3/4분기	회의	항만 위험성 평가 표준안 및 안전시설 기준안 마련 연구용역 회의	’24.8월

□ 기대효과

- 항만안전점검관 제도 운영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 국비 보조 등을
통해 **안전한 항만 작업 환경 조성**을 통한 **재해 저감 및 손실 예방**
- 항만보안 인프라 및 보안인력 역량 강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무역항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 항만 운영**을 지원

□ '23년도 미흡부진과제 개선계획 : 해당없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항만운영 및 관리(Ⅲ-4-일반재정③)				
① 항만운영 및 관리(5064)			75	67
■ 항만보안시설 확충(303)		교특회계	75 (75)	67 (67)
② 해운물류지원(6133)		일반	25	19
■ 항만하역장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353)		일반	25	1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① 민간의 자율적 항만안전관리 능력 강화 (가중치 50%)	-	-	-	92	최근 2년간 재해예방시설 지원 사업 평균 실행률(94) 및 항만 사업장 환경을 고려	항만사업장 재해예방시설 지원 사업 실행률(60%)+ 항만 안전 위해요인 시정조치 이행률(40%)	사업추진 실적 및 내부자료
② 항만보안사고 저감율(보안사고 건수, 하향)(공통) (가중치 50%)	-	-	-	100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16년 '항만보안 강화방안'을 기준으로 보안사건 건수와 최근의 항만보안 여건을 반영한 보안사고 건수의 평균(7.3)을 목표치로 설정 * 기준연도('16) 이전('11~'15) 보안사고 : 6.4건 / 최근('21~'23) 보안사고 : 8.3건	[1 - ((실적치 - 목표치) / 목표치)] * 100 * 목표치 : 7.35건 =[기준연도 이전('11~'15) 보안사고 건수(6.4건) + 최근('21~'23) 보안사고 건수(8.3)] / 2 ** 실적치 : '24 보안사고 발생건수	지방해양수산청 보고자료

(1) 주요 내용

□ 지능형 해상교통망 구축으로 해양사고 예방

- 해상교통 환경변화(풍력단지 개발 등)에 따라 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으로 국가 필수 해사수송로 확보 및 해양사고 예방

* 연안해역 선박통항 정보를 분석하고, 해상교통로 식별을 통한 해상교통망 구축

- 5cm 미만 위치 오차의 해양 PNT 시스템을 구축 및 전파 교란에도 정상 활용 가능한 지상파 항법서비스 제공

□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제공 및 신산업 육성

-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바다내비 신규 서비스 확대*, 기존 서비스 고도화**, 단말기 기능개선 및 신형 단말기 보급 등 추진

* △ 해양안전 음성정보(일일 바다날씨, 해양사고 등), △ 단말기간 문자서비스 시범운영(~'24.下)

** △ 원격의료지원(의료 전담인력 확대, 의료키트 개선 등), △ 연안여객선 원격모니터링(신규 정기항로 표시 기능 등), △ 항로안내지원(과거 선박항적을 결합한 기능 개선) 등

- (산업 육성)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추진 및 산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 협의회 운영(연중)

*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개정을 통해 △ 디지털 선박 건·개조, △ 디지털 등급기준 및 인증절차, △ 바다내비 체계 개방 등 지원 근거 마련 등

□ 글로벌 친환경선박시장 주도를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 (제도개선) 국가 기본계획('21~'30)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이행(매년), 친환경선박 국가인증제도 대상 확대*('24~)

* (기존) 선박 → (확대) 선박 + 기자재 / 인증제도 운영요령(고시) 개정 추진

- (기술개발) 저탄소선박 기술 국산화 및 무탄소선박 기술 선제적 확보
 - LNG·하이브리드 등 저탄소 연료 핵심부품(화물창, 전기추진 시스템 등) 국산화* 및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 원천기술(엔진, 연료전지 등) 확보**
 - * LNG탱크 설계 해외 의존(GTT社), 국내 전기추진시스템 선진국 최고기술 대비 약 20%
 - **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사업('22~'31, 2,540억원 ※해수부·산업부 공동) 등
 - 선박용 이동식 배터리 및 선박 개발('20~'24), 친환경 추진기술 실증용 선박(2천톤급) 건조 및 연구·실험동 건립 추진
- (보급확산) 친환경선박 보급계획 수립 및 자체 보급·지원 사업 추진, 타부처 관련 사업 현황점검 등 목표 이행·관리
 - (공공) 친환경전환 가속화를 위해 노후선박 상태평가(15척), 대체건조(7척) 및 대체 계획이 없는 저 선평 선박은 친환경 개조*(20척) 추진
 - *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설치 : 선박 배출 입자상물질을 필터로 거른 후 제거하는 장치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공공선박 친환경선박 전환척수(척)	15	48	27	27	'24년 친환경선박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공공부문 건조7척, 개조 20척을 더한 총 27척을 전환 목표로 설정	공공선박 친환경 전환 척수(27척)(100%)	방침문서 관련공문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고품질 위치정보 제공을 위해 위성기반 서비스 연계 필요

- (환경분석) 우리부가 개발 중인 지상기반 고정밀 위치정보의 해양 이용범위 확장을 위해 위성기반 서비스와의 연계 필요
- (갈등관리) 다부처 협력사업(과기정통부 주관)인 KPS*에 우리부 연구 성과를 연계해 위성기반 서비스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 한국형 지역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22 ~ '34, 약 3.7조, 위성 8기로 구성)

(4) 기타

□ 친환경 선박 관련 국제 규제 동향

- (IMO)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50년 국제해운 탄소감축 목표를 상향('08. 대비 50% → 100%↓)한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 채택

* (감축목표) '08년 대비, ('30년) 20~30%, → ('40년) 70~80% → ('50년) 100%

- 목표 달성을 위해 현존 에너지효율 규제*에 더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연료표준제, 탄소부담금 등 저·무탄소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규제 도입 예정('27~)

* ▲신조선 효율개선을 위한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현존선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에너지효율지수(EEDI), ▲저속운항, 최적항로 등 운항개선을 위한 탄소집약도지수(CII)

- (EU) “Fit for 55*” 발표, EU 내 운항선박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 본격화

*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90년 대비) 감축을 목표로 12개 재개정 입법안('21.7)

**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cheme), 지속가능연료제(FuelEU Maritime)

- (배출권거래제) EU 해역 내 운항 배출량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확보(거래)하여 제출토록 의무화('24 배출량 측정, '25 부과)

* EU 배출권거래제 적용 : '05년 철강, 화학, 시멘트 등 → '12년 항공 → '24년 해운

- (지속가능연료제) 무탄소 연료 전환을 위해, 선박 사용 연료유의 온실가스 함량(CO_{2eq}/MJ)을 단계적으로 제한('25~)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디지털 해상교통정보(바다내비) 제공 및 신산업 육성(I-3-①)

첨단해양교통관리팀 (044-200-6142 / 6143)

□ 추진배경 (목적)

- 정부 주도의 연안선박 대상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및 해양 안전정보(기상정보 등) 제공 등 바다내비 서비스 시행 중('21.1~)

- 서비스 이용자 증가*, 해상무선통신망 및 바다내비 시스템 연계 기관 확대** 등에 따라 안정적이고 다각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

* 단말기·앱 사용 선박 2.4만여척으로 증가('21.1월, 720척 → '23.12월, 2.5만척)

** 2개 기관(해경, 수협) → 6개 기관(해경, 수협, 軍, 국정원, 관세청, KRISO)

- 선박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 수립('23.10)

-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핵심기술·서비스 개발, 국내기업 제품 홍보 전시회·상담회 개최 및 민·관 협의체 운영 등 추진

* (목표) △21개 강소 수출기업 육성, △42개 핵심기술 확보, △세계시장 점유율 4.5% 달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바다내비 신규 서비스 확대*, 기존 서비스 고도화**, 단말기 기능개선 및 신형 단말기*** 보급 등 추진

* △ 해양안전 음성정보(일일 바다날씨, 해양사고 등), △ 단말기간 문자서비스 시범운영(~'24.下)

** △ 원격의료지원(의료 전담인력 확대, 의료키트 개선 등), △ 연안여객선 원격모니터링(신규 정기항로 표시 기능 등), △ 항로안내지원(과거 선박항적을 결합한 기능 개선) 등

*** △ 13.3인치 표시장치(기존 10인치), 어군탐지기 연동 단말기, 소형 송·수신기 등

- (통신망 품질관리 강화) 기지국 신·증설*을 통한 통신망 품질 제고,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화** 및 유관기관간 지속 협업 추진

* 서·남해 지역 기지국 장비 6개소(신설5, 증설1) 개선 추진

**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의 해역 구분을 정밀화(4배, 약 8천개 → 32천개)

- (신기술 개발) 국제항해 선박을 위한 디지털 항해*·통신**장비 개발 및 국제공동 실증을 통한 디지털 항로 구축 추진

* 지능형 선박 항해장비 시제품 개발 및 국제상용화를 위한 장비 서능 국제표준안 마련

** 선박통신 연계 신기술 테스트 베드 구축·운영, VDES 통신 단말기 시제품 설계·제작

- (산업 육성)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추진 및 산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 협의회 운영(연중)

*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개정을 통해 △ 디지털 선박 건·개조, △ 디지털 등급기준 및 인증절차, △ 바다내비 체계 개방 등 지원 근거 마련

- (국제협력) 해양디지털 분야 선도를 위한 국제 콘퍼런스* 개최 및 개도국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ODA 사업** 추진

* 제8회 아태지역 해양디지털 국제 콘퍼런스(9.10~11), 국내기업 제품 홍보 전시회·상담회 병행

** 해상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용역량 향상('23~'26년 / 40억원 / 필리핀)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 선박 점검	'24.2월	-
	2024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행계획 수립	'24.3월	국정40-4
	해양디지털 국제표준 주도를 위한 용역 착수	'24.3월	국정40-4
2/4분기	디지털 해상교통정보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착수	'24.4월	국정40-4
	바다내비 긴급 구조신호(SOS) 대응체계 합동훈련	'24.5월	-
	통합공공망 정책 협의회 개최	'24.6월	국정40-4
3/4분기	해양디지털 항로 실증기술 개발사업(R&D) 진도 점검	'24.7월	국정40-4
	아·태 지역 해양디지털 국제 콘퍼런스 개최	'24.9월	국정40-4
4/4분기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제3차 디지털 기술(DTEC) 위원회 참석	'24.10월	국정40-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개최	'24.12월	국정40-4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24.12월	국정40-4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1/4분기	현장방문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현장 방문	'24.3월
2/4분기	현장방문	바다내비 이용자 대상 바다내비 서비스 설명회	'24.6월
3/4분기	현장방문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설명회	'24.8월
4/4분기	간담회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 협의회 개최	'24.12월

□ 기대효과

- 바다내비 서비스 확대·고도화 및 단말기 보급 등을 통해 육해상 정보격차 해소 및 통신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 활성화로 해양사고 저감 지원에 기여
- 통신품질 제고를 위한 해상무선통신망(LTE-M) 기지국 신·증설 등을 통해 통신범위 확대 및 통신강도 강화 기대
-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를 통해 선박·건개조, 디지털 등급기준·인증절차 및 바다내비 체계 개방 등 지원기반 마련

□ '23년도 미흡부진과제 개선계획

-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보완 필요사항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소통·확산 방안 발굴 및 성과지표 개선·보완 등 조치
 - (성과지표) ①신산업 육성·지원 지표를 국내기업 수출계약·MOU 체결 건수로, ②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지표를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 순증률로 목표치 산출 등 성과지표 개선·보완
 - (정책소통)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현장 방문 및 바다내비 서비스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정책수요자와의 적극적인 정책 소통·확산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계획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해양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일반재정)				
①	해양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6332)	일반회계	37.51 (37.51)	31.09 (31.09)
	■ 스마트 해양안전교통망 구축·운영(308)		37.51	31.09
항행안전정보(정보화)				
①	항행안전정보(4275)	일반회계	248.48 (248.48)	228.58 (228.58)
	■ 스마트 해양안전 교통정보(정보화)(504)		248.48	228.58
해양안전기술개발(R&D)				
①	해양안전기술개발(4163)	교특회계	75.9 (75.9)	107.45 (107.45)
	■ 해상디지털 통합활용연계 기술개발(R&D)(307)		51	42
	■ 국제표준기반지상파-위성통합VDES체계 기술개발(R&D)(313)		13	26.36
	■ 해양디지털항로실증 기술개발(R&D)(314)		11.9	39.09
해양수산산업진흥(R&D)				
①	해양수산산업진흥(2046)	일반회계	20 (20)	5 (5)
	■ (다부처)암호화사이버위협대응기술연구개발및실증(R&D)(340)		20	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신산업 육성 및 지원(%) (가중치 60%)	신규	신규	신규	200%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전년대비(MOU 체결 2건) 국내기업-해외기업간 수출계약·MOU 체결 지원 비율을 20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전년대비(MOU체 결 2건) 국내기업-해외기 업간 수출계약·MOU 체결 지원 비율	국내기업-해외기업간 체결한 수출계약·MOU 사본
②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 스 이용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가중치 40%)	신규	신규	신규	100%	① 전년대비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 순증률을 목표로 설정(50%) ② 해상무선통신망(LTE-M) 통신 품질 취약구역 내 기지국 신설을 통한 통신강도 강화 개소 건수를 목표로 설정(50%)	① 단말기 보급 순증률 10% 이상 * 23년도 1,294척 ② 통신강도 강화 개소 5건	① 내부통계 ② 내부통계

② 차세대 해양 위치정보(PNT) 및 디지털 위치정보 제공(I-3-②)

항로표지과 (044-200-5871 / 5873)

□ 추진배경 (목적)

- 주요 국가들은 PNT(위치·항법·시각) 인프라를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시설로 인식하고 국가별 독자성 확보를 위해 경쟁 중
 - 차세대 PNT 정보제공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스마트항만 조기 도입 및 위성항법시스템 전파교란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 해양정보 체계가 디지털화로 재편됨에 따라 기존 선박과 ICT 기술이 융·복합된 첨단 해양모빌리티로 산업생태계 전환
 - 미래 해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항로표지 시설 정보의 디지털화 및 소형선박을 위한 해로드 앱 활성화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선박의 안전항해 지원과 해양 4차산업 시장 선점을 위해 차세대 PNT (위치·항법·시각) 및 항로표지 분야 디지털전환 인프라 조성·기술개발 추진

- 차세대 해양 위치정보(PNT) 기술개발
 - (지상기반) GPS 오차를 5cm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센티미터급 보강서비스를 개발·구축('20~'24), 지상통신망을 통해 제공*
 - (위성기반) 확보된 지상기반 인프라를 기반으로 KPS* 항법위성 서비스 기술을 개발·구축**, 국가 주요기반시설에 활용(자율주행차 등)

* 수로측량, 준설, 항만 및 해양플랜트 건설 등에 활용, 향후 자율운항선박/자동접안, 스마트항만 운영, 도선지원, 해저케이블 부설 등의 분야로 확대 예상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22~'35, 다부처 사업/3조72백억원/우리부 69백억원)

** 우리부 전담분야: KPS 센티미터급 보강기술 개발('22~'32, 285억원)

○ GPS 전파교란 대비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고도화 추진

-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의 세계 최고수준 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후속 기술개발** 추진('24~'27, 230억원)

* 위치정확도(20m→10m), 시각정확도(50ns→10ns), 시각동기유지(14일→무제한), 신호암호화 등

**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시스템(시각:10ns, 변복조, SDR기반) 개발 및 UAM 오차지도 시스템 개발 등

- 서해권역 대상 안정적인 항법 서비스를 위해 소청도 송신국 시스템 이중화('24~'25년, 30억원), 보정기준국 1개소 확충(대산항)

○ 스마트 항로표지 시설고도화 및 연계기술 개발

- (시설고도화) 장비의 고장진단 알고리즘, 해양정보 수집·제공을 위한 다목적 중·대형부표 개발, 다중통신(AIS, NB-IoT 등) 기술개발

- (연계기술) 독립·분산된 항로표지 정보의 연계, 표준·디지털화된 통합형 시스템으로 정비 및 수집정보를 활용한 新서비스* 개발

* 고장예측 등 관리, 해양 생태 등 해양환경, 가상항로표지 등 항해 지원

- (해로드 앱) 나홀로 조업, 해양레저 이용객 등 안전 취약층의 해양사고 예방·대응 강화를 위한 앱 기능개선 및 활성화

* 해상안개관측망 영상정보 및 수온정보 제공, 1:1문의창구 개설 및 디자인 개선 등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고정밀 해양PNT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24.1월	국정 40-4
	항로표지의 스마트화 및 상용화 추진계획 수립	'24.1월	
	해로드 앱 7.0버전 출시	'24.2월	
2/4분기	eLoran 고도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기술개발 착수	'24.4월	국정 40-4
	해로드를 활용한 긴급구조 모의 훈련(해경청)	'24.5월	
	스마트 중형등부표 실험역 실증	'24.6월	
3/4분기	고정밀 PNT 해상성능(자율운항선) 검증 추진	'24.7월	국정 40-4
	스마트 항로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시범운영	'24.7월	
	해로드를 활용한 긴급구조 모의 훈련(소방청)	'24.9월	
4/4분기	제3차 항로표지 기본계획('25~'30) 수립	'24.10월	
	국제기구(UN ICG, IALA, FERNs 등) 회의 대응 및 의제 제출	'24.11월	
	고정밀 해양 PNT 개발사업 성과 검증 및 시범서비스 실시	'24.12월	국정 40-4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고정밀 해양 PNT) 차질 없는 국정과제 이행, 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응용 분야 발굴 등을 위해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 고정밀 해양 PNT 서비스 관련 이용활성화, 응용 분야 발굴 및 공동 사업모델 발굴 등을 위한 의견수렴 및 상호협력
- * 방송통신·모빌리티 분야 민간기업,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 및 학회 등 25개 기관
- (스마트 항로표지) 스마트 항로표지 산업의 활성화 및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항로표지 산업계 의견수렴
 - 항로표지 분야 기술개발, 장비제조, 위탁관리업 등 기업 간 상호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등
- (해로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 해로드 앱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및 향후 개선사항 의견수렴
 - 이용목적, 유입경로, 이용빈도, 편리한 기능과 추가 기능개선 필요사항, 불필요 기능, 서비스 품질 만족도 등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1/4분기	간담회	고정밀 해양PNT 민관 협의회 출범식 및 1차 회의	'24.1월
	현장방문	스마트 항로표지 중형부표 설치 관련 관계기관 협의	'24.3월
2/4분기	간담회	정밀 해양 PNT 민관 협의회 분과별 의견수렴	'24.4월
	설명회	지상파항법시스템 유관기관 설명회 개최	'24.6월
3/4분기	간담회	항로표지 미래전략 간담회 개최	'24.7월
	현장방문	해로드 앱 현장소통 및 정책홍보	'24.9월
4/4분기	간담회	스마트 항로표지 산업계 의견수렴 회의	'24.10월
	간담회	고정밀 해양PNT 민관 협의회 2차 회의 개최	'24.11월
	의견수렴	해로드 앱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	'24.12월

□ 기대효과

- 안전한 해양교통과 4차산업 혁명에 필수적인 PNT 제공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항행안전을 지원하고 국가의 스마트화 확산을 지원
 - 전파교란·간섭 등 위성항법 중단 시에도 지상파항법을 사용하여 PNT 정보를 끊김 없이 제공, 국가의 공공안전 기능을 강화
- 항로표지 관리 효율화, 국민들의 해양활동 편의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 해양분야 신산업 창출 및 국제표준 선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해양안전기술개발(Ⅲ-2-R&D⑧)				
① 해양안전기술개발(4163)		교특회계	475.77	513.47
■ 해양 PNT 고도화 기술개발(305)			32.89	15.38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309)			368.38	426.54
■ 스마트 항로표지 및 연계기술 개발(308)			74.50	47.25
■ 지상파항법시스템 고도화 기술개발(317)			-	24.30
항로표지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Ⅱ-5-일반재정②)				
① 항로표지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6350)		교특회계	59.06	53.91
■ 표지시설-측위원(304)			59.06	53.9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고정밀 위치정확도 제공 달성도(%) (가중치 70%)	-	-	238	100	전국에서 균일한 센티미터 수준의 위치정보 확보 달성율 *국정과제인 PNT 연구개발 사업의 주요목표를 지표로 설정	고정밀 위치 정확도(<5cm) 전국망 달성도 [목표정확도(5cm)/측정값(cm)]*100	공인측정기관 보고서
② 스마트 항로표지 실효성 실증 및 해로드 앱 활성화(%) (가중치 30%)	-	-	-	100	해로드 앱 이용자 만족도 달성율 *최근 5년간의 만족도 조사결과의 평균치를 상회하는 목표치 설정	이용자 만족도 (87.0점 이상) 달성도 [만족도 점수/목표치(87.0점)*100%]	만족도 조사 결과 문서

③ 그린 쉬핑(Green Shipping) 생태계 기반 확충(I -3-③)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8 / 5839 / 5843)

□ 추진배경 (목적)

-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친환경선박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상용화·보급 지원 필요

* '50년 50% 감축('08년 대비) → '50년 탄소중립(순배출량 제로)

- 또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20.10)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1.9) 등에 따라 해운부문 온실가스 감축전략의 적극이행 요구

* 국내해운 배출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2018년 대비 70% 감축(101→71만톤)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친환경선박 보급·확산과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주도를 통해 범 지구적 탄소중립 기여 및 그린 쉬핑 생태계 구현

- '24년도 친환경선박 보급계획* 수립, 자체 보급·지원사업 추진 및 타 부처 관련 사업 이행점검 등을 통해 해운·조선업 경쟁력 제고

* '24년 소요예산 총 2,422억원 : 국비 1,859억원, 지방비 434억원, 공공기관 129억원

- (공공) 친환경전환 가속화를 위해 노후선박 상태평가(15척), 대체건조(7척) 및 대체 계획이 없는 저 선령 선박은 친환경 개조*(20척) 추진

*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설치 : 선박 배출 입자상물질을 필터로 거른 후 제거하는 장치

- (민간) 국가인증 신기술을 적용하여 친환경선박을 건조하려는 해운선사 대상(내항 7척, 외항 10척)으로 건조비용의 일부 지원 추진

* (내항선)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143억원 / (외항선)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대응지원 226억원

- (기술개발)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무탄소 선박 핵심기술 및 육상시험평가설비 구축 등 친환경 인프라·기술개발* 추진

*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등 총 6개 R&D사업 : '24년 312억원

- 한-미 컨소시엄 구성, 공동 연구 등을 통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계획 수립·발표 및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주도 기반 마련
- (컨소시엄 구성) 한-미 정부 및 전문기관, 선사, 에너지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국제 컨소시엄(협의체) 구성·운영*
 - * 한-미 공동 기술적·제도적 여건, 경제적 타당성 등 이행계획 마련을 위한 세부 연구 수행
- (이행계획 마련) 세부 구축항로, 운항선박, 실증 방법 등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세부 이행 계획 수립
 - * '28년까지 한-미 주요항만 간 최소 1개 이상 항로에 대한 시범운항 착수 목표
- (대외발표·국제협력)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제29차 COP('24.11) 등 국제행사에서 녹색해운항로 구축 계획 발표, IMO 온실가스 감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국제해운 탈탄소 분야 협력 기반 구축
 - * 저개발국·군소도서국의 선박온실가스 감축규제 이행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GHG SMART, GHG-Sustainable Maritime Transport)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4년도 친환경선박 보급시행계획」 수립·공고	'24.1월	국정 40-4
	2024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공고	'24.1월	국정 40-4
	“녹색해운항로 활성화 방안” 수립	'24.3월	
	공공선박 상태평가 및 친환경 개조 용역 착수	'24.3월	국정 40-4
2/4분기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24.5월	
	2024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현장 설명회	'24.6월	국정 40-4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타당성 연구 착수	'24.6월	국정 40-4
3/4분기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세미나 개최	'24.8월	국정 40-4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개정	'24.9월	국정 40-4
	2024년 개도국 IMO 온실가스 감축전략 이행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GHG-SMART) 운영	'24.9월	국정 40-4
4/4분기	「전기추진선박기준」 고시 개정	'24.10월	국정 40-4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이행 계획” 발표	'24.11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포함하여 우리부의 탈탄소화 대응 정책 공유·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설명회 개최
- 민간부문 친환경 전환을 위해 해운선사, 조선업체 등 대상으로 친환경 정책 및 사업설명, 건조계획 수요조사 등 설명회 개최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1/4분기	설명회	국제해운 탄소감축 동향 및 우리부 지원정책 등 소개·의견 수렴을 위한 “해양환경정책설명회” 개최	‘24.3월
2/4분기	간담회	녹색해운항로 구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해운사 등을 대상 의견 공유 등을 위한 간담회 개최	‘24.5월
	설명회	국가인증제도 및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관련하여, 해운선사, 조선업체 대상으로 정책설명, 수요조사 등 설명회 개최	‘24.6월
4/4분기	설명회	국제해운 탄소감축 동향 및 우리부 지원정책 등 소개·의견 수렴을 위한 “해양환경정책설명회” 개최	‘24.10월

□ 기대효과

- 국제해사기구(IMO) 탄소감축 규제의 이행과 글로벌 규범 논의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친환경 해운 선도국으로서 국가 브랜드 제고
 - 선박배출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감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및 2050 탄소중립 달성·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선제적 녹색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친환경 산업·기술 육성 등을 통해 탄소중립시대의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 창출
 -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으로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조선·기자재 등 연관 산업 활성화

□ '23년도 미흡부진과제 개선계획 : 해당없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해양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Ⅱ-5-일반재정①)				
①	해양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6332) ▪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315)	일반회계	172.8 172.8	142.5 142.5
해운물류지원(Ⅲ-4-재정(3))				
①	해운물류지원(6133) ▪ 관공선 건조 및 운영(친환경관공선 도입)(300)	일반회계	43.6 43.6	55 55
해양수산산업진흥(Ⅰ-2-R&D⑩)				
①	해양수산산업진흥(R&D)(2046) ▪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R&D)(314) ▪ 안전기반 소형 수소추진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R&D)(318) ▪ (다부처)CBM+ 기반기술 적용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개발(R&D)(347)	일반회계	136.43 112.91 23.52 -	209.63 188.83 10 10.8
해양안전기술개발(Ⅲ-3-R&D⑥)				
①	해양안전기술개발(R&D)(4151) ▪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등 저감장치 개발(R&D)(303) ▪ 선박배출 미세먼지 통합저감 기술개발(R&D)(306)	일반회계	66.08 47 19.08	9.4 9.4 -
해양안전기술개발(Ⅲ-3-R&D⑧)				
①	해양안전기술개발(R&D)(4163) ▪ 수소선박 안전기준 개발(R&D)(304) ▪ 선박배출온실가스(GHG)통합관리기술개발(R&D)(315)	교특회계	71.1 51.1 20	69.4 39.4 3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① 친환경선박 전환척수(%) (가중치 50%)			100%	100%	친환경선박 보급확대를 위해 공공·민간 전환 목표를 '23년 목표(37척) 대비 19% 상향된 총 44척으로 전환 목표를 설정 *총44척 (공공27척, 민간17척)	공공·민간선박 친환경 전환 척수(44척)(100%)	방침문서, 관련공문
②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계획 수립 추진율(%) (가중치 50%)			100%	100%	한-미 녹색해운항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공동연구, 이행계획 발표를 성과 지표로 설정	이해관계자 컨소시엄 구성 (20%) 공동연구를 통한 이행계획 수립 (40%) GHG-SMART 프로그램 개최 (20%) 국제행사 대외 발표(20%)	방침문서, 관련공문

(1) 주요 내용

□ 청년 및 신규인력 유입을 위한 양질의 선원 일자리 창출

- (실질소득 증대) 외항상선 승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확대(월 300만원→500만원)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일자리 지원) 외국인을 국적 선원으로 대체고용한 선사에 평균임금차액 일부를 지원하고, 청년 해기사 해외취업도 지속 지원
- (선원 양성 경로 확대) 오션폴리텍 운영 및 일자리 박람회 등을 통해 해운 비전공 청년, 군 전역자 등의 양성 및 취업 지원

□ 만족스럽게 오래 근무하도록 선원 근로여건 및 복지 확대

- 선원들의 선내 안전확보를 위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고시*」을 제정하고, 선사·감독기관용 매뉴얼 제작

* (주요내용) 해사노동협약(MLC) 세부기준에 따라, 안전대표자·선내안전보건위원회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 직무사고 보고조치, 세부안전 및 위생기준 등 마련 등

- 명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외국인 선원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노사정 합동점검반 운영
- 원양 선원의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승선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해양 원격의료 지원 확대
- 정신건강 전문가의 검진·상담·교육 서비스 제공 및 지역별 교육 기관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원체계 구축

□ 스마트항만 일자리 안정화 및 자율운항선박 전문인력 양성

- (기존 인력) 원격조종·자동화 하역장비 등 직무교육 지원으로 스마트항만으로의 원활한 전환배치 유도
- (신규 인력)시스템 운용인력 및 육상 제어사 등 자율운항선박 신(新)직업군에 대한 면허 및 근로기준 마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국적 해기사 양성 및 취업 연계(명)	207	369	402	343	과정지표인 해기사 양성 인원과 더불어, 결과지표인 실제 취업 인원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성과지표를 구성하였으며, 선원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실적 목표치를 최근 3년 실적 대비 5% 상향한 도전적인 목표 설정	외국인 선원 대체고용 지원실적+미취업·비전공자 대상 교육양성 인원	내부 자료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선원 근로여건 개선 등에 대한 노사 이견 조율 필요

- 근로여건 개선 등은 선사의 비용부담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아 노사 간 갈등 발생 우려
- 육상근로자 및 해외 사례, 국제협약 등을 감안하여 선원, 선사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간 충분한 사전협의 진행

(4) 기타

- (취업현황) 선원 임금의 상대적 하락,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국적선원은 감소추세이며, 50세 이상 선원이 전체 선원 약 68%로 선원인력이 심각하게 고령화

《 취업선원의 연령별 현황('23년말 기준) 》

(단위 : 명)

연도	합계	25세 미만	25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 이상
2022	32,510	995	2,636	3,294	4,901	8,757	11,927
2023	31,867	874	2,540	3,103	3,687	7,719	13,944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양질의 국적선원 공급 및 두터운 선원복지 제공(I -4-①)

선원정책과 (044-200-5743 / 5741 / 5745)

□ 추진배경 (목적)

- 국적선원 수 '00년 이후 지속 감소, 고령화 심각(60세 이상 비중 44%)
 - * (국적선원수/비중): ('00) 5.9만명/88.5% → ('10) 3.9만명/68.6% → ('22) 3.2만명/53.0%
- 과거 고소득·전문직으로서의 위상 저하, 신규인력 대부분 5년내 이직
 - * 해양계열 대학, 해사고 등 통해 취업한 해기사 중 78%는 5년 내 육상직으로 이직
- 선원 부족으로 10년 뒤 외항상선 절반 이상 운항 차질 우려
 - * 현추세 지속시 '32년에 외항상선 1,500여척 중 600여척만 운항可(해기사협회, '22)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해운 비전공자 대상 해기사 양성) 업계 수요에 발맞추어 원활한 해기인력 공급을 위해 비전공자 대상 단기교육과정 운영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오션폴리텍 과정(상선해기사 3,5급 / 어선해기사 5,6급)으로 총 260명 대상
- (청년해기교육) 미취업 해기사를 대상으로 기업과 공동으로 일자리 연계 사용자 맞춤형 해기교육 이수 후 취업 연계
 - * 대상자 200명을 선발하여 교육 수료 후 취업박람회를 통해 150명 취업 연계
- (외국인 선원 인권실태점검 회의) 외국인 선원 인권실태 점검 방식 개선을 위한 업계, NGO 등 관계기관 회의 실시('24.3)
- (경력단절 해기사 재승선 교육지원) 선박 재승선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단기간에 이수 가능토록하여 조속한 현장 복귀 지원
 - * 약 6개월 가량 소요되는 교육기간을 3~4주로 집중 운영

-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 외국인 해기사를 대체하여 한국인 해기사를 고용한 선사에게 내외국인 간 평균 임금차액 일부 지원
* (지원인원) 100명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3,500천원 / 노사정 심의위 개최 등
- (선원 임금체불 특별점검) 명절 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선사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조기 상환을 독려하여, 선원의 생계 보장('24.9)
* (대상 / 점검방법) 최근 3년간 임금 체불업체 등 / 지방청별 점검
- (선원 최저임금 노사정 협의) '25년 선원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사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노·사 교섭 착수('24.10)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해운 비전공자 대상 해기사 교육실시	'24.1월	국정 40-5
	청년해기교육 기업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24.2월	국정 40-5
	외국인 선원 인권실태점검 회의	'24.3월	국정 40-5
2/4분기	청년해기 참여기업 및 유관단체 협약 체결	'24.4월	국정 40-5
	제1차 경력단절 해기사 재승선 교육지원사업 시행	'24.5월	국정 40-5
	해운 비전공자 대상 해기사 취업박람회 개최	'24.6월	국정 40-5
3/4분기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지급 심사	'24.7월	국정 40-5
	청년해기 제2차 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	'24.8월	국정 40-5
	추석 명절 대비 선원 임금체불 특별점검	'24.9월	국정 40-5
4/4분기	'25년 선원 최저임금 노사정 협의회 개최	'24.10월	국정 40-5
	청년해기역량강화 교육훈련 수료 및 채용 연계 추진	'24.11월	국정 40-5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 심사	'24.12월	국정 40-5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장관 간담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 위원장 및 의장단 의견을 청취하고, 선원 권익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 개최(1월)
- (노사정 심의위원회) '24년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을 위한 노사 지원금 출연 논의 및 노사정 심의위* 운영 방향 설정

* (노) 선원노동조합연맹 2명 / (사) 한국해운협회 2명 / (정) 우리부 2명

- (선내 인권침해 네트워크 회의) 선내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연도별 대책 추진실적 관계기관 간 공유를 위한 회의실시('24.4)
- (제1회 선원의 날 기념행사) 선원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선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개최(6.21)
* 매년 6월 셋째주 금요일을 법정기념일 '선원의 날' 지정('23.6, 선원법 제4조의2 신설)
- (선원근로감독관 직무교육 실시) 선원근로감독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선원정책일반, 선원근로관계법령, 수사기법 등 교육('24.7)
- (선원 일자리 혁신 이행사항 점검회의)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23년 7월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의 이행 실태 점검 실시('24.11)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1/4분기	간담회	선원노련 대표단 장관 간담회 개최	'24.1월
	회의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 노사정 심의위원회 개최	'24.2월
2/4분기	회의	선내 인권침해 네트워크 회의 개최	'24.4월
	현장소통	제1회 선원의 날 기념행사 개최	'24.6월
3/4분기	현장소통	선원근로감독관 직무교육 실시	'24.7월
4/4분기	회의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 이행사항 점검 회의 개최	'24.11월

□ 기대효과

- 선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젊은 신규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 승선을 유도
- 선원복지 증진을 통한 선원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선원 수급 안정화로 해운수산산업의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

□ '23년도 미흡부진과제 개선계획 : 해당없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해운인력양성 지원(Ⅲ-4-일반재정②)				
①	해운인력양성 지원(6132) ▪ 해사고등학교 지원(300) ▪ 해양수산연수원 지원(302)	일반회계	486.1	
			61.1	61.1
			425	432.4
선원근로 복지 향상 (Ⅲ-4-일반재정①)				
①	선원근로 복지 향상(6131) ▪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301) ▪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305) ▪ 국적해기사 일자리 지원(302)	일반회계	80.4	
			65.5	70
			13.1	13.2
			5	4.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임금체불 예방 특별근로감독 임금체불 해소율(%) (가중치 50%)	-	-	-	60.5	최근 3년('21~'23) 임금체불 예방 특별근로감독 임금체불 평균 해소율(59.7%)을 고려해 60.5% 로 설정	특별근로감독기간 임금체불 해소 사업장/특별근로 감독기간 임금체불사업장	2월, 9월
② 선원복지수혜자 만족도(점) (가중치 50%)	81.9	80.5	81.4	82.5	최근 3개년('20~'22)간 평균 만족도보다 0.12% 상향 설정	선원복지 수혜자 중 5%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면담 또는 전화 조사방식으로 리커트 5점 척도의 100점 만점 기준 만족도 측정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12월)

전략목표 Ⅱ.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해양·항만을 조성한다.

1. 연안·항만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2. 재해·기후위기에 안전한 연안·항만을
조성한다.
3.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경제영토 확장 및
관리역량을 강화한다.

기 본 방 향

◇ 배경·필요성(중요성)

- 노후·유휴항만 재개발 및 어항 개발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이 살고 싶고, 국민들이 방문·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여 연안경제 활력 제고
- 연안침식 등 재해에 취약한 연안공간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재해에 선제적 대응으로 전환하고, 해양사고 대처능력 향상 등 국민의 안전한 해양 이용을 도모

◇ 그간의 성과

- 기후변화, 자연재해로부터 연안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5년간 총 90개소 연안에 대한 정비사업 실시
- 최근 5년 인명피해('19~'23, 537명)는 종전 대비('14~'18, 932명) 42.4%(395명) 감소
- 해양안전체험관(경기 안산) 운영 활성화, 국민해양안전관(전남 진도) 건립 및 운영('23.12), 어선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어선형 개발('21) 등 해양안전문화 확산 기반 조성

◇ 주요 내용

- 연안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어항 개발 및 항만 재개발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의 적기 추진
- 연안침식에 대응하여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재해안전항만 구축 등을 통해 기후변화·자연재해로부터 연안 안전망을 확보
- 해양사고 발생 저감을 위해 중대 사고 및 취약선박 집중 안전관리, 민간 주도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임무와의 상관관계

- 국정과제 40번(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41번(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102번(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차질 없는 개최 추진) 등 이행을 위해 성과관리 체계와 연계 추진 필요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3	3	6	11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전략목표 Ⅱ.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해양·항만을 조성한다.			① 해양사고 인명피해(사망·실종, 명)
1. 연안·항만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① 신규 재개발사업 추진(건)
	①[민생]항만 및 연안공간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조성		① 항만재개발 추진율(%) ② 연안침식 관리강화 추진율(%)
	②[민생]부산항 북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①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추진율(%) ② 북항 2단계 재개발 추진율(%)
2. 재해·기후위기에 안전한 연안·항만을 조성한다.			① 재해대응 안전항만 구축 추진율(%)
	①기후변화 대비 등을 위한 안전항만 구축 추진		① 재해안전항만 사업 집행률(%) ②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지적 조치율(%)
3. 해상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① 해양사고 발생 건수(건)
	①국가 해양수산 재난관리체계 선진화		①국가 해양수산 재난관리체계 선진화 추진율(%) ②해양수산분야 중대재해 예방활동 이행율(%)
	②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범정부 해사안전대책 시행		① 해양사고 피해 저감실적(지수) ② 취약선박 집중관리 (케어쉽프로그램) 추진실적(척)
	③연근해어선 안전관리 체계화		① 어선 1만 척당 주요어선사고(건)

(1) 주요내용

□ 항만 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도모

- 항만재개발 추진(5개소) 및 소규모 항만재생 활성화 기반 마련

* 부산북항 2단계, 인천내항 1·8부두, 군산항 금란도·장항항, 울산항 매암동

□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추진으로 해양도시 가치 확대

- (북항 1단계) 잔여부지(10만㎡) 조성을 완료하고 해양관광사업과 연계된 전략적 투자유치*(Target Marketing)를 통한 지역성장 활성화

* 북항 1단계 재개발지구 활성화 및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

- (북항 2단계) 사업계획 수립절차 착수(수익성 제고방안 마련 등), 자성대 부두 이전 완료 및 철거공사 착공('24) 등으로 원활한 2단계 사업 진행

□ 재해·기후위기에 안전한 연안·항만 조성

- 「연안관리법」 개정('24)으로 연안관리 근거, 통합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고, 고위험 연안에 친환경 완충구역 조성 추진

- 강화된 안전기준(기존 50년→100년 빈도)을 갖춘 재해안전항만 및 재해 대응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 해양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 (법제정비) 연안해역 해상교통망 구축·관리를 위한 법률* 및 해상풍력단지 등 대규모 해양시설의 안전관리 법제화 추진

* 해상교통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상교통망 구축과 함께 법적기반 마련 필요

- (자문단 운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으로 어선 등 취약선박 종사자 안전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시행

* 조업안전·선박안전·해양안전·인적과실 등 해양수산 안전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23	'28			
① 해양사고 인명 피해 (사망·실종, 명)	98	126	120	99	94	92	5년간('19~'23년) 평균 해양 사고 인명피해 발생건수(104명)를 기준으로 매년 2.5%씩 감축 - 24년도 목표 : $104 \times 0.975 = 102$ 명 - 25년도 목표 : $102 \times 0.975 = 99$ 명 - 26년도 목표 : $99 \times 0.975 = 97$ 명 - 27년도 목표 : $97 \times 0.975 = 94$ 명 - 28년도 목표 : $94 \times 0.975 = 92$ 명	해양안전심판원 통계	해양안전심판원 통계

(3) 기타: 해당없음

(1) 주요 내용

□ 항만재개발을 통한 지역 문화·경제 거점 조성

- 노후·유헴 항만공간을 활용하여 원도심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항만재개발 추진

* 노후·유헴화된 항만도시공간을 지역 경제·산업·문화 거점으로 개조

□ 항만재개발 활성화 및 체계적 항만 관리

- (부산) ¹단계 부지조성 완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Target Marketing)마련하고 ²단계 사업계획 수립 착수 및 자성대 부두 이전 및 철거공사 착공으로('24) 사업 적기 추진

* 전체 부지조성 102만㎡ 중 92만㎡ 준공('23), 잔여 10만㎡(해양문화지구 등)는 '24 완료 계획

- (인천·광양·거제) 인천내항 1·8부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광양항 3단계·묘도, 고현항 등 사업 추진 가속화

* (광양항) 3단계 연결도로 착공, 묘도 송배수 등 지원시설 착공 / (고현) 4단계 착공

□ 연안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안 공간조성

- 해양의 직접 작용으로 연안침식 등 재해에 취약한 연안공간의 통합·체계적 관리와 재해예방 추진

- 77개 연안 취약지구*를 지속 정비하고, 재해위험이 높은 해안에 재해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 추진

* 국가 23개소(신규 6개소, 계속 17개소) / 지자체 54개소(신규 19개소, 계속 35개소)

* 사업범위, 모델 정립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해 실행방안 수립('24.하)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신규 재개발사업 추진(건)	1	1	1	1	항만재개발 신규 사업 확대를 위해 매년 1개소 이상 항만에 대한 사업화방안 마련 또는 공모(제3자 제안 공모 포함)하여 사업시행자 모집 추진 - ('22) 구룡포항 사업계획 공모 - ('23) 금란도·장항항 기본구상 마련 - ('24) 인천항 내항 1·8부두 제3자 제안 공모	항만재개발 사업 직접 공모 또는 제3자 제안 공모 공고문, 기본구상안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항만재개발 추진과 관련된 지역사회와의 갈등 발생

- 계획 수립시 지자체, 항만공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 갈등 발생을 사전 예방
- 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사업은 지역주민, 전문가 등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 추진 전 적극 소통 및 공감대 형성

☐ 연안 침식 대응 및 적응력 확보 시급

- 연안침식 가속화에 따른 우려심각비율('23. 43.3%), 연안재해 완충 공간 감소*로 인한 연안재해 피해** 발생

* 최근 5년간('18~'22) 축구장 면적 390배 백사장 감소

** 해안은 해일 등으로부터 연안역을 지켜주며, 최근 7년간 연안재해복구비로 4.2조원 소요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항만 및 연안공간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조성(Ⅱ-1-①)

항만연안재생과 (044-200-5983 / 5984 / 5985 / 5987 / 5988)

□ 추진배경 (목적)

- 노후·유희화된 항만과 주변 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정비하여 항만의 성장잠재력과 주변 지역의 도시경쟁력 증진
-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특화개발을 통해 항만 공간이 항만도시의 '경제·산업·문화 거점'이 되는 항만재개발 추진

<제3차('21~'30)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 전국 14개 항만 19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

<국정과제41-5>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⑤ 안전하고 시민 친화적인 연안·항만 조성

- 항만재개발 신규 추진(6개소, ~'27) 및 소규모 항만재생 활성화 기반 마련

- 국민이 안심하면서 쾌적한 해안공간을 즐길 수 있고 삶의 터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연안침식 예방 및 대응 강화 추진
- 연안침식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침식원인 조사 및 주민 참여 확대, 제도정비, 기술개발 등의 침식관리대응 역량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항만재개발)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재개발 사업방향, 사업방식 등 제도개선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 (광양항) 제3단계 투기장 해상교량공사* 착공('24.9), 묘도는 재정 지원시설(용수·폐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KDI) 대응(~'24.11)

* 재정지원시설(475억원)로 여수 국가산업단지와 제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 구역을 연결

- (인천내항) 사업타당성(KMI) 검토 후 사업자 제3자 공모('24.5),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및 협상 착수('24.8), 사업시행자 지정('24.12)
- (금란도·장항항) 개발구상(안)*을 토대로 민간투자자를 지속 발굴하고 지역상생협의체 운영('24.6)을 통해 지역요구사항 협의
- * 지역상생협의체 의견을 반영하여 재개발 추진 방향 등 장래 구상(안) 마련('23.12)
- (소규모 항만재생) 유희항만 정비 필요성 및 사업* 추진체계 확립, '25년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본구상 마련 착수('24.上)
- *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유희항만 공간에 주민 친수공간 조성 또는 앵커시설 건립 등 지원
- (제도개선) 항만재개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업방향, 사업방식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24.12)
- (연안침식 관리강화) 연안재해 방지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관리체계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효율적인 연안관리
 - (연안정비) 부산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등 77개 지구(신규 23개 포함)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시행상황도 점검(반기 1회)
 - (국민안심해안) 지자체 협의체 운영(4월~), 시범사업(2개소) 추진 현황 점검(반기 1회), 안심해안 실행방안 수립('24.下)
 - (제도개선) 연안침식 판단기준이 되는 관리해안선 도입, 침식영향검토 의무화 등 연안관리법 개정 추진('23.11 상임위 상정)
 - (실태조사 등) 연안침식 실태조사(360개소), 연안정비를 위한 정밀조사(12개소) 및 연안정비 시설물(2개소)에 대한 효과평가 실시
 - (협의회) 연안침식관리구역 침식피해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지역주민, 전문가, 지자체 참여 관리협의회 개최(상·하반기 2회)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양양 남해1리, 강릉 소돌 침식관리구역 관리계획 수립	'24.3월	
	소규모 항만재개발 기본구상 시행방안 마련	'24.3월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 착수	'24.3월	
2/4분기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추진 여부 결정 통보	'24.4월	국정 41-5
	항만재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 준공	'24.5월	국정 41-5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사업자 제3자 공모	'24.6월	국정 41-5
3/4분기	지방항만재개발 권양 이양을 위한 항만재개발법 하위법령 개정	'24.8월	국정 41-5
	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지구-여수국가산단 연결교량 설치 착수	'24.9월	국정 41-5
	정동진해변 연안정비사업 준공	'24.9월	
4/4분기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 재정지원시설 설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KDI) 절차 완료	'24.10월	국정 41-5
	국민안심해안 실행방안 수립용역 준공	'24.12월	국정 41-5
	연안침식 실태조사 준공	'24.12월	국정 41-5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수혜자) 지역주민, 지자체, 전 국민 등
- (이해관계자) 부두 운영사 및 항만근로자, 지자체, 시민단체, 연안 토지소유자, 연안개발사업 시행자 등

구 분		내용	세부일정
1/4분기	현장방문	국민안심해안 시범사업 상반기 현장방문	'24.3월
2/4분기	회의	국민안심해안 지자체 협의체 착수회의	'24.4월
	회의	상반기 침식관리 협의회	'24.5월
	회의	군산항·장항항 지역상생협의체	'24.6월
3/4분기	회의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추진협의회	'24.9월
4/4분기	현장방문	국민안심해안 시범사업 하반기 현장방문	'24.10월
	회의	하반기 침식관리 협의회	'24.11월

□ 기대효과

- (항만재개발) 항만 공간을 배후도심과 연계한 새로운 도심 공간으로 개발하여 원도심 활력 제고 및 지역 생활·문화거점 조성
 - 산업시설, 해양관광·문화시설 등 지역의 신성장 동력 시설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연안침식 관리강화) 연안침식 및 연안재해 예방·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연안침식 관리기술 개발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침식 및 연안 재해 예방·관리·대응 가능

□ '23년도 미흡부진과제 개선계획

- 성과지표 개선·보완 및 정책소통·확산방안 발굴 등 정책추진 노력 개선방안 제고
 - (성과지표) 항만재개발사업 단계별 추진 절차,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민간투자 유치 및 재정지원 등을 위한 정책추진 과정을 목표로 설정하여 성과지표 개선
 - (정책추진) 국민안심해안사업 등 국정과제 정상 추진 및 연안 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해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 개최 등 정책 소통을 위한 다양한 자리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	'23	'24
항만 재개발(Ⅲ-1-일반재정⑬)				
① 항만 재개발(5061)	교특회계	80	55	
▪ 기타항만 재개발(301)		80	55	
연안환경관리(Ⅰ-1-일반재정③)				
① 연안환경관리(1034)	일반회계	539 (593)	-	
▪ 연안정비(302)		539	-	
연안환경관리(Ⅰ-1-일반재정③)				
① 연안환경관리(1034)	지특회계	-	552 (552)	
▪ 연안정비(302)		-	552	
해양 및 수자원 관리(Ⅰ-1-일반재정⑥)				
① 해양 및 수자원 관리(1062)	지특회계	381 (545)	428 (611)	
▪ 해양 및 수자원관리(301)		381 (545)	428 (611)	
- 연안정비		381	428	
해양 및 수자원 관리(제주)				
① 해양 및 수자원 관리(제주)(1063)	지특회계	8 (22)	9 (48)	
▪ 해양 및 수자원 관리(제주)(301)		8 (22)	9 (48)	
- 연안정비		8	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① 항만 재개발 추진율(%) (가중치 50%)	100	98.3	100	100	'24년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 및 재정지원 등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목표치로 설정	④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50%) ⑤ 항만재개발 제도개선 방안 마련(50%)	- 관련문서 - 관련문서
② 연안침식 관리강화 추진율(%) (가중치 50%)	100	100	100	100	연안정비사업 추진률(22% 달성)	연안정비사업 추진율(100%) : (연안정비사업 집행금액 / 연안정비사업 총사업비) × 100 / 22%	-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등

② 부산항 북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Ⅱ-1-②)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051-604-3111/ 3112)

□ 추진배경 (목적)

- 북항 물류 기능이 신항으로 이전됨에 따라 기존 물류기능을 벗어나 새로운 발전축으로 거듭나기 위한 북항 재개발 추진
- (북항 1단계) 누구나 쉽게 찾고, 365일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친수 공간과 국제관문 기능이 복합된 해양관광거점으로 개발
- (북항 2단계) 항만, 철도, 원도심 통합개발을 통해 국제교류, 금융, 비즈니스, R&D 등 신해양산업 육성 거점 개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정과제(102-3)이면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은 노후화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1단계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모색 및 2단계 사업 적기 추진

- 북항 1단계 전체 부지* 조성을 완료('24)하고 사업 조기 활성화와 관광명소로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도입 계획 수립
 - * 전체 부지조성 102만㎡ 중 92만㎡ 준공('23), 잔여 10만㎡(해양문화지구 등)는 '24 완료 계획
- 공공콘텐츠(공원시설, 해양레포츠комплек스 등) 도입컨셉 및 주변시설 연계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설치방안 마련*('24.12)
 - * 북항 1단계 재개발지역 활성화를 위한 상부콘텐츠 검토용역
- 국제해양 관광 및 레저사업 육성을 위한 마리나(2단계) 착공('24.4)
 - * 위치/규모 : 1단계 마리나지구 / 연면적 2,595㎡, 계류 총 134척
- 전략적 투자유치 방안(Target Marketing*)을 마련하여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재개발 부지 활성화를 위한 실시협약 변경 추진('24.9)
 - * 북항 1단계 재개발지구 활성화 및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용역
 - * 복합항만지구(15.5만㎡), 공공포괄용지(1.3만㎡), 해양문화지구(2.9만㎡), IT·영상지구(2만㎡) 등

- 미분양 부지에 대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공공기관 입주 수요를 반영하고자 공공포괄용지 관리전환 협의('24.9)
- 북항 2단계 사업계획 수립 절차 착수(사업 수익성 제고 방안 마련), 자성대부두 기능 이전(→감만·신감만부두) 및 철거 공사 착수('24.12)
- 통합개발 사업지 투자 유치 및 정책 추진 지원 위한 홍보활동
 - 부산항북항 통합개발 사업의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SNS,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24.2~)
 -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북항 재개발 홍보 키오스크 설치('24.5)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홍보용역 착수	'24.2월	
2/4분기	북항 1단계 마리나(2단계) 착공	'24.4월	국정102-3
	북항 1단계 공공콘텐츠 검토용역 착수	'24.6월	국정102-3
3/4분기	공공포괄용지 관리전환 협의	'24.9월	국정102-3
	북항 재개발지구 활성화 및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 용역 발주	'24.9월	국정102-3
4/4분기	재개발 부지 활성화를 위한 Target Marketing 마련	'24.11월	국정102-3
	공공콘텐츠 세부 추진방안 마련	'24.12월	국정102-3
	북항 1단계 잔여부지(1-3단계) 조성 완료	'24.12월	국정102-3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향후 공급부지 투자유치 방안 마련하고자 간담회 개최('24.1)
- 북항 재개발사업 내 양질의 투자 유치와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유치 방안을 마련하고자 투자유치 공동협의회 개최('24.5)
 - 실무협의회를 통해 북항 재개발 사업의 관련기관(부산시, 부산항만공사 등) 의견 수렴 및 추진계획 공유('24.1)

- 북항 2단계 사업의 적기 착공을 위하여 관계기관 간 의견수렴 및 향후 계획 공유를 위한 조기착공 T/F 회의 추진(상·하반기)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1/4분기	간담회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민간투자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24.1월
	회의	투자유치 공동협의회 실무협의회 개최	'24.1월
2/4분기	회의	투자유치 공동협의회 개최	'24.5월
	회의	북항 2단계 조기착공 상반기T/F개최	'24.5월
3/4분기	간담회	공원시설 등 공공콘텐츠 사업 전략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24.9월
4/4분기	회의	북항 2단계 조기착공 하반기T/F 개최	'24.12월

□ 기대효과

- 지역사업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이 동북아 중심지로 발돋움
-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함과 동시에 마리나·크루즈 등을 기반으로 해양관광거점으로 성장
- 부산항 북항과 배후지역 연계개발을 통해 원도심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지키고 미래성장동력 확보
- 약 20만명의 고용창출과 약 36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15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경제적 효과 전망

* (북항1단계) 생산유발효과 17.9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6조원, 고용유발효과 약 12만명

* (북항2단계) 생산유발효과 18.2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4조원, 고용유발효과 약 9만명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항만재개발(Ⅲ-1-13(항만개발 및 관리))				
① 항만재개발(5061)				
■ 부산북항 항만재개발(300)		교특회계	332	22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추진율(%) (가중치 60%)	-	-	-	100	1단계는 부지조성이 대 부분 완료됨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조기 활성화 달성을 목표로 설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방안 마련(60%) -투자유치 전략 수립(30%)+ 실시협약 변경(30%)	관련문서
② 북항 2단계 재개발 추진율 (가중치 40%)	-	-	-	100	2단계는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단계별 과 정의 이행 정도를 목표로 설정	- 자성대 부두 기능 이전 및 철거공사 착수 (20%) - 사업수익성 제고 방안 마련(10%) - 사업계획 수립용역 재착수(10%)	관련문서

(1) 주요 내용

□ 기후변화 대비 등을 위한 안전항만 구축 추진

○ 해수면 상승, 태풍 강도 증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시설보강, 기준개선, 안전환경 조성, 인프라 구축 등 안전항만 강화방안 추진

- (시설보강) 100년 재현빈도 폭풍해일 등에도 견딜 수 있도록 방파제 등 항만 외곽시설 보강 및 침수취약지구 정비 추진

* 외곽시설 보강 43개소, 취약지구 정비 22개소 우선순위에 따른 순차 추진('23~'37)

- (기준개선) 국내 해양환경 및 설계 여건 등을 고려한 최신 설계 기술 확보 및 안전 성능 강화를 목표로 한 항만설계기준 확립

- (안전환경 조성)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 시설물 점검·정비 및 대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추진

- (기반 확충) 기반 시설물 등에 대한 실규모급 실증 실험이 가능하도록 국내 최대규모 실험시설을 갖춘 방재연구센터* 조성

* 대규모 실증 시설(270mx10mx5m), 연구동 등 / 강원도 강릉시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재해대응 안전항만 구축 추진율(%)	96.7	92.8	94.1	94	'항내 정온수역 및 시설물 안전 확보' 및 '외곽시설 및 재해예방시설 축조의 목표 달성을 측정하고 사업의 적기 완공을 위한 사업 추진현황 확인 지표	(실적공정률 / 계획공정률) X 100	내부 자료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해양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력 확보 시급

- 해양 기후변화 가속화*로 태풍·집중호우 등이 빈번해짐에 따라 연안침수, 재해쓰레기 발생, 생태계 교란 등 기후재난이 빈번한 발생하게 발생하고, 악화 우려

* (표층수온) '68~'20 1.27°C ↑(세계 평균 0.53°C) (해수면) '71~'06 2.56mm/yr ↑(세계 평균 2.36mm/yr)

☐ 정책 수요자의 의견 반영으로 현안대응 및 갈등예방

- 새로운 기술기준 마련 등 대외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 강화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기후변화 대비 등을 위한 안전항만 구축 추진(Ⅱ-2-①)

항만기술안전과 (044-200-5951 / 5972 / 5955)

□ 추진배경 (목적)

-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항만의 시설보강, 기준개선, 안전환경 조성, 기반 확충 등 강화방안 추진으로 선제적 해양재해 대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국정과제41-5>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⑤ 안전하고 시민 친화적인 연안·항만 조성

- 강화된 안전기준(기존 50년→100년 빈도)을 갖춘 재해안전항만*(65개소) 및 재해 대응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27)

- 해수면 상승, 태풍 강도 증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시설보강, 기준개선, 안전환경 조성, 기반 확충 등 안전항만 강화방안 추진

- (시설보강) 100년 재현빈도 폭풍해일 등에도 견딜 수 있도록 방파제 등 항만 외곽시설 보강 및 침수취약지구 정비 추진

* 외곽시설 보강 43개소, 취약지구 정비 22개소 우선순위에 따른 순차 추진('23~'37)

- (기준개선) 국내 해양환경 및 설계 여건 등을 고려한 최신 설계기술 확보 및 안전 성능 강화를 목표로 한 항만설계기준 확립

- (안전환경 조성)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시설물 점검·정비* 및 대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컨설팅** 추진

* 공사비/사업기간/사업범위 : 313억원 / '23년~'24년 / 국가관리항(24개항) 안전시설 정비

** 사업비/사업기간 : 50억원 / '23년~'25년('23년 15억원 / '23.2~'23.12)

- (기반 확충) 기반 시설물 등에 대한 실규모급 실증 실험이 가능하도록 국내 최대규모 실험시설을 갖춘 방재연구센터* 조성

* 대규모 실증 시설(270mx10mx5m), 연구동 등 / 강원도 강릉시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운영 매뉴얼 개정	'24.1월	국정 41-5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목포항, 마산항) 예비타당성조사(면제) 신청	'24.2월	국정 41-5
2/4분기	상반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합동 항만건설현장 점검	'24.3월~5월	
	연평도항 서방파제 보강공사 설계 착수	'24.5월	국정 41-5
	항만 재해취약성 평가체계 구축 용역 착수	'24.5월	국정 41-5
3/4분기	항만시설 성능개선기준 개정	'24.7월	국정 41-5
	태풍대비 재해예방시설 현장 방문	'24.7월	국정 41-5
	지진해일 선박대피 행동요령(안) 마련	'24.9월	국정 41-5
4/4분기	하반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합동 항만건설현장 점검	'24.10월~11월	
	지진분야 항만시설물 비상대처계획 지정목록 개정	'24.11월	국정 41-5
	목포항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추진협의회 개최	'24.12월	국정 41-5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정책수요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태풍대비 가동식 재해예방시설 점검 및 항만건설현장 방문 등

구 분		내용	세부일정
1/1분기	회의	항만 외곽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파력계측 전문가 자문회의	'24.2월
3/4분기	현장방문	태풍대비 재해예방시설 현장방문	'24.7월
	현장방문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건설 현장방문	'24.9월
4/4분기	회의	목포항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추진협의회 개최	'24.12월
	교육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건설관계자 교육 및 의견 수렴	'24.12월

☐ 기대효과

- 상습적인 침수피해 지역 및 태풍피해에 대한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후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재산의 보호 목표 달성
- 우리나라 해역의 기후변화 양상을 반영한 설계기준을 수립

- 항만구역 내 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를 통한 안전성능 향상
및 대국민 교육·홍보를 통한 안전인식 확립
- 신뢰도 높은 연안·항만 방재연구 및 기술개발 추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주요항 건설(Ⅲ-3-일반재정⑩)				
① 주요항 건설(5058)		교특회계	2	4
	■ 항만건설관련 연구용역(316)		2	4
	- 방재연구센터 운영방안 검토		2	4
일반항 건설(Ⅲ-3-일반재정⑩)				
① 일반항 건설(5059)		교특회계	23	26
	■ 일반항(302)		23	26
	- IoT기술을 활용한 파력계측 시스템 구축		6	6
	- 한국형 설계기준 확보를 위한 개정용역		17	20
항만시설유지보수(Ⅲ-3-일반재정⑩)				
① 항만시설 유지보수(5060)		교특회계	15	15
	■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충액)(300)		15	15
	- 중대재해 예방 안전컨설팅		15	15
그린포트 구축(Ⅲ-3-일반재정⑩)				
① 주요항 건설(5063)		교특회계	695	987
	■ 재해안전항만 구축(302)		695	987
	- 울산신항 남방파제(1-1공구) 보강		274	283
	- 울산신항 남방파제(1-2공구) 보강		90	215
	- 울산신항 동방파제 보강		75	221
	-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117	105
	- 항만시설물 안전시설 정비		139	16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① 재해안전항만 사업 집행률(%) (가중치 50%)	96.7	92.8	94.1	94	과거 5년 평균 재해안전항만사업 집행률 감안하여 '24년에 94%를 목 표로 설정 * ('19) 88.2%, ('20) 96.1%, ('21) 96.7%, ('22) 92.8%, ('23) 94.1% ** 5년 평균 집행률 93.58%	재 해 안 전 항 만 사업 집행률(집 행액/ '24년 예산 현액, 50%)	내부 문서 등
②항만건설현장 안전 점검 지적 조치율(%) (가중치 50%)	-	100	100	100	과거 3년 평균 항만건설현장 안전 점검 지적 조치율 감안하여 '24년에 100%를 목표로 설정 * ('21) - → ('22) 100% → ('23) 100% ** '22년부터 중대재해법 시행	항 만 건 설 현 장 안전점검 지적 조치 건수(조치건 수/지적건수)	

(1) 주요 내용

□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촘촘한 재난대응체계 확립

- 범정부 해사안전대책 시행 및 맞춤형 재난대응계획 수립·시행, 재난안전 취약계층 현장체험 추진
- 위기관리매뉴얼 종합개편, 집중안전점검 실시, 범정부 재난 대응 합동훈련, 재난안전 협의체 구성 등 추진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고용부, '22.11)'에 따른 위험성 평가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고도화

□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법제정비) 여객선(길이 100m 미만) 운항해역에서의 해양개발사업에 대해 진단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강화 추진('24.下)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및 「해상교통안전진단 지침」 개정

- (선박안전관리사) 안전관리책임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가 전문자격증인 선박안전관리사 제도 시행('24년 연중)

- (사이버보안) 선박 운항과 관련된 사이버 위협·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및 종합대책 마련('24.下), 전문가** 포럼 개최('24.下)

* 「해사안전법」 개정(「해사안전기본법」 조문신설), 「해사사이버안전 관리지침(안)」

** 해운협회, 해양대, 정보보호학회, KMI, KRISO, 한국선급,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 (해역관리) 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 구축(타당성조사, '23) 및 해양 개발사업 현황을 반영한 해상교통흐름 도식화 책자 마련('24.下)

* 풍향계측기, 해상풍력발전단지 위치 등을 반영한 선종별·길이별 해상교통흐름 제시

○ (정보고도화) 차세대 해양 PNT(위치·항법·시각) 기술개발* 추진

* 위치정보 오차감소(10m급→5cm급, '22~'32, 2,540억원) 초정밀 위성항법기술

□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 (안전경영)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체제 유지·감독의무 부과* 안전사고 사망 발생 시 선박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수시인증심사 의무화** 추진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현행)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현행) +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발생 시 수시인증심사 전수 실시

○ (교육내실화) 이론중심에서 사례·실습중심*으로 개편, 자문단**을 구성해 취약선박(어선·낚시어선 등) 안전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

* 어로작업 기본수칙, 사고사례, 시뮬레이터·VR장비 활용, 구명뗏목 작동·탑승 등

** 조업안전·선박안전·인적과실 등 해양수산업 분야 안전 전문가 8인으로 구성

○ (문화확산) 구명조끼 무상보급*·착용 캠페인 중점추진 및 '해양안전의 날'·'어선안전의 날'(매월 1일) 계기 안전문화 진흥운동** 전개

* 1인 조업어선(706척, ~'23)→1·2인 일반선박(313척, ~'24)→2인 조업어선(14,167척, '25~)

** 해양안전실천본부(전국 12개) 중심, 해수부·해경·지자체·수협·해양수산업단체 등 참여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해양사고 발생 건수(건)	2,720	2,863	3,092	2,834	3년간('21~'23년) 평균 해양사고 발생건수(2,892건)를 기준으로 2% 감축 - 24년도 목표 : $2,892 \times 0.98 = 2,834$ 건	해양안전심판원 통계	해양안전심판원 통계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선박안전·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안전할 권리에 대한 국민요구 증대, 안전관리 패러다임이 정부·규제중심에서 참여·맞춤·지원형으로 전환 중
- 국민 스스로 안전관리의 주체가 되고 고위험선박, 빈발하는 해양사고 등에 대한 맞춤형 집중관리 및 각종 규제 이행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 바다에서도 국민의 안전할 권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 증대, 특히 선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의무강화 등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

-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수칙 미준수, 안전 부주의에 따른 단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지속 발생*

* (어선) 최근 5년간 안전사고 인명피해(사망·실종) 262명 중 93명(35%)이 해상추락
(비어선) 최근 5년간 안전사고 인명피해(사망·실종) 69명 중 19명(28%)이 해상추락

□ 재난 및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과 정책수요의 증대

- 코로나-19, 이태원사고 등 연이은 대형사건·사고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지속 증가 및 국가의 책무강화 요구 증대
-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24)되는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법 이행 필요

* ('22.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24.1~) 5~49인 사업까지 확대

□ 정책 수요자의 의견 반영으로 현안대응 및 갈등예방

- 새로운 기술기준 마련 등 대외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갈등 해소 필요

- 대국민 캠페인·홍보*, 무상보급, 연구개발, 의무화 등을 중점·지속 추진하여 구명조끼 착용을 해양안전문화로 정착

* 도로교통분야 자동차 안전띠의 경우, 단계적 착용 의무화('81~'18) 추진 및 30년 이상 다각적 교육·캠페인·홍보·단속 등을 통해 착용률(앞좌석) 90% 수준 달성

(4) 기타: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국가 해양수산 재난관리체계 선진화(Ⅱ-3-①)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53 / 5857 / 6074)

□ 추진배경

- 해양수산 재난의 복잡화·대형화 및 정부의 재난대응 역량에 대한 국민 기대치 증가 등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난관리 역량 요구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요구 및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민간영세사업장 지원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가. 해양수산분야 재난대응체계 확립

- (재난관리계획)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명·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수산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계절별·분야별 계획 수립
 - 안전점검의 날 추진계획('24.4),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24.4) 여름철·겨울철 재난대응계획('24.6·11), 안전관리 집행계획('24.9) 등
- (재난매뉴얼) 현장 활용성 강화 및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 해양 선박사고 재난매뉴얼 현행화 및 교육
 - (매뉴얼 현행화) 비상연락망(PS-LTE 번호 추가 등) 수정, 상위 매뉴얼 연계성 및 법령 명칭·조항 현행화 등
 - (재난관리 교육) 국가재난관리체계, 매뉴얼 작성·관리방법, 초기 대응 방안 등 권역별 워크숍('24.6) 및 실무자 교육(수시)
- (점검·훈련 등) 재난관리 역량강화 및 재난발생 시 초기 상황 보고 등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실태점검 및 재난대응 훈련
 - (실태점검) 재난매뉴얼 관리현황, 집중안전점검 후속조치 및 안전관리 집행계획 이행여부 등 기관별 재난관리 실태점검(반기 1회)

- (훈련) 신속한 상황보고·전파 및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불시 상황전파(분기1회) 및 범정부 재난대응 훈련(연1회)

나.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

- (안전보건 이행·관리) 본부·소속기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 등 반기 점검('24.6·12)
- 주요 현장(관공선, 등대시설 등) 위험성평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항만시설 등) 안전계획 이행 등 소속기관 집중 점검('24.9)
- (취약분야 집중지원) 공공선박 및 영세 민간사업장 등에 맞춤형 컨설팅, 교육 및 홍보 등 지원
- (공공선박 컨설팅) 유해·위험요인 식별, 안전수칙 적절성 검토 등 공공선박 안전보건 컨설팅('24.10)
- (민간지원) 영세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24.4.~10) 및 현장 설명회(연 2회), 중대재해 표준매뉴얼 안내서 마련('24.下)
- (실무자 역량강화) 우리부·관계기관 중대재해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24.4) 및 워크숍('24.11) 개최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4년 재난매뉴얼 관리계획 수립	'24.1월	
	해양수산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지원 계획 수립	'24.1월	
	봄철 농무기 대비 상황전파 훈련	'24.3월	
2/4분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4.5월	
	태풍 대비 재난대응계획 수립 및 상황전파 훈련	'24.6월	
	중대재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현황 점검(상반기)	'24.6월	
3/4분기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24.9월	
	추석 연휴 대비 상황전파 훈련 시행	'24.9월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이행현황 점검	'24.9월	
4/4분기	겨울철 재난대응계획 수립	'24.11월	
	겨울철 대비 상황전파 훈련 시행	'24.11월	
	중대재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현황 점검(하반기)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해양수산분야 재난·재해 이해관계자·수요자 대상, 민·관 워크숍, 설명회 및 정책 현장 방문 등 소통강화로 정책효과 제고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1/4분기	현장방문	해양수산분야 재난안전(사고선박) 현장방문	'24.3월
2/4분기	설명회	해양수산 민간사업장 대상 중대재해 설명회	'24.5월
	워크숍	재난대응체계 및 구조·구난 대응사례 공유를 위한 민·관 워크숍	'24.6월
3/4분기	설명회	해양수산 민간사업장 대상 중대재해 설명회	'24.9월
	현장방문	재난상황관리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현장방문	'24.9월
4/4분기	세미나	해적 등 해외재난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세미나	'24.11월
	워크숍	해양 선박사고 저감을 위한 관계기관·지자체 항행장애물 워크숍	'24.12월

□ 기대효과

- 재난매뉴얼의 체계적 관리 및 실효적인 훈련·교육을 통한 철저한 대비·대응태세 유지, 역량향상 및 편차해소
- 재해예방 중심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충, 민간 영세사업장 및 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 등으로 중대재해 예방활동 내실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해양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Ⅱ-5-일반재정①)				
①	해양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6332)	일반회계	17	17
	▪ 해양수산 재난관리 지원(307)		17 (17)	17 (1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①국가 해양수산 재난관리체계 선진화 추진율(%) (가중치 70%)	100	100	100	100	○ 재난 예방·대비 추진 (100%) - 재난 예방·대비 추진과제 이행 여부 정도를 목표치로 설정	○ (산출식) 실적/계획(43) X 100% * 계획 8건, 대응 훈련 1회, 상황 전파훈련 4회, 통합점검 3회, 해양 선박사고 재난매뉴얼 26개 현행화, 안전정보 전파 1식(문자 200회 이상) ○ (목표값) 100%	내부자료
②해양수산분야 중대재해 예방활동 이행율(%) (가중치 30%)	신규	신규	100	100	○ 안전보건확보 추진 및 민간지원(100%) - 안전보건 추진과제 이행여부 및 민간지원 실적 결과를 목표치로 설정 * 추진과제 46개 - 산업재해 13개 - 시민재해 11개 - 컨설팅 5개 분야(해운, 항만, 어업, 수산, 레저) - 설명회 2회(민간사업장 대상, 참석자 100명 이상 규모) - 민간사업장 실태조사 15개 분야(해운 4개, 항만·운송 3개, 어업 4개, 수산 2개, 레저 2개)	○ (산출식) 이행건수/추진과 제건수(46) X100% ○ (목표값) 100%	내부자료

②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범정부 해사안전대책 시행(Ⅱ-3-②)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46 / 5817)

□ 추진배경 (목적)

- 해양에서의 대형 인명피해* 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지속, 사고예방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해양안전관리 혁신요구 증대
 - * 화물선 침몰('17, 22명), 낚시어선 충돌침몰('17, 15명), 어선 화재('19, 12명), 어선 전복('21, 7명, '23, 9명)
- 선진국형 민간자율관리 안전문화가 정착된 사회로 성숙되기 전까지 지속적인 정부주도의 안전관리 불가피
 - 체계적인 대책수립·이행과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
- 해사안전·해양환경 분야의 국제기준을 선도하기 위해 국제협약 제·개정을 담당하는 국제해사기구(IMO) 대응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범정부 안전계획) 해사안전증진을 위해 제3차 국가해사안전 기본계획('22~'26)에 따른 '24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협업강화) 안전대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유관부처·단체, 지자체 등 합동 해양안전 점검회의 개최
- (취약분야 안전대책) 기상특성 및 선종별 취약요인을 고려한 계절별 해양사고 예방대책 등 수립·시행 및 현장이행 점검 추진
- (현장이행력 강화) 해사안전감독관 지도·감독계획, 취약선종 점검계획 수립·시행 및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등
- (안전문화 확산) 대국민 체험형 안전교육을 위한 해양안전 체험관(안산, 진도) 운영,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구축·운영 등
- (국제해사분야 영향력 강화) 국격 제고 및 영향력 강화를 위한 개도국 공적개발원조(ODA) 및 기술협력 확대 추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MTIS(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교통혼잡예측정보 개발·활용	'24.2월	국정 40-4
	어업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해양교통방송 시범운영	'24.2월	국정 40-4
	'24년 해사안전 시행계획 수립·시행	'24.3월	국정 40-4
2/4분기	해양교통망 구축 및 관리체계 마련 연구 착수	'24.4월	국정 40-4
	안전투자 공시제도 세부 운영·관리 방안 연구 착수	'24.4월	국정 40-4
	계절별(여름)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24.6월	국정 40-4
3/4분기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구축·운영	'24.8월	국정 40-4
	선박 운송 전기차 화재 대응 종합대책 수립·시행	'24.9월	국정 40-4
	해양안전 공모전 개최	'24.9월	국정 40-4
4/4분기	안전투자 공시제도 관련 공시항목 내역산출 가이드라인 제작	'24.11월	국정 40-4
	해사분야 사이버 공격·위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24.12월	국정 40-4
	계절별(겨울)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24.12월	국정 40-4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해사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확대하여 정책의 현장이행력 제고

구 분		내용	세부일정
1/4분기	회의	해양안전 점검회의 개최	'24.1월
	간담회	'24년 해사안전정책 설명회 개최	'24.2월
	현장점검	위험물운반선 등 현장안전점검	'24.3월
2/4분기	현장점검	해사안전정책 이행실태 현장점검 및 건의사항 청취	'24.6월
3/4분기	현장점검	해사안전정책 이행실태 현장점검 및 건의사항 청취	'24.9월
4/4분기	회의	해양안전 점검회의 개최	'24.12월
	현장점검	해사안전정책 이행실태 현장점검 및 건의사항 청취	'24.12월

□ 기대효과

- 해상교통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해양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Ⅱ-5-일반재정①)				
①	해양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6332)	일반회계	167	173
	▪ 해상안전 국제협력(301)		71	70
	▪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302)		96	10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① 해양사고 피해 저감실적(지수) (가중치 50%)	3.91	3.70	3.70	3.58	3년간('21~'23년) 1~11월간 평균 해양사고 피해 저감 지수(3.77)의 5% 감축	사망·실종자(1천척당)*+주요 사고 발생률** *당해연도(1~11월) 사망·실종 인원수 ÷ 선 박등록척수 x 1,000 **당해연도(1~11월) 주요사고 발생척수 ÷ 선 박등록척수 x 100	중앙해양안전 심판원 해양사고 통계
② 취약선박 집중관리 (케어쉽프로그램) 추진실적(척) (가중치 50%)	462	597	622	650	전년 목표(600척) 대비 50척 상향 * 한정된 예산과 현장 관리인력을 고려, 점진적으로 목표치 상향	나홀로조업어선, 안전취약선박 등 고위험선박에 대한 집중 안전 관리 실적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내부 실적관리 시스템

③ 연근해어선 안전관리 체계화(Ⅱ-3-③)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51 / 5552)

□ 추진배경 (목적)

- (현황) 전체 해양사고 중 어선 사고*가 66%를 차지하고 인명피해**는 연평균(최근 5년) 대비 8.9% 감소 추세이나 지속적으로 발생

* 어선사고 발생건수: ('19) 1,951 → ('20) 2,100 → ('21) 1,786 → ('22) 1,718 → ('23) 2,047

** 어선사고 인명피해(명): ('19) 79 → ('20) 99 → ('21) 89 → ('22) 83 → ('23) 78

- 대규모 인명피해를 동반한 충돌·화재사고 역시 매년 발생*하며, 사고 시 수색자원 총동원으로 국가적 부담** 증가

* 3명 이상 인명피해를 동반한 중대형 어선사고 : ('21) 3건 → ('22) 3건 → ('23) 2건

** 중대형 어선사고 발생 시 약 10일 이상 수색을 지속, 일일 최대 약 25억원(추산) 소요 / 25억원 = 동원선박 유류비(23.4억원) + 항공기유류비(0.4) + 조명탄(0.5)

- (사고원인) 해상의 열악한 조업환경, 안전장비 미착용, 조업 중심의 어선 건조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 어선사고는 투양망·어획물 적재 등 선상 작업과 연관되며, 선박구조 및 작업환경 전반의 근본적 문제로 인해 발생

- 연근해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선제적으로 어선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안전제도)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처분 강화 및 어선사고 대응 매뉴얼 등 개정 추진

- 어업인의 조업편의 보장과 효율적인 어선 위치관리를 위하여 위치통지제도 합리화* 및 위치통지 미이행 시 처분강화** 추진

* 위치통지 횟수를 경감하고, 어업인이 언제든지 위치통지가 가능하도록 횟수방법을 조정

** (기존)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변경)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24.1)에 따라 상시근로자 5~49인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지원

* 50인 이상('22.1.27. 시행, 대형선망 선단 既구축) → 5인 이상 50인 미만

** 업종별로 마련한 중대재해 대응 표준매뉴얼의 현장 정착·적용을 위해 사업장 대상 컨설팅 및 알림서비스 등 지원('23~)

- 어선원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제·개정, 어선원안전감독관 등 전담조직 확충('24.下)**

*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고용부 / 20톤↓)과 선원법(해수부 / 20톤↑)으로 이원화 → [개선] 어선안전조업법으로 일원화(해수부 / '24.1.2. 공포, '25.1.3. 시행 예정)

** [법령]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어선원 안전·보건 기준, 위험성평가 기준 등 고시 제정 / [조직] 지방청 어선원안전감독관 및 본부 전담인력 정기직제 반영

- 제1차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체계적 이행 및 기본계획 정책을 구체화한 '24년도 어선안전조업 시행계획 수립·시행

○ (건조기반) 어선의 건조단계부터 조선·검사·연구 등 소과정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및 산업기반 마련

- 조업 중심에서 안전 중심으로 어선건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어선설계 플랫폼 개발, 대체건조 저금리 대출* 등 지원 확대

* 어선건조금 90% 융자, 이자 보전(고정 2~3%, 15년 상환)

- 국가 차원의 어선 건조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어선건조 진흥단지' 구축 등 산업기반 강화

* 어선건조 진흥단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어선법」 개정), 어선건조업 등록제 도입

○ (안전설비) 어선·어선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여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마련

- 어선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사고징후어선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 기능개선 추진

* 1척의 어선에서 다수의 위치발신장치가 동시에 꺼진 경우 전복·침몰 등 사고징후 어선으로 구분하여 우선적 관리(D-MF/HF 설치어선(1,950척)에 시범운영 중, '23.10~)

** 총 1,918척 보급완료 / ('21) 800척 → ('22) 700척 → ('23) 418척

- 소규모 어선(2명 이하), 선장의 승선원 착용책임 등 구명조끼 착용의무('25.10) 홍보* 및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장치 개선**('24)

* 어업인 안전교육, 어선안전의 날 캠페인, 수협 홍보방송, 어업현장 방문 등 수시 홍보

** 성능개선 용역('23.6~12월) → 실해역 검증 및 시범운영('24.1~6월) → 현장 보급('25)

- (안전 문화) 어업인의 사고대응 역량강화와 내실있는 교육 운용을 위한 교육방식 및 제도 정비, 대어업인 안전문화 홍보 강화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업인 안전교육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운영지침 마련 등 제도 정비

-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습형·체험형 교육 확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 확대 등 운영방식 내실화

- 사고 빈발 시기에 중요 안전규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 점검 실시하고, 전국 주요 항·포구에서 안전 캠페인 활성화

* 구명·소방 설비 비치, 어선 위치발신장치 및 무선설비 설치 등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어선 원격검사제도 도입	'24. 1월	
	2024년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 수립	'24. 3월	국정 41-7
	어선건조설계 플랫폼 R&D 전문가 협의회	'24. 3월	
2/4분기	에너지절감형 친환경어선기술개발 사업(R&D) 연구기관 협약 체결	'24.4월	국정 41-7
	500마력 LPG 추진어선 개발 착수	'24.6월	국정 41-7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장치 시범운영 완료	'24. 6월	
3/4분기	「연근해 어선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	'24. 7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4. 7월	
	표준어선형 및 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24. 7월	
4/4분기	업종별 어선원 안전·보건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	'24. 12월	
	「어선법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일부 개정	'24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의견수렴)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과 어업인의 조업편의 보장을 위하여 어업인과 관계기관 의견수렴·간담회* 추진

- 어선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행 규제**의 **완화** 또는 **정비**를 위한 어업인 업·단체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 매뉴얼 배포 등 정부정책의 **현장 수용성 확인**, 어업인 의견수렴 등 추진
- (현장점검) 어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현장 운영실태 점검 등
-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장치의 현장 보급을 위해 실제 어선·해역에서의 시범운영 및 실사용자 현장의견 청취
- 조업현장에서의 안전의식 제고와 내실있는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운영을 위한 계절별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 교육현장 실태점검 등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1/4분기	간담회	일시적 조업 및 항행제한 규제완화를 위한 인천 어업인 업·단체 간담회	'24. 3월
2/4분기	현장방문	봄철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24. 5월
	현장방문	업종별 어선원 안전·보건관리 표준매뉴얼 교육·컨설팅	'24. 6월
3/4분기	현장방문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시스템 시범운영	'24. 7월
4/4분기	현장방문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운영현황 현장점검	'24. 10월
	현장방문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24. 11월

□ 기대효과

- (안전성) 연근해 어선 안전관리 체계화와 선제적 어선사고 대응 기반을 마련하여 어선사고 감소와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지속성) 국가 차원의 어선건조 산업 관리, 어업환경 현대화로 지속 가능한 어선건조 산업환경 조성 및 패러다임 전환
- (친환경) 노후어선 대체 건조, 친환경 온실가스 저감효과 등 국제사회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역량 마련
- (경제 활성화) 어선 신조에 대한 체계적인 산업기반 마련으로 국민경제의 생산과 고용 창출을 통한 중소조선 산업 활성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어업안전지도강화(Ⅱ-3-일반재정①)				
① 어업안전지도강화(3132)		일반회계	248 (1,988)	266 (1,117)
■ 어선안전조업지원(302)			197	221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304)			18	18
■ 연근해 위치확인시스템 구축(306)			33	27
친환경양식육성(Ⅱ-3-일반재정③)				
① 친환경양식육성(3140)		농특회계	42 (1,392)	42 (989)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335)			42	42
연근해어업구조조정(Ⅱ-3-일반재정⑦)				
① 연근해어업구조조정(3145)		농특회계	18 (1,369)	18 (1,661)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301)			18	18
기술개발(Ⅱ-3-일반재정⑪)				
① 기술개발(6431)		기후대응기금	86 (86)	52 (5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① 어선 1만 척당 주요어선사고(건)	신규	신규	신규	118	최근 5년간 연근해 등록 어선 1만척당 주요사고* 건수 평균보다 5% 감소된 118건을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목표치를 설정 * 인명피해(사망) 97%를 차지하는 충돌, 전복, 침몰, 화재, 안전사고 ** 최근 5년간('19~'23) 주요어선사고건수 평균(492건) / 연근해어선등록척수 평균(39,603척) X 10,000척 = 124건	(당해연도 주요 어선사고 건수 / 국내 등록 연근해어선 수) ×10,000	해양사고 통계 및 등록어선통계

전략목표 Ⅲ.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행복을 키우는 해양공간을 구축한다.

1. 해양 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여
해양선도경제를 조성한다.
2. 국민 행복을 위해 해양레저관광·해양문화
강국으로 도약한다.
3.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경제영토 확장 및
관리역량을 강화한다.
4. 해양환경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및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이용기반을 마련한다.

기본방향

◇ 배경·필요성(중요성)

- 해양바이오 산업, 신재생 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바다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극지, 대양진출 및 심해저 개발 등 경제영토 확장 필요
- 기후변화, 해양쓰레기, 바다의 무분별한 선점식 이용 등 국민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관리 필요

◇ 그간의 성과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23.3),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22.12) 해양바이오 산업 신성장 전략(22.7) 등을 수립하여, 유망 해양 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기본설계(23.2), 남극 내륙탐사를 위한 K-루트 구축(23.12) 등 극지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무인도서의 체계적 관리 및 독도해양주권 관리능력 강화
- 국민 안심을 위한 해양방사능 조사정점 대폭 확대(52→127) 및 감시해역 확대로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조사결과를 신속·정확히 공개
- 「기후변화 감시·예측법」 제정(23.10) 및 전담조직 신설, 「블루카본 추진전략」 수립·이행(23.5), 갯벌 식생 복원사업 지속 확대 추진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23.12), 해양이용영향평가팀 신설 등 해양 보전과 이용의 공존을 위한 환경성 평가제도 재정립
- 「해양폐기물 저감 혁신대책」(23.4), 「하천폐기물 해양유입 저감대책」(23.12) 수립
-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에 공공시설물(대피소, 선착장 등) 설치,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 토지소유자 시설물 설치 허용 등 무인도서법 일부 개정(23.8)

◇ 주요 내용

- 해양 바이오, 마리나,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영해기점 무인도서 특별관리 계획 수립 및 동해 해양과학기지 구축을 통한 해양영토 관리 강화
- 해양환경 위해요소 대응체계 구축, 깨끗한 해양수질 확보 및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를 통해 청정 해양환경 조성
- 지자체간 해상경계 획정, 공유수면 불법행위 감축 등 해양공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갯벌 복원 및 해양보호구역 확대 등 해양생태계 건강성 회복

◇ 임무와의 상관관계

- 국정과제 41번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73번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이행을 위해 성과관리 체계와 연계 추진 필요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2	4	4	15	30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전략목표 Ⅲ.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행복을 키우는 해양공간을 구축한다.		① 극지 및 대양탐사 진척도(%) ② 극지 및 대양연구 분야 논문 발행 수(건)
	1. 해양 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여 해양선도경제를 조성한다.	① 해양신산업 상용화 기반 구축율(%)
	①해양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	①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②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발전기반구축율
	②해양신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한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① 해양수산생명 자원주권 강화율(%) ②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노력도(%)
	③해양산업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① 해양수산 분야 창업·투자지원 업체 수(개소) ② 투자유치액 (억원)
2. 국민 행복을 위해 해양레저관광·해양문화 강국으로 도약한다.		① 국민 해양레저 관광 체험률(%)
	①권역별 해양관광명소 조성 및 해양관광 콘텐츠 확산	① 해양레저관광 수요창출 노력도(%) ②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 추진율(%)
	②해양교육문화 콘텐츠 확충 및 향유기회 확대	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제도 강화율(%) ③ 해양문화시설 인프라구축 및 운영 효율화(%)
3.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경제영토 확장 및 관리역량을 강화한다.		① 해양영토 관련 학술연구 성과(건)
	①독도 등 섬 관리강화 및 대국민 인식제고	① 무인도서 관리 강화(%) ② 독도 연구성과 활용 확대(건)
	②해양영토의 과학적 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	① 동해 해양과학기지 구축률(%) ② 국제해양법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성과 만족도(점)
	③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분야 통상협상 대응	①규범 협상 대응 ②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지원
	④해양수산 ODA 확대 및 양자협력 증진	① 해양수산 ODA 사업 예산 ② 외국 정부와의 해양수산 분야 협의회 횡수
	⑤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상력 강화	① 국제수산기구 제안서 제출비율(%) ② 국제협상 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실무 참여율(%)
4. 해양환경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및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이용기반을 마련한다.		① 해양수질 개선율(%)
	①해양쓰레기 전(畝)주기 대응 및 보전개발이 조화로운 해양 관리 강화	① 해양쓰레기 수거량 ② 해양이용 영향평가법 하위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 제·개정 건수
	②지속가능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해양환경안전망 구축	① 해양오염감시망 강화 ②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구축
	③개발과 보전의 상생 및 공존을 위한 해양공간관리 체계화	① 해양공간의 공공성 강화 ② 해양수산 빅데이터플랫폼 데이터 제공창구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 실적
	④해양자산 관리 강화 및 해양생태계 보전	① 해양생물 멸종위기 위험도 평가 달성률(%) ② 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수 (개소)
	⑤해양 기후변화 대응 강화	①(국내)민간대상 온실가스 감축 사업 확대 ②(국제) 해양부문 국제감축사업 발굴

(1) 주요내용

□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신산업 기반 구축

- 조류, 파력 등 해양에너지원별 핵심기술 개발로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고 해저체류 기술개발 및 해양 무인이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
- 해양플랜트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역량강화 지원을 추진하며, 해외 정부와의 협력 기반 구축
- 전기·암모니아 혼소 등 친환경 대체연료 선박을 개발하고, 해상 테스트베드를 통한 기술검증 지원으로 상용화 촉진
- 북극 고위도 항해가 가능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인도양과 북서태평양 해역관측 등 극지 및 대양 진출 기반 마련

□ 해양 창업 생태계 조성 및 투자활성화 기반 마련

- 해양수산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 디딤돌 마련,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 발굴 및 지원 추진

□ 「해양교육문화법」 시행(21.2)에 따라 체계적인 해양교육을 실시하고, 해양문화 권역별 인프라 구축 및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 추진

- 체계적인 해양교육 실시와 해양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해양교육·문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문화 대중화·산업화 추진
- 권역별 대규모 해양문화 인프라 확대(국립인천해양박물관, 미래 해양과학관 조성) 및 해양교육·문화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계획 수립(공공개발 검토 등)을 통해 해양복합관광 클러스터 구축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

□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강화를 통한 저변확대 및 레저수요 창출

- 국내 해양관광 수요에 맞춰 해수욕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안전성 확보, 우수해양관광 콘텐츠 신규 발굴 추진
- 해외 크루즈선 신규 유치, 국제 크루즈박람회 개최, 지자체 행사 연계 등을 통한 해양레저 저변확대 및 내수경기 활성화

□ 해양레저관광 명소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대 조성

-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마리나 인프라 및 남해안권 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을 통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추진
- 국민의 여가 편의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연안·어촌지역에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제공하기 위한 권역별 해양레저관광거점 신규 조성 추진

□ 무인도서의 체계적 관리 및 관할해역 관리역량 강화

- 장기간 방치되어 오염·훼손된 보전형 무인도서(주변해역 포함)의 해양환경 개선 및 영해기점 도서의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
- 동해 해양과학기지 구축을 통한 전체 관할해역 관리역량을 확보하고, 해양관련 국제현안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한 전문가 육성

□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를 위한 대외정책 추진

- (ODA)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글로벌 가치실현에 기여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ODA 사업 대폭 확대
- (국제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22.12)에 따라 미국·일본·태평양 도서국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추진

□ 기후 위기 적극 대응 및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 추진

- 탄소중립 로드맵 체계적 이행 및 해양의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양환경관리체계도 기후변화 대응형으로 전환
- 수산자원 보호, 선박 안전운항 확보, 해양환경 보전 등을 위해 해양쓰레기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의 전주기 과정 관리 추진

□ 해양공간 관리 체계화, 갯벌 등 해양자산 관리 강화

- 바다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양공간계획 및 공유수면의 체계적 관리·운영과 해양수산정보 공유·활용체계 구축
- 다양한 갯벌의 생태적 특성과 개발·이용 수요 등을 체계적·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갯벌법」 및 「해양생태계법」 개정 등 추진
- 해양 이용·개발 행위의 양적 증가 및 다양화·대형화에 따라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사후 관리 강화 추진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23	'28			
① 극지 및 대양 탐사 진척도(%) (가중치 50%)	신규	신규	113.6	100.3	137.5	100	극지 및 대양과학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남·북극해, 아북극·서태평양 등 연차별 탐사 계획 최종목표('28년까지 조사 목표 정점 수 총 1,809점) 반영 * ('24년) 90.0%, ('25년) 92.5%, ('26년) 95%, ('27년) 97.5%, ('28년) 100%	실제 조사 정점 수 / 조사 목표 정점 수(%) * 최종 목표('28년, 1,809점) 대비 정점 조사를 누적 집계	연구과제 연차보고서, 탐사보고서, 관측DB 등 확인
② 극지 및 대양 연구 분야 논문 발행 수 (가중치 50%)	신규	신규	신규	62	60	74	최근 3년 평균(74.6건) 극지 및 대양과학 연구 사업 논문 발행 건수를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 ('21년) 61건 ('22년) 62건 ('23년) 101건	극지 및 대양분야, 해저공간 관련 논문 발행 건수 집계	중빙자료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NTIS) 등 확인

(3) 기타: 해당없음

(1) 주요 내용

□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신산업 기반 구축

- 조류, 파력 등 해양에너지원별 핵심기술 개발로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고 수중건설로봇 등 해양 新장비 개발과 사업화 지원
- 해양플랜트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역량강화 지원을 추진하며, 해외 정부와의 협력 기반 구축

□ 해양 창업 생태계 조성 및 투자활성화 기반 마련

- 해양수산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 사업화 자금, 투자유치 컨설팅 등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및 유망기업 발굴
- 해양모태펀드 규모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투자기반 마련 및 투자협의회, 기업설명회(IR) 등 투자 활성화 촉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해양신산업 상용화 기반 구축율(%)	100	100	100	100	해양수산 신산업 상용화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율을 목표로 설정	(차세대 선박과 해양플랜트 산업 인프라 구축율 +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노력도 + 친환경선박 보급 기반 마련율) ÷ 3 × 100	방침문서, 관련공문 등 내부자료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물가상승 등 외부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의 투자활동이 위축되는 등 다양한 지원 확대를 바라는 현장 목소리 다수 발생
 - 유망 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사업계획 변경, 지원 대상 확대 등 적극적 대응 필요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해양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Ⅲ-1-①)

해양개발과 (044-200-5241 / 5244 / 5248 / 5664 / 6182)

□ 추진배경 (목적)

- 해양과학기술 선도를 통한 극지·대양 및 심해저 등 해양영토 확대와 해양에너지·친환경 선박 등 신산업 시장 선점 필요성 증대

- (해양에너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합하는 해양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산업육성 필요

◦ 제9차 전력수급계획('20~'34)	⇒ '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5.8%(재생 22.2)
◦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34)	⇒ '34년 신재생에너지 주력 에너지원, 저탄소 이행 가속화
◦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 우리부, '30년 21.1만톤(해운 19.1, 어업 2)
◦ 재생에너지 2030 이행계획('17)	⇒ '30년 발전설비 용량 63.6GW 확충
◦ 해양e 2030 계획('18)	⇒ '30년 발전설비 용량 1.5GW(≒신고리원전 1기≒75만가구분)

- (차세대 선박) 글로벌 해운분야 탄소 저감 대응을 위한 전기추진선 및 용융염원자로, 암모니아 혼소 기관 등 미래 친환경 선박기술 개발 추진

- (해양플랜트) 해양플랜트 산업 분야의 신시장 창출을 위하여 유지·관리, 해체 등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산업*으로 진출 지원

* 해양플랜트의 운송, 설치·시운전, 유지·관리, 해체 및 인력·물자 조달 등 부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련의 산업(산업 전체 부가가치의 50%↑)

- (해양장비) R&D 성과물인 국산 해양장비의 공인시험성적서 확보를 통해 관련 신산업 창출 및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

- (해저공간) 수심 50m에 5인이 30일 거주할 수 있는 해저 체류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실증 추진

-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기업 지원체계 구축, 홍보 등을 통해 미래 해양심층수 산업 육성 필요

- (극지 및 대양) 극지 거버넌스 확대 및 글로벌 대양 연구를 통한 해양과학기술 선도를 통하여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해양에너지) 파력, 그린수소 등 에너지원별 기술고도화 및 상용화 추진으로 해양에너지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 (파력발전) 다수모듈을 활용한 방파제 연계 파력발전 실증플랜트 기본 및 구조물 상세설계 완료(10월)
 - (그린수소) 수전해, 해수담수화, 통합원격감시 제어 시스템 등 실증시스템을 제작하고 실험역 설치(10월)
- (차세대 선박) 전기추진선, SMR, LNG-암모니아 혼소기관 등 차세대 선박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 추진
 - (전기추진선) 전기추진 시험 인프라 준공(6월), 전기추진 차도선 실증운항 보고 및 명명식(12월)
 - (SMR) MSR 탑재 원자력추진선·부유식 원전 비즈니스 모델 고려 필수 설계요건 및 전력 네트워크 모델 도출(12월)
 - (LNG-암모니아 혼소기관) 혼소엔진 배기성능 공인기관 인증(10월), 대유량 연료공급시스템 선급 인증(10월)
 - (테스트베드) 친환경 대체연료 실증 선박 건조 및 시운전(12월), 해양환경모사 시뮬레이터(HILS) 구축(12월)
- (해양플랜트) 국내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시장설명회 및 수출상담회 추진(12월)
- (해양장비) 공인시험 지원용 수조 시험 시스템 구축 및 내해 실증 시험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12월)
- (해저공간) 해저공간 플랫폼 상세설계 완료, 잠수 챔버 및 공기 산소발생기 등 장치 제작(12월)
- (해양심층수) 제4차 해양심층수 기본계획 및 2024년도 시행 계획 수립(6월), 심층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 시행(12월)

- (극지 및 대양) 기후변화 대응, 해저자원 탐사 등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 추진
- (기후변화) 인도양 수온약층 용기해역(6월), 북서태평양 온난화 소용돌이 해역 탐사(9월), 전남극 빙상 정보 수집 및 빙상모델 구축(12월)
- (해저자원 탐사) 보퍼트해 해저환경 변동성 관측(12월), 인도양 해저열수광상(5월)·서태평양 망간각(12월)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
- (해양생태 연구)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의 환경 특성 파악(12월)
- (국제협력) 해양과학기술 거점확대와 국제현안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등 해양외교력 강화를 위한 양자회담 및 행사 개최
- * 한-인니 해양과학 공동위 개최(5월), 한-중 해양과학 관리위(7월), 한-미 해양과학기술협력 연례회의(9월) 등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극지및대양) 남극 세종기지 정부조사단 파견	'24.1월	국정 41-1
	(극지및대양) 2024 북극프런티어 참석	'24.2월	국정 41-1
	(해양에너지) 파력발전 사업추진 현장점검	'24.3월	국정 73-6
2/4분기	(차세대선박) 전기추진선박 시험동 준공	'24.6월	
	(극지및대양) 인도양 수온약층 용기해역 관측	'24.6월	
	(해양심층수) 제4차 해양심층수 기본계획 수립	'24.6월	
3/4분기	(국제협력) 한미 해양과학기술협력 연례회의	'24.9월	
	(극지및대양) 북서태평양 온난화 소용돌이 해역 조사	'24.9월	
	(극지및대양) '24년도 북극연구체험단 파견	'24.8월	국정 41-1
4/4분기	(해양에너지) 해양그린수소 실증시스템 실험해역 설치	'24.10월	국정 73-6
	(차세대선박) 전기추진차도선 명명식	'24.12월	
	(해저공간) 잠수 챔버 및 공기 산소발생기 등 장치 제작	'24.12월	국정 41-1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해양에너지) 파력발전 이해관계자 간담회(2월), 조류발전 과제 사업추진 현장점검(9월)
- (차세대선박) 용융염원자로 혁신기술개발사업 세미나(11월), 전기 추진차도선 실증운항 최종 간담회(12월)
- (해양플랜트)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을 위한 발전협의회 실시(6월)
- (해저공간) 테스트베드 구축 예정지 주민설명회 실시(9월)
- (해양심층수) 취수 및 연구시설 현장확인(2월)
- (극지 및 대양) 제1차 극지정책협의체 개최(4월)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1/4분기	간담회	(해양에너지) 파력발전 이해관계자 간담회	'24.2월
	현장방문	(해양심층수) 취수 및 연구시설 현장확인	'24.2월
2/4분기	간담회	(극지및대양) 제1차 극지정책협의체 개최	'24.4월
	현장방문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발전협의회 실시	'24.6월
3/4분기	설명회	(해저공간)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해역이용협의 관련 주민설명회	'24.9월
	현장방문	(해양에너지) 조류발전 과제 추진현황 점검	'24.9월
4/4분기	간담회	(차세대선박) 용융염원자로 혁신기술개발사업 세미나	'24.11월
	간담회	(차세대선박) 전기추진차도선 실증운항 최종 간담회	'24.12월

□ 기대효과

- (해양에너지) 해양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고도화를 통한 해양 에너지 상용화 토대 마련
- (차세대선박) 전기추진차도선, 친환경연료 해상테스트베드 개발, 해양용 MSR 전력네트워크 모델개발 등 친환경 선박추진의 기술 확보
- (해양플랜트)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기술수준 향상**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시장 규모는 약 300조원 규모(동남아 수리·해체 분야 시장규모 : 42조원 추정) / ** 선진국대비 기술수준 '21년 30% → '30년 85% 수준

- (해양장비) 공인화된 실증시험 데이터를 확보하여 국내 신산업 창출 및 국산 장비의 해외 시장 진출에 기여

- (해저공간) IT기업 수중데이터센터, 잠수사·우주인 훈련장, 의료·생명과학 연구 공간, 해양레저·관광 등의 분야에서 활용
-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 산업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이해당사자 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산업 활성화에 기여
- (극지 및 대양) 극지 및 대양 진출을 위한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통해 거버넌스 선도국으로 도약하여 해양신산업 추진 기반 마련

□ '23년도 미흡부진과제 개선계획

- III-3-③(극지 진출 및 대양연구 기반 구축) 추진계획의 충실성 및 정책효과 개선·보완필요, 성과지표 부합도가 상대적으로 저조
- III-3-③ 과제 내용을 포함하여 III-1-① 과제를 확대·개편하여 추진계획 충실성, 정책효과, 성과지표 부합도 개선 추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해양자원이용기술개발(I -2-R&D①)				
①	해양자원이용기술개발(R&D)(2041)	일반회계	124 (164)	169 (169)
■	심해저 광물자원 기술개발(R&D)(305)	일반회계	39	71
■	해양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기술개발(R&D)(306)	일반회계	65	80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파력발전 상용화 기술개발(R&D)(307)	일반회계	20	18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I -2-R&D②)				
①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2042)	일반회계	523 (702)	257 (445)
■	해양장비연구성과활용촉진사업(R&D)(313)	일반회계	43	13
■	해저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R&D)(318)	일반회계	41	41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R&D)(325)	일반회계	422	181
■	고품질 준실시간 해양파도 데이터 서비스 체계 개발(R&D)(329)	일반회계	17	22

		회계구분	'23	'24
극지및대양과학연구(R&D)(I -2-R&D③)				
①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R&D)(2043)	일반회계	250 (365)	183 (215)	
■ 극지 유전자원 활용 기술개발(R&D)(306)	일반회계	49	4	
■ 극한지개발 및 탐사용 협동이동체 시스템 기술개발(R&D)(307)	일반회계	22	22	
■ 극지 해양환경 및 해저조사 연구사업(R&D)(308)	일반회계	83	62	
■ 급격한 남극빙상 용융에 따른 근미래 전지구 해수면 상승 예측기술 개발(R&D)(322)	일반회계	41	39	
■ 기후변화 예측력 향상을 위한 대양 연구(R&D)(325)	일반회계	55	55	
해양기술역량강화(R&D)(I -2-R&D④)				
① 해양기술역량강화(R&D)(2045)	일반회계	24 (228)	30 (87)	
■ 해양수산 과학기술 국제협력 고도화사업(R&D)(305)	일반회계	24	30	
해양수산산업진흥(R&D)(I -2-R&D⑤)				
① 해양수산산업진흥(R&D)(2046)		51 (646)	63 (659)	
■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R&D)(302)	일반회계	18	17	
■ 해양플랜트 친환경 해체 실용화 기술개발(R&D)(306)	일반회계	9	1	
■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시험·평가기술개발(R&D)(322)	일반회계	20	40	
■ 용융염원자로(MSR)혁신기술개발(R&D)(342)	일반회계	4	5	
② 탄소중립기반구축 기술개발(R&D)(6431)		79	65	
■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R&D)(752)	기후대응기금	79	65	
해양정책 및 문화기반 조성(I -2-일반재정①)				
① 해양문화 활성화(2031)		39 (1,126)	39 (1,516)	
■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312)	일반회계	39	39	
해양영토관리기반구축(I -2-일반재정②)				
① 해양영토관리 기반구축(2032)	일반회계	15 (134)	10 (130)	
■ 극지정책 및 극지활동 역량 강화(302)	일반회계	15	1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가중치 50%)	신설	신설	신설	100	㉠ 전기추진 차도선 실증운항 (6회, 가중치 60%) * 전기추진선박의 안정성 확보를위한 실증목표 설정 ㉡ 해상 테스트베드 구축율(실증선박조기건조, 가중치 40%) * 예산 반영추이를 고려, '24년도목표를 실증선박 조기 건조 원료로설정	전기추진선 실증(6회,60%)+해 상 테스트베드 구축율(실증선박 조기건조, 40%)	과제 연차보고서, 내부자료
②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발전기반구축율 (가중치 50%)	신설	신설	신설	100	㉠ 해외 진출타당성조사지원 (2개기업, 가중치 30%) *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걸리는기간을 감안하여 타당성 조사 지원 기업 개수를 (‘21~’23) 4개 기업, 단년도 지원→(‘24) 2개 기업, 2~3년 연차별 지원 방식으로 사업 방식 개선 ㉡ 한·인니 수출상담회(1회, 40%) ㉢ 시장설명회(1회, 30%) * 최근 3년간 실적치(수출상담회 1회, 시장설명회 1회)와 동일하게 설정	해외 진출타당성 조사지원 (2개기업, 가중치 30%) + 한·인니 수출상담회(1회, 40%) + 시장설명회(1 회, 30%)	과제 연차보고서, 내부자료

② 해양신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한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구축(Ⅲ-1-②)

해양수산생명자원과 (044-200-5670 / 5671 / 5672)

□ 추진배경 (목적)

- (성장 잠재력) 국내 해양바이오 시장은 연간 7.6%의 성장률을 보이며 잠재력이 커 유용자원의 전략적 확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 필요
 - * EU는 해양바이오 산업이 청색 경제(Blue Economy)의 핵심이 될 것이며, OECD (Marine biotechnology, '17)는 글로벌 문제 해결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
- (중장기 전략) '해양바이오산업 신성장 전략('22.7)*, '제2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24~'28)'에 따라, 유용자원 확보부터 해양바이오 기술개발, 산업생태계 조성 등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
 -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총리주재, '22.7.28) 상정, 5년 단위('22~'27) 중장기 계획
- (자원 주권 확보) 나고야의정서*, BBNJ** 등 해양생물자원 이용 제한 강화에 대응하여 각국은 자원 확보 및 해양바이오 인프라 구축 지원 확대 추세
 - * 유전자원에 접근 시 사전승인 및 상업적 이용에 따른 이익공유 의무화 규정('17년 국내발효)
 - ** 공해·심해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UN산하 국제협정('23.6월 채택)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체계적·효율적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관리

- (자원 확보) 산업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명자원 현황조사를 실시 하고, 외곽섬 등 미탐사해역 조사 및 신종·미기록종 확보(연중)
 - * 기존 자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동해~제주권 해역에서 산업적 가치가 높은 자원 우선 조사
- (자원 관리) 자원 종목록 구축(3월),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제도 개선*, 경제·학술적 가치를 고려한 자원등급 부여(12월) 등을 통해 자원관리 강화
 - * 「해양생명자원법 시행령」 개정(6월)
- (국제규범 대응) BBNJ 협정*의 조속한 가입 및 이행을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안 및 의제별 대응 방안 마련 등 국내 비준 준비(~12월)
 - * 주요의제 : 해양유전자원 이익공유, 해양환경영향평가, 구역기반관리수단(보호구역) 등

② 해양바이오 산업화 기반 강화

- (바이오뱅크 활성화) 시장 수요기반 상용화 유망소재 제공 확대를 위해 대사 질환에 대한 해양추출물 효능 분석 및 뱅크 소재에 기업 공동연구* 실시(∼12월)
 * 고혈압, 당뇨, 비만 각 150점 분석(∼'24) → 대사질환 뱅크 신규운영('25∼, 예정)
 ** 카로테노이드 생산 국산 미세조류의 체지방 감소 원료소재 개발
- (산업소재 고도화) 해양생물의 항균·항염증 등 산업적 효능을 탐색*(650종) 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해양바이오 산업소재(6개) 국산화 기술개발** 추진(연중)
 *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다부처) ('21∼'26, 556억원, '24년 79억원)
 ** 해양바이오 국산화 타깃 산업소재 표준화 ('22∼'26, 145억원, '24년 14억원)
- (상용화 기술 확대) 해조류 기반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및 수산부산물 유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활용소재 개발**(연중)
 * 탄소저감 바이오 산업소재 표준화 ('22∼'26 150억원, '24년 18억원)
 ** 해양수산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 ('22∼'27, 300억원, '24년 20억원)
- (산업 거점화) 소재생산부터 인·허가까지 산업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권역별 특성을 살린 인프라 조성 추진(연중)

중부권	산업화 지원센터('20∼'24, 347억원, 서천), 인증지원센터('22∼'26, 250억원, 서천)
서남해권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 생산 시설('21∼'25, 232억원, 완도)
동해권	해양바이오 메디컬 실증연구센터('22∼'27, 300억원, 포항)

③ 기업지원체계 마련

- (네트워킹 확대) 해양바이오 연구성과 전시,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 및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제2회 해양바이오 박람회'* 개최(6월)
 * 기술·사업 성과 전시 및 홍보, 해양바이오 포럼, 기술이전 설명회, 기업 컨설팅 등
- (플랫폼 운영) 기술이전 활성화, 해양바이오산업 동향 및 기업 DB 제공, 기술마케팅 지원을 위한 '해양바이오 산업정보 플랫폼(가칭)' 시범운영(9월∼)

④ 해양수산생명자원 가치 및 중요성 인식 제고

- (자원 전시) 심해를 주제로 국제교류전*을 개최('24.4~'25.2.)하고, 찾아가는 전시 및 전시실 VR 구현 등 온·오프라인 전시 확대(~12월)

*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 「Ocean, Diving into the unknown(19.10~20.1)」 재구성 전시

- (자원 교육) 국내·외 청소년 대상 해양생물 탐구대회*를 개최(4~10월) 하고, 현장체험형,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교육 등 자원 교육 확대(~12월)

* 국내 초·중·고생 각 8개팀, 국외 10개팀 예선 선발 / 해양생물 관련 자유탐구 수행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해양생명자원 관리 사업 착수	'24.1월	
	해양수산생명자원 종목록 구축·공개	'24.3월	
2/4분기	해양바이오뱅크 산업계 등 분양 추진상황 점검(1차)	'24.4월	국정 73-6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제협약 대응전략 연구 착수	'24.4월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 교류 특별전 개최	'24.4월	
3/4분기	해양바이오 국산화 R&D 진도보고회 참석	'24.7월	국정 73-6
	해양바이오뱅크 산업계 등 분양 추진상황 점검(2차)	'24.8월	국정 73-6
	해양생물 유래 추출물에 대한 효능 분석(1차)	'24.9월	국정 73-6
4/4분기	해양생물 유래 추출물에 대한 효능 분석(2차)	'24.10월	국정 73-6
	해양바이오 국산화 R&D 단계평가	'24.12월	국정 73-6
	해양생명자원 등급 부여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소통채널) 기업 애로사항 등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수요기반 정책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기업 현장방문*(5월) 및 박람회 개최(6월)

* 해양바이오 기업(잠정), 유관기관(자원관 등), 관계 전문가 참여

- (상용화 지원) 해양바이오산업 지원을 위한 업계 수요 중심의 기술 개발(R&D) 발굴 협의회*(10월) 및 해양바이오뱅크 사용자 의견 수렴(12월)

* 기술개발 수요를 검토하여 공공기관과의 공동연구 또는 국가 R&D 사업 기획 추진

- (인프라 조성) 권역별 특성*을 살린 해양바이오 거점 적기 조성을 위해 공정률 등 추진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파악, 향후계획 등 협의(연중)

* 중부권(산업소재 공급, 기업지원), 서남부권(해조류 기반), 동부권(의료·헬스케어)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1/4분기	회의	해양바이오 인프라 사업계획 협의	'24.2월
2/4분기	현장방문	해양바이오 관련 기업현장 방문	'24.5월
	박람회	해양바이오 박람회 개최	'24.6월
3/4분기	협의회	기술개발(R&D) 발굴 협의회	'24.10월
4/4분기	회의	해양바이오 인프라 구축 기본계획안 마련 관계기관 업무협의 참석	'24.12월
	의견수렴	해양바이오뱅크 사용자 의견 수렴	'24.12월

□ 기대효과

-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원확보·관리 체계 고도화
 - 산업적 가치가 높은 유용자원 확보, 자원 등급화 등 활용과 연계한 자원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자원의 산업적 활용 촉진
 -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용 등을 규제하는 국제규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자원주권 강화 및 국내 산업계 영향 최소화 도모
-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한 산업생태계 조성
 - 산업계 수요기반 유용소재를 발굴하고 해양바이오뱅크를 활성화 하여 기초기술 및 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계 지원 강화
 - 소재생산부터 인·허가까지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프라를 조성하여 해양바이오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추진
- 해양수산생명자원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 각계각층 대상 다양한 온·오프라인 전시교육을 확대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제·생태·학술적 가치에 대한 대국민 이해 증진

□ '23년도 미흡과제 개선계획

- 수요에 기반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간담회, 박람회 등 소통채널을 확대하여 해양바이오 업계 의견수렴 및 정책공유 강화
- 활용과 연계한 유용자원 확보·관리체계 개선, 해양바이오뱅크 상용화 유망분야 수요조사, R&D 성과점검 등 정책효과 확산 추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해양환경보전 선진화				
① 해양생태계 조사 및 관리(일반재정)(1031) · 해양생명자원 관리	일반회계	5	4	
② 해양생물자원관 건립·운영(일반재정)(1035) · 사업출연금	일반회계	187	160	
해양산업 육성 및 영토관리				
① 해양문화 활성화(일반재정)(2031) ■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312) ·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 해양바이오 메디컬 실증연구센터 건립 ·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 마린펠로이드 바이오소재 산업화 플랫폼(타당성조사) · 해양바이오소재 대량생산 플랜트(타당성조사) ·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타당성조사)	일반회계 " " " " " " "	72 (72) 59 10 3 2 2 2	108 (108) 42 30 12 18 2 2 2	
②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R&D)(2044) ■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R&D)(303) ■ 국가해양생명연구자원 선진화(R&D)(305) ■ 빅데이터 기반 해양바이러스 제어 및 마린바이오 틱스 개발(R&D)(308) ■ 해양바이오수소 생산 상용화 기술개발(R&D)(309) ■ 해양바이오 산업소재 국산화 기술개발(R&D)(311) ■ 해양수산물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R&D)(312) ■ 해양바이오 원료·제형화 기술개발(R&D)(314)	일반회계 " " " " " " "	358 (358) 46 95 75 19 55 50 18	190 (190) 79 54 32 20 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① 해양수산생명 자원주권 강화율(%) (가중치 50%)	100	100	100	100	법정 해양생명자원조사 계획상 '24년도 자원확보·관리 목표로 설정	유용자원 확보 및 분석 30종, 자원 등급화 80종	결과보고
②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노력도(%) (가중치 50%)	100	100	100	100	해양바이오뱅크 분양 건수 350건(최근 3년 평균 292건 대비 19.9% 상향)	해양바이오뱅크 분양 건수 350건	결과보고

③ 해양산업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Ⅲ-1-③)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44-200-6225 / 6229)

□ 추진배경 (목적)

- 창업부터 사업화, 투자유치 등 전주기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여 해양수산 신산업 활성화 및 기업·민간 주도 경제성장 실현 도모
 - 해양수산 분야의 창업 활동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므로 유망 해양수산기업 발굴 및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 필요
- * 해양수산 창업사업체와 벤처기업 비중은 각 전체의 4.3%, 3.1% 수준
- 해양 신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해양모태펀드 조성·운영을 통해 투자기관의 위험 분담 및 해양 분야 민간투자 확대
- * 세계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은 연평균 8.5% 성장해 2030년 4,749억 달러 전망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창업·사업화 지원) 유망기업 보육,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 유도 및 스타트업의 성장 디딤돌 마련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해양수산기업을 ‘예비 오션스타’로 선정하여 집중지원*을 통해 우수사례 창출 및 후속 성장 유도
- * 사업화 자금·컨설팅 우대 지원(가점, 우선배정 등) 및 투자유치 지원(기업설명회) 등
- ‘창업설명회’ 개최를 통해 멘토링을 지원하고, 유망 스타트업을 직접 발굴하여 보육·투자까지 지원하는 창업기획자(6개사) 운영('24년, 18억원)
- 시제품 제작, 홍보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컨설팅 제공**을 통해 사업화 역량 및 투자유치 역량 강화, 기업 자생력 제고
- *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 '24년 33개사, 최대 3천만원 지원
- ** (사업화 컨설팅 사업) '24년 33개사 지원 / (투자유치 컨설팅 사업) '24년 30개사 지원
- 기술개발, 창업기업의 유망기술 발굴 및 기술 고도화, 국내외 인증 확보 지원을 통해 유망기술의 사업화 및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 * 해양수산 신산업 기술사업지원 사업(10억원), 해양수산 기술창업 Scale-up사업(46억원)

- 해양수산 일자리 홍보 및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기관-구직자 간 매칭 지원
- (투자 활성화) 정책펀드 확대, 투자기관의 해양수산 분야 관심·이해도 제고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 해양모태펀드 지속 출자를 통해 해양분야 중소·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자펀드를 확대*하여 민간투자 촉진
- * ('19) 2개 자펀드, 295억원 → ('20) 4개 자펀드, 593억원 → ('21) 5개 자펀드, 736억원 → ('22) 6개 1,036억원 → ('23) 7개, 1,236억원 → ('24) 8개, 1,479억원 조성 추진
- 벤처캐피탈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48개사) 운영*, 투자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투자기관 간, 기업-투자사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 투자기관 대상 기업 IR(연 4회), 팸투어(연 2회), 투자심사역 양성과정(연 1회) 등 진행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해양모태펀드 추진계획 수립	'24.1월	국정 73-6
	해양모태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	'24.2월	국정 73-6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계획 수립	'24.3월	국정 73-6
2/4분기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선정 공고	'24.4월	국정 73-6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용역 발주	'24.5월	국정 73-6
3/4분기	블루스타트업 지원기업 선정 공고	'24.7월	국정 73-6
	해양수산 R&D 통합관리 및 공동 활용 체계 구축 최종보고회	'24.9월	국정 73-6
4/4분기	오션테크코리아 추진계획 수립	'24.11월	국정 73-6
	해양수산 과학기술주간 개최	'24.12월	국정 73-6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해양수산 창업설명회) 해양수산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초청 강연, 창업상담 등 제공하여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의 장 마련
-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해양수산분야 청년인재 유입 및 구인기관-구직자 매칭 지원을 위해 일자리 정보 및 채용기회 제공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1/4분기	설명회	해양수산 R&D 투자방향 설명회	'24.1월
2/4분기	설명회	해양수산 창업설명회	'24.6월
3/4분기	간담회	예비오션스타 간담회 개최	'24.9월
4/4분기	박람회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개최	'24.10월
	세미나	오션테크코리아 개최	'24.12월

☐ 기대효과

- 해양 분야의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붐(boom)을 조성하고,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창출 확대
- 창업 초기부터 성장, 성숙 등 성장주기별 창업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유치 지원을 통해 오션스타 기업 발굴

☐ '23년도 미흡부진과제 개선계획 : 해당없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해양문화활성화(I -2-일반재정②)				
① 해양문화활성화(2031)			332.68	392.24
	▪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312)	일반	202.68	222.24
	▪ 해양모태펀드(313)	일반	130	170
해양기술역량강화(I -2-R&D⑨)				
② 해양수산기술역량강화(2045)			204.25	57.3
	▪ 해양수산 기술창업 Scale-up사업(R&D)(304)	일반	98.75	46.5
	▪ 해양수산 신산업 기술사업화 지원(R&D)(306)	일반	105.5	10.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해양수산 분야 창업·투자지원 업체 수(개소) (가중치 70%) (공통)	197	231	412	364	해양수산 분야 창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과거 3개년 평균(280개소) 대비 30%상향하여 도전적 목표 설정	지원업체 수	c
② 투자유치액(억원) (가중치 30%) (공통)	482	346	672	600	민간 투자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안정적 목표의 도출을 위해 과거 3개년 평균 투자유치액(500억원) 대비 20% 상향하여 도전적 목표치 설정	지원업체의 투자 유치금액 합계	내부자료 KIMST 보고서 등

(1) 주요 내용

□ 해양레저관광 저변확대를 위한 콘텐츠 강화로 국민레저수요 창출

- (관광 콘텐츠 개발) 해수욕장·해안누리길 등 해양관광 콘텐츠 개선, 우수 관광상품 개발, 섬 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
- (연안크루즈) 크루즈 터미널 운영 활성화 및 연안크루즈 육성 및 지원
- (레저스포츠 활성화)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프로그램 및 대회 운영

□ 해양치유·마리나·수중레저 등 해양레저관광 핵심 新산업 육성

- (마리나) 수도권, 동남·서남해안권 등 권역별 입지 특성, 도시·어촌, 내륙·해수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마리나 인프라 기능 확충
 - 마리나정비업 신설을 통한 마리나 안전성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레저선박 제조 및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한 마리나산업 고도화
- (수중레저) 수중레저 활동 안전 기반 조성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해양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된 해중경관지구 조성
- (해양치유) 해양치유 시범지구(센터) 조성 and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관계부처 협업, 제도적 기반 마련

□ 해양문화 진흥을 통해 바다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권역별 해양문화 인프라를 확대하고, 해양교육 · 문화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법적 ·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국민 해양레저관광 체험율(%)	49.1	56.2	58.8	68.2	해양레저관광 수요와 관련 산업 활성화 정도를 간접 확인할 수 있는 전국민 해양 레저관광 체험율 목표치를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인 '19년도까지 실적과 코로나19 이후 감소된 실적('20~'21)을 고려하여, '23년 대비 9.4%p 상승한 68.2%를 목표로 설정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약 4천여명) 으로 해양레저관광 (해수욕장, 지역축제, 해양 리조트, 어촌체험 마을, 해양레저스포츠, 마리나, 크루즈, 도서, 심신치유) 체험율을 측정 *국가승인통계를 근거로 작성	표본통계조사 (통계조사용역)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코로나19로 국내외 관광시장이 축소되고 관광서비스업이 침체
되었으나, 국제관광의 회복·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환기
도래

- 2021년 세계 관광객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해
72% 감소, 전년 대비 4% 증가하여 회복 속도는 더딘 상황
(UN, '22)

* 관광산업 GDP기여도('21) : 1조 9,000억 달러('19년 대비 △45.7%),
국제 관광수입('21) : 6,200억 달러('19년 대비 △57.8%)

- 국내 관광산업 매출액은 8조 2,024억원('20)으로 전년 대비
69.4%가 감소하였으며 관광사업체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30.7% 감소(문체부, '21)

* 여행업(△95.0%), 관광숙박업(△52.6%), 유원시설업(△73.9%) 등 모든 관광사업체
매출 감소 및 관광사업체 수 감소(33,325개→32,015개)

□ 세계적인 관광산업 침체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활동 역시 위축되었으며, 해양레저·관광사업체 경영난 지속

- 국내 해양관광 유형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해수욕장 이용객은 전년 대비 약 75.2%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이전의 약 56% 수준('22.기준)

* 해수욕장이용객(만명) : ('18) 8,275 → ('19) 7,158 → ('20) 2,720 → ('21) 2,273 → ('22) 3,983

- 선내 집단감염 우려로 크루즈선의 기항·운영이 제한('20.2)됨에 따라 '20년 이후 크루즈선 입항 및 여행객 방한 실적이 전무

* 크루즈 여행객(만명) : ('17) 39 → ('18) 20 → ('19) 26 → ('20~) 0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양관광산업 매출액의 49%, 종사자의 27% 및 서비스 고객 수의 40%가 감소하는 등 사업체의 피해 발생

□ 국민들은 바다를 대표적인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인식하며,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해양관광 수요는 지속 증가할 전망

- 이동·활동의 제약으로 국내여행 수요가 높아지고, 그 중 '바다, 해변'이 여행장소 1순위*로 꼽히는 등 해양관광에 대한 선호가 높은 상황

*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여행 행태('21.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크루즈 입항 본격화('23.3.13~)를 앞두고 크루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모객을 기획하는 등 해외 관광객 대상 해양관광 재개 준비중

- 다만, 정부에서는 해양레저관광 기초 인프라 구축, 산업 관련 법·제도 마련을 추진중이나 증가하는 해양관광 수요 대응에는 한계

☞ 국민에게 다양한 여가·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제공하며, 기업과 함께 해양레저관광 산업의 회복을 도모

(4) 기타

- ☐ (마리나) 제2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 마리나산업 전략적 육성 대책('15.5/경제관계장관회의)
- ☐ (해양치유)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
-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23.3/경제관계장관회의)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권역별 해양관광명소 조성 및 해양관광 콘텐츠 확산(Ⅲ-2-①)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51 / 5252)

□ 추진배경 (목적)

- **국정과제 73-7**(마리나 육성 등 해양레저관광 강국 도약) 관련 연안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권역별 해양관광인프라 조성 및 해양관광 콘텐츠 확산** 추진
- 마리나, 수중레저, 크루즈, 해양치유 등 해양관광 분야별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해양치유)** ‘해양치유 기본계획(‘22~‘26)’ 수립(‘21.12.)에 따라 전문 인력 양성기관 및 해양치유지구 지정 등 해양치유 인프라 조성
- 해양치유센터 조성, 해양치유 연구개발 효과성 검증,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 추가 지정, 해양치유지구 지정 등 추진
- **(레저산업)** 장비산업 판로확대 지원, 신기술 발굴·표준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서비스업 제도개선 분야 전략 마련
- 보트쇼 등 전시·홍보 확대,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마리나업 점검·관리, 산업 집적화 및 규제개선 추진
- **(콘텐츠 다양화)** 신생·소규모 업체 대상 경영 컨설팅 지원 및 대형여행사와 연계 협업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국민들이 부담없이 해양관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된 특색있는 콘텐츠의 지속 개발 지원
- 또한, 해양레저관광을 즐길 수 있는 대표 휴양공간인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테마 해수욕장 운영 활성화 추진

- **(레저스포츠 활성화)** 국내 최대의 종합해양스포츠대회인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개최,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체험·대회 지원**, 지자체와 협업하여 해양레저스포츠 대중화와 저변확대 도모

* (개요) '24.7.31.~8.3(4일간) / 충남 보령 / 정식종목 경기(요트, 카누, 핀수영, 트라이애슬론), 번외경기(드래곤·고무보트, 바다수영 등), 해양스포츠 체험 행사 등

- **(크루즈 활성화)** 내수경기 활성화 및 여행수지 개선 등을 위해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및 국내 저변확대 등을 위한 활성화 대책 시행

- 외국적 크루즈선 기항 확대를 위한 국제 크루즈박람회 개최*. 참가**, 관계기관 공동 현지 포트세일즈(5월) 및 등 추진

* 제11회 제주 국제크루즈포럼(7월) / ** Seatrade Cruise Global(4월, 마이애미)

- 국내 크루즈 저변 확대를 위한 매체 홍보 및 크루즈 체험단 운영(하반기) 등

- **(해양레저 인프라 조성)** 해양관광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해역별 특성에 맞게 7개 권역에 해양레저관광거점* 확대 및 바다역(소규모 계류시설) 지정** 추진

* (기추진 중, 7개소) 군산, 강원고성, 제주, 보성, 시흥, 보령, 경주('24. 1개소 선정 예정)

** (국정과제 73-7) 제2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25.)을 통해 바다역 도입환경 분석 등 지정검토 예정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4년 해양스포츠대회 지원계획 수립	'24.1월	국정 73-7
	'24년 해양치유 시행계획 수립	'24.2월	국정 73-7
	'24년 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	'24.3월	국정 73-7
2/4분기	국제 크루즈산업박람회 참가	'24.4월	국정 73-7
	관계기관 공동 해외 포트세일즈 실시	'24.5월	국정 73-7
	해수욕장 현장점검 계획 수립	'24.6월	국정 73-7
3/4분기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 점검 현장방문	'24.7월	국정 73-7
	해양스포츠대회 개최	'24.8월	국정 73-7
	남해안권 해양힐링·체류형 관광거점사업 관계기관 간담회	'24.9월	국정 73-7
4/4분기	우수 해수욕장 선정 계획 수립	'24.11월	국정 73-7
	해양레저관광거점 신규 선정	'24.11월	국정 73-7
	제18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 선정	'24.12월	국정 73-7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서해안권 해양레포츠 및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현장 점검(1월)
 - 해양치유·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건설관계자 등과 사업 추진 시 현안사항 및 향후 운영계획 수립 여부 점검 등
- 마리나·해양레저관광 조성사업 현장 방문(5월)
 - 사업시행자 등과 해양레저관광거점(도시형 마리나, 제주권 해중 경관지구)사업의 적기 준공 등을 위한 민원해소여부, 사업 추진상황, 안전관리 점검 및 현안사항 공유 등 의견 수렴
- 해운대리점, 크루즈 관련 여행사 등 관련 업계 간담회를 통해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확대, 국내 연관산업 활성화 등 논의(11월)
- 제도개선, 법령개정 등을 통한 수중레저활동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해 дай버, 사업자 등 현장 의견수렴 추진(6월)
 - * 수중레저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관련 용역 추진(~4월),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등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6월)
-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식 행사 및 대회·체험행사 준비현황 점검(8월)
 - * 종목별 대회 운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교통·숙박 및 안전 대책 등 제전 기본 계획에 따른 준비현황 및 육해상경기장 및 공식행사장 등 시설물 점검 등

구 분		내용	세부일정
1/4분기	현장방문	서해안권 해양레포츠 및 해양레저관광 거점 현장점검	'24.1월
	현장방문	완도해양치유센터 운영 점검 및 소통	'24.3월
2/4분기	현장방문	수도권 도시형 마리나 관광거점 사업 현장방문	'24.5월
	간담회	수중레저활동 활성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	'24.6월
3/4분기	현장방문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 현장방문	'24.8월
	현장방문	태안해양치유센터 현장 방문	'24.9월
4/4분기	현장방문	제주권 해양레저관광 조성사업 현장 방문	'24.10월
	간담회	크루즈산업 업계 간담회 개최	'24.11월

□ 기대효과

- 권역별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조성을 통해 지역별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의 기반 역할 수행
- 해양치유 산업화를 통한 해양 휴양관광, 치유제품,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융합·발전 및 연안지역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민 건강증진 도모
- 마리나 등 레저장비 산업분야 전시·판로확대 및 기술지원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 해양레저관광 콘텐츠에 대한 국민관심 증대
- 관광 욕구를 충족시키는 콘텐츠 발굴과 소비자-사업자 연계 지원을 통한 해양레저관광 선순환 생태계 구축
-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발굴과 해양관광업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을 통해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 유치, 국내 크루즈 저변 확대를 통해 내수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여행수지 개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해양관광육성(I -2-일반재정④)				
① 해양관광육성(20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관광육성(310) - (해양관광인프라 조성)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 (해양레저관광 정보 기반구축) -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일반회계	579	408	
		579	408	
		503	341	
		66	57	
		3	3	
		7	7	
해양수산업진흥(R&D)(I -2-일반재정⑩)				
① 해양수산업진흥(R&D)(20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해양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해수부)(R&D)(307) ▪ 해양레저장비 및 안전기술 개발(R&D)(308) ▪ 해양치유자원 효능 검증 및 활용 기술개발(R&D)(313) 		661	661	
		14	14	
		40	40	
		28	28	
해운물류지원(Ⅲ-4-일반재정③)				
① 해운물류지원(61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루즈산업활성화지원(310) 		8	8	
		8	8	
마리나 항만개발(Ⅲ-3-일반재정⑬)				
① 마리나 항만개발(50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리나 항만(301) 	교특회계	88	33	
		88	3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해양레저관광 수요창출 노력도(%) (가중치 40%)	신규	100	100	100	콘텐츠 개발, 소비자-사업자 연계지원 등 해양레저관광 수요 창출을 통한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달성을 위한 크루즈 입항 및 행사추진 실적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④크루즈선 입항 항차는 코로나19 입항금지 기간('20~'22)을 제외한 최근 3년간 평균 입항 항차수 167항차의 3%증가한 172항차를 목표로 설정하였고, ⑥전시회, 대회 등 해양관광 증대 행사 추진실적은 행사예산이 전년대비 △27.3억 원 감축에 따라 전년수준으로 유지함	④크루즈선 입항 항차 달성률(50%) * '24년 크루즈선 입항 항차 /172 * 100 ⑥전시회, 대회 등 해양관광 증대 행사 추진실적(50%) * 연 2회 장·차관 참석 행사 개최 추진 실적 ** 장·차관 참석 행사 실적/2 * 100	④ 출입국 기록(법무부) ⑥ 결과 보고 및 추진실적
②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 추진율(%) (가중치 60%)	신규	51.4	71.5	78	'권역별 해양관광명소 조성' 노력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표이며,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레저체험을 지원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이 필수 요소로써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전년대비 4.5% 증가한 78% 공정률(누계 집행률)을 목표치로 설정함	총사업비 누계 집행실적 '16~(당해년도-1년) 집행금액 합계 + 당해년도 집행실적 *총사업비 대상사업('16~'17개소, 해양레저관광 거점(7개소, '24년 신규선정 제외), 마리나 비즈센터(2개소), 해양치유센터(4개소), 해양교육원(2개소), 연안체험공원(1개소)	dBrain

② 해양교육문화 콘텐츠 확충 및 향유기회 확대(Ⅲ-2-②)

해양정책과 (044-200-5226/5223/5229)

□ 추진배경 (목적)

-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향유기회의 확산으로 바다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해양강국 도약 기반 조성
- 학교 및 사회에서의 해양교육 콘텐츠 보급으로 국민의 해양교육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해양적 소양*을 확산
- * (Ocean Literacy) 해양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과 내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
- 계층·지역에 따른 해양문화 향유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기반을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해양교육·문화 콘텐츠의 보급 확산과 해양문화 인프라의 체계적 조성·운영으로 해양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국민 삶의 질 개선

< 1. 해양교육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확산 >

- 해양교육 확산을 위한 핵심 전략 마련·이행
- (네트워크 구축) 해양교육기관과 전국 국·공·사립 해양문화 전시기관이 포함된 해양교육문화 네트워크* 구축('24.下)
- * (교육) 해수부 산하 해양교육기관 8개, (전시관) 전국 해양문화 전시기관 19개로 구성, 단계적으로 지역해양교육센터, 해양교육전문기관 등 추가 발굴·확대 추진
- (지역거점 지정) 지역해양교육센터 시범 운영 및 해양교육전문기관 공모·지정 추진('24.下)
- (공동홍보 지원) 네트워크 기관들 교육프로그램 공동홍보 지원, 바다주간 공동주제로 기관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합동 전국 해양교육박람회 개최 등

- (교과목 보급·확산) 교과서 교육부(청) 인정도서 승인('24.2), 교과목 신설('24.3), 교육보조자료 개발, 교원 연수 등 보급 확산
- (생애주기별 기반) 초·중·고 해양강좌, 중·고 진로교육, 대학생차세대 아카데미 (학점인정), 일반인 디지털기반(K-오션MOOC), 소외계층 나눔교육 등 체계 확장
- (환류체계 마련) 교육부 등 정책변화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대외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기초 데이터 축적·분석('24.12)

○ 해양문화 확산 및 해양의식 고취를 통한 해양력 강화

- (해양문화 확산) 바다의 날, 장보고 대상 등 기념행사 개최로 해양수산인의 자긍심 고취, 체험행사 등 해양문화 향유기회 확대
- (거버넌스 확대)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한 해수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 개최, 세계해양포럼 등 지자체, 산학연 협력 확대

< 2. 해양교육문화 인프라 조성 및 운영 효율화 >

○ 수도권/내륙 해양문화시설 조성

- (인천해양박물관^{수도권}) 박물관 준공, 법인출범('24.4) 및 개관('24.下)
- (미래해양과학관^{내륙권}) 건축 및 전시물 제작·설치 등 시설 조성 및 법인설립 근거 마련 등 「국립해양과학관법」 개정 추진

○ 지역 해양문화 인프라 신규조성 확대

- (해양수산박물관^{전남}) 해양수산 부문을 포괄하는 서남해권 해양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응('24.1~)
- (해양생명과학관^{전북}) 해양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구분	사업개요
국립 인천해양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규모) 인천 중구 북성동 / 부지 27,601m², 건축연면적 17,318m² ○ (사업기간 / 총사업비) '19~'24 / 1,016억원(국비 919, 지방비 97) ○ (추진일정) '19~'21(설계) → ~'24.4(공사) → '24.4(법인출범) → '24.말(개관예정)
미래 해양 과학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규모) 충북 청주시 청원구 / 부지 15,406m², 건축연면적 14,980m² ○ (사업기간/총사업비) '20~'25/ 944억원(국비 869, 지방비75) ○ (추진일정) ~'22(설계) → ~'25.4(공사) → '25.4(법인출범) → '25.下(개관예정)
국립 해양수산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규모) 전남 완도군 / 부지 45,368m², 연면적 18,230m² ○ (총사업비/기간) 1,442억원(전액국비) / '22 ~ '29(8년) ○ (추진일정) 타당성 조사(~'23.4) → 설립타당성 사전평가('23.10,문체부) → 예타('24)→ 설계('25~'26) → 공사('26~'29) → 개관('29.下)
국립 해양생명 과학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규모(안)) 전북 김제시(부지미정) / 부지35,915m², 연면적15,524m² ○ (총사업비/기간) 1,161억원(전액국비) / '22 ~ '30(9년) ○ (추진일정) 타당성조사('24.5) → 설립협의('24.9, 과기부) → 예타('24.下~'25) → 설계('26~'27) → 공사('27~'30) → 개관('30.下)

○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추진

- (사후활용) 공공개발을 통해 박람회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YGPA / '24~'25, 20억원)
- (지역소통) 사후활용위원회(위원장 차관) 등을 통해 지역소통 강화

○ 해양문화시설 확충 및 육성 전략 수립

- (시설 확충) 해양문화시설의 체계적 확충을 위해 신규 시설의 콘텐츠, 입지, 규모, 운영관리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
- (거점시설 기능 강화) 기관별 기능 조정 및 특성화, 권역별 대표 문화시설로서 역할 확대 및 위상 강화
- (지역연계 확대 등) 권역별 협력망 구축, 거점시설과 지역시설 간 협력사업 발굴·확대, 지원체계 구축

< 3. 국립해양문화시설 운영 효율화 >

○ 국립해양박물관 관리·운영

- (위상제고) 해양자료 수집, 소장자료 과학적 관리를 통해 종합 해양박물관으로서 역사적·학술적 역량 제고, 문화유산 전승
- (전시기획) 기획전시, 테마전시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 제공
- (교육문화) 학술조사, 서적발간, 학술대회, 교육콘텐츠 개발·운영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해양교육문화 확산 기여
- (사회기여) 지역사회공헌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ESG 경영 실천 및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강화

○ 국립해양과학관 관리·운영

- (역할강화) 해양과학 특화 기획전 운영, 상설전시실 체험 전시물 개선, 보이는 해양로봇 연구실 운영 등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
- (문화확산) 해양과학 동화책 출판·보급, 해아과학캠프 운영, 해양과학동아리 운영, 진로·취업교육 활성화, 교원 연수 등 추진
- (공공성장화) 지역 협력 강화, ESG 경영 실천 및 사회공헌활동 강화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24.1월	
	해양교육 확산을 위한 핵심전략 마련	'24.2월	
	해수부-해군-해경 제3자 정책협의회 개최	'24.3월	
2/4분기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설사업 준공	'24.4월	
	해양문화시설 확충 및 육성전략 수립	'24.6월	
	전국 해양교육 문화박람회 개최	'24.6월	
3/4분기	해양교육문화 네트워크 구축	'24.7월	
	국립해양과학관법 일부개정 추진(의원입법)	'24.9월	
	지역해양교육센터 시범운영	'24.9월	
4/4분기	해양과학 업사이클링 메이커톤 대회	'24.10월	
	세계해양포럼 개최	'24.11월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지자체, 해양문화교육 유관기관 및 업·단체 대상으로 현장방문, 회의 등을 통해 해양교육문화 정책 및 사업 관련 의견수렴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1/4분기	회의	해양교육문화 네트워크 정례회의를 통한 관계기관 의견청취	'24.2월
	현장보고회	여수세계박람회 마스터플랜 수립 위한 기초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의견 수렴(해수부, 전남도, 여수시, 여수시의회, 시민단체 참석)	'24.2월
	현장설명회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사업 현장설명회	'24.3월
2/4분기	간담회	해양수산 유관기관 관계자(한국해양재단 등) 간담회	'24.4월
	회의	국립해양생명과학관 전시계획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자문회의)	'24.4월
3/4분기	회의	해양포럼 협력 강화를 위한 관계자 의견수렴	'24.7월
	설명회	지역해양교육센터 지정을 위한 지자체 등 관계자 설명회	'24.8월
4/4분기	회의	고교 해양교과서 개정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24.10월

□ 기대효과

- 해양교육문화 정책 본격 시행으로 해양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해양문화 향유 사각지대를 완화하여 해양적 소양 확산
- 해양교육문화 인프라 개선·확충을 통해 지역 거점으로 활용, 관광객·방문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도모
 -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생산유발효과 90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93억원, 고용유발효과 842명, 취업유발효과 879명 발생
 - * (국립미래해양과학관) 생산유발효과 9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34억원, 고용유발효과 915명, 취업유발효과 955명 발생
 - *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생산유발효과 1,97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79억원, 고용유발효과 1,027명, 취업유발효과 955명 발생
- 국립해양문화시설 운영 효율화를 통해 전시환경 개선, 사회 공헌활동 등 공공성 제고, 지역 협력 강화 등 저변확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3	'24
해양문화활성화(I -2-일반재정①)				
① 해양문화활성화(2031)			780.73	1,109.80
■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301)	일반회계		57.22	58.68
■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308)	일반회계		723.51	1,051.1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제도 강화율(%) (가중치 50%)	신설	신설	100	100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반 강화를 위한 중점 정책 추진 ① 신규 추진과제 이행 여부 : {고교 해양교과 교과서 교육청 인정}×0.4+(지역해양교육센터 시범운영×0.3))+K-오션MOOC 신규 콘텐츠 12개×0.3}}×100 (40%) ②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체험 참가자수(만명) : 8.8만명 이상 (30%) (‘23년 8.8만명) ③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체험 참여자 만족도(%) : 90.5% 이상 (30%) (‘23년도 90%)	①×40% + ②×30% + ③×30%	관련 문서, 각 행사별 집계자료, 만족도 설문 조사 등
③ 해양문화시설 인프라구축 및 운영 효율화(%) (가중치 50%)	신설	신설	100	100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공정률 및 운영효율화에 따른 관람객수·만족도 측정 ① 해양문화시설 건립사업 예산대비 공정률 (30%) *인천(70%)+미래(30%)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목표 공정률 : 100% (‘23년 68%) *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목표 공정률 : 75% (‘23년 30%, ‘25년 100%) ② 해양문화시설 관람객수 : 80만명 (25%) (‘23년 59만명) ③ 해양문화시설 관람객 만족도 (%) : 90.5% (25%) (‘23년 90%)	①×40% + ②×30% + ③×30%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시설별 집계자료, 만족도 설문 조사 등

(1) 주요 내용

□ 독도 등 섬 관리강화 및 대국민 인식제고

- 독도 등 섬 관련 사업, 정책 등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대국민 관심 제고 추진
 -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환경 개선 및 체계적·효과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독도 등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과학적 논리 근거 지속적 확보 및 독도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고

□ 해양영토의 과학적 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

- 동해는 해양과학기지가 부재한 상황으로 관할해역의 총체적 관리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물적 기반 시설 확충
 - * [국정과제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해양과학기지 3→4개)
 - 동해(왕돌초) 해양과학기지 구축 공사 착수 및 구조물 제작
- 해양을 둘러싼 국제갈등 대응 및 신해양규범 형성 주도적 참여 등을 위해 주변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제해양법 인적 기반 확충

□ 해양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대외협상 대응 및 역량강화

- WTO, FTA, CPTPP 등 수산 관련 통상협상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시장 확대
- 지역수산기구에서의 국제어업관리 규범 및 어업 쿼터 협상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전문가 역량을 강화
- 미, 일, 아세안 등 주요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개도국 대상 ODA 확대 등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해양영토 관련 학술 연구 성과(건)	4	12	11	11	'21~'23년('21년 4건, '21년 12건, '23년 11건) 3년간 발표한 국제학술 논문(SCI급) 평균 실적 대비 20% 상향	'24년 지원 사업을 통해 발표한 해양영토 관련 국제학술논문 건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보고서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독도 등 섬 관리강화 및 대국민 인식제고

- 이해관계 집단(토지소유자·지자체·환경단체 등)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관리유형 지정(변경)시 등 이해관계자별 설득·대응 필요
 - 관련 전문가·지자체·소유자 등과의 무인도서 현장점검 및 이의신청을 통한 절차적 공정성 확보
- 관계기관 이견 발생 시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 등 사전협의·조율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여건 조성

☐ 국제해양법 현안대응을 위한 전문가 부족현상 고착화

- 법학전문대학원제 시행('09) 이후, 국제해양법 전공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주변국에 비해 절대적 부족 현상 지속
 - 국가 정책지원을 통해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체계 강화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독도 등 섬 관리강화 및 대국민 인식제고(Ⅲ-3-①)

해양영토과 (044-200-5353 / 5355)

□ 추진배경 (목적)

- 독도 등 섬 관련 사업, 정책 등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대국민 인식개선 필요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도의 과학적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독도 지속가능 이용연구의 성과 확산 필요
- 장기간 방치되어 오염·훼손된 보전형 무인도서(주변해역 포함)의 해양환경 개선 및 영해기점 도서의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

* [국정과제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24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연구 계획 수립('24.1) 및 연구('24.3~12)
- 국·공유 무인도서 쓰레기 관리사업 추진계획 수립('24.1)
- 무인도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4.3)
- 제2차 무인도서 실태조사(7차년도), 무인도서 정보관리 및 '24년도 무인도서 해양쓰레기(원인분석, 처리 등) 관리업무 수행('24.3~12)
- '24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24.4.)
- '24년 독도연차보고서 작성 및 국회제출('24.8)
-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마련('24.12)
-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수립('24.12)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독도 관련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24.1월	
	국·공유 무인도서 쓰레기 관리 추진계획 수립	'24.1월	
	「무인도서법 시행령」 시행	'24.2월	국정 41-1
2/4분기	'24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24.4월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원인분석 연구 착수	'24.4월	
	'24년 올해의 섬' 상왕등도 홍보 다큐멘터리 방영	'24.6월	
3/4분기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 추진	'24.7월	
	'24년 독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국회 제출	'24.8월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원인분석 실증 테스트	'24.9월	
4/4분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연구 성과 활용 특별 전시회 개최	'24.11월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마련	'24.12월	
	영해기점 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수립	'24.12월	국정 41-1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24년도 대상지역(무인도서) 관할 지자체 담당자 대상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추진계획 공유 및 현안 논의('24.3, 7, 8)
- 영해기점 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24.10)
- 독도 관련 사업의 세부 추진실적·계획 공유, 관계기관 간 연계 과제 발굴·추진 기반 마련 및 분야별 이슈 논의('24.9, 11)

구 분		내용	세부일정
1/4분기	간담회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관리업무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상반기)	'24.3월
2/4분기	회의	무인도서 관련 연구사업 착수보고 및 워크숍	'24.4월
3/4분기	회의	독도 관련 관계기관 협력 하계 워크숍 개최	'24.7월
	간담회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관리업무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하반기)	'24.8월
4/4분기	회의	영해기점 도서 이용 관련 지자체 간담회	'24.10월
	회의	독도 관련 관계기관 협력 동계 워크숍 개최	'24.11월

□ 기대효과

-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환경 개선 및 체계적·효과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독도 등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과학적 논리 근거 지속적 확보 및 독도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고

□ '23년도 미흡부진과제 개선계획

- 성과지표 부합도 및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 (성과지표) 기존('23) 관리과제*의 세부추진 단위를 조정하여 성과지표 개선
- * (Ⅲ-3-①) 무인도서의 체계적·효율적 관리강화(보통), (Ⅲ-3-②) 해양영토의 과학적 관리기반 확충(미흡)
- (정책추진) 관련 기관·단체 등과 소통 강화 및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정책효과 개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독도 등 섬 관리강화 및 대국민 인식제고(Ⅲ-3-①)				
①	해양영토관리기반구축(2032)	일반	118 (134)	120 (130)
	■ 독도지속가능이용 및 관리(300)	일반	88	101
	■ 해양영토관리 역량강화(311)	일반	30	1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단위 : 억원)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① 무인도서 관리 강화(%) (가중치 50%)	-	-	-	100%	무인도서 관련 제도개선 총 2건(회) 달성(50%) + 30개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50%)	정책 환경 및 '23년 자체평가 제안사항 등을 참고하여 신규지표 설정 (자체 및 위탁사업 결과보고)	법령 고시자료 및 결과보고
② 독도 연구성과 활용 확대(건) (가중치 50%)	7	10	5	9	'21~'23년('21년 7건, '21년 10건, '23년 5건) 3년간 해양수산부를 제외한 정부부처 및 지자체, 학교, 공공기관, 민간기업, NGO,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한 어촌계 및 기타 법령에 규정된 민간 조직에 연구성과를 제공한 평균 실적 대비 20% 상향	정책 환경 및 '23년 자체평가 제안사항 등을 참고하여 신규지표 설정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결과보고)	결과보고서(12월)

② 해양영토의 과학적 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Ⅲ-3-②)

해양영토과 (044-200-5351 / 5357)

□ 추진배경 (목적)

- 서·남해(이어도, 웅진소청초, 신안가거초 기지)와 달리 동해는 해양과학 기지가 부재한 상황으로 관할해역의 총체적 관리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물적 기반 시설 확충(‘21~’26, 동해 해양과학기지 구축* 중)

* [국정과제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해양과학기지 3→4개)

- 국가 간 해양을 둘러싼 갈등 대응 및 신해양규범 형성의 주도적 참여 등을 위해 주변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적 기반 확충 필요
 - 국가 간 해양관할권 확대 및 해양권익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해양법 전문가의 정책지원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국내 해양법 전문가가 주변국과 비교해 심각한 불균형 현상이 고착화되어 국제현안에 대한 대응역량에 한계로 국익훼손 우려

* (한) 21명, (中) 274명, (日) 105명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동해(왕돌초) 해양과학기지 구축 공사 착수 및 구조물 제작 등(‘24.1~)

<주요 내용>

- ☞ (과학기지) 기지 구축 공사가 착수됨에 따라 구조물 제작장 선정 및 기자재 구매·반입, 기지 하부 및 상부 구조물(자켓·데크) 육상 제작
- ☞ (연구지원) 신규 기지에 도입할 해양관측장비의 운영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과학기지를 관리·활용하는 정부기관,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회 실시(상·하반기)

○ '24년도 국제해양법 전문가 양성사업 내실화 추진('24.3~)

<주요 내용>

- ☞ (관심제고) 해양법 분야를 친근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여 해양법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제고
 - * (초등) 유엔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만화형식 책자 발간 완료('24.하)
 - (중·고등)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추진 / (대학) 국제해양법 아카데미 및 모의재판대회 추진
- ☞ (전공자 지원확대) 국내외 대학에서 해양법을 주제로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재학생·수료생 대상으로 개별 지원 강화
 - * 박사과정 연구지원금 지급, 해양법 자유주제 공동연구 지원 등
- ☞ (취업안정화) 공공부문 국제해양법 전공자 채용 확대*를 위한 노력 전개 및 국제해양법 선도대학 운영 기반 확보 추진
 - * (우리부) 민간전문가 경력직 공무원 채용 및 배치(5급 1명)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동해 해양과학기지 구축 공사 착수	'24.1월	국정 41-1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고	'24.2월	
	'24년도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 세부 추진 계획 수립	'24.3월	
2/4분기	국제해양법 민간경력직 공무원 채용 배치	'24.5월	
	동해 해양과학기지 관측장비 유관기관 의견조회	'24.5월	국정 41-1
	상반기 국제해양법 아카데미 운영	'24.6월	
3/4분기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개최	'24.8월	
	국제해양법 모의재판 대회 개최	'24.8월	
	동해 해양과학기지 해상 운반 및 설치 절차서 작성	'24.9월	국정 41-1
4/4분기	하반기 국제해양법 아카데미 운영	'24.11월	
	제12회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 개최	'24.11월	
	동해 해양과학기지 구조물 제작	'24.12월	국정 41-1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해양과학기지 운영·자료활용 연구자간 협의회를 실시(2회/연)하고, 지자체 및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체계 확보
-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추진성과 점검 및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주기적인 의견수렴 추진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1/4분기	회의	해양영토 관련 해양경찰청 업무협의	'24.2월
2/4분기	회의	'24년 상반기 해양과학기지 활용협의회	'24.4월
3/4분기	간담회	동해 해양과학기지 구축 인허가 등 관련 간담회	'24.9월
4/4분기	회의	'24년 하반기 해양과학기지 활용협의회	'24.10월
	간담회	국제해양법 신진연구자 간담회	'24.12월

□ 기대효과

- 「관할해역 첨단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융합연구」 사업의 실질행위를 지표로 활용하여 기지 구축 공정관리를 통해 국정과제 목표 달성
 - 동해 해양과학기지는 동한난류의 변동, 기후변화 기인 해양환경·생태 변화 등 동해 연안에 특화된 장기적 연구 전초기지로 역할 수행
- 동북아 해역에서의 잠재적 갈등에 대한 대응역량 확보와 해양분야 신규범 형성과정에서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해양권익 증대 기여

□ '23년도 미흡부진과제 개선계획

- 성과지표 부합도 및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 (성과지표) 기존('23) 관리과제*의 세부추진 단위를 조정하여 성과지표 개선

* (Ⅲ-3-①) 무인도서의 체계적·효율적 관리강화(보통), (Ⅲ-3-②) 해양영토의 과학적 관리기반 확충(미흡)

- (정책추진) 관련 기관·단체 등과 소통 강화 및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정책효과 개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해양영토의 과학적 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Ⅲ-3-②)				
①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R&D)(2042)		일반	41 (702)	74 (445)
■ 관할해역 첨단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융합 연구(317)		일반	41	74
해양영토의 과학적 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Ⅲ-3-②)				
① 해양영토관리기반구축(2032)		일반	30 (134)	18 (130)
■ 해양영토관리 역량강화(311)		일반	30	1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① 동해 해양과학기지 구축률(%) (가중치 50%)	78.6	74.9	100	93%	'동해 해양과학기지 구축' 사업의 최근 3년간 평균집행률(84.5%)에 10% 상향 (도전적 목표 설정)	정책 환경 및 '23년 자체평가 제안사항 등을 참고하여 신규지표 설정 (동해 해양과학기지 구축 예산 실행행률)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IRIS) 및 결과보고서(12월)
②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성과 만족도(점) (가중치 50%)	-	-	-	77점	참가자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 측정 (5점 척도 기준)	정책 환경 및 '23년 자체평가 제안사항 등을 참고하여 신규지표 설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결과보고)	결과보고서(12월)

③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분야 통상협상 대응(Ⅲ-3-③)

통상무역협력과 (044-200-5387)

□ 추진배경 (목적)

- IPEF, WTO, CPTPP, FTA 대응시 해양친화적 통상 협상을 기반으로 식량주권을 수호하고 해외시장 경쟁력 확대
- 통상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어업인 및 관련 단체·기관과의 정책 소통 실시로 국내 갈등 완화 및 정책 수용성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시장개방 협상) FTA 협상시 민감품목 보호수단*을 마련하고 잠재력 있는 품목은 상대국 시장을 개방하여 수출여건 개선

* ①양허제외, ②관세의 장기적 철폐, ③저율관세할당(TRQ) 등

** (진행중) 한중일, 멕시코, 메르코수르 등 / (신규) 조지아, 몽골 / (개선) 인도, 영국, 칠레 등

- (신통상규범 협상) 우리 법·제도·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양수산업계의 해외 진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협상

- (WTO) 면세유, 원양보조금 등 「WTO 수산보조금 협정*」의 미합의 쟁점에 관한 협상 대응을 통해 국내 수산업 피해 최소화 도모

* IUU어업에 관여한 선박·운영자에 대한 보조금, 남획된 어종의 어획에 대한 보조금, 자원관리가 없는 수역에서의 어업에 대한 보조금 등 금지

- (IPEF*) 해양산업의 역내 진출 기반 확대 및 우리 해양수산 관련 업계에 대한 피해 최소화 도모**

* 협상 개시 후('22.12. 1차 협상) 필라2(공급망) 및 필라3(청정경제)이 타결되었으나, 필라1(무역)은 주요국 간 입장차가 커 '24년에 이어서 협상하기로 합의

** 수산보조금, 수산물 위생검역, 선원인권, 해양기반 기후대책 등 우리부 쟁점 대응

- (소통강화) 어업인에게는 통상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통상당국에는 어업인 우려사항을 전달하여 **갈등 완화** 및 **지원 정책 강화**
 - 관계 부서 및 기관 대상 통상업무 동향 공유, 주기적 설명회 개최를 통해 협상 결과의 국내정책 수용성 제고
- (수출입제도 안정적 운영) 탄력관세 등 수출입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수산업 경쟁력 강화, 민생경제 및 물가 안정 도모
 - (탄력관세*) 정기 탄력관세 품목(조정 7개, 할당 1개) 현행 유지 및 물가 상황에 따라 수시 할당관세(ex 고등어) 적용 추진
 - * (조정관세) 수산물 수입증가에 따른 산업기반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인상 부과, (할당관세) 물가 관리 등을 위해 인하 부과
 - (김 IQ*)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품목별* 쿼터 배분안을 마련하고 수산물 무역과장회의를 통해 관철하여 **김 수출 증대**에 기여
 - * 일본이 자국 김 생산자 보호를 위해 수입량을 직접 규제하는 제도로, 한국산 김에 대해서는 매년 수산물 무역과장회의를 통해 품목별 배분안 확정
- ** 마른김, 무당조미김, 김조제품(김스낵, 부각 등)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한-뉴 수산협력사업 추진계획 수립	'24.3월	
2/4분기	김 입찰·상담회 개최	'24.6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코드집 발간	'24.6월	
3/4분기	통상협상 홍보	'24.9월	
4/4분기	한·일 수산물무역과장회의	'24.11월	
	FTA 협상 대응	연중	
	WTO SPS 정례회의 대응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해양수산분야 주요 통상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정책수용성을 제고할 필요

* CPTPP 가입 검토, IPEF 협상, WTO 수산보조금 후속 협상 등

- 어업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업인 우려 및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통상 및 지원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갈등 최소화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2/4분기	회의	수산통상 전문가 포럼을 통한 동향 파악 및 의견수렴	'24.6월
3/4분기	간담회	대일 김 수출업체 간담회	'24.9월
4/4분기	현장방문	냉동꽂치 조정관세 폐지관련 이행 현황 현장점검	'24.11월

□ 기대효과

- 상대국 이해를 파악한 체계적 대응으로 WTO 및 CPTPP 등 양자·다자 협상력 강화, 우리 수산업 피해 최소화 및 수출 확대기반 마련
-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어업인 공감대 형성 및 신뢰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원양어업기반 구축(Ⅰ-4-일반재정①)				
① 원양어업기반구축(3542)	농특회계	46 (388)	58 (561)	
▪ 국제수산물기구 협상 및 대응(301)	농특회계	46	58	
수산물 수출지원(Ⅱ-1-일반재정③)				
① 수산물 수출지원(2837)	농특회계	43	52	
▪ 수산물해외시장개척(300)	농특회계	43	52	
유통·가공시설(기금)				
① 유통·가공시설(기금)(3067)	수발기금	1	7	
▪ 수산물 유통정보조사(305)	수발기금	1	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①규범 협상 대응 (가중치 50%)	신규	신규	신규	100%	규범 협상(WTO 수산보조금, IPEF) 참여 및 대응 - 주요쟁점에 대해 우리 입장 관철을 위한 제안서 제출 또는 발언 실시 * WTO 총회 및 IPEF 수석대표급 회의에서 제안서 제출 또는 발언한 실적	주요 쟁점에 대한 제안서 제출 또는 발언 건수(1건 이상) /WTO 및 IPEF 회의 참석건수	전문 또는 내부 자료 확인
②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지원 (가중치 50%)	신규	신규	신규	100%	㉠(50점 만점) + ㉡(50점 만점) * 단, 타결 FTA가 없을 경우 ㉡를 100점 만점으로 산출		
					㉠ FTA 타결 기준 상대국 개방률 목표 달성도(점) - ('24년 목표) 최근 3개년 타결 FTA 상대국 평균 개방률 : 89.1%	(타결 FTA 상대국 개방률)/(목표 개방률) x 50(점)	내부자료
					㉡ 대일 김 수출 계약물량 목표 달성도(점) - ('24년 목표) 최근 3개년 대일 김 수출 평균 계약* 물량 : 949백만장 * 한국 김 입찰·상담회에서 계약	(대일 김 수출 계약물량)/(목표 계약물량) x 50(점)	한국 김 입찰 상담회 결과

④ 해양수산 ODA 확대 및 양자협력 증진(Ⅲ-3-④)

국제협력총괄과 (044-200-5331/5342)

□ 추진배경 (목적)

-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 ODA의 효율성 제고 및 양자협력 확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ODA)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가치실현에 기여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ODA 사업 추진
 - 기후변화 대응, 수산업 발전, 해운·해사 역량 강화 등 2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춘 전략적 지원*
 - * 지역별 중점추진분야/사업비중 : 아시아(수산양식기술 증진 해기인력양성/46.7%), 태도국(기후변화 역량강화/34.1%), 아프리카(영세, 여성 어업인 등 취약계층 지원/6.9%)
 - FAO, WMU, IUCN 등 다자협력 국제기구와 IUU 어업근절 역량 강화, 해양환경보호 등 협력사업* 신규 추진
 - * FAO(항만국조치협정 글로벌 훈련 프로그램, '24~'26/65억원), WMU(IUU 어업 대응 역량강화, '24~'28/50억원), IUCN 해양플라스틱 오염 저감사업, '24~'28/50억원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를 개최('24.6.)하여 아프리카 진출 발판 마련 및 협력사업 발굴
- (인도태평양 협력 강화) 미국, 일본, 아세안, 태도국 등 주요 국가들과의 교류협력 확대 및 협력사업 발굴 추진
 - 한·미, 한·일 국제어업관리 협의회를 통한 IUU 어업 등 국제 어업규범 이슈 및 주요현안에 대한 소통·협력 강화
 - 필리핀, 인니 등 주요 국가와 공동위원회, 해양대화 등 협력 채널을 운영하여 해양수산 쏠 분야 협력사업 발굴 및 체계적 관리

- (국제협의회) OOC, UNOC,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부대행사 등 국제 행사 개최를 통해 글로벌 해양이슈 선도
- Our Ocean Conference 10차 회의('25.3) 개최 준비 및 '28년 UNOC 국내유치 통한 해양분야 비전 제시 및 협력방안 제시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4년 해양수산 ODA 추진계획 수립	'24.2월	
	해양수산 주재관 회의를 통한 국제동향 파악	'24.3월	
	2025년도 무상원조 시행계획 제출	'24.3월	
2/4분기	OUR OCEAN 컨퍼런스 참석	'24.4월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 개최	'24.6월	
	제3차 UNOC 고위급 해양 행동 회의 참석	'24.6월	
3/4분기	'23년 해양수산 ODA 평가계획 수립	'23.8월	
	제4차 한-인니 해양공동위원회 개최	'24.9월	
	해양수산 ODA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24.9월	
4/4분기	해수부-WMU IUU 어업 대응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24.10월	
	제2차 한-필리핀 수산공동위원회 참석	'24.11월	
	민·관 해양환경 정책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24.11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1/4분기	회의	아워오션 컨퍼런스 준비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2/4분기	간담회	MMPA 동향 및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NGO 간담회
3/4분기	간담회	민·관 해양환경 정책협의회 분과회의 개최
4/4분기	간담회	해양수산 ODA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간담회	민·관 해양환경 정책협의회 분과회의 개최

□ 기대효과

- 연안개도국의 자립기반 조성 및 경제발전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국격 제고 및 안정적인 해외수산자원 확보 도모
- 양자협력 강화로 수산양식, 항만개발 등 해양수산 관련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정부 외교정책과 연계한 성과사업 발굴
- 국제기구와 각국 전문가들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경험과 지식 공유를 통해 불법어업 근절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 '23년도 미흡부진과제 개선계획 : 해당없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원양어업기반구축(I -4-일반재정①)				
① 원양어업기반구축(3542)		농특	387	561
			85.0%	90.9%
	▪ 연안국과의 협력(ODA)(302)		287	436
	▪ 국제수산물기구 협상(301)		42	7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① 해양수산물 ODA 사업 예산(억원) (가중치 50%)	148	287	436	500	지난해 ODA 예산 대비 약 15% 증가치	신규+계속 사업 예산 합계	12월말 국회통과 예산
② 외국 정부와의 해양수산물 분야 협의회 횟수(회) (가중치: 50%)	1	0	1	3	전년 대비 300% 증가	당해연도 참석/개최한 정부간 협의회 횟수 합계 * 단순면담이나 일반국세회의는 제외	12월말, 해양수산물부 자체 합산

⑤ 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상력 강화(Ⅲ-3-⑤)

국제협력총괄과 (044-200-5331/5333)

□ 추진배경 (목적)

- 해외 수산자원, 특히 원양어획물 확보는 국내 수산물 공급 및 소비자 물가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큼
 - 특히, 명태, 꽁치,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과 참치, 이빨고기 등 고가/수출 어종은 대부분 원양어업을 통해 어획
- 원양어획물은 어획할당량이 결정되는 국제수산기구 수역에서 대부분(3/4 이상) 어획되며,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규범에 따라야함
 - 국제수산기구는 관할 수역에서의 국제어업규범을 설정하고, 국가별 어획량을 결정하기에 국제수산기구 대응을 위한 국제협상력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여도 확대) 보존관리조치* 제·개정 제안서 제출 및 의장단 진출을 통해 우리나라 위상 및 영향력 제고

* 보존관리조치 : 국제수산기구의 궁극적인 목표인 해당수역의 수산자원 보존관리를 위한 세부조치인 국가별 어획량 및 어업규범 등을 총괄하는 문서

- (협상 및 회의대응) 국제수산기구 총회 및 하부위원회* 회의의 적극적·연속적 대응을 통한 협상력 증진 및 어획할당량 확보

* 작업반 회의, 과학위원회, 이행위원회, 재정위원회 등

- (회의 개최 및 양자협약) 국제수산기구 총회 국내 개최* 및 주요국(일본, EU 등)과 양자협약(상시) 등을 통한 협상 밀도 강화

* 남인도양수산협정총회(SIOFA, 6월)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남태평양지역수산물기구(SPRFMO) 연례회의 대응	'24.2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패널2 회의 대응	'24.3월	
2/4분기	북태평양수산물위원회(NPFC) 연례회의 대응	'24.4월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연례회의 대응	'24.5월	
	남인도양수산물협정(SIOFA) 연례회의 국내개최 및 대응	'24.6월	
3/4분기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 북방위원회 대응	'24.7월	
	전미열대다랑어보존위원회(IATTC) 연례회의 대응	'24.8월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 이행위원회 대응	'24.9월	
4/4분기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연례회의 대응	'24.10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연례회의 대응	'24.11월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 연례회의 대응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지역수산물관리기구 협상 준비 및 대응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업계, NGO 단체, 외국 원양 조업국 및 연안국)와 상시 소통

구 분		내용	세부일정
1/4분기	회의	북태평양수산물위원회(NPFC) 연례회의 사전대책회의	'24.3월
2/4분기	회의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연례회의 사전대책회의	'24.4월
	회의	남인도양수산물협정(SIOFA) 연례회의 사전대책회의	'24.6월
3/4분기	회의	전미열대다랑어보존위원회(IATTC) 연례회의 사전대책회의	'24.8월
	회의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 이행위원회 사전대책회의	'24.9월
4/4분기	회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연례회의 사전대책회의	'24.10월
	회의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 연례회의 사전대책회의	'24.11월

□ 기대효과

- 관련 이해관계자(업계, NGO 등)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국익 극대화 및 국제적 기준선도 사이 균형잡힌 입장 수립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원양어업기반구축(I -4-일반재정①)				
① 원양어업기반구축(3542)		농특	387	561
			10.8%	13.1%
■ 국제수산물기구 협상 및 대응(301)			42	7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① 국제수산물기구 제안서 제출비율(%) (가중치 70%)	18%	77%	195%	145%	우리나라 조업규범 논의 또는 어획할당량 산정이 이루어지는 11개 국제수산물기구 모두에 제안서 제출을 기본 목표로, 최근 3년 평균(96%) 대비 약 50% 증가된 수치 목표 설정	전체 제안서 제출건수/11 × 100 * 우리부 단독/주도 제안은 1건, 타국 주도 공동제안 참여는 0.5건으로 산정	해양수산부 자체자료 (내부 보고자료, 지역수산물관리기구 회의결과 보고서)
② 국제협상 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실무 참여율(%) (가중치 30%)	신규	신규	100%	100%	1) 협상 전문가에 대한 필수교육 (①국제법, ②수산물 자원관리, ③수산물 어구공학, ④국제협상 실무) 100% 이수 2) 11개 주요 국제수산물기구의 회의의 실무그룹 논의 100% 참여를 목표로 설정	① 협상 전문가 대상 필수교육 실시(50%) * 교육이수 인원 / 전체인원 × 100 ② 협상 전문가의 주요 국제수산물기구 워킹그룹 또는 전문가그룹 등 실무그룹 논의 참여(50%) * 협상 전문가가 실무그룹 논의에 참여한 주요 국제수산물기구 회의 / 11개 주요 국제수산물기구 회의 × 100	해양수산부 자체자료

(1) 주요 내용

□ 국민이 안심하는 해양환경 관리체계 마련

- 오염수 장기 방류에 따른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해양방사능 감시를 강화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 위기관리 대응훈련 강화
-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오염이 심각한 특별관리 해역의 수질관리 강화 및 교육을 통한 해양환경 인식 개선

□ 개발과 보전의 상생 및 공존을 위한 해양공간관리 체계화

- 해양공간의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 공유수면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국가 주도 이용실태 조사* 실시

* 공유수면 이용실태 조사('23 ~ '25) : 제1권역('23) 경기·인천·충청지역 / 제2권역('24) 전라·경남지역 / 제3권역('25) 부산·경북·강원

-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 조정을 위해 해양공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과학적 정보체계 구축
-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해양공간 이용·개발행위 증가에 따라 지자체 간 관할구역 확정 및 합리적 공간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

□ 해양쓰레기 전주기 대응 및 보전·개발이 조화로운 해양관리

-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23)」,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저감 대책(23)」 등 수립에 따라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한 전방위적 관리 강화

- 해상풍력 등 대규모 해양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사후관리 필요성 증가에 따라 전면적 제도개선 추진
- 해양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관련 부처 및 지자체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범부처 거버넌스 공고화

□ 해양자산 관리 강화 및 해양생태계 보전

- 해양생태계 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내 해양보호생물 실태조사 및 서식지 보호를 강화하고 멸종위기생물의 위험도 평가 추진
-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등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 해양 기후변화 대응 관리체계 구축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해양수산 배출량 70% 감축)을 위한 국제감축사업,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등 기후변화 대응 추진
- 해운·수산·염습지 온실가스 통계 생산 및 온실가스 배출·흡수원 추가 발굴 및 국가 통계 반영을 통해 기반 강화
- 한반도 연근해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대국민 해양기후 정보제공 체계 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해양수질 개선율(%)	51.2	45.6	49.6	49.6	강우량·해수온도 등 외부요인 영향이 크나, 해양수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고려하여, 작년 실적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24년 목표 설정 * 목표실적은 최근 3년 평균의 2%, 최근 4년 평균의 6% 높은 수치로 대단히 도전적인 목표임	(WQI 1등급 정점수) ÷ (전체 연안 해역 조사정점 수 375개) × 100%	내부보고자료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해양환경 개선 관련 외부요인 영향 통제의 어려움

- 해양환경 개선 효과는 강우량, 기온 등 기상 조건과 육상 오염 물질 유입 등 외부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음
- 또한, 해양환경 개선 효과는 각종 정책의 시행 이후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장기적 분석이 요구

* 연도별 실적보다는 중장기적인 수질개선 추세치 분석값이 중요

□ 해양공간의 보전·관리해야 할 공유재로서의 인식 부족

- 공유수면 등을 개인의 소유물과 같이 인식하고, 보전·관리 대상이 아닌 개발·이용 수단으로 취급
 - 법규의 정비와 엄격한 시행, 감시체계의 강화,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활동 등 대책 마련과 노력이 필요
- 해상풍력·해사채취 등 해양환경 영향이 큰 개발행위에 대응하여 객관적 평가기준 수립 등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사후 관리체계 강화

□ 해양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력 강화

-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육상 기인 쓰레기의 증가로 인해 기존 해양쓰레기 수거 확대 노력만으로는 해양쓰레기 저감에 한계
- 해양쓰레기의 혁신적 저감을 위한 육상 쓰레기 관리, 하천을 통한 해양유입 방지 등 관련 부처 및 지역과의 협력체계 강화

(4) 기타

□ (참고자료)

제5차 해양환경종합계획('21~'30)

제4차 환경관리해역별 관리계획('24~'28)

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19~'28)·관리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해양생태계 보전·관리기본계획('19~'28)

제1차 해양폐기물관리 기본계획('21~'30) 등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해양쓰레기 전(全)주기 대응 및 보전·개발이 조화로운 해양 관리 강화(Ⅲ-4①)

해양보전과 (044-200-5307/5847)

□ 추진배경 (목적)

○ (해양쓰레기 문제) 해양쓰레기는 수산자원 감소, 항행 방해, 해양 환경 오염 등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특히 미세플라스틱이 먹이사슬을 통해 생물체내에 축적되고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면서, 해양쓰레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UN 등 국제사회에서도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제적 현안*으로 인식

* G20 정상회의('19.6)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대응 이행체계, 유엔환경총회('22.3)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결의안' 채택 등 해양쓰레기 문제를 기후변화에 준하는 전 지구적 현안으로 인식

○ (해양이용 증가) 해상풍력, 바닷모래 등 해양이용·개발 수요가 대규모·다양화함에 따라 사전 환경성 검토 중요성 증대

- 이에,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 제도를 분법한 독자법률인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24.1.)하고,

- 평가항목 사전 컨설팅(Scoping), 평가대행자 선정위탁(공탁제), 평가절차·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 선진화 필요

○ (해저퇴적물 오염) 오염퇴적물은 해양생태계·수산자원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 삶의 질을 저해

- 조선소, 해양시설, 산업폐수 등으로부터 유입된 오염퇴적물은 확산·재부유 등에 의해 용출돼 수질 악화, 생태계 교란 등 야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해양쓰레기 전(全)주기 대응 및 해양이용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고도화 등으로 보전·개발이 조화로운 해양 관리 강화

- (예방·수거) 해양쓰레기 발생원 관리 및 신속·효과적인 수거
 - 특정시기 집중 발생하는 해안가 쓰레기에 대해 바다환경 지킴이 등을 활용한 수거체계 구축 및 관련 예산 확대 추진
 - 테트라포트 지역 등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집중 수거 추진
 - 집중호우·태풍 내습 등 재해쓰레기 발생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현장 대응 매뉴얼 마련
 - 장마 전 관계기관 합동정화 및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 운영 등 관계기관(환경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 간 협력 강화
 - 해양쓰레기 One-stop 해상처리(동결과쇄, 유해성분 제거 등) 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친환경선박 개발(450억, '22~'26)
 - 해양쓰레기 일제수거, 범국민 연안정화 참여 강화, 재활용 활성화 등 '해양쓰레기 수거혁신 대책('23.4.)' 이행 점검 추진
- (미세플라스틱)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리 강화
 - 해양 유입·발생 평가, 환경거동 기작 규명 및 생태계 보호기준 마련을 위한 위해성 평가 R&D 추진('22~'26)
 - 그간 실시해온 모니터링 결과('21~, 매년 90개정점)를 DB(해양환경 정보포털)화 하고, 관련 정책 및 연구 공유·개발 체계 마련

○ (재활용)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기반 강화

- 폐어망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한 공공집하장 운영(2개소) 및 추가 확대(3개소)를 통해 재활용 활성화 추진

* ('24년) 부산, 목포항 운영 개시 및 인천, 군산, 광양항 추가 설치

- 해양폐기물 재활용 국민참여형 공모전 개최 및 수요자 맞춤형 제품 제작 및 판로 개척 지원

○ (협력강화) 기관 간 협업 및 국제기구 협력 강화

- 플라스틱 국제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적극 참여

- ASEAN 및 태도국 등을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저감성과를 체감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협력사업(ODA) 추진

-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및 관련 분위원회* 운영

* R&D, 정책, 국제협력 분과회의 및 하천폐기물 해양유입 저감 관계기관 협의회 등

○ (환경성 검토 강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25.1월) 대비, 신규 도입 제도 설계 및 기존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이해관계자 수용성을 기반으로 한 관련 행정규칙 제·개정 추진

* 국정과제 41-6.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

○ (오염퇴적물 정화) 부산 북항, 울산 온산항, 포항 구항 해양 오염퇴적물 수거·처리 추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 개최	'24.3월	국정 41-7
	'23년 해양쓰레기 수거 통계 확정	'24.2월	국정 41-7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저감을 위한 권역별 실무협의회 운영방안 점검회의 개최	'24.3월	국정 41-7
2/4분기	방치폐기물 수거작업 착수	'24.4월	국정 41-7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작업 착수	'24.5월	국정 41-6
	IUCN 해양플라스틱 오염 저감 ODA 사업 MOU 체결	'24.6월	국정 41-7
3/4분기	해양침적폐기물 수거작업 착수	'24.8월	국정 41-7
	팽생이모자반 대응상황 판단회의 개최	'24.8월	국정 41-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24.9월	국정 41-6
4/4분기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개최	'24.12월	국정 41-7
	플라스틱 오염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참석	'24.12월	국정 41-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하위법령안 마련	'24.12월	국정 41-6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1/4분기	간담회	주요 하천 권역별 협의체 구성 및 회의 개최	'24.3월
2/4분기	현장방문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사업 현장방문	'24.7월
3/4분기	현장방문	방치폐기물 수거현장 방문	'24.8월
4/4분기	현장방문	먼바다 쓰레기 수매사업 운영 현장방문	'24.10월

□ 기대효과

- 해양쓰레기 및 오염퇴적물 수거·처리로 해양생태계 보전, 해양 환경 개선 및 항행 안전 위해요인 제거
- 쾌적한 경관 조성으로 지역주민 정주 여건 개선 및 해양관광 수요 증가
- 선진화된 사전 환경 영향성 평가 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 가능

□ '23년도 미흡부진과제 개선계획

- (지적사항) 성과관리 자체평가 시점에서 증빙이 어려운 성과 지표('해양쓰레기 수거량')*가 있어 개선 필요

⇒ (개선) '해양쓰레기 수거량' 산출근거로, 기한 내 증빙가능한 부유쓰레기, 침적쓰레기 수거량만을 설정하여 계량지표 개선

* 성과지표 중 '해양쓰레기 수거량' 관련, 지자체로부터 실적 취합이 필요한 해안가 쓰레기 수거량 증빙 지자체 행정처리 시간 소요로 지연되어 미흡하였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해양환경보전(Ⅰ-1-일반재정②)				
① 해양환경개선 및 관리(1033) ■ 오염퇴적물 정화, 복원(305)	일반회계	133.5	197.5	
		133.5	197.5	
해양환경보전(Ⅰ-1-일반재정②)				
① 해양환경개선(1065) ■ 해양폐기물정화사업(301)	수발기금	363	482.3	
		363	482.3	
해양수산연구개발(Ⅲ-3-R&D①)				
①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4132) ▪ 과학기술기반 해양환경영향평가기술개발(304)	일반회계	58	33.6	
		58	33.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① 해양쓰레기 수거량(톤) (가중치 70%)	신규	신규	신규	9,377톤	태풍발생횟수와 장마기간 등에 영향을 받는 지표로,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목표치 상향은 한계가 있으므로, 최근 3년간 실적 평균 수준으로 설정 (침적: ('21)3,656, ('22)3,276, ('23)6,697) (부유: ('21)4,539, ('22)4,568, ('23)5,396)	최근 3년('21~'23년) 침적쓰레기 및 청항선 부유쓰레기 수거물량의 평균	해양환경공단 실적보고 자료
② 해양이용 영향평가법 하위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 제·개정 건수(건) (가중치 30%)	신규	신규	신규	8건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하위법령 및 해양 환경성 검토 제도 운영에 필요한 필수 지침 개수	지침 제·개정 건수 방침자료	내부자료

② 지속가능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해양환경안전망 구축(Ⅲ-4-②)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1 / 5282)

□ 추진배경 (목적)

-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보전법」, 제5차 해양환경종합계획 등에 따라 국가는 해양환경 등을 관리·보전하기 위한 책무 보유
-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해양오염사고 등 해양환경 위해요소에 대비한 선제적 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 필요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본격화됨에 따라 해양방사능 감시 강화 등 예상 리스크의 지속 관리 필요
 - 선박의 초대형화 추세, 해상 화물의 다양화로 해양오염사고의 잠재적 위험성이 증대하여 효과적인 사고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제2차 해양환경종합계획('21~'25)에 따라 해양환경교육의 전국적 확산 및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위한 대국민 인식 증진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사능 안전) 해양방사능 정기·긴급조사 정점을 127→165개소로 확대하여 유입 감시를 강화하고 대국민 정보제공 지속 이행(1월~)
 - 정기조사를 60개소(23. 54개소)로 확대하여 정밀성을 높이고, 긴급조사 대상에 서해 북·중부, 동해 북·중부를 추가, 쏜해역 긴급조사 실시
 - 일본 인근 공해상(8개 정점) 조사를 통해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 해역에의 영향 여부를 선제적으로 감시
 - 해양방사능 조사분석 체계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조사계획안 마련(8월)
- (해양수질 관리) 시화호 등 특별관리해역 대상 '연안오염 총량 관리제'*를 통해 육상기인 오염원의 해양유입 저감 추진(3월~)
 - * 연안오염총량관리 20주년 기념행사('25년 OOC 부대행사) 계획안 마련(11월)

- 환경관리해역 등 주요 관심해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오염원 관리 강화 요청(7월)
- 해역별 중점관리대상지역 및 대상물질 선정(12월) 등 오염 수준을 구체적으로 집중 감소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조치방안 마련
- (측정망 적극 활용) 해양환경측정망의 효율적 운영, 생산정보의 활용 확대 등을 위한 논문공모전(4월~) 및 협업대학 시범운영
 - * 해양환경측정망 정보활용 협업대학 운영계획 수립(1월) → '24년 시범운영 후 단계적 확대
- (정도관리 제도개선)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규제 완화 및 새로운 관리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 * 해양환경 측정분석 정도관리 제도개선안 검토(1월) → 개선안 마련(8월)
- (오염사고 대응) 침몰선박으로 인한 2차 해양오염사고 방지를 위한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 등 잠재적 위험관리 강화
 - 선박, 해양시설 등의 필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에 대한 교육·훈련(연중)을 통하여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대응능력 강화
- (관리체계 개선) 우리 해역 및 정책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해양환경 관리체계 개편을 위해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추진계획 마련
 - 해양환경정보 시스템 대국민 이용편의 개선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모바일 웹 기반 지도 서비스 및 신규항목 DB 구축 추진
 -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위한 근본적 인식변화를 위해 유아·초등생부터 성인까지 수요자 맞춤형 대국민 해양환경교육 실시
 - * (유아·초등) 해양환경 이동교실, 해양환경 온라인 콘텐츠 학습, (중·고등, 성인) 해양환경 온라인 라이브 특강 등
- (항만대기질 관리) 선박·항만에서 기인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 주요 과제 : 선박 저속운항, 황함유량 기준 단속, 비산먼지 저감 등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해양환경측정망 '24년도 추진계획 수립	'24.1월	국정 41-6
	해양환경측정망 구성, 운영계획 고시 개정	'24.2월	국정 41-6
	해양환경측정망 협업대학 시범운영 계획 수립	'24.2월	
2/4분기	환경보전해역 기본계획 해역별 관리계획 수립	'24.4월	국정 41-6
	새만금 외해역 해양환경 모니터링 방안 마련	'24.5월	
	대국민 해양환경 온라인 라이브특강 운영	'24.6월	
3/4분기	해수부-환경부 정책협의회 개최	'24.7월	국정 41-6
	해양환경 정도관리 제도개선 법령 개정안 마련	'24.8월	국정 41-6
	해양방사능 중장기 조사계획안 마련	'24.8월	
4/4분기	해양환경측정망 논문공모전 시상식	'24.11월	국정 41-6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수립	'24.11월	
	환경관리해역 해역별 관리해역 23년도 이행평가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관계기관 실무협의 및 해양방사능 현장 방문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는 해양환경관리망 구축 노력
- 연안 해역에서의 오염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선박 유류공급업체 및 해양시설 소유자 등과 해양오염사고 대응 방안 협의
- 해양환경분야 ESG 활성화 전략 마련 및 민간부문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
- 낙동강 하굿둑 개방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기타 주요 하구의 환경현안 파악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 추진
- 각종 해양 관련 행사 연계 해양환경교육 참여부스 설치를 통해 전국민 대상 해양환경 인식 제고 추진

< '24년도 정책현장 소통 추진 계획 >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1/4분기	현장방문	해양환경 방사능조사 및 항만 미세먼지 저감 관리 현장방문	'24.1월
	자문회의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24.2월
2/4분기	간담회	해양환경분야 ESG 활성화 전략 마련 등을 위한 기업 간담회	'24.5월
	회의	시화호 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24.6월
3/4분기	현장방문	대국민 해양환경 인식증진 홍보활동	'24.7월
	현장방문	연안하구역 생태계 모니터링 업무협의회	'24.8월
4/4분기	회의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24.10월
	회의	해양오염사고 대비 이해관계자 협의회	'24.11월

□ 기대효과

- 국내 해역의 방사능 농도에 대한 신속한 분석 및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 '안전'과 '안심' 확보
- 해양오염 위해요소 사전예방 및 신속·체계적 대응을 통해 해양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 최소화
- 환경보전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해양환경 교육을 통해 해양의 건강성 회복 및 지속가능한 해양이용 기반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해양환경보전(Ⅰ-1-일반재정①)				
① 해양환경개선 및 관리(1000-1033)	일반	109 (315)	178 (513)	
■ 해양환경감시체계 구축 운영(320)		109	178	
② 해양오염 피해복구(1000-1036)	일반	143 (143)	178 (178)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Ⅰ-2-일반재정①)				
① 해양문화활성화(2000-2031)	일반	- (-)	13.5 (1,477)	
■ 해양정책및문화육성(300)		-	59	
- 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		-	13.5	
해양수산정보화(Ⅰ-5-일반재정④)				
① 해양환경정보(정보화)(4200-4273)	일반	8.7 (8.7)	12.7 (12.7)	
해양수산연구개발(Ⅲ-3-일반재정①)				
① 해양수산환경 기술개발(4100-4132)	일반	14 (456)	2.8 (333)	
■ 4대강 물길복원에 따른 연안하구역 환경, 생태계 모니터링 및 활용기술 개발R&D(320)		14	2.8	

* '23년에는 해양오염 피해복구(단위사업) 내 해양환경교육 운영(세부사업)으로 예산편성(20억)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해양오염감시망 강화 (가중치 70%)	427	660	746	858	① 해양방사성물질 결과 정보공개 건수(60%) * (근거) 연도별 해양방사성물질 항목별 측정 분석결과 정보공개 건수 기준으로 전년 대비 15% 상향한 858건으로 설정 ② 해양오염 위기 관리 대응 훈련 건수(40%) * (근거) '22.7월 건조한 대형방재선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년 실적 3건 대비 150% 상향한 5건으로 설정	'24년 정기조사 시료채취·분석 공개 건수 모의훈련 건수	해양환경정보포털 내부문서·메모보고 및 결과보고서 등 * 점검실적 제외하고 방재선활용 훈련건수로만 한정
②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구축 (가중치 30%)	신규	신규	신규	100	① 특별관리해역 '좋은' 수질 달성률 (60%) * (근거) 최근 3년 평균 실적(96개)을 기준으로 달성률 100% 설정 ② 해양환경교육 전·후 인식변화율 (40%) * (근거) 작년 실적인 8.3%보다 약 10% 상향한 9.2%로 설정	(특별관리해역 WQI 1·2등급[좋은 이상] 정점 수) ÷ (특별관리해역 내 최근 3년간 WQI 1·2등급 정점 수, 96개) x 100% (사후인식점수-사전 인식점수) ÷ (사전인식 점수) x 100%	내부보고자료 * 측정시기 연 2회 교육 수강자 설문 조사

③ 개발과 보전의 상생 및 공존을 위한 해양공간관리 체계화 (Ⅲ-4-③)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1 / 5262)

□ 추진배경 (목적)

- 해양공간 활용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해상경계가 명시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지자체·주민 간 갈등이 장기화·극대화된 상황
 - * 홍성·태안('10~'15), 고창·부안('16~'19), 경남·전남('15~'21), 남해·통영('22~), 완도·제주('23~) 등 현재 권한쟁의심판을 통한 분쟁해결 시도 급증
-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제 마련을 통해 지자체 간 권한·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고 사회적 비용 저감
- 최근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신규 신청* 증가로 수산업과 공존하며 질서 있는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증대
 - *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신규 신청(건) : ('23.1월) 2 → ('23.2월) 2 → ('23.3월) 2 → ('23.5월) 2 → ('23.6월) 3 → ('23.8월) 4 → ('23.9월) 1 → ('23.10월) 6
- 이해관계자 소통·협의를 통해 권익을 보호하고, 수산업·해양환경·해상교통 등 영향을 고려한 질서 있는 해상풍력 추진 필요
- 해상풍력 등 공유수면 이용 수요가 다변화되는 한편, 국민 모두를 위한 공유재로서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증가
 -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보전을 위한 실태조사·인식개선 필요
- 해양수산정보 제공과 해양공간 정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제공 필요
 - 해양수산 분야 공공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증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이행·연구수행 등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해양관할구역 확정) 지자체 간 해양관할구역 경계 갈등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
 - 상임위 계류 법안*의 21대 국회 임기 내 제정을 추진('24.5월) 하고, 임기 만료 폐기 시에는 재추진 계획 마련('24.6월)
 - * '23.1월 발의 후 공청회 2회, 법안소위 심사 3회를 통해 대안 합의 후 상임위 전체회의 계류 중('23.9)
 - 해양관할구역 확정법 하위법령, 확정 계획 등 마련을 위한 준비 TF회의 개최(연중), 사전 연구* 착수('24.4월)
 - * 해양관할구역 확정을 위한 사전 연구('24~'25, 13억) : 확정 계획 및 상세 기준 등을 수립하고 확정안 마련에 필요한 필수 조사항목·방법 등 정립
- (해양공간 실태조사·인식 제고) 공유수면 이용실태 조사와 연안상태 진단, 관련제도의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 추진
 - 전라·남해권 공유수면의 불법 매립, 점용·사용 등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적법조치 도모
 - * 공유수면 이용실태조사('23~'25) : 1차('23, 기추진) 경기·인천·충청권 / 2차('24) 전라·남해권 / 3차('25) 부산·경북·강원권
 - 연안이용·개발, 사회·경제적 실태, 연안재해 등 연안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연안상태 진단 및 평가
 - 공유수면 관리 제도의 이해, 불법이용 예방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유수면 정책에 대한 홍보 추진
 - 매립수요의 환경영향·안전성·경제성 등 매립 타당성을 조사·검토하여 환경친화적이고 합리적인 매립관리 추진
- (해양공간 정보 활성화)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기반 구축과 해양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 해양 개발사업 전주기(Life-Cycle) 정책 의사결정 정보의 신속한 획득·활용 지원을 위한 핵심정보 연계·융합 방안 마련
-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공동활용체계)의 분야별 이용자 수요 파악 및 데이터 융합·가공처리, 제공 활동 적극적 수행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4년 공유수면 이용 실태조사 사업계획 수립	'24.1월	국정 41-6
	해양환경정보 종합화 계획 수립	'24.2월	
	공유수면 관리 인식제고를 위한 콘텐츠 제작계획 수립	'24.3월	국정 41-6
2/4분기	2024년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개선 사업 추진계획 수립	'24.4월	
	제5차 연안기본조사 추진계획 수립	'24.5월	국정 41-6
	해양 관할구역 확정법 제정 준비 T/F 회의 개최	'24.5월	국정 41-6
3/4분기	공유수면 정책심의를 위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 개최	'24.7월	국정 41-6
	연안 관리 인식제고 홍보부스 운영	'24.8월	국정 41-6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고시	'24.9월	국정 41-6
4/4분기	해양 관할구역 확정법 하위법령(안) 마련	'24.11월	국정 41-6
	공유수면 실태조사 완료 보고	'24.12월	국정 41-6
	해양수산 빅데이터플랫폼 데이터 제공·관리 창구 운영결과 보고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해상풍력 관련 어업인 권익 보호를 위한 의견수렴 강화

-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어업인 애로·건의사항 청취·논의

* 수석위원장, 8개 권역별(경인, 충청, 전북, 전남, 경북·울산, 부산·경남, 제주) 및 업종별(어선업종) 대책위원장으로 구성, 총 57개 조합 참여

- 지역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에 어업인 등 실질적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민간위원 구성 시 수협중앙회가 제공한 사업예정 해역의 조업정보를 고려하여 우리부와 협의

- 해양관할구역 확정법 제정(안), 법에 따른 확정 기본계획(안),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한 지자체 설명회 개최

* 전국 연안 11개 광역시·도 담당자

- 공유수면관리청 대상 업무협의회 개최

- 공유수면관리청,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유수면 허가제도 운용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정책 방향 모색

- 해양수산분야 데이터 활용 공공기관, 연구자, 기업 등 대상 데이터 수요조사·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 추진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1/4분기	협의회	공유수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3년 공유수면 이용 실태조사 결과 공유	'24.2월
2/4분기	간담회	해양수산정보 활용 해양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연계 간담회	'24.5월
	회의	해상풍력 관련 관계기관 업무협의회 개최	'24.6월
3/4분기	협의회	현장 공유수면 관리 애로사항 청취 및 논의	'24.9월
4/4분기	간담회	해상풍력 관련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24.11월
	간담회	해양관할구역 확정 추진계획 지자체 설명회 개최	'24.12월

□ 기대효과

- (해양공간 갈등 해소) 해양관할구역확정 법제화로 지자체, 주민 간 관할구역 분쟁을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 저감

- 국민의 안정적 해양공간 이용, 지자체의 책임감 있는 해양영토 관리, 지자체간 합의 유도를 통한 상생협력 기대

* 현재까지 약 30여건에 달하는 지자체간 해상경계 분쟁이 해상경계 법제 마련 및 운영을 통해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

- (질서있는 해상풍력) 주요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소통 강화 및 관련 제도 지원

- (이용질서 확립) 해양공간의 무분별한 이용 방지, 공유수면 인식 제고와 관리청의 역량강화를 통한 관리질서 확립
 - 공유수면 불법이용의 원상회복·적법화 조치, 정책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공유재로서 가치 회복 기대
- (정책지원 체계 구축) 해양수산정보 통합·개방으로 타 분야 정보 융합기반을 제공하여 해양수산분야 정책지원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해양환경보전(Ⅰ-1-일반재정①)				
①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1031)	일반회계	24	48
	■ 해양공간통합관리(305)		(579)	(513)
			24	48
해양수산정보화(Ⅰ-5-정보화⑨)				
①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정보화)(4280) ³⁾	일반회계	21	19
	■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정보화)(500)		(21)	(19)
			21	19
해양수산연구개발(Ⅲ-3-R&D①)				
①	해양수산환경 기술개발(R&D)(4132)	일반회계	63	59
	■ 해양공간 디지털트윈 적용 및 활용 기술개발(R&D)(312)		(487)	(321)
			63	5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① 해양공간의 공공성 강화(%) (가중치 50%)	-	-	100	100%	공유수면 이용실태조사 개소수(전라·남해권) 완료 달성률	공유수면 이용실태조사 (전라·남해권) 조사완료 개소수/27개소× 100%	내부보고 (공유수면 이용실태조사(전라·남해권) 완료 보고)
② 해양수산 빅데이터플랫폼 데이터 제공창구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 실적(건) (가중치 50%)	-	-	-	50건	해양수산 빅데이터플랫폼 통합창구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정보제공 건수	해양수산 빅데이터플랫폼 데이터 통합창구를 통한 정보 제공건수	정보시스템 추출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

④ 해양자산 관리 강화 및 해양생태계 보전(Ⅲ-4-④)

해양생태과 (044-200-5311~8 / 5327)

□ 추진배경 (목적)

- 해양보호구역·갯벌의 생태적 특성과 개발·이용 수요 등을 체계적·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관리 수단 확보 및 시행
-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21.7.) 된 '한국의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해양생태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제고 및 지속가능한 이용 실현
 - *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1,284km²)
- 기후변화, 연안개발 등 자연적·인위적 요인에 따른 해양생물 다양성 감소는 국제사회의 주요·핵심 환경 현안
 - 해양생태축 관리, 해양보호생물 및 유해·교란 해양생물 등 위협요인의 체계적인 관리로 생태계 건강성 및 지속가능한 이용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정책(제도)기반 마련

-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해양 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마련
 - * (4대 전략) ①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②해양생물다양성 위협요인 관리, ③해양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이용, ④국제협력 및 인식증진
- 해양생태계가 우수한 지역 등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해양생태관광의 기반*을 마련
 - * (원칙) ①자연환경의 보전, ②주민참여와 역량 강화, ③환경 인식증진 및 양질의 경험 제공, ④경제적 편익 창출 및 합리적 분배
- 해양보호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체 별 특성에 맞는 보호 조치 시행을 위한 해양보호생물 보전 방안 마련

- 해양보호생물 및 유해교란생물의 지정·해제 기준 마련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법정 지정종 관리체계 개선
 -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개정('24.12)

② 해양자산 관리 강화

-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최소 2개소) 및 세계유산 지역 내 바닷새 모니터링 지속
- 갯벌의 온실가스 흡수능력 증진과 함께 해양생물 서식 제공 등을 위한 갯벌복원사업 지속 추진 및 신유형 발굴*

* 철새의 종류 및 먹이망, 쉼터 등을 고려한 철새 서식지 복원유형을 신설 하고, 지자체 수요조사 실시('24.上)

③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생태계 보전

- 갯벌·연안·암반·바닷새조사를 포함한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추진하여 해양생태계 분석 기초자료 확보 및 진단·평가 기반 마련
- 수족관 허가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수족관 검사관 구성·운영('24.6)
 - 수족관 인·허가 및 관리·감독기관 담당자, 수족관 검사관, 수족관 업계 종사자 대상 수족관 관리 및 동물복지 교육 실시('24.3~12)
-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서식실태 및 위협요인 등에 대한 조사(10종/년) 시행을 통해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5년 주기 조사체계 구축

④ 국제협력 추진

-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계유산 심포지엄 개최('24.4)
- 갯벌과 바닷새의 보전 등을 위해 영국왕실조류협회(RSPB)와 MOU체결 예정('24.5)

- 해양생태계 관리 강화 및 국제 생물다양성 실천목표 달성을 위한 제4차 해양-수산 국제기구 포럼 대응 및 부대행사 개최('24.6)
-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지침 개정을 위해 블루카본 관련 국제행사 참석 및 연구개발 등을 통한 국제협력 추진
 - * 국제협력을 통해 IPCC 지침 개정(現 염습지·저지·해초류만 인정) 및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비식생갯벌·해조류 등 반영, 해양의 온실가스 흡수원 국가통계 반영 확대 추진
- 기후변화 대응 및 갯벌의 탄소흡수원 인증을 위한 블루카본 국제포럼 및 관련 회의 참석 등
- 해양보호생물 상평이 보호를 위한 한·중·일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전문가 워크숍 개최('24.10)
- IUCN Red List 생물군에 대한 국내 관리체계와의 연계를 위해 국내 해양생물(200종)에 대한 위험도 평가보고서 작성('24.12)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수족관 인허가 및 관리감독기관 담당자 교육	'24.3월	국정 41-7
	갯벌복원 신규사업 수요조사 시행	'24.3월	국정 41-7
2/4분기	한국의갯벌 세계유산 심포지엄 개최	'24.4월	국정 41-7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수립	'24.5월	국정 41-7
	세계 습지의 날 개최	'24.5월	국정 41-7
	수족관 검사관 구성	'24.6월	국정 41-7
3/4분기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	'24.7월	국정 41-7
	'24년도 유산지역 바닷새 모니터링 신규착수	'24.7월	국정 41-7
	구조·치료·증식 해양동물(바다거북, 점박이물범) 자연방류	'24.9월	국정 41-7
4/4분기	상평이 보호를 위한 국제 워크숍 개최	'24.10월	국정 41-7
	해양보호생물/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업무지침 개정	'24.12월	국정 41-7
	국가보호종 관리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개최	'24.12월	국정 41-7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설명, 해양보호구역 지정시 규제 및 재정 지원 여부 등을 안내하여 신규지정을 위한 주민 이해 및 지지 기반 마련
- 해양동물 구조·치료, 수족관 관리 등 해양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개선 등을 위해 전문가·동물보호단체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 추진
 - 구조가 필요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방안, 구조·치료된 개체 해양 방류, 수족관 관리 및 동물복지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1/4분기	주민설명회	마산 창포만 갯벌 해양보호구역 신규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24.3월
	현장방문	해양동물 구조·치료 기관 현장방문(경포아쿠아리움)	'24.3월
2/4분기	회의	갯벌복원 신규사업 수요지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4.6월
	회의	수족관 관리방안 등 논의를 위한 수족관 동물관리 위원회	'24.5월
3/4분기	공청회	해양보호구역 신규지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	'24.9월
	회의	해양생태관광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 회의 개최	'24.9월
4/4분기	회의	해양동물 보호위원회	'24.11월

□ 기대효과

- 해양보호구역을 신규(확대)지정하기 전 지역주민들과 소통함으로써 지정필요성, 혜택 등을 공유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
- 갯벌복원 신규사업 수요지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시행을 통해 신규 수요지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가능
- 해양동물 구조·치료 기능 확대 및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해양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해양환경보전(I -1-일반재정①)				
①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1031)	일반회계	404	465
			(579)	(513)
	■ 해양생태계 조사 및 관리(303)		90	98
	■ 갯벌생태계 복원사업(304)		252	205
	■ 해양정원 조성사업(307)		21	20
	■ 우수해양생태계 보호(310)		41	142
해양환경보전(I -1-일반재정①)				
①	해양환경개선(1065)	수발기금	126	231
			(519)	(735)
	■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복원사업(304)		126	23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해양생물 멸종위기 위험도 평가 달성률(%) (가중치 50%)			신규	4%	'30년까지 평가 대상종(총 5,000종) 평가 완료를 위한 연차별 목표 반영	연차별 평가 종수(누계) / 평가대상 종 수(5,000종)	평가보고서
② 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수(개소) (가중치 50%)	32	34	36	38	최근 3개년('21-'23) 간 연평균 1~2개소씩 추가 지정(또는 확대)한 점을 고려하여 산출* * 전국 연안습지 60%(1500.9km)를 보호지역으로 기지정, 추가(확대) 지정이 쉽지 않은 상황	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수	보호구역 지정 고시문

⑤ 해양 기후변화 대응 강화(Ⅲ-4-⑤)

기후환경국제전략팀 (044-200-6268 / 6270)

□ 추진배경 (목적)

- 해양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태풍 및 집중호우, 연안침식·침수, 해양생태계 교란 등 기후재난 빈번·강화 우려
 - 이에 따라,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역할 강화, 탄소중립의 체계적 이행 및 해양의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등 기후위기 대응 긴급
- (감시·예측)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23.10)을 계기로 해양·극지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의 통합관리 추진 필요
-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 등 이행을 위해 해양수산분야 탄소 감축 필요
 - 해양수산부문 국제감축사업 및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발굴·지원 등을 통해 NDC 달성을 위한 민간 저변 확대
 - 2030 NDC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으로 연간 480만톤의 CO₂ 감축 필요에 따라 국내·외 CCS 사업 적극 추진
- (적응력 강화) 해수면 상승 및 수온 등 기후변화 예측정보의 국민체감형 정보제공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지원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해양수산부문 기후변화대응 정책 총괄·조정
 - 2035 NDC 상향에 따른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조정 및 해양수산부문 기후변화 대응 정책효과 정량화
 - 국가 온실가스 통계품질 제고를 위한 개선 및 연안습지 MRV 지침 개정안 수립 지원 추진(24.1~)

- 해양 기후변화 포럼을 통해 기후변화에서 해양의 역할 홍보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유관부처·기관 간 협력 강화
-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강화
 -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 제정('24.10)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본계획 수립('24.12) 등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제도 정비
 - 소속·산하기관 등에 산재되어 있는 감시·예측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협의체를 구성·운영('24.8)하는 등 총괄 역할 강화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추진
 - (국내)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목표관리제** 예비관리업체 지정·고시('24.6) 및 목표관리제 설명회를 개최('24.9)하는 등 국내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 *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이 아닌 사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
 - ** 기준량(업체당 5만톤 등)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연간 감축목표 부여 및 달성 관리
 - (국제) 해양수산부문 국제감축사업 발굴을 위해 타당성조사 공모 및 대상기업 선정('24.6월) 등 국제감축사업 대표모델 개발 추진
 - 해양수산부문 국제감축사업 개발·추진을 위해 GGGI와 사업추진계획 협의 및 분담금 협정 체결('24.8월)
 - 국제감축 투자·지원사업, 타당성조사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영규정 고시('24.9월)
- 2030NDC 달성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적기 추진
 - CCS 산업 지원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24.2월, 산업부 등 공동)
- 국제사회에서 해양기후 역할 확대 등 국제협력 강화
 - 유엔기후변화협약 내 해양의 역할 확대 추진 및 해양기후대화('24.6), 제29차 당사국 총회('24.11) 참석·대응

- APEC, PEMSEA, COBSEA 등 다자 국제협의체 대응 및 선도적 의제 발굴을 통한 논의 선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4년도 해양수산부문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추진계획 수립	'24.1월	국정 41-7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24.2월	국정 41-7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 이행점검	'24.3월	국정 41-7
2/4분기	해양부문 국제감축 예비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대상기업 선정	'24.6월	국정 41-7
	목표관리제 예비관리업체 지정·고시	'24.6월	국정 41-7
	해양·극지 기후변화 감시·예측 업무체계 개선방안 마련	'24.6월	국정 41-7
3/4분기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협의체 구성·운영	'24.8월	국정 41-7
	GGGI 연계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분담금 이행 협정 체결	'24.8월	국정 41-7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24.9월	국정 41-7
4/4분기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4.10월	국정 41-7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 및 부대행사 개최	'24.11월	국정 41-7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본계획 수립	'24.12월	국정 41-7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1/4분기	설명회	'24년 해양부문 국제감축사업 관련 부처 통합설명회 개최	'24.2월
	간담회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법 시행령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24.3월
2/4분기	간담회	CO ₂ 해양지중저장 법률 개정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24.5월
3/4분기	포럼	유관기관·전문가 의견교류를 위한 해양 기후변화 포럼 개최	'24.7월
4/4분기	현장방문	탄소중립 해양마을 현장점검	'24.12월
	설명회	민간기업 해양부문 국제감축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24.12월

□ 기대효과

-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강화 및 국내외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
- 기후변화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해양환경 의제 발굴을 통해 해양 기후변화 국제사회 논의 선도 및 국가위상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해양환경 개선 및 관리(I -1-일반재정③)				
① 해양환경 개선 및 관리(1033)			30	29
■ 해양환경감시체계 구축 운영(320)				
- 해양환경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	일반회계	3	2	
■ 해양환경국제협력(302)	일반회계	27	27	
해양수산산업진흥(R&D)(I -2-R&D⑩)				
① 해양수산산업진흥(R&D)(2046)			32	34
■ 해양 기후변화 진단 및 장기전망 연구(312)	일반회계	32	34	
산업저탄소화(I -1-일반재정⑫)				
① 산업저탄소화(6131)			-	12
■ 해양부문 국제감축사업(700)	기후기금	-	-	12
제도운영(Ⅱ-5-일반재정④)				
① 제도운영(6433)			-	2
■ 해양해운목표관리제(600)				
- 해양목표관리제	기후기금	-	-	2
어항기반시설조성(I -3-일반재정⑥)				
① 어항기반시설조성(3301)			19	29
■ 어촌신활력증진(303)				
- 탄소중립 해양마을	균특회계	19	2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국내) 민간대상 온실가스 감축 사업 확대(건) (가중치 50%)	-	-	-	10건	최근 3년간 국내 민간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수행 건수 고려 <table><tr><th>'21</th><th>'22</th><th>'23</th></tr><tr><td>2</td><td>2</td><td>5</td></tr></table>	'21	'22	'23	2	2	5	민간 대상 온실가스 감축 지원 건수	내부보고 및 결과보고서 등 (민간대상 1:1 또는 1:多 설명회 및 예로사항 해결 컨설팅 등 지원건수)
'21	'22	'23											
2	2	5											
② (국제) 해양부문 국제감축사업 발굴(건) (가중치 50%)	-	-	-	2건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관련 타부처의 예산 대비 예비타당성조사 평균 건수 및 국제감축사업 발굴 환경, 민간 수요 고려	예비타당성조사 건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전략목표 IV.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활력넘치는 어촌을 조성한다.

1.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
2.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어업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3. 친환경·스마트양식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생산 환경을 조성한다.
4. 신선수산물 유통·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기 본 방 향

◇ 배경·필요성(중요성)

-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가치 소비 확산 등으로 먹거리 안전과 친환경적 생산에 대한 관심 고조
- 1인·2인 가구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간편식 선호 확산, 온라인 상거래 보편화 등 유통구조 변화 가속화

* 1인 가구 비중 : ('00)31.2% → ('22)33.3 → ('50e)40

-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기후변화*는 고수온·적조·태풍 등 자연재해 확대** 및 수산자원 변동을 초래하여 생산기반 위협

* (표층수온) '68~'22 1.36℃ ↑ (세계 평균 0.52℃)

** 최근 5년('18~'22) 양식어가 피해액 : 고수온 918억원, 저수온 123억원, 적조 44억원 등
23년 이상수온 피해 : (저수온) 61어가, 48억원 / (고수온) 1,125어가, 452억원

- 내년에도 고금리, 고유가, 전기료 인상 등이 지속될 전망으로 경영비용 상승 압박

* 시장은 '24년도 美·韓 중앙은행이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

- IPEF 등 국제사회의 강화된 환경·노동 규범과 WTO 수산보조금 협정 등은 수산업계 체질 개선 요구

◇ 그간의 성과

- 방사능 검사 전년(5,441건) 대비 2배 이상인 12,012건 검사, 부적합 없음
- 원산지 단속 일본산 등 국민 관심 품목 취급업소 2만개 대상 2차례 특별점검(업체당 4회 전수조사)(수산물, 지자체 등)
- 과거 오염수 유출 인정('13.7) 시 수산물 소비가 최대 22.1%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소비 위축 신호 없음
- 물가안정책임관(차관) 지정 및 물가안전대응반 운영, 정부 비축예산* 확대 및 적기 방출 등으로 물가 안정** 도모

* 정부비축예산(억원) : ('22)1,081 → ('23)1,750 → ('24)2,065

** 수산물 CPI(전년비, %) : (23.2.)8.2 → (23.4)6.2 → (23.6)6.1 → (23.9)3.5 → (23.11)2.1 → (23.12)1.8

- (수산공익직불금) 소규모어가 약 2.0만호(전체 어가의 44%)와 어선원 약 7천명을 대상으로 수산공익직불금 신규 지급(연 120만원)
- (경영안정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담보력 보강, 정책자금 무이자 전환 및 상환 유예, 어선원 보험료 납부 유예 등
- 온·오프라인, B2B·B2C 수출 지원 등으로 '23년 수출 30.0억불 달성 및 김 수산식품 수출 최초 1조원 돌파(약 7.9억불)
- 조건불리 직불제의 최초 도입('14)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수산공익직불제* 도입('21) 및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신설을 통해 어업인 소득안정 지원 강화

* ('21) 조건불리지역(기준) +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신규 3종)
('23)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 추가

- 어촌뉴딜300 사업*('19~'24) 및 어촌지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18~'22, 46개소)** 추진을 통해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 ('19) 70개소, ('20) 120개소, ('21) 60개소, ('22) 50개소

** ('18~'22) 어촌종합개발 34개소, 어촌테마마을 10개소,漁울림마을 2개소

◇ 주요 내용

- 자원관리형 어업관리 강화, 수산자원 회복 다양화, 어업질서 및 안전 확립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어업체계 구축
- 스마트·친환경 양식으로 체질 개선, 건강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어장 형성, 양식산업 전략적 육성으로 첨단·친환경 양식산업으로 도약
- 수산식품산업 육성, 유통구조 선진화 및 어선건조, 수산기자재 등 수산 신산업 육성을 통한 수산업 성장 견인
- 어업인 소득 안전망 구축, 어촌어항 인프라 개선 및 특화 콘텐츠 개발을 통한 어촌상회 새로운 활력 부여
-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수산물 안전 국민 소통 강화, 수산물 전주기 위생 관리 및 소비시장 안정화 등으로 국민 안심 수산물 소비체계 구축

◇ 임무와의 상관관계

- 국정과제 41번(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73번(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등 이행을 위해 성과관리 체계와 연계 추진 필요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4	4	17	30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전략목표 IV.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활력넘치는 어촌을 조성한다.		① 수산물 수출액(억불)
1.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		① 귀어귀촌 정책자금 수혜자 수(명)
	① 어촌·어항 개발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	① 관광소득 5억 원 이상 어촌체험휴양마을 수(개소) ② 국가어항 개발사업 추진률(%)
	② 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기반 확보	① 어촌활력지역 변화율(%) (어촌뉴딜 대상지) ②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착공개소 (개소)
	③ 어업인의 생활·복지 지원 강화 및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	① 3톤 미만 어선원 보험 가입률(%) ② 여성어업인 검진인원 증가 달성률(%)
	④ 수산업·어촌 공익증진과 연계한 어가 소득 기반 강화	① 수산 공익직접지불금의 무 준수율(%)
	⑤ [민생] 연안해운 공공성 및 안전관리 강화	① 연안여객선 수송실적(천명) ② 연안여객선 안전 관리 강화율(%)
2.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어업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① 수산자원 직접 조사 정점 수 목표 달성율(%)
	① 수산자원조성 및 자원관리체계 고도화	① 연안생태계 건강성 향상 실적
	② 어선어업 구조개선 추진	① 근해어선 감척 이행률(%)
	③ [민생] 어업 안전 보장 및 조업질서 유지 역량강화	① 국내 IUU어업 예방·근절을 위한 육·해상 검색률(%) ② 중국어선 불법 대응건수(건)
	④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①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 대상 수(개) ② 어선청년임대 사업 청년어업인 지원 건 수(건)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⑤지속가능한 국제 수산물 공급 여건 조성	① IUU어업 예방을 위한 원양어선 점검 실적(건) ② 원양 정책 서비스 만족도(점)
3. 친환경·스마트양식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생산 환경을 조성한다.		① 양식 생산량(천톤)
	①첨단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① 친환경 수산물 인증건수(건) ② 친환경·첨단양식 기술이전 교육자(수)
	②고부가 양식품목 전략적 개발 육성 및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① 양식 전략품목 생산금액(백억원) ② 배합사료 직불제 참여율(%)
	③지속가능한 양식산업 경쟁력 확충	① 양식업의 지속가능성 증대 ② 지속가능한 양식수산물 생산체계 마련
	④깨끗하고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기반 조성	① 사업 전후 저서동물지수 개선도(%) ②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기준 지도·점검율(%)
4. 신선수산물 유통·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① 수산식품산업 인프라 구축률(%)
	①수산물 수급·물가위기 관리체계 구축 및 안심 유통환경 조성	① 할인혜택을 받은 소비자수 (쿠폰발행건수)(천명)
	②[민생]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① 수출전략산업 육성 추진율(%) ② 수산물 수출 다변화 및 수출 확대 추진율(%)
	③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정책 지원 강화	① 수산분야 규제혁신과제 발굴(건) ② 수산분야 금융 지원액(억원)

(1) 주요내용

□ 자원관리형 어업관리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관리체계 구축

- 미참여 어업인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어획실적 등 조업상황 조사·분석을 거쳐 적용 대상해역과 업종 확대 추진
 -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비어업인의 합리적인 포획·채취 기준(방법·종류·수량 등) 마련(「수산자원관리법」 개정)
-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시행 및 관리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생산~수거 각 단계별 어구 실태조사 실시(5년 주기)
 - 어구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및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설치 추진

□ 구조개선 및 서식지 개선을 통한 수산자원 증대

-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중심의 감척을 지속 추진(1,204 → 1,341억원)하고, '제3차 중기 감척 기본계획('24~'28)' 수립
- 지역특화 어종의 산란·서식장을 확대 조성(계속 10, 신규 3개소)하고, 방류종자 인증제 확대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 어업질서확립 및 어업주권확보로 안정적 조업환경 조성

- 노후 지도선 대체(8척 준공, '23) 및 대형 지도선 3척(~'24)을 건조하고, 어업지도선 임무 재편 등 '어업질서 확립 종합대책' 수립
-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맞춰 안전매뉴얼 마련 지원

- 양식업 체질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양식산업 발전
 - 스마트 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와 가공·유통, 육상 양식장 등 배후부지로 구성된 클러스터 조성
 - 개체굴 양식 등 친환경·고부가 생산체계 전환 지원, 어가에 순환여과식·바이오플락 시설보급 확대 추진
- 생산체계 전환 및 재해 대응으로 건강한 어장생태계 조성
 - 어장청소 주기 완화 및 어장청소 의무관리제도 전환 시행하고, 청정어장 재생사업 확대 추진
 - 위기경보 발령 기준 개선, 재해대응 사업 통합관리 등 '어업재해 대응 개선방안' 및 '수산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응 전략' 수립
- 수산식품 수출기업·품목 및 제품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수출전략형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초보-성장-고도화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 컨설팅 지원 등 경쟁력 확보 지원
 - 유망 수출국 무역지원센터 신규 개소와 'K-Seafood관' 입점기업을 확대하고, 라이브 방송 마케팅 등 지원으로 수출시장 외연 확대
 -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가공·유통 시설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수산식품 클러스터 및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추진
- 직거래·온라인 등 신유통망 확대 등 유통구조 선진화 추진
 - 위판장과 인접 가공공장을 연계하여 단순가공(절단·소분 포장 등) 후 유통기업을 통한 수산물 직배송 지원
 - 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고 유통단계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입점 가능한 홈쇼핑 채널 확대 도모

- 어업인·중소유통업체 온라인 시장진입을 위하여 상품구성, 홍보전략·판로개척 등 맞춤형 전자상거래 컨설팅 지원

□ 어선 건조 및 수산기자재 등 수산업 다각화 추진

- 인적·물적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어선건조업 등록제 도입 및 설계·조선·검사·연구기능을 집적한 진흥단지 구축 착수
-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법률 제정, 산업 실태조사 인증체계 마련, 수산 기자재의 기계화·현대화 촉진 등 추진

□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및 인력공급을 통한 어업인 복지 향상

-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지급단가 상향 및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제 지급규모 확대 추진
- 고용허가제(E9) 규모 확대, 계절근로자(E8)와 숙련된 근로자(E7-4) 확보를 통한 외국인 어업인력 수급 지원

□ 어촌어항 인프라 개선을 통한 어촌 신활력 창출

- 어촌 규모·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추진('23~'27)
- 방치 폐어구·쓰레기 수거, 위생·환경 상태 개선, 경관 정비 등에 중점을 둔 CLEAN 국가어항 5개소 조성 추진('23~'25)

□ 어촌의 생활경제여건 개선 등을 통한 어촌인구 유입

- 지역수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등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특화상품 개발(20종), 상품 판매·홍보 온라인 유통채널 구축
- 귀어학교(6→8개소)와 귀어인의 집을 확대(6→12개소)하고, 귀어인 대상 창업·주택구입 융자 지원, 청년어촌정착지원금 확대 제공

☐ 수산물 방사능안전 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국민신뢰도 확보

-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방사능 검사 장비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검사 건수를 지속 확대

* 검사장비: ('22) 29대 → ('23) 54대 → ('24 목표) 71대

** 검사건수: ('22) 5,441건 → ('23) 12,012건 → ('24 목표) 18,000건

-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을 확대 시행('23.7~)하고 전국적인 원산지 의무표시 민·관 특별점검 등을 통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음식점 원산지표시: (현) 참돔·명태 등 15개 → (개선) 가리비·우렁쉥이·방어 등 20개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23	'28			
① 수산물 수출액 (억불)	25.1	23.2	28.3	31.6	30.0	37.6	'19~'23년 연평균 증가율 (4.6%)을 감안하여 '28년 37.6 억불 달성을 목표로 설정	수산물 수출액(억불)	관세청 수출통계

(3) 기타

☐ 어촌 정주 여건 개선 및 어촌관광 활성화

- 어촌마을 홍보창구인 해양관광포털 바다여행(www.seantour.com)을 운영하고 국민에게 신뢰도 높은 다양한 어촌관광정보 제공

(1) 주요 내용

□ 어가소득 안정화로 안정적 어업경영 기반 조성

-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으로 수산자원 보호, 해양영토 수호 등 수산업·어촌의 공익가치를 제고하고, 어가소득 안정 도모
- 보험 가입률 제고, 수산 정책보험 제도개선 등으로 재해보험 활성화를 추진하여 어업인 재해보장 능력 강화 지원
- 어업인 기초생활 보장(의료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어업활동 지원 등으로 어업인 복지체계 강화

□ 어촌·어항재생을 통한 어촌 정주 여건 개선

- (정주 여건) 낮은 소득·한정된 일자리·생활 서비스 접근성 부족 등 열악한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인구유출 방지 및 신규인력 유입 촉진
 - 어촌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을 통해 어촌주민 정주 여건 개선 및 삶의 질을 제고하여 행복 어촌마을 조성
- (안전강화) 여객선이 입·출항하는 소규모 항포구의 열악한 해상교통 안전 인프라 혁신으로 국민의 해상교통기본권 강화

□ 정주 여건 개선과 소득증대 실현을 위한 어촌개발사업* 추진

- (소득창출) 어촌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득원 발굴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경제 조성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귀어귀촌 정책자금 수혜자 수(명)	600	706	742	724	최근 3년('21~'23) 실적 평균(683명)과 전년도 실적 증가율(5.1%)를 감안하여 평균 대비 6% 증가한 724명을 목표로 설정	귀어 창업·주택 자금 지원대상 선정자 수	자체 행정자료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신규인력 어촌 진입 시 높은 진입장벽 극복 필요

- 어촌지역은 어가인구 고령화, 도·농지역보다 낮은 수준의 삶의 질 및 열악한 노동 여건 등으로 신규인력 유입 정체
- 어업은 사업 형태가 노동집약적이고 영세하며, 타 산업보다 재해율도 높아 어업종사자의 안심 근로체계 마련 시급

* 산업별 재해율('20기준, %): 어업(4.31) > 건설업(1.17) > 운수창고통신업(0.77) >제조업(0.72)

☐ 가계·경영 기반이 없는 도시민 귀어귀촌 수요 증대 방안 마련

- 기존 홍보(귀어귀촌 박람회, SNS 활용)를 강화하여 각 지역별 어촌 크리에이터 양성 및 지역별 소규모 박람회를 통해 귀어귀촌 관심 제고
- 상담, 교육, 컨설팅, 현장실습 등 귀어 상황에 맞는 단계별 지원 정책을 통해 단순 관심 단계의 도시민이 추후 실질적인 어촌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연계
- 귀어귀촌 관련 교육 개선(실습기간 연장) 및 어촌정착상담사 운영 강화(역량교육, 상담사 증원) 및 컨설팅 이용 확대(10→15회)를 통한 안정적 어촌정착 도모

□ 어업인력 육성과 경영안정망 확충을 통한 어업생산 기반 확보

- 어업분야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어업인력 전문기관 지정·운영,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력 규모 확대 추진
- 어업인 보험 가입률 제고 등을 위해 정책 및 재해보험 관계 기관 협의 추진, 어업인 보장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여성어업인 등 어업인 건강관리를 위한 직업성 질환 특검 도입 및 예방 활동 등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추진

(4) 기타: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어촌·어항 개발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IV-1-①)

어촌어항과 (044-200-5651 / 5652)

□ 추진배경 (목적)

- 어촌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및 어촌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귀어·귀촌 지원 확대 및 어업 외 소득 증대 필요

* 귀어가구(가구) : ('18) 917 → ('19) 904 → ('20) 897 → ('21) 1,135 → ('22) 951

** 귀어인(명) : ('18) 986 → ('19) 959 → ('20) 967 → ('21) 1,216 → ('22) 1,023

*** 어촌체험객(만명) : ('18) 145 → ('19) 150 → ('20) 96 → ('21) 114 → ('22) 130 → ('23) 156

-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어항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어항 환경·경관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어항시설을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어촌 활력 】

- 어촌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민의 귀어·창업 및 어촌정착 지원

- '24년 귀어·귀촌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23.1.)하고, 정보, 상담, 교육, 정책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해 어촌 신규인력 유입 활성화

* 귀어·귀촌 정보, 상담, 기초교육 제공('24.상시), 청년어업인 지원대상자 선정('24.2), 귀어귀촌-어촌계 상생 워크숍('24.12)

- 귀어·귀촌인 임시 주거시설, 기술교육 강화 등을 위한 신규사업인 귀어인의 집 조성(6개소)*, 귀어학교(8개소) 교육 프로그램 강화** 추진

* 이동식주택 등 개소당 최대 50백만원을 지원하여 6개소 조성(1.5억원, 국비 50%, '24.12)

** 현장교육 확대, 수산물 유통·가공 교육 및 어촌계 교류 교과과정 추가

- 차별화된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어촌자생력 강화

- 어촌 숙박 중심 특화* 조성을 위해 가이드라인 및 통합브랜드 개발·홍보, 서비스(어메니티) 표준화 추진

* '24년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의 아이টে를 '숙박'으로 집중하여 특화 조성(4개 마을)

** (해수부·공단)브랜딩·어메니티 연구용역 → (마을·지자체)특화 시설조성 → (해수부·공단)운영매뉴얼 컨설팅

- 타부처 협력*을 통해 유희시설을 활용한 사무공간을 조성하여 체험, 숙박, 식당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케이션 사업 확대 추진
 -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소협력재단, 수협은행, 서울경제진흥원 등 관계기관 협력강화
- 동·서·남해안 체험마을을 서로 연결하는 광역 루트화 및 희소성 있는 증정품 구성 등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 기획·운영
 - * 기개발된 관광코스(코리아둘레길)와 마을간 맞춤동선을 발굴하여 관광거점으로 육성
 - ** 권역별, 테마별 체험마을 관광코스 개발을 통한 스탬프 투어 기획·운영
- 우리나라 고유 어업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자긍심 제고를 위해 FAO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 * ①남해 죽방렴 어업, ②신안 부안 갯벌 천일염 어업
 - ** (등재현황) ①'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23.7.10)', ②'제주해녀어업('23.11.10)

【 어항 개발 】

-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추진
 - 수산업 기반시설 기능 및 안전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어촌 경제 중심의 국가어항 조성을 위해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10개항)
 - * 지속가능한 어항 개발·관리 및 지역 경제 자생력 강화를 위해 국가·지자체·민간의 역할분담 방안이 반영된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평가하여 최종 선정
- 쾌적하고 깨끗한 국가어항을 위한 'CLEAN 국가어항' 사업 추진
 - 현재 추진 중인 시범사업 대상 5개 국가어항*에 대하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 추진
 - * 안흥항(충남 태안), 격포항(전북 부안), 녹동항(전남 고흥), 남해항(강원 양양), 대대다포항(경남 거제)
- 경제적 및 효율적 어항시설 설계를 위한 어항 설계기준 개정 추진
 - 어항 설계기준 개정방향 설정을 위한 '99년도 설계기준 개정 이후 어항 이용실태* 및 어항개발 정책** 변화 등 기초조사 추진
 - * 어선 대형화, 양식어업증가(어선·어구 형태 변화), 어항기능편익시설 수요증가(설계기준 부재)
 - ** 지방어항 개발 지방이양(항종에 맞는 설계기준 부재), 어촌·어항 통합개발

○ 안전하고 편리한 국가어항 건축물 환경조성 추진

- 국가어항 건축물 보수·보강계획 수립 등을 통한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국 국가어항 건축물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어항 특화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수산·관광·레저 기능과 지역 특색을 갖춘 다기능어항 개발, 어항 수산기능 재편·강화, 지역사업과 연계한 기존 어항시설 정비

◆ 어항 특화개발 사업 유형

- ① 다기능어항 : 시범사업 13개항('04~'13), 확대사업 10개항('14~'26)
- ② 아름다운 어항 : 4개항('14~'22)
- ③ 어항 이용고도화 : 4개항('11~'21)
- ④ 어촌 마리나역 : 신규 10개항('15~'22), 다기능어항내 포함 5개항('17~'26)

* (다기능어항 4개소) 서망항('24.12.), 남당항·육지항·저동항 지속 추진('24.1.~'24.12.)

** (어촌마리나역 3개소) 남당항, 육지항, 저동항 다기능어항 포함 추진 중

○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촌·어항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 어항시설의 범위를 기존 수산업 관련 시설에서 쇼핑센터, 신재생 에너지 설비 등 수익시설까지 확대하여 민간투자 여건 개선
- '어항배후지역'을 지정·개발하여, 진입도로 등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촌·어항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투자 유치

○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정화 활동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어항 조성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소규모 건설현장에 안전·보건 컨설팅을 진행하고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우리과에서 관리 중인 '어촌어항관리시스템'에 구축

- 배면, 수중구조물 등 안전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설물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어항 3D모델 구축(3개항*)

* 동해, 서해, 남해 권역별 각 1개항 구축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귀어귀촌 시행계획 수립	'24.1월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대상자 선정	'24.2월	국정 73-4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숙박특화) 사업 대상지 선정	'24.3월	국정 73-4
2/4분기	국가어항(3개항) 3D모델 구축을 위한 용역 발주	'24.5월	
	귀어인의 집 사업 추진 현장점검	'24.6월	국정 73-4
	깨끗한 항, 다시 찾고 싶은 항 캠페인 실시(상반기)	'24.6월	
3/4분기	국가어항 사진전 개최	'24.8월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숙박특화) 사업 추진상황 점검	'24.9월	국정 73-4
	귀어귀촌 크리에이터(유튜버) 확대 운영	'24.9월	
4/4분기	깨끗한 항, 다시 찾고 싶은 항 캠페인 실시(하반기)	'24.10월	
	풍요로운 어촌 사진·영상 공모전	'24.12월	
	중대재해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연안·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현장 소통 강화, 예비 귀어인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상향식 소통기회 확대

* 시도 수산정책협의회, 돌아오는 언어톡 토크콘서트,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간담회, 기자단 팸투어 등 의견 수렴 접점을 넓혀 현장 의사가 수시로 반영될 수 있는 소통 채널 확립

-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관련 선정 계획 설명,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자체 설명회 개최 및 추천 후보지에 대한 현장방문(평가)

구 분	내용	세부일정
1/4분기	간담회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계획 지자체 설명회
	간담회	어촌연안 활력제고를 위한 토크콘서트(언어톡) - 남해권/서해권
2/4분기	현장방문	어촌체험휴양마을 팸투어
	간담회	귀어귀촌 활성화 워크숍
3/4분기	현장방문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후보지 현장방문
	현장방문	해리포터 기자단 漁케이션(일·휴가) 대상지 방문 체험
4/4분기	간담회	제17회 전국어촌대회 개최
	간담회	귀어귀촌-어촌계 상생 협력 워크숍

□ 기대효과

- 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소 및 청년·도시민의 어업 창업과 어촌 정착지원을 통해 어촌사회의 활력 증진
- 어촌지역의 새로운 잠재 소득원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어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어선 접안시설, 어업활동 지원 등 수산업 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촌 정주 환경 조성 및 어업인 편의 제공
- 수산물의 생산·유통, 해양관광 등 어항의 복합기능수행으로 주민 소득증대 및 경제 활력 제고
- 국가어항 안전관리를 체계화하여 건설현장 종사자, 국가어항 이용객 등 안전사고 예방

□ '23년도 미흡부진과제 개선계획

- 추진계획의 충실성,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개선·보완 필요
 - (현안중심) 국정과제, 해양수산부 핵심과제, 범부처 추진과제 현안 위주로 우선순위 설정하여 추진계획 보완
 - (의견수렴) ‘어촌·연안 활력제고’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연·어특), 海리포터 기자단 현장 답사 등 상향식 소통 확대
-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개선·보완 필요
 - (재구조화) “어촌활력기반구축”과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을 “어촌소멸대응지원” 사업으로 통합하고 정책효과가 저조한 사업 폐지
 - (협업강화)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협업(문화체육관광부-코리아둘레길/농림부-국가중요농·어업유산)을 강화하여 정책효과 극대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	'23	'24
귀어귀촌지원(I -3-일반재정⑩)				
①	귀어귀촌지원(3347)	균특회계	160	84
	▪ 어촌소멸대응지원(300)		160	84
귀어귀촌지원(I -3-일반재정⑫)				
③	귀어귀촌지원(3347)	균특회계	19	25
	▪ 청년어촌정착지원(363)		19	25
어항기반시설조성(I -3-일반재정②)				
①	어항기반시설조성(3345)	농특회계	3,119	3,536
	▪ 국가어항관리(302)		258	257
	▪ 국가어항(303)		2,635	3,063
	▪ 가거도항복구(306)		226	21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관광소득 5억 원 이상 어촌체험 휴양마을 수(개소) (가중치 50%)	신규	신규	신규 (9)	12	코로나19 이후 국내 관광 트렌드에 적합한 체험마을 조성 노력 등을 반영하여 '23년도 9개소에서 33% 이상 증가한 도전적 목표 설정	마을별 체험마을 관광소득(체험, 숙박, 음식, 특산물 판매 등) 5억원 이상 마을 수	한국어촌어항공단 마을별 보고시스템 산출 (마을별 한국어촌어항공단 보고시스템 입력)
② 국가어항 개발사업 추진률(%) (가중치 50%)	신규	신규 (10.0)	신규 (20.7)	32.4	*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 총사업비 25,116억원 기준 누계 투자금액을 목표치로 설정 * '22년 2,514억원 '23년 2,689억원 투자 * '24년 예산 3,063억원 기준 95.6% ('21~'23 평균집행률)인 2,928억원을 투자하여 누계 8,131억원(32.4%) 추진	국가어항 누계 투자실적('22~) ÷ 국가어항 총사업비(25,116억원) × 100(%)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집행실적

② 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기반 확보(IV-1-②)

어촌어항재생과 (044-200-6174 / 6171)

□ 추진배경 (목적)

- (정주 여건) 낮은 소득·한정된 일자리·생활 서비스 접근성 부족 등 열악한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인구유출 방지 및 신규인력 유입 촉진
- (안전강화) 여객선이 입·출항하는 소규모 항포구의 열악한 해상교통 안전 인프라 혁신으로 국민의 해상교통기본권 강화
- (관광자원) 어촌이 보유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육성하여 소득 창출 기반 마련
- (지속기반)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기반 마련, 지역 맞춤형 생활 서비스 제공, 소외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어촌사회 지속성 강화

< 근거 법령 >

- 어촌·어항법 제47조의6(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 ① 어촌·어항재생사업은 사업계획수립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어촌·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농어촌정비법 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세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매년 국가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특화어촌의 발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상위계획인 국정과제 및 핵심과제와 연계를 통한 성과관리 내실화

주요과제명	관련 과제 번호	주요내용
국정과제	73-4 어촌신활력 증진으로 어촌생활수준 향상	어촌을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어촌 생활권 규모·유형별로 맞춤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 진행중인 어촌뉴딜300사업과 신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등 낙후된 어촌의 활력 제고

< ① 사업 관리 내실화 추진 >

- (기본계획심의) 신활력증진사업의 적정 계획수립 등을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적정성 검토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 * 기본계획 심의 전 사업의 목표 및 비전,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현장자문 지원(2회)
- (성과체계)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어촌뉴딜 사업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사업 관리 강화
 - * 기존 성과지표인 어촌활력지역 변화율과 신규로 추진중인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성과지표(착공개소 수) 및 목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 점검 실시
- (자문단 운영) 신활력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계획수립 유도 등을 위한 부분별 계획내용 검토 및 자문 추진하는 자문단 구성(102명)
 - * 유형별 위원 102명 선정(유형1 5개분야, 23명 유형2 5개분야, 43명 유형3 3개분야, 36명)
- (집행관리 강화) 집행신포등 세분화, 사업 부진 시 불이익 확대(신규사업 신청 제한, 총사업비 감액, 사업취소 등) 등 집행관리 강화*
 - * 집행관리 강화 방안 마련('24.3)

< ② 성공사례 발굴·확산 >

- (사업관리) 어촌뉴딜사업 준공연도 대상지('22년)의 철저한 공정관리 및 사업관리를 통해 대표 성과 발굴 지속
 - 집행관리 등 모니터링체계 강화*를 통한 촘촘한 사업관리 추진
 - * 절차별 표준 소요기간 기준 세분화, 지자체 책임강화(사업비감액, 사업취소 등) 등

- (성공모델발굴)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및 사업추진 지원 등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성공 모델 도출
 - * 사업지별 여건을 반영한 마스터플랜 수립 후 시설사업 실시설계 및 S/W사업 추진
- (성과홍보) 현장 및 언론 소통 강화, 방송 프로그램·영상 콘텐츠 제작·홍보를 통해 어촌어항 재생사업 지속을 위한 동력 확보
 - 어촌뉴딜사업 성공사례를 통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중요도를 인지시키고, 사업성과 홍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의 홍보전략 수립

< [3] 어촌어항재생 지속 기반 마련 >

- (어촌공간 재생계획) 사업 수요 발굴,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해 전국 어촌대상 생활권 분석, 지원과제 발굴 등 계획 수립(5년 단위) 추진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속추진) 어촌을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하기 위한 어촌신활력증진 '24년도 신규 대상지 선정(31개소) '25년도 대상지 공모(~'24.9), 평가 등(~'24.12) 추진

◆ 정주 여건 개선과 소득증대 실현을 위한 어촌개발사업 추진

- (소득창출) 어촌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득원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경제 조성
 - * 전국 31개 시·군 124개 읍·면 대상으로 권역단위 거점개발(100억원 이하, 5년 이내), 시·군 역량강화(2억원 이하, 1년)
- (특화센터) 어촌공동체 중심의 창업·컨설팅, 판매·유통·홍보 등 어촌특화사업 지원을 위한 어촌특화지원센터(10개소)* 운영
 - * ('16) 전남, 경남 ('17) 강원, 충남, ('18) 경기, 전북, 경북, 제주, 인천, 부산
 - 어촌특화지원센터의 교육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기업, 어촌주민 등 소득 사업 관계자 대상으로 사업 아이템 발굴, 운영 노하우 전수 등 지원
- (빈집관리) 어촌재생과 빈집 정비를 연계*하고, 도시·농·어촌 빈집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어촌특성을 고려한 빈집 관리 체계 구축
 - *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사업 가점 부여 및 어촌빈집·어촌재생사업 정보 통합 제공
 - ** 국토부·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시스템 세부 기능 고도화 추진 중(한국부동산원, '24.上~)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대상지 선정 발표	'24.1월	국정 73-4
	'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3) 기본계획(2차) 심의	'24.2월	국정 73-4
	'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유형1 추가 사업대상지 선정	'24.3월	국정 73-4
2/4분기	'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현장자문	'24.4월	국정 73-4
	상반기 어촌어항재생사업 재정집행 점검 회의 개최	'24.5월	
	'25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지구 사업성 평가	'24.6월	
3/4분기	'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상반기 집행점검	'24.7월	국정 73-4
	'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공모 설명회	'24.9월	국정 73-4
	'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기본계획 심의	'24.9월	국정 73-4
4/4분기	'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3) 기본계획 심의	'24.10월	국정 73-4
	하반기 어촌어항재생사업 재정집행 점검 회의 개최	'24.11월	
	'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평가	'24.12월	국정 73-4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정책·사업의 수혜자

- (지역주민 및 어업인) 사업대상지역 거주 주민 및 어업시설 이용 어업인
- (일반국민) 여객선이용객, 관광 목적 방문객 등 일반 국민

○ 이해관계자

- 지역의 지역주민, 어촌계, 여객선 선사, 수협, 사업위탁 공공기관

구 분		내용	세부일정
1/4분기	간담회	'25년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24.1월
	간담회	어촌어항재생사업 관계자 워크숍	'24.3월
2/4분기	회의	상반기 어촌어항재생사업 재정집행 점검 회의 개최	'24.5월
	현장방문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현장 방문 및 의견 청취	'24.6월
3/4분기	간담회	'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공모 설명회	'24.9월
	현장방문	어촌 빈집 현장 의견 청취	'24.9월
4/4분기	회의	하반기 어촌어항재생사업 재정집행 점검 회의 개최	'24.11월
	간담회	어촌특화지원센터 10개소 대상 간담회 개최	'24.12월

□ 기대효과

- (해상교통 편익 증진) 소규모 항·포구의 접안시설 등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여 도서민 정주 여건 및 관광객의 교통편익 증진
- (어촌 활력증진)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쇠퇴하는 어촌에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주민 소득을 증대에 기여
 - * 갯벌체험장, 낚시 특화센터, 수산자원 브랜드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등
-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등 어업 필수 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어업생산성 증대 및 작업효율을 제고
- (생활공간 혁신) 취약한 섬·어촌 지역 보건·복지, 교육, 문화, 여가 등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
- (국가 균형발전) 낙후된 어촌지역 생활밀착형 SOC를 공급으로 국가균형발전 구현과 공도화(空島化) 및 어촌소멸 방지에 기여
- (어촌관광 활성화) 어촌경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발굴하여 일반국민들에게 해양레저·스포츠 등을 즐길 수 있게 함으로써 어촌관광 활성화에도 기여
 - * 바다, 섬, 해양레저, 어항, 수산자원, 자연경관 등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어촌지역에 어촌 뉴딜을 통해 인프라를 보강하고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국민들이 찾고 싶은 어촌 조성
- (일자리 창출) 어촌 재생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어항기반시설조성(균특)				
① 어항기반시설조성균특(3301)			3,310	2,606
▪ 어촌신활력증진(303)	균특		444	962
▪ 어촌뉴딜300(304)	균특		2,866	1,644
어촌·어항관광기반조성(농특)				
① 어촌어항관광기반조성(농특)(3340)			6	4
▪ 어촌발전기반조성지원(305)	농특		6	4
귀어귀촌지원(지특)				
① 귀어귀촌지원(3347)			35	11
▪ 어촌소멸대응지원(300)	지특		35	1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① 어촌활력지역 변화율(%) (가중치 : 60%) (어촌뉴딜 대상지)	38.9	40.2	41.7	42	('23년) 41.5% → ('24년) 42.0% -측정산식 :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의 지표를 4·5등급 어촌* /300개소(전체대상지) * 인구사회(지역소멸지수변화, 어촌생활인구변화), 산업경제 (수산물 판매금액변화, 어촌사업체수변화), 물리환경(어항투자비변화, 어항노후화)의 종합 산정하여 4.5등급으로 2개 이상 해당되는 어촌 비율 측정	3개 부분 값'을 정규 분포화 하여 등급을 구분하고, 4.5등급이 2개 이상 해당되는 어촌의 전체중 비율 *사업대상지의 인구사회(지역소멸지수 변화, 어촌생활인구변화), 산업경제 (수산물 판매금액변화, 어촌사업체수변화), 물리환경(어항투자비변 화, 어항노후화)의 종합 산정하여 4.5등급으로 2개 이상 해당되는 어촌 비율 측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②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작공개소(개소) (가중치 : 40%)	신규	신규	신규	10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작공개소 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작공개소 수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③ 어업인의 생활·복지 지원 강화 및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IV-1-③)

소득복지과 (044-200-5461/5462)

□ 추진배경 (목적)

-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어촌지역은 생활 여건(보건·복지 등)이 열악하고 삶의 질이 낮아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필요

* 삶의 질 만족도('23, KMI 조사) : 도시(6.3) > 농촌(5.7) > 어촌(5.2) > 섬 지역(3.6)

-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예고 없는 재해에 대한 보장 능력을 강화하여 안정적 경영환경 마련

* 어가인구(천명) : ('10) 171.2 → ('22) 90.8 / 어촌 고령화율(%) : ('10) 23.1 → ('22) 44.2

- '행복한 어업인, 살고 싶은 어촌'을 위해 보건·복지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어업인력 육성과 경영 안전망 확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확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복지 개선) 어촌지역의 기초적인 생활 서비스(의료 등) 여건 개선, 소득안전망 구축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 어업안전보건센터 운영과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한 어업인 업무상 질환 사전 예방 및 어촌지역 의료접근성 취약 해소

- 어업인 대상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23. 10,764 → '24. 13,864세대), 연금 보험료 지원 실시('23. 13,271 → '24. 13,130명)로 취약 가구 지원강화

- (인력확보) 어업인력 전문기관 지정, 어업 분야 외국인력 규모 확대 등을 통한 어촌 고령화 대응 및 어업인력 수급 애로 해소

- '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시행('24.2.15.)

- 고용허가제(E9) 규모 확대('23년 7,000명 → '24년 10,000명), 계절 근로자(E8)와 숙련된 근로자(E7-4) 확보를 통한 외국인 어업인력 수급 지원

- (재해보장) 보험 가입률 제고, 수산 정책보험 제도개선 등으로 재해보험 활성화를 추진하여 어업인 재해보장 능력 강화 지원
 - 신규 재해보험상품 출시(흰다리새우, 방어 등)
 - 어선원보험 전 톤수 의무가입(25)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인지제고를 위한 집중 홍보
 - 어선원 보험 소지품 유실급여 보상기준 개선*, 어선 충돌 손해배상책임 확장 특약**, 선체수리비 확장 특약*** 도입
 - * 소지품 증명불가시 일정한 금액 지급, 어선원 사망시 1개월치 급여 지급 등
 - ** (현행) 타인의 선박 및 적하에 대한 충돌만 보상
→ (개선) 해상풍력 시설, 항만시설, 부두 하역시설 등과의 충돌 보상
 - *** 재해사고로 인해 선체가입금액의 전손이 발생이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수리에 한하여 선체가입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보상
- (여성어업인 육성) 여성어업인의 특수질환에 대해 맞춤형 건강 관리 및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여성어업인 육성 추진
 - 여성어업인의 직업성 질환*에 대해 검진을 지원하는 특화검진사업의 대상자를 여성어업인 전체로 확대하여 추진('22~'23 시범사업/'24~ 본사업)
 - * 근골격계질환검사, 골절위험검사, 심혈관계질환검사, 난청검사, 예방교육 등
 - 여성어업인 포럼 개최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어업기술교육 등을 추진하여 여성어업인의 역량을 제고하고 어촌의 주체로 육성
- (어업환경개선)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 지원, 기자재 수리 지원 등을 통한 어업 근로 여건 개선
 - 수산장비 구입(용자)지원(16억원), 도서·벽지 등에 어업 장비 이동수리소 운영(53개소, 8억원)을 통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외국인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으로 근로자 인권보장·생활 환경 개선, 고용방식 완화*로 국내 체류 유도과 안정적 소득 보장
 - * 고용 허가를 받은 어선이 휴업(금어기, 휴어기)할 경우 동일 선주 어선에 한해 이동근무 가능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참여 지자체 수요조사	'24.2월	국정 73-4
	어업안전보건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4.2월	국정 73-4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관리기관 공모	'24.3월	국정 73-4
2/4분기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지역 설명회	'24.4월	국정 73-4
	외국인어업근로자 복지회관 대상 확정	'24.4월	국정 73-4
	여성어업인 특화검진기관 선정	'24.6월	국정 73-4
3/4분기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시도 담당자 업무협의	'24.7월	국정 73-4
	어업활동 지원사업 홍보 실시	'24.8월	국정 73-4
4/4분기	어업활동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24.11월	국정 73-4
	수산정책보험발전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24.11월	국정 73-5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추진상황 점검	'24.12월	국정 73-4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시행 관련 지자체 의견 수렴 및 검진 독려를 위한 현장방문을 통해 여성어업인 건강 증진 도모 등
- 외국인어업근로자의 생활환경 상황 확인, 지역 의견 수렴 및 수산정책보험·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기관협의 추진 등

구 분		내용	세부일정
1/4분기	회의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시·도 업무협의(영상)	'24.2월
2/4분기	간담회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 관련 공청회 실시	'24.5월
	현장방문	외국인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추진현황 점검	'24.6월
3/4분기	회의	수산정책보험발전협의회 개최	'24.7월
4/4분기	회의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 제도개선 관계기관 협의	'24.10월

□ 기대효과

- 어업인의 생활·복지 지원강화 및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을 통한 어촌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재해대책				
① 재해대책(3443)	농특	1,702	2,032	
▪ 양식어업재해보험(300)		230	241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301)		1,338	1,661	
▪ 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303)		134	130	
수산경영안정				
① 수산경영안정(3440)	농특	180	200	
▪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300)		123	122	
▪ 수산장비(임대)활용(지자체)(311)		28	49	
▪ 어업인삶의질향상(312)		29	2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① 3톤 미만 어선원 보험 가입률(%) (가중치 50%)	신규	신규	12.4	11.8	어선원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3톤 미만 가입률의 3년 평균(11.3%) 대비 4% 상향한 목표 (11.8%) 설정	3톤 미만 어선의 어선원재해보험 가입자 / 3톤 미만 어선의 어선원재해보험 가입대상	보험가입통계
② 여성어업인 검진인원 증가 달성률(%) (가중치 50%)	신규	신규	신규	100	'22년 대비 '23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율 20%보다 상향한 2.5배 확대(50% 증가)로 목표 설정	{('24검진인원-'23검진인원)/'23검진인원/연평균증가율 (50%)} *100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률 전년 대비 50% 확대	내부 자료

④ 수산업·어촌 공익증진과 연계한 어가 소득 기반 강화(IV-1-④)

수산직불제팀 (044-200-5452 / 5453)

□ 추진배경 (목적)

- 어촌사회 유지,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등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해 공익형 직접지불제(직불제) 도입·시행('21.3.~)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20.5.)

(국정과제 73-5) 수산공익직불금제 개편 등 수산인 경영안전망 강화

-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어업경영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어가와 내국인 어선원에게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지급하여 소득안정과 어촌사회 유지 도모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의 어업인에게 안정적 어업 경영을 위한 직불금을 지급하여 소득 보전 및 지역 활성화 제고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TAC 등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의 전환을 유도
- (경영이양 직불제)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후계 어업인의 유입 촉진과 은퇴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통한 어촌사회 유지
- (수산정보화) 직불제 관리시스템 등 수산정보통합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수산행정 업무처리 등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직불제도 개선) 어업 현장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산공익 직불제 전반에 대한 법령 등 제개정 추진
 - 직불금 지급요건 개선, 지급금액 상향, 신규 직불제 발굴 검토 등
- (직불제 운영) 직불금 신청 홍보, 지급 대상 신청·접수 절차 안내 및 지급요건 검증 등 직불제 운영
 -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어업형태, 일정 소득규모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어가와 6개월이상 승선한 어선원에게 직불금 지급('24년 지급단가 : 어가당 130만원)
 - * (국정과제73) 소규모어가까지 직불금 지급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도서 및 해상 접경지역 등 조건불리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불금 지급('24년 지급단가 : 어가당 80만원)
 - *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 및 타분야 기본형 직불 중복수급 금지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TAC 할당 준수 등 강도 높은 자원관리 의무를 이행하여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강화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급(어선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수산자원보호 준수업무 >

기본업무	선택업무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준수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전자 어획보고)	어선감척	그 밖의 의무*

* 해양쓰레기 수거, 어구보증금제 이행, 생분해성 어구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사용, 어구제한, 채포 체장·체중 제한, 종자방류 등(최대 3개까지 신청 가능)

< 직불금 지급 단가 >

구간	1구간 (10톤 이하)	2구간 (10~20톤)	3구간 (20톤 초과)
단가	75만원/톤	70만원/톤	65만원/톤

- (경영이양 직불제 운영)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어업인에게 어촌계 결산 소득 구간에 따라 직불금 지급

< 직불금 지급 단가 >

소득구간	200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 ~ 2,400만원 이하	2,400만원 초과
지급액	연 120만원(정액) (월 10만원)	연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의 60%	연 1,440만원(정액) (월 120만원)

- (직불제 운영지원) 수산 공익직불제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관리시스템 및 수산행정 업무처리 지원을 위한 수산정보통합시스템 운영
- (시스템 운영) 직불제별 신청·접수, 대상자 선정, 이행점검, 지급대상 확정 등 직불제 업무처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수산정보 관리) 분야별(어경제, TAC, 낚시해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도 제고 및 수산정책 수립 활용도 향상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금의 준수 의무 및 총톤수 구분 기준 고시 개정	'24.1월	국정 73-5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직불금 지급액 고시 개정	'24.2월	국정 73-5
	수산 공익직불제 교육 위탁계약 체결	'24.3월	국정 73-5
2/4분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 선정	'24.4월	국정 73-5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지급대상 후보자 선정	'24.4월	국정 73-5
	소규모어가·어선원·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행지침 수립·시달	'24.4월	국정 73-5
3/4분기	소규모어가 직불제 대상 어촌지역 선정	'24.7월	국정 73-5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24.8월	국정 73-5
4/4분기	수산 공익직불제 현장교육 실시	'24.10월	국정 73-5
	수산 공익직불제 관리시스템 고도화 완료 보고	'24.12월	국정 73-5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설명회) '24년 직불제 개선사항 공유, 신청방법 및 준수 의무 이행방법 안내 등을 위한 설명회 개최
- (간담회) 어선원 직불제 지급기준 완화, 지급대상 확대 및 홍보강화 방안 등 사업 추진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 (현장방문)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1/4분기	설명회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설명회	'24.1월
	간담회	어선원 직불제 간담회	'24.1월
2/4분기	설명회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 방법 등 설명회	'24.4월
	설명회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준수 의무 이행 설명회	'24.4월
3/4분기	현장방문	직불제 이행점검 실시	'24.8월
	현장방문	직불제 이행점검 실시	'24.9월
4/4분기	설명회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설명회	'24.12월

□ 기대효과

- 어선원을 포함한 소규모어가 등에 대한 지원으로 어업분야의 지역간, 산업간 소득격차를 해소
- 수산공익 직불제 시행·확대로 어가 소득 보전, 어업경영 안정 및 어촌사회 유지에 기여하는 등 수산업·어촌분야 공익기능 강화
 - *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환경보호 등 수산업과 어촌이 가지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어업인 경영안정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
- 수산정보통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계기관 공동활용, 대국민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양방향 맞춤형서비스를 제공
 - 수산정보의 통합·공유·개방을 통한 新 부가가치 시장 창출 도모

□ '23년도 미흡부진과제 개선계획

- 추진계획의 충실성, 성과지표 부합도, 목표달성도 및 정책효과 개선·보완
 - 수산공익직불제 시행 취지와 그간 발굴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운영관리 개선,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을 추진 계획에 반영

- 정책 시행에 따른 목표달성도를 나타내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에 부합하고 정책효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표를 변경
- 기존 직불금 지급 실적 등의 지표에서 “직불금 수령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 이행 정도”를 신규지표로 설정
- 직불금 수령자는 교육 이수, 수산관계 법령 준수 등 「수산직불제법」에서 규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준수의무 이행을 통해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기여 확인이 가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 ¹⁾	'23	'24
어가소득보전(Ⅱ-4 일반재정⑧)				
① 어가소득보전(3460)			933 (933)	1,062 (1,062)
■ 수산 공익직불제(310))	농특회계		933	1,062
수산행정정보화(Ⅱ-4 정보화①)				
① 수산행정정보화(정보화)(3462)			16 (16)	13 (13)
■ 수산정보화(정보화)(505)	농특회계		16	1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① 수산 공익직접지불금 의무 준수율(%) (가중치 100%)	-	-	-	85	신규지표 설정 직불제도 도입 목적 달성을 위해 직불금 수령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 준수 정도를 측정 (최근 3년간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의무 준수율 평균(85.8%)과 신규 직불제 도입 시기('23) 등을 고려하여 85%로 설정함)	준수한 의무 건수 / 직불금 수령자의 준수사항(의무) 건수*100	수산공익직불제 관리시스템

㉔ 연안해운 공공성 및 안전관리 강화(Ⅳ-1-㉔)

연안해운과 (044-200-5731 / 5732)

□ 추진배경 (목적)

- 섬 주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으로서 안정적이고 편리한 연안여객항로 운영 등 연안여객항로의 공공성 강화 필요
- 여객선 사고를 통해 노출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문제들을 개선하는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지속적 추진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해상교통망 구축) 섬 주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섬과 육지를 왕래할 수 있는 해상교통망 구축
 - (국가보조항로 운영방식 개편) 여객 서비스·선박 안전 등의 효율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가보조항로(現 민간위탁)의 기관위탁 변경 등 운영방식 개선 추진
 -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1일 생활권 미구축, 적자 발생 등으로 섬 주민의 교통권을 저해하는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여 운항결손액 지원
 -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여객선과 도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선박을 투입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 및 정주 여건 개선
- (소외지역·취약계층 지원)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섬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섬 지역 택배화물 및 유류, 가스 등 기초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으로 정주 여건 개선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코로나 엔데믹 이후 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 대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연안여객선 집중 점검 등 현장 밀착관리 추진

- (안전관리 강화) 연안여객선 현장 밀착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 안전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 개선도 향상
- (국민안전감독관) 국민이 직접 연안여객선 안전상태를 불시 확인하고 미비점을 정부에 알려 시정하게 하는 국민안전감독관 운영
- (특별안전점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설·추석·행락철·하계·겨울철 대비 항해·통신장비, 구명·소화설비 등에 대한 민관합동점검

* (개요) 연 5회 이상 / 155척 전수 / 지방청·운항관리자, 해경, 검사기관 등

- (연안선박 현대화) 여객선 선령제한 강화정책 및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화된 여객선·화물선 신조 추진

* 연안선 현대화 펀드('16~'24) : 총 3,190억원 출자 / '24년 200억원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4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공모 실시	'24.1월	국정 41-4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 추진상황 점검	'24.2월	
	설 대비 연안여객선 특별 교통대책 시행	'24.2월	국정 41-4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출자	'24.3월	국정 41-4
	'24년 국민안전감독관 위촉	'24.3월	
2/4분기	'24년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공모 실시	'24.4월	국정 41-4
3/4분기	국가보조항로(도초-우이) 신조선 대체투입	'24.9월	국정 41-4
	추석 대비 연안여객선 특별 교통대책 시행	'24.9월	국정 41-4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선박 건조현장 점검	'24.9월	국정 41-4
4/4분기	'25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공모 실시	'24.11월	국정 41-4
	'24년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현장 점검	'24.11월	국정 41-4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1/4분기	회의	국가보조항로 운영방식 개편을 위한 협의회 개최
	현장방문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 추진상황 점검
	현장방문	'24년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현장 점검
2/4분기	간담회	연안화물선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업단체 간담회
3/4분기	현장방문	추석 대비 연안여객선·터미널 현장방문

□ 기대효과

-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해상교통망 구축을 통해 연안여객선에 대한 신뢰 및 수송실적* 증대

* ('18) 1,471만명 → ('19) 1,455만명 → ('20) 1,060만명 → ('21) 1,146만명 → ('22) 1,399만명 → ('23) 1,326만명

- 여객선 운임, 섬 지역 택배화물 및 유류, 가스 등 생활연료 해상 운송비 지원 등을 통해 도서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 여객선 안전의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정부부터 전문기관, 선사, 시민까지 참여하는 다중 안전관리 제도 운영으로 여객선 안전성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도서지역 해상교통 지원(Ⅲ-4 일반재정④)				
①	도서지역 해상교통지원(6134)		416	444
	▪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300)	지특	202	233
	▪ 내항여객선 운임보조(301)	지특	198	197
	▪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304)	일반	16	1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① 연안여객선 수송실적(천명) (가중치40%)	10,740	13,291	12,579	12,440	여객선 정책 관련 대표적 지표인 여객선 수송실적을 목표설정 연료 및 도서주민 감소로 여객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19~'23) 여객수송 실적 평균 대비 3% 가산	연안여객선 이용객수(1~11월) * 산식 : 5년간('19~'23) 여객수송실적(5)*103% * 12월 실적은 익년도 1월말 확정으로 제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통계자료
② 연안여객선 안전 관리 강화율(%) (가중치60%)	신규	신규	100	1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연안여객선 안전 관리 목표 설정 ① 여객선 안전관리 개선도(50%) ② 여객선 안전제고방안 마련(50%)	①(개선이행건수/특별점검지적건수)×0.5 ②방안 마련 및 지침 개정×0.5	내부보고 (메모보고 등) 내부방침 (메모보고 등)

(1) 주요 내용

□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및 지원체제로 전환

- 수산자원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 축소를 위해 향후 5년간('24~'28) 근해어선은 524척, 연안어선은 1,500척 감척 추진

* 어획강도 및 업종 간 갈등·분쟁 등을 고려하여 연근해어선 감척

** '24년 : 근해어선 90척 및 연안어선 205척 감척(1,626억원)

- 어업경영악화 등으로 감척사업 수요 증가추세로 자율감척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필요시 자원남획이나 상습적 불법어업에 대한 직권감척도 병행

□ TAC 확대와 고도화를 통한 과학적 어업관리

- '27년 이후 TAC 전면도입을 목표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근해중심의 TAC를 연안까지 적용* 추진

* 현재 근해통발만 참여하고 있는 붉은대게 TAC를 연안통발까지 확대

- 우리나라의 복잡다양한 어업현실에 맞게 TAC 운영체계를 다변화*하고, '한국형 ITQ' 도입방안 마련 검토

* 다년제 TAC의 도입(고등어), TAC 어기의 별도 적용(꽃게)

□ 생태계 기반의 통합 자원관리 추진

- 융합기술*을 통한 주요 회유성 부어류 현존량을 추정하고, 바이오로깅 시스템의 적용 확대**로 조사 자료의 정밀도 제고

* 과학어탐, 연속어란채집, 환경DNA분석 기술접목으로 주요 부어류 변동 모니터링

** 내만으로 산란·회유하는 주요 수산자원의 산란기 내 행동 특성 연속 모니터링

- 한국형 생태계 기반 자원평가 모델*을 통해 해역별 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자원평가 대상종 확대('23. 65종 → '24. 70종)

* 단일어종 중심이 아닌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하여 어종·어업·생태계 위험도를 종합 평가

** ('22) 동해권역 → ('23) 남해·제주권역 → ('24) 서해권역 → ('25) 근해 전역

□ 국제수준의 어업관리체계 확립

- (위치·어획보고) 실시간 조업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어선위치, 어획량 파악
 - 쏘 어선에 자동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여 정확한 위치를 파악토록 하고, 조업 일마다 어획량·위치 등 전자 보고를 통해 확인
 - * 총 3.7만척의 허가어선중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2,243척에 장치 보급 추진
- (양륙) 5톤 이상 어선은 지정항구* 양륙을 의무화하여 어종·양 등을 보고토록 하고, 어업감독관이 적법 수산물에만 어획확인서 발급
 - * 위판장 소재지 등 5톤 이상 어선약 1.3만척이 입출항, 판매하는 어항 위주로 300여 개 지정(24.1)
- 조업감시센터 구축·운영(24~)으로 조업 전 과정 전자적 보고방식에 따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상에서 육상 중심으로 단속체계의 실효성 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수산자원 직접조사 정점수 목표 달성율(%)	100.0	100.0	100.0	100.0	500개 정점수는 직접조사 가능한 최대 정점수로, '21년부터 자원조사 결과의 연속성을 위해 최대 직접조사 가능 정점수 유지 필요	'24년도 수산자원 직접조사 정점수 / 수산자원 직접조사 목표 정점수 500개] × 100%	연근해특정해역 수산자원정밀관리 결과보고서 (국립수산과학원)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에 따른 어업생산량 감소

- 과잉어획, 기후변화, 조업구역 축소 등으로 생산량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어획 어종도 단순화**되어 어업인 간 갈등 심화
 - * 생산량(만톤): ('14) 106 → ('16) 91 → ('18) 101 → ('20) 93 → ('21) 94 → ('22) 89
 - ** 연근해 어획 상위 3개 어종(멸치, 고등어, 살오징어) 비율 : ('80년대) 32.7% → ('10년대) 45.9%
- 연근해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양한 자원관리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자원 회복이 더딘 상황

□ 비용상승, 어선원 부족 등 어업 경영여건 악화

- 지속적인 고유가 등 비용상승과 어획 부진으로 어업활동이 위축되고, 고금리는 높은 부채비율(40~50%)의 경영구조에 큰 리스크로 작용
- 높은 진입장벽으로 신규 인력 유입 제한, 고령화로 인한 국내 어선원 부족 및 외국 어선원의 인권 문제 등 대두

□ 국제규범 강화, 日 원전오염수 방류 등 대외환경 변화

- IPEF, CPTPP 등 국제사회의 강화된 환경(어업 포함)·노동 규범*, WTO 수산보조금 협정 등은 정부 지원의존성이 높은 어업분야에 큰 부담

* (CPTPP) 자원감소 어종의 과잉어획을 유발하거나 IUU어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철폐

- 日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23.8.24)에 따라 우리 연근해 해역, 해양 생태계, 어업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전략적 어선감척* 추진하고, 감정평가체계 일원화, 업종간-지역간 어업인 의견수렴을 거쳐 어업분쟁 갈등해소 추진

* 5년간('24~'28) 총 2,024척 감척 목표(근해어선 524척, 연안어선 1,500)

(4) 기타

□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조성을 위한 TAC 운영 등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www.fira.or.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수산자원조성 및 자원관리체계(IV-2-①)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3 / 5534 / 5536 / 5540 / 5541)

□ 추진배경 (목적)

- 우리나라 연근해 전해역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 조사·분석 기반을 마련하고, 생태계 기반의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실효성 제고
 - * 추진근거: 「수산자원관리법」제10조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제11조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계획
- 수산자원조성·관리로 연안 생태계를 복원하여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거점을 구축하여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TAC 확대) '27년 이후 TAC 전면도입을 목표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근해중심의 TAC를 연안까지 적용* 추진
 - * 현재 근해통발만 참여하고 있는 붉은대게 TAC를 연안통발까지 확대
- 우리나라의 복잡다양한 어업현실에 맞게 TAC 운영체계를 다변화*하고, '한국형 ITQ' 도입방안 마련 검토
 - * 다년제 TAC의 도입(고등어), TAC 어기의 별도 적용(꽃게)
-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자율관리어업 정책설명 및 우수사례 공유·현장 의견수렴 등을 위한 맞춤형 현장교육*, 컨설팅** 추진
 - * (현장교육) 활동이 부진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현장교육·견학 등 실시(15개소)
 - ** (컨설팅) 자율관리어업 정책교육 및 홍보, 우수사례 전파 등 실시(200개소)
- (바다숲 조성) 갯녹음 해소, 연안생태계 복원 및 탄소저감*을 위한 바다숲 조성** 및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민간참여 개방
 - * '09~'23년까지 바다숲 317.2km² 조성으로 연간 10.7만톤 이산화탄소 저감
 - ** 조성면적(누적, km²): ('09~'22) 291.80 → ('23) 317.21 → ('24) 345.7
 - *** 현대자동차(15억원), 효성그룹(5억원), 포스코(7억원) '24년 27억원 예산 반영

- (수산자원증대) 자원회복·관리가 필요한 대상종을 중심으로 산란·서식장*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공급거점 구축

* ('21) 6종, 14개소 → ('22) 9종, 20개소 → ('23) 11종, 23개소 → ('24) 12종, 25개소

- (침단·고도화) 융합기술*을 통한 주요 회유성 부어류 현존량을 추정하고, 바이오로깅 시스템의 적용 확대**로 조사 자료의 정밀도 제고

* 과학어탐, 연속어란채집, 환경DNA분석 기술접목으로 주요 부어류 변동 모니터링

** 내만으로 산란·회유하는 주요 수산자원의 산란기 내 행동 특성 연속 모니터링

- (자원평가 확대) 한국형 생태계 기반 자원평가 모델*을 통해 해역별 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자원평가 대상종 확대('23. 65종 → '24. 70종)

* 단일어종 중심이 아닌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하여 어종·어업·생태계 위험도를 종합 평가

** ('22) 동해권역 → ('23) 남해·제주권역 → ('24) 서해권역 → ('25) 근해 전역

- (조사 인프라 확충) 침단장비를 탑재한 조사선 대체*로 해양생태계 변동에 따른 자원조사 역량 강화 및 CPMP 가입 등 당면 국제현안 적극 대응

* 조사선 건조(누적) : ('19) 3척 → ('22) 준공 4 → ('23) 준공 5 → ('24) 준공 5, 건조 중 2척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회 참석	'24.1월	국정 73-1
	수산자원조사선(탐구2호, 8호) 건조 현장점검	'24.2월	국정 73-1
2/4분기	ITQ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사항 점검 회의 개최	'24.4월	국정 73-1
	'24년 제12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및 국제포럼 개최	'24.5월	국정 41-7
	수산자원조사선 탐구8호 준공	'24.5월	국정 73-1
3/4분기	바다숲 블루카본 민관협력(포스코) 업무협약식	'24.6월	국정 41-7
	TAC 시행계획 수립	'24.7월	국정 73-1
	광역형 수산자원조성 전략 수립	'24.8월	국정 73-1
4/4분기	수산자원평가 대상 70종에 대한 자원평가	'24.11월	국정 73-1
	바다숲 및 산란·서식장 조성 신규조성지 선정위원회 개최	'24.12월	국정 41-7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현장교육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고등어 다년제 TAC 적용 검토 등을 위한 협의회 개최('24.1)
- '24/25어기 TAC 시행 관련 어업인 설명회('24.5)
 - * TAC 확대 및 정착을 위해 현장 의견수렴, 어업인이 참여하는 자원관리 추진
- 수산자원회복 프로그램 전문가 토론회 개최('24.7)
 - * 수산자원회복 대상품종 권고안 및 세부 이행계획 등 논의
- 수산자원 조사·평가·조성·관리 관계기관 심포지엄 개최('24.12)
 - * 정부학계·지자체 등 수산자원 관리기반 고도화, 조성사업 추진방향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운영 실태·관리 등을 위한 현장점검('24.12)
 - * 자율관리육성사업 시행지침 이행여부,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1/4분기	간담회	다년제 TAC 적용을 위한 협의회
	현장방문	수산과학조사선 건조 사업 현장 점검
2/4분기	간담회	'24/25어기 TAC 시행 관련 어업인 설명회
	간담회	수산자원 조사·평가 전문가 간담회
3/4분기	간담회	수산자원 정책과제 리뷰세미나 개최
	간담회	수산자원회복 전문가 토론회 개최
4/4분기	간담회	2024년 수산자원조성사업 심포지엄 개최
	현장방문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현장점검

□ 기대효과

- 바다숲 조성을 통한 연안생태계 복원으로 우리바다 건강성을 회복하고, 탄소흡수원 확충을 통한 탄소 저감 기여
- 어종별 맞춤형 자원조성을 통한 연안해역 생산량 향상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수산자원 조성·관리 내실화로 연안생태환경 및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
- 배타적경제수역 내·외 수산자원의 체계적 조사·분석으로 과학적 수산자원관리 정책 수립 지원 및 대외 협상력 강화
- 생태계 기반 자원평가 확립으로 자원관리정책 효율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수산자원회복(Ⅱ-3-일반재정①)				
① 수산자원회복(농특)(3131)		농특회계	72 (72)	139 (139)
수산자원회복(Ⅱ-3-일반재정⑤)				
① 자율관리어업육성(농특)(3142)		농특회계	81 (81)	79 (79)
수산자원조성(Ⅱ-3-일반재정⑥)				
① 수산자원조성(농특)(3150)		농특회계	776 (850)	694 (713)
■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304)			665	659
■ 수산자원조사선 건조(306)			111	35
어업경영자금(기금)(Ⅱ-4-일반재정⑩)				
① 수산자원조성(농특)(3150)		수발기금	105 (426)	105 (1,333)
■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융자)(304)			105	10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① 연안생태계 건강성 향상 실적	6.6	8.2	6.8	7.19	최근 3년간 건강성 향상률 평균치인 7.19%로 목표치 로 설정	당해연도 건강성 향상률(%)/전년도 건강성 향상률(%) * (건강성향상률) 해역별 종다양성 지수의 평균 * (생물종다양성 산식) $-\sum_{i=1}^S P_i \cdot \ln P_i$ Pi = i번째 종의 개체수/총 개체수	바다숲 조성사업 보고서 (한국수산자원공단)

② 어선어업 구조개선 추진(IV-2-②)

어업정책과 (044-200-5516/5517)

□ 추진배경 (목적)

- 어업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어선감척 사업으로 전환·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 및 어업경쟁력 강화
 - (근해어선) 대형트롤, 기선권현망, 저인망, 안강망 등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단기간내 집중 감척하여 수산자원 보호효과 최대화
 - (연안어선) 어획강도가 높고 타 업종과 분쟁이 심한 업종 위주 감척
 - * 어종별·업종별 어획노력량 대비 연근해어선 세력 9.8% 과다('18.11, 부경대)
-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노후어선, 대형어선을 중심으로 감척을 추진하여 해양수산분야의 탄소중립 실현(국정과제 41-7*)
 - * 해양수산 탄소중립 실현 및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 한-일어업협상 타결 지연,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급감, 업종별 경영여건 악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
 - * 5년간('24~'28) 근해어선 524척, 연안어선 1,500척 감척 추진

- 수산자원 회복 및 연안-근해어업간 분쟁 해소를 위해 어획 강도가 높은 대형 근해어선과 분쟁이 많은 업종 위주의 감척 추진
 - 특히 한-일 어업협정 타결 지연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영향을 받는 업종 우선 감척('24. 1,626억원)
 - * '23년 : 근해어선 79척 및 연안어선 200여척 감척 추진
- 평균 근해어선감척 사업 포기율(24.1%) 등을 고려하여, 이후 근해 자율감척 성과지표 목표 달성을 위하여,
 - 업종별 50%로 예비후보자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선순위 대상자 사업 포기 시 지체없이 사업 진행하도록 개선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4년도 근해어선감척 감척 시행계획 공고	'24.1월	국정 41-7
	'24년도 연근해어선감척 사업집행지침 수립	'24.1월	국정 41-7
	'24년도 근해어업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23.2월	국정 41-7
	'24년 근해어선 자율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	'23.3월	국정 41-7
2/4분기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집행상황 실태점검	'23.5월	국정 41-7
	근해어선 감정평가 관리기관 위탁사업 중간보고	'23.6월	국정 41-7
3/4분기	'24년도 근해어업 실태조사 중간보고	'23.7월	국정 41-7
	근해어선 감척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	'23.9월	국정 41-7
4/4분기	근해어업 실태조사 최종 보고	'23.10월	국정 41-7
	근해어선 감정평가 관리기관 위탁사업 최종보고	'23.12월	국정 41-7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연근해어선 어업자, 소비자 등
- (이해관계자) 어업인 단체, 지자체 등

☐ 기대효과

-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을 통한 어업경쟁력 강화
- 수산자원량에 적합한 어선척수 유지로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감척 지원금 지급(안) 확정, 연근해구조개선법 개정 등 제도개선 관련 어업인·지자체·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워크숍 및 현장방문

구 분		내용	세부일정
1/4분기	회의	구조개선 관련 지자체 설명회	'24.3월
2/4분기	현장방문	감척 대상 어업인 구조개선 워크숍	'24.6월
	회의	감척 지원금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24.6월
4/4분기	회의	구조개선사업 정책발전워크숍 개최	'24.12월

☐ 기대효과

- 어획강도가 높고, 경영여건이 악화된 근해어선 집중감척 지속 확대를 통해,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연근해어선 어업이익 개선

☐ '23년도 미흡부진과제 개선계획 : 해당없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연근해어업 구조조정(Ⅱ-3-일반재정⑦)				
①	연근해어업구조조정(3145)	농특회계	1,341	1,626
			(1,341)	(1,626)
	■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300)		1,341	1,62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근해어선 감척 이행률(%)	114.0	130.1	126.6	85.0	'24년도 근해어선 감척 추진계획 및 과거 자율감척 실적등을 감안하여 근해어선 감척 이행률 목표 설정 - 최근 5년간 어업인 자율감척 포기 비율(24.1%) 등을 고려하여 추세치 반영 * 자율감척 포기 비율(%) : (‘19) 25.0 → (‘20) 35.7 → (‘21) 24.5 → (‘22) 7.4 → (‘23) 28.1	(근해어선 실제 감척수 /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 상 감척 목표)×100	추진실적 자료 (우리부)

③ 어업 안전 보장 및 조업질서 유지 역량 강화(IV-2-③)

지도교섭과 (044-200-5561 / 5563 / 5565 / 5571)

□ 추진배경

- 우리 관할 수역 내에서 수산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한·중, 한·일 간 어업협정의 운영 및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근절 추진
 - 주변국과의 조업 경쟁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예방을 위해 어업관리 역량강화 등 추진
- 연근해 어선의 고질적인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수산자원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어 체계적인 지도·단속 체계 확립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한·중 어업협정) 제21차 어공위(21.11.19)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어업협정의 안정적 운영 및 '24년 어기 한중 어업협상* 대응
 - 어업공동위원회, 지도단속 실무회의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중국정부의 자구노력 등 협력 촉구
- * 1차 국장급 준비회담(9월/중국, 잠정), 2차 준비회담 및 본회담 개최(10월/한국, 잠정)
- (국내 어업질서 확립) 연근해 불법어업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조업감시센터 구축 운영('24.7)
 - * '24.3~7월 / 15억원 /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연근해 조업감시센터(FMC) 구축
 - 지역별·업종별·시기별 테마 단속과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5·10월)·특별단속(수시) 실시
- (소통 강화) 연평어장 등 접경수역에 대한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 지자체 및 어업인 등과의 소통 강화
- (어업관리 역량 강화) 어업관리단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업무 역량 향상 및 국가어업지도선 건조계획 등에 따른 인프라 확충

- 어업관리단 안전 관리를 위해 어업지도선 신규 승선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방안 마련('24.上)
- (한·일 어업협정) 한일 어업협상 재개를 위해 실무협의 재개 등을 위해 일본측과 협의를 추진하고, 업계 의견수렴 추진
- 주일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日 정부동향 모니터링 지속 실시하고, 양국 수산단체(민간) 간 소통(협의회 개최) 지원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어업지도선 신규 승선직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	'24.1월	국정 41-1
	국가어업지도선 건조 공정관리협의회 계획 수립	'24.2월	국정 41-1
	서해5도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24.3월	-
2/4분기	한·중 해양생물자원 전문분과위원회 참석	'24.5월	국정 41-1
	한·중 지도단속 실무회의 개최	'24.6월	국정 41-1
3/4분기	가을어기 연평어장 안전조업 대책 계획 수립	'24.8월	국정 41-1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준비회담 개최	'24.9월	국정 41-1
4/4분기	가을철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실시	'24.10월	국정 41-1
	연근해 조업감시센터 구축	'24.12월	국정 73-1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北 접경수역 거주 어업인 조업 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정책 의견수렴
- 친환경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건조 적기공정 및 조선업계 의견 청취 등을 위한 현장 방문 추진
- 한·중 어업협정 관련 협상 안건 발굴 등을 위한 어업인 관계자 면담 및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 마련

구 분	내용	세부일정
1/4분기	간담회	인천 접경수역 어업인 정책 간담회
	회의	한일어업협상 관련 업계 회의 개최
	현장방문	친환경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 취항식 개최
2/4분기	현장방문	연평어장 꽃게 봄어기 조업실태 현장점검
	현장방문	국가어업지도선 건조 업체 현장 방문
3/4분기	현장방문	한·중 수산종자방류 행사 개최
4/4분기	현장방문	가을어기 연평어장 안전조업 현장 방문
	현장방문	한·중 어업협상 제도 현장 설명회

□ 기대효과

- 우리 수역 내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어업인 안전·조업권을 강화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어업체계 마련
- 한중 외교협력 강화, 합동단속 등을 통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 국내 수산자원 보존을 통한 향후 한·일, 한·중 협상에서 우위 확보

□ '23년도 미흡부진과제 개선계획 : 해당없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어업안전지도강화(Ⅱ-3-일반재정②)				
① 어업안전지도강화(3132)		일반	1,867 (1,867)	915
▪ 어업협정이행(300)			127	64
▪ 어업지도관리(303)			1,311	430
▪ 어업지도선관리및운영(305)			429	42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국내 IUU어업 예방·근절을 위한 육·해상 검색률(%) (가중치 50%)	11.0 (4,210)	11.2 (4,305)	11.4 (4,380)	12.0 (4,600)	최근 3년 실적 증감율(0.2%)보다 높게 설정(0.6%)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표 설정 * 연근해 어선 38,416척 기준('22년) ** 국제수산물구 요구 기준(5%) 보다 상향 설정	(고위험 어선 및 양륙항 육·해상 검색건수 ÷ 전체 연근해 어선 척수)×100	(검색건수) 어업관리단 종합정보시스템 상 등록된 건수 (어선척수) 통계청
② 중국어선 불법 대응건수(건) (가중치 50%)	262	819	1,100	1,250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 입어가능한 중국어선 허가척수('24년 최대 1,250척) 100%를 직접 승선조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전년대비 22% 높게 설정)	우리수역 내 입어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직접 승선조사 건수	한·중 불법조업 공동단속시스템상 중국어선 승선조사 등록된 건수 기준

④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IV-2-④)

어업정책과 (044-200-5518 / 5604)

□ 추진배경 (목적)

- 어업생산량은 '86년 약 172만톤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22년 생산량은 약 96만 톤('86년 대비 55.8% 수준)
 -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어선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어구와 조업방식이 발전하고 있어 업계의 규제 개선 요구는 증가
- 경직된 어구·어법이나 어업현장의 규제를 줄이고, 총허용어획량 등 산출량 중심의 어업관리체제로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 할 필요
 - * 선복량, 어구·어법 등 Input control → TAC(총허용어획량) 등 Output control
- 어가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인한 연안어업 지속가능성 우려, 높은 어선구매 비용은 청년의 어선어업 진출의 진입장벽으로 작용
 - 어선 임차료 지원, 역량강화 교육 제공을 통해 청년어업인을 양성하고 연안어업 활성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지원 세부시행계획 수립	'24.2월	
	연근해어업 선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연구 착수	'24.3월	
	'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 어선 및 청년어업인 모집 공고	'24.3월	
2/4분기	업계 규제개선 요구 청취 및 검토	'24.4월	
	'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24.6월	
	'24년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24.6월	
3/4분기	'24년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 추진	'24.7월	
	'24년 신규청년어업인 대상 어업역량교육 진행	'24.8월	
	연근해어업 선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연구 중간 점검	'24.9월	
4/4분기	'23년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 현장 점검	'24.10월	
	'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 어업활동 현장점검	'24.12월	
	연근해어업 선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연구 결과 보고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수산정책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와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한 후 제도를 개선
- 귀어학교, 어업인 대상 설명회를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청년어업인 워크숍,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어선청년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구 분		내용	세부일정
1/4분기	워크숍	청년어업인 워크숍 개최	'24.1월
	현장방문	수산정책 현장설명회 청취	'24.3월
2/4분기	설명회	귀어학교, 어업인 대상 사업 설명회 추진	'24.4월
3/4분기	협의회	시험사업 참여 관련 지자체 및 단체 협의회	
4/4분기	협의회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24.12월

□ 기대효과

- 효율성을 낮추는 조업방식을 개선하는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을 통해 어업의 경쟁력과 생산 효율성 제고
- 어선어업 신규청년인력 유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생산체계 구축 및 어촌소멸 대응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수산자원조성(Ⅱ-3-일반재정⑥)				
① 수산자원조성(농특)(3150)		농특회계	40	19
			(850)	(713)
	■ 지속가능한어업생산체계구축(343)		40	19
연근해어업구조조정(Ⅱ-3-일반재정⑦)				
① 연근해어업구조조정(3145)		농특회계	5	11
			(1,369)	(1,661)
	■ 어선청년임대(303)		5	1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①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 대상 수(개) (가중치 50%)	신규	2		2	'23년도 실적 시범사업 참여 대상이 2건인 것을 감안하여 '24년도 시범사업 참여 대상 확대를 목표로 설정	당해연도 사업 참여단체 수 측정	'24년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실시계획
② 어선청년임대사업 청년어업인 지원 건 수(건) (가중치 50%)	-	6	12	25	청년어업인 1인당 지원가능 금액 및 '24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목표 설정	청년어업인 지원 건 수 측정	'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 세부사업계획서

⑤ 지속 가능한 국제 수산물 공급 여건 조성(Ⅳ-2-⑤)

원양산업과 (044-200-5630 / 5361 / 5362)

□ 추진배경 (목적)

- (생산·소비) 전세계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자원감소, 조업 규제 강화 등으로 원양어업을 비롯한 포획어업 생산량은 정체

* (포획) ('10) 9,110만 톤→ ('20) 9,030만 / (양식) ('10) 7,150만 톤→ ('20) 8,750만

- (조업여건) 원양어장 전반의 자원감소에 따른 연안국 입어료 상승*, 투자·ODA-쿼터 간 연동 또는 현지 합작** 정책 등으로 여건 악화

* (키리바시 입어료 추이) : ('10) 333만 불→ ('15) 2,313만→ ('20) 2,995만

** 합작 생산량(만톤) : ('17) 35→ ('18) 38→ ('19) 37→ ('20) 33→ ('21) 30→ ('22) 35

- (국제규범) 국제사회에서 IUU 어업* 감시·근절, 조업 안전기준** 및 선원인권 강화*** 등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 과거 美(2회, '13.1월/'19.9월), EU(1회, '13.11월)에서 한국을 예비IUU국가 지정·해제

** (케이프타운협정) 24m 이상 공해조업어선 대상 선체 안전성, 구명설비 등 요건 규정

*** 美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2등급 유지('23.6.), NGO의 원양 외국인 인권보고서 발표('23.5.)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원양어선 안전관리 강화 >

- (관리·감독 강화) 해양사고 주요 발생 시기 원양어선 안전관리 강화 독려('24.2.) 및 안전 점검 이행 여부 관리·감독(연 2회)

- (어선 현대화) 국제 기준을 반영한 선형으로 안전펀드*(75억원) 신조 지원 및 선체 개조·수리 어선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연중)

* 안전펀드 지원근거 구체화를 위한 마련에 따른 「원양산업발전법」 하위법령 개정('24.12.)

** (공급규모) 2,572억 / (지원금리) CTA 대비 또는 안전 관련 선박 수리·개조 시 고정 2%

- (CTA 비준) IMO에서 어선의 국제적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케이프타운 협정*(CTA) 가입을 위한 국내 비준 절차 이행(~'24.12.)

* 적용 대상, 발효 기준 등을 명시한 총칙과 구조·설비, 복원성, 구명설비, 무선통신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한 부속서로 구성

< 안정적인 어장 조성 >

- (국제협력 강화) 對 아프리카 수산 협력을 위한 수요 발굴('24.2.) 및 업무협약 추진(~'24.7.)으로 해외수산물 공급망 다변화 여건 조성
- (자원확보) 국내 소비가 많은 품목(명태·오징어·대구)의 자원 확보를 위한 제33차 한-러 어업위원회 개최('24.6.) 및 입어 지원
- (자원조사) 안정적인 지역수산기구 쿼터 확보를 위한 과학조사 이행 및 CCAMLR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해역 입어 추천('24.下)을 통한 업계 지원

< 국제규범 대응을 통한 경쟁력 강화 >

- (인권개선) 원양 외국인 선원 인권 보호 및 감시체계 개선을 위해 선사·시민단체·선원 등과 소통하여 원양어선 인권개선 방안* 마련('24.上)
- * 관리방식 개선, 정부 주도 피해자 식별·감시체계 구축, 이행 모니터링 강화 등
- (전자모니터링 도입) EM* 시범사업('21~'23)을 통해 확보된 조업 영상 DB(64TB)을 활용, AI 기반 EM 프로그램 개발 추진('24.12.)
- * 전자모니터링(Electronic Monitoring, EM): 조업과정을 녹화, 해당 영상 분석을 통해 어획량 및 지역수산기구 등의 보존조치 이행 여부 확인으로 IUU 방지 가능
- (IUU어업 근절) 조업감시센터(FMC) 상시운영 및 원양어선 항만국 검색 등 감시·감독·관리(MCS) 체계 강화 및 관련 제도개선*·보완('24.12.)
- *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추진
- (국제인증) 국내 원양 선사의 MSC* 인증 지지 서한 발송('24.1.), 어획물 입고 현황 점검('24.3.) 등을 통한 국제 제품경쟁력 확보 지원
- *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세계식량기구(FAO)와 지속가능성 표준을 위한 국제협회(ISEAL)에서 정한 모범지침을 충족한 어획활동에 발급하는 유일한 인증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원양어선 MSC인증심사 지원을 위한 인증 지지서한 기업발송	'24.1월	국정 73-2
	원양어선 안전관리 합동점검 계획 수립	'24.3월	
	원양 어획물 입고 현장 방문	'24.3월	국정 73-2
2/4분기	원양어선 조업감시 현장 방문	'24.4월	국정 73-2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 공고	'24.5월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방안 마련	'24.6월	
3/4분기	원양어업 통계조사 공표('23년말 기준)	'24.8월	
	(수산식품산업 인증활성화) 원양어선 MSC인증 취득	'24.8월	국정 73-2
	운반선 감시·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24.9월	
4/4분기	원양어선 안전관리 현황 점검	'24.11월	
	「원양산업발전법」 하위법령 개정	'24.12월	
	케이프타운 협정 국내 비준 절차 이행 완료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원양어선 안전관리 강화 >

- (어선 현대화) 사업희망자 대상 사업이해도 증진 및 원활한 사업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 설명회 개최('24.5.)
- (CTA 비준) 원양어선 안전성 강화에 따른 업계 영향 최소화 및 CTA 효율적 이행방안 등 논의를 위한 업계 간담회 추진('24.10.)

< 안정적인 어장 조성 >

- (국제협력 강화) 한-파나마 간 운반선 활용을 위한 업무 협의('24.2.), 한-케냐 수산부 차관 수산협력 관련 면담('24.3.)
- (자원확보) 한-러 어업위 대비 조업선사 간담회('24.3.), 러 수역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선사 설명회('24.8.), 차기 추진 방향 논의 선사 간담회('24.12.)
- (자원조사) 해외어장 개척을 위한 선사업계 간담회('24.2.), 전문가 자문회의('24.2.), CCAMLR 입어 추천 협의회('24.下)

< 국제규범 대응을 통한 경쟁력 강화 >

- (인권개선)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인권문제 제기 당사자(미국, 시민단체) 대상 인권개선 방안 이행 현장방문('24.3.) 및 간담회('24.1./'24.3.)

- (전자모니터링 도입) AI 활용 한국형 EM 시스템 개발과 EM 도입에 따른 예상 문제점 파악 등을 위한 업계 간담회 추진(~'24.3분기)
- (IUU 어업 근절) 유관기관 및 원양업계 참여 간담회('24.下) 및 국제옵서버 발전방향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2회) 개최
- (국제인증) MSC인증 유지 및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조업 현황 점검('24.上) 및 인증 지원방안 등 논의를 위한 민·관 협의회('24.12)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1/4분기	간담회	외국인 원양어선원 인권개선 관련 NGO 간담회	'24. 1월
	간담회	한-러 어업위원회 개최 대비 선사 간담회	'24. 3월
2/4분기	설명회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 설명회	'24. 5월
	회의	상반기 국제옵서버 발전 협의회	'24. 6월
3/4분기	설명회	러시아 수역 내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선사 설명회	'24. 8월
	간담회	원양어선 전자모니터링(EM)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	'24. 9월
4/4분기	간담회	케이프타운 발효 대비 원양업계 간담회	'24.10월
	회의	(수산물산업 인증활성화)원양어선 MSC인증심사 민관협의회	'24.12월

□ 기대효과

- 어장 보유국과의 수산협력 강화, 신규 어장개발, 협정어장에 대한 안정적인 조업 지원 등을 통한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 기반 조성
- 어선 안전관리 및 어선원 인권 개선방안 이행을 통한 조업 역량 강화
-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조업 질서 유지 및 친환경 조업을 통한 원양어업 지속가능성 확보

□ '23년도 미흡부진과제 개선계획

- 성과지표 개선·보완 및 정책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민간·전문가·NGO 등)와의 정책 소통 강화
- (성과지표) 과제와 성과지표의 부합성 제고를 위해 과제명 변경, 과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신규로 설정

- (정책효과) 정책 효과성 제고 및 확산을 위해 민간·전문가와의 간담회뿐만 아니라 NGO, 대사관 등과의 소통 확대로 정책 실현 가능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원양어업기반구축(기금)(I -4- 재정(2))				
① 원양어업기반구축(기금)(3541)		수발기금	90 (90)	75 (75)
▪ 원양어선 안전관리(301)			90	75
원양어업기반구축(농특)(I -4- 재정(1))				
① 원양어업기반구축(3542)		농특회계	72 (387)	82 (535)
▪ 원양어업활성화(300)			42	51
▪ 연안국과의 협력(ODA)(302)			20	16
▪ 원양어선감독관리체계구축(303)			10	1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IUU어업 예방을 위한 원양어선 점검 실적(건) (가중치 60%)	-	-	-	90 (신규)	국내 입항 원양어선 대상 현장점검(검색) 건수 + 국외 조업 중인 국적 원양어선 대상 원격 점검(검색) 건수 * '23년 기준 조업 중인 원양어선 수 192척 대비 47% ** 국제수산물기구 항만국검색 요구 수준 5%	해양수산부 내부보고자료	12월
② 원양 정책 서비스 만족도(점) (가중치 40%)	-	-	-	6.5 (신규)	신규 설정 성과지표이며, 기존에 원양 정책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하되, 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만점(10점) 대비 중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표 설정	용역업체 (설문조사기관) 조사 결과 보고 * 모집단은 정책 이용 고객 200명 내외로 함	12월

(1) 주요 내용

□ 스마트·친환경 양식생산 확대

- (스마트양식산업 전환) 연관산업 집적화를 위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스마트양식 시스템 보급을 통해 양식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
- (핵심기술 R&D) 유전체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육종 기술과 양식장 관리 디지털화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성 및 친환경성을 강화
- (연관산업 지원 강화) 종자·사료·기자재 등 연관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전략품목별 육성을 통해 양식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추진

□ 지속가능한 양식생산기반 조성

- (신규인력 유입) 어촌사회 신규 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귀어인, 청년 등 신규인력의 양식업 창업을 지원하는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
*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장을 임차하고, 이를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제도
- (건강한 어장)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감소, 청정어장 재생사업 확대(신규 2개소), 수산생물 질병 관리 강화 등
- (기후 대응) 고·저수온 등 양식재해 피해 예방, 양식장 친환경 설비(히트펌프, 인버터) 보급 등으로 경영안정화 및 저탄소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양식 생산량(천톤)	2,397	2,273	2,269	2,320	어업인 감소, 재해 발생 등으로 매년 양식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나, 전년 대비 2.3% 상향한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함	KMI 관측 자료 또는 통계청 통계	KMI 관측 자료 또는 통계청 통계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양식산업의 양적인 성장 한계에 따라 첨단기술 접목, 생산원가 절감, 환경·위생·안전관리 강화 등 양식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필요

* 양식생산량(만톤) : ('18) 224 → ('19) 241 → ('20) 230 → ('21) 239 → ('22) 227

- (경험 의존) 육안관측·경험에 의존한 생산·연구로 기술·설비가 표준화되지 않고 분절되어 기술 확산이 느리고 연관산업 미발달
- (재해 취약)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급변으로 해상양식은 영양염류 부족, 고·저수온, 태풍 등 자연재해에 상시 노출

* 양식 재해 피해현황(억원) : ('18) 713 → ('19) 82 → ('20) 84 → ('21) 408 → ('22) 205

- (안전 우려) 금지약품 사용,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비브리오 패혈증, 노로바이러스 등으로 양식수산물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 상존
- (환경 훼손) 폐쇄형 연안에서의 밀집·밀식으로 어장환경 수용력을 초과, 생사료 및 폐기자재 퇴적 등 오염부하 심화

(4) 기타

- 어업생산 동향 등 통계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어업생산동향(www.kosis.kr)
- KMI 수산물관측(www.foc.re.kr)

① 첨단·친환경 양식산업 육성(IV-3-①)

양식산업과 (044-200-5631/ 5635/ 5637/ 5683)

□ 추진배경 (목적)

- 양식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해 경험·노동력 중심의 양식업을 기술 중심의 스마트·디지털화 및 규모화 등 체질 개선 필요
-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첨단 양식기술 보급 등 친환경 양식 생산기반 확대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양식업의 스마트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양식산업의 집적화, 규모화를 추진하고, 유통·가공 등 연관산업 직접화를 통한 양식업 경쟁력 제고
- 첨단 ICT 기술을 융복합하여 내수면 양식시설의 스마트화 지원을 통해 내수면 양식산업의 생산성 향상 추진
- 민간 및 지자체에 바이오플라, 순환여과식 수처리 설비 등을 지원하여 스마트·친환경 양식기술 보급 및 확산 추진

② 주요품종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양식산업 체질 전환 가속화

- 고부가 양식품목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및 현재 양식업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스마트양식 활성화 방안 등 신규 연구 과제 추진
- 개체굴 등 부가가치가 높고 보다 친환경적인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다수의 어가가 함께 사용하는 다목적생산시설 지원

③ 친환경적인 양식산업을 위한 지원 강화

-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등을 통해 양식수산물의 친환경적 생산을 지원하고, 공익적 가치 및 품질제고를 통해 고부가가치화 추진

④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디지털육종 원천기술 개발

- 수온내성 등 형질데이터를 수집하고, 예측모델 최적화를 통해 우수어미를 선발·확보하여 우량종자를 생산하는 원천기술 확립

⑤ 친환경 양식 기술 교육과 창업을 연계한 원스톱 지원 체계 건립

- 내수면 창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양식 기술 교육 및 창업 지원 추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준공	'24.3월	국정 73-1
	친환경·첨단 양식 기술이전 교육 착수	'24.3월	국정 73-1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사업대상자 선정	'24.3월	국정 73-5
2/4분기	유수식 디지털양식 핵심기술개발 협약 체결	'24.4월	국정 73-1
	우량종자 생산 신기술(디지털육종) 개발 업무 협약	'24.4월	국정 73-1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기본계획 승인	'24.6월	국정 73-1
3/4분기	친환경 수산물 인증기관 협의회 개최	'24.8월	국정 73-3
	첨단·친환경 양식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 점검	'24.9월	국정 73-1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기본계획 승인	'24.9월	국정 73-1
4/4분기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이행점검	'23.11월	국정 73-5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추진현황 점검	'24.12월	국정 73-1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 개선	'24.12월	국정 73-3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친환경·스마트양식을 확산하고 양식업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지원사업 홍보, 창업 우수사례 및 첨단양식 기술동향 등 공유

* 지자체 담당자, 귀어인·청년 등 양식창업 희망자, 스마트양식 전문가 등

-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및 내수면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우수사례 공유 및 어도 관련 학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종자의 품목별 표준지표(성장·질병 등) 개발을 통한 품질표준화 체계 확립을 위해 생산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의견 청취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1/4분기	세미나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홍보 및 친환경·스마트 양식 기술동향 등 공유	'24.2월
	협의회	내수면 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협의회	'24.3월
2/4분기	협의회	내수면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시·도 협의회	'24.4월
	간담회	내수면가두리 피해어업인 대상 보상금 신청 안내 등 간담회	'24.5월
3/4분기	간담회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 관련 어업인 간담회	'24.7월
	협의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지자체 협의회	'24.9월
4/4분기	간담회	수산종자 품질표준 지표 개발 관련 어업인 간담회	'24.10월
	토론회	내수면 어도관리 발전 토론회 개최	'24.11월

□ 기대효과

- 전통 방식의 양식업을 첨단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IT 등이 접목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 민간 및 지자체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인력난, 에너지 절감 등 수산업이 처한 현안 대응 등
- 친환경 인증을 통해 환경오염 저감, 친환경·저탄소 양식 등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으로 전환 기대
- 수온내성 등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우량종자 생산을 통한 연관산업(양식·가공·유통 등) 부가가치 창출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어업인소득안정지원(Ⅱ-4-R&D①)				
① 수산연구개발(3433)		농특회계	119.61	107
▪ 수산종자산업 디지털혁신 기술개발(R&D)(325)			49.61	37
▪ 유수식 디지털양식 혁신기술개발(R&D)(326)			70	70
친환경양식육성(Ⅱ-3-일반재정③)				
① 친환경양식육성(3140)		농특회계	548	369
▪ 친환경양식어업육성(301)			548	369
내수면어업(Ⅱ-3-일반재정④)				
① 내수면어업(3141)		농특회계	141	67
▪ 내수면자원조성(303)			141	67
수산공익직불제(Ⅱ-4 일반재정⑨)				
① 어가소득보전(3460)		농특회계	933	1,062
▪ 수산공익직불제(310)			933	1,06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친환경 수산물 인증건수(건) (가중치 60%)	신규	신규	214	160	친환경 수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최근 3년간 평균 친환경 수산물 인증(유기수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활성처리제비사용) 건수(133건)보다 20% 상향한 160건으로 매우 도전적인 목표 설정 * (21) 50건 → (22) 132 → (23) 214건	유기수산물 인증건수+무항생제 수산물 인증건수+활성처 리제비사용 인증 * 건수는 품목 당 1건 기준으로 산출	인증정보시스템 친환경 수산물 인증건수 산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② 친환경·첨단양식 기술이전 교육자(수) (가중치 40%)	신규	신규	235	222	어촌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친환경·첨단양식 등 양식분야 기술혁신 등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친환경·첨단 양식 기술이전 교육자수 목표 신규 설정 (최근 3년간 평균값의 5%를 상향하여 목표 설정) * (21) 188건 → (22) 215건 → (23) 235건	친환경양식 창업지원(양식기술 이전교육) 건수 집계	창업지원 대상 조사 결과 (한국어촌어항공단)

② 고부가 양식품목 전략적 개발 육성 및 연관산업의 동반성장(IV-3-②)

양식산업과 (044-200-5631 / 5633/ 5683)

□ 추진배경 (목적)

- 양식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에 제한된 수요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 창출* 및 외연 확장에 한계

* 국내 수산물 중 양식생산량 비중은 62% 이상이지만, 생산금액 비중으로는 41%에 불과

** '23년 양식생산량 품종별 비율 : 해조류 76.4%, 패류 18.4%, 어류 4.8%

- 양식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품목별 맞춤 전략 수립과 종자·사료·기자재·부산물 처리 등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 필수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양식수산물 핵심품목* 육성지원

- 핵심 품목인 굴의 수출 확대와 위생적인 생굴 공급을 위해 굴까기 작업장(박신장 등) 시설지원으로 굴 양식산업의 자동화·스마트화 도모

* 양식수산물 핵심품목(5종) : 넙치, 굴, 전복, 김, 새우

② 수산종자 및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 종자산업 실태조사, 종자 생산정보(명칭 등) 표시 의무화 및 종자관측 등을 통해 종자 품질·유통관리 정착·체계화 추진
- 전복종자 사료원료 건조시설 지원, 종자 생산업체 대상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종자 생산·공급 기반조성 추진

③ 양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배합사료 공급기반 구축 및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추진

-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배합사료) 직불제 사업대상자 선정 및 이행점검, 저어분·고효율 배합사료 양식현장 적용시험 추진
- 안정적인 배합사료 공급을 위한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건립 및 양어사료 전문 생산시설 추진현황 현장점검

- 안정적인 배합사료 공급을 위한 양어사료 전문 생산시설 추진
현황 현장점검 및 새우 전용 배합사료 공장건립 추진

④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현장 의견과 신기술 개발 현황을 반영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기 위한 「수산부산물법」 하위법령 개정
-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재활용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수산부산물 정책 홍보 실시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4년 배합사료 판정심의위원회 개최	'24.1월	국정 73-1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대상자 선정	'24.3월	국정 73-5
	2024년 수산부산물 시행계획 수립	'24.3월	
2/4분기	저어분·고효율 배합사료 양식현장 적용시험 착수	'24.5월	국정 73-1
	새우 전용 배합사료 공장건립 추진상황 점검	'24.6월	국정 73-1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24.6월	
3/4분기	수산종자산업 실태조사 결과 공표	'24.9월	
	배합사료 직불제 추진현황 및 이행점검	'24.9월	국정 73-5
4/4분기	종자·관상어 사업 추진상황 점검	'24.10월	
	저어분·고효율 배합사료 양식현장 적용시험 결과보고	'24.12월	국정 73-1
	양어사료 전문 생산시설 준공	'24.12월	국정 73-1
	수산부산물 전처리시설 보급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제도 정보를 공유하고, 수산종자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논의하는 등 업무기관 간 협업·소통 추진
- 노후·재래방식으로 열악·영세한 생산업체에 대한 생산·경영개선
서비스 제공 등 종자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현장 방문 추진
- 해외 수산부산물 재활용 선진사례 공유와 국내 재활용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수산부산물 국제 포럼 개최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1/4분기	국제 회의	2024년 수산부산물 국제 포럼 개최	'24.2월
	현장방문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건립 현장방문	'24.2월
2/4분기	간담회	배합사료 활성화를 위한 어업인 간담회	'24.4월
	현장방문	수산종자 생산업체 컨설팅 등 정책현장 방문	'24.6월
3/4분기	간담회	양어용 배합사료 제조업체 간담회	'24.7월
	간담회	배합사료 현장적용시험 관련 협의회 개최	'24.8월
4/4분기	간담회	수산종자산업 업무기관 간 협업·소통 강화 연찬회	'24.11월
	간담회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워크숍	'24.11월

□ 기대효과

-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보급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통한 新산업 육성
- 병에 강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종자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 양식 산업 경쟁력 제고
- 종자의 품질·유통관리를 정착하고, 종자생산 기반조성 등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연관산업 발전
- 배합사료 사용 확대를 통한 친환경 생산여건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업 조성
-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수온내성·내병성이 강한 신품종 개발을 통해 양식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체계에 기여

□ '23년도 미흡부진과제 개선계획

○ 성과지표 개선·보완 및 정책소통·확산방안 발굴 등 정책추진 노력 개선방안 제고

- (성과지표)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성과 지표를 배합사료 사용 어가수에서 직불제 참여어가 비중으로 변경

* 3년('21~'23년)간 직불제 참여어가 비율의 평균에서 1%p 상향한 15.6%를 목표로 설정

- (정책추진) 수산부산물 해외 선진사례 공유를 위한 국제 포럼* 개최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일본의 수산부산물 사례 공유 및 국내 수산부산물 재활용 업체 및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발전방향 논의

** 처리업 허가요건 완화, 유해화학물질 조건부 허용, 재활용 유형 확대 등을 위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24.6)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친환경양식육성(Ⅱ-3-일반재정③)				
①	친환경양식육성(3140)	농특회계	301.64	283.28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300)		79	71
	▪ 수산종자산업육성(305)		16	37
	▪ 양식수산물전략품목육성(350)		114.19	111.79
	▪ 관상어산업육성(351)		70	41
	▪ 수산부산물자원순환기반구축(355)		22.45	22.49
수산공익직불제(Ⅱ-4-일반재정⑨)				
①	어가소득보전(3460)	농특회계	933	1,062
	▪ 수산공익직불제(310)		933	1,06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① 양식 전략품목 생산금액(백억원) (가중치 60%)	신규	신규	225	230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을 통한 양식생산량 확대에 글로벌 수산강국 도약을 도모하고자 전략품목* 양식생산금액을 목표로 설정 * 핵심품목(5종) : 넙치류, 새우류, 김류, 전복류, 굴류 - 최근 3개년('21~'23) 생산금액 평균치(228백억)를 기준으로 약 2% 상향한 목표 설정 * 생산금액 : ('21)226 → ('22)232 → ('23)225	전략품목(핵심품 목) 양식생산금액	통계청 (전략품목 생산금액, 어류양식동향조사)
② 배합사료 직불제 참여율(%) (가중치 40%)	신규	신규	17	15.6	고품질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최근 3년간('21~'23) 전체 지원대상 어가 대비 배합사료 직불제 참여어가 비율 평균(14.6%) 대비 1%p 상향한 목표 설정 * 지원현황 ('21) 13.0% → ('22) 14.3% → ('23) 17.0%	('24년도 배합사료 직불제 참여어가수/ 지원대상 어가수)×100	내부자료 (지자체별 배합사료 직불제 신청현황 보고) 통계청 (어류양식동향조사)

③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경쟁력 확충(IV-3-③)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1 / 5614 / 5392)

□ 추진배경 (목적)

- 수산물 소비는 확대되고 있으나 수산자원은 감소추세에 있어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서 양식산업의 중요성이 부각
- 최근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 대내·외 여건에 대응한 안정적인 양식산업 경영 여건 마련 필요
 - 신규인력이 양식업 창업을 희망하더라도 막대한 초기 자본*, 양식장 운영 경험 미비 등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한계
 - * 양식업권(면허) 매매 추정 가격: 어류 3~4억원, 패류 3~5억원, 해조류 3~5억원
 - 고수온, 적조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장 피해 발생, 전기요금 인상* 등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 필요
 - * 양식장 전기요금(원/kwh): ('21.12) 34.2 → ('22.12) 46.5 → ('23.1) 50.3 (**21년 말 대비 47%↑**)
 - ** '23년 어업재해 피해 현황(501억원): 고수온 438억원, 저수온 48억원, 빈산소 15억원
 - 양식수산물 수급 조절, 소비 활성화 등 양식품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물 자조금 확대 운영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개방성 강화) 귀어인, 청년 등 신규인력의 양식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
 - *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장을 임차하고, 이를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제도
- (양식장 정보 통합) 면허·허가권자인 지자체(시·군·구)별로 관리*하던 양식장 정보를 전산화하여 종합관리하기 위한 통합 정보체계 구축
 - * 수기, 전자적(엑셀, 서울시스템 등)
- (재해 대응)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점검, 고수온·적조 대응 장비(액화산소공급기, 산소발생기 등) 지원 및 재해 대응 교육 등

- (탄소 저감) 양식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 개발(12월) 및 저탄소 인증제 인증지침 제정(12월)
- (수급정보 제공) 주요 양식수산물의 입식·사육·생산량, 산지·도매가격 등 수급동향을 분석·제공*하여 양식업 경영 안정성 제고
 - * 전문가와 어업인이 참여하는 품목별 동향점검 회의 개최를 통해 관련 정보 공유
- (자조금 내실화) 자조금 지원 확대, 의무자조금 전환 지원, 단체 역량 강화 및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
- (어촌활력) 어촌의 신규인력 유입을 통한 생산력 제고 등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 마련
- (소비 촉진) 日 오염수 방류 등 소비 위축 우려에 대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24 수산양식박람회' 개최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어촌계 양식장 개방성 확대를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24.1월	
	어촌·연안 전문가 자문단 구성	'24.1월	국정 734 민생
	양식장 임대 사업계획 수립	'24.2월	국정 73-4
2/4분기	수산재해 대응 교육 실시	'24.5월	
	양식장 임대사업 대상자 선정	'24.5월	
	의무자조금 전환 지원	'24.6월	
3/4분기	자연재난 복구기준 산정 기준 개정	'24.7월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 수립	'24.8월	국정 734 민생
	자조금단체 대상 교육 실시	'24.9월	
4/4분기	2024년 양식박람회 개최	'24.11월	국정 73-4
	양식장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시연	'24.12월	
	저탄소 인증제 인증지침 제정	'24.12월	국정 41-7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현장점검) 이상수온·적조 등 재해 대응 현장을 방문하여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양식어가 의견 수렴(저수온 1월, 고수온 7~9월)
- (간담회) 어촌·연안 활력제고 방안 수립 등을 위한 귀어귀촌인, 어촌주민, 관계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의견 수렴(3월)
- (협의회) 주요 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자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 의견 수렴 및 산지 수급 동향 점검 실시(6월)
- (협의회) 지자체 담당자, 해경, 수협 등 재해 대응 주체 간 협력 강화 및 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의회 개최(11월)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1/4분기	현장방문	저수온 대응 현장점검(1.10, 2.6)	'24.1월
	간담회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24.3월
2/4분기	간담회	주요 산지 수급 동향 점검	'24.6월
3/4분기	현장방문	고수온 대응 현장점검	'24.8월
4/4분기	간담회	어업재해 대응 및 면허 이용에 관한 업무 협의회	'24.11월
	현장방문	양식장 임대사업 설명회 개최(국정 73-4)	'24.10월

□ 기대효과

- 임대형 양식장 시행 등 청년·귀어인의 양식업 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여 어촌경제 활성화
- 기후변화로 지속·반복되는 양식재해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신속한 생산복구 지원 등을 통한 양식수급 적정량 유지 지원
- 자조금단체 기능 강화를 통해 자율적 수급 조절, 품질개선 등 양식생산자단체 스스로 경쟁력 강화 유도

☐ '23년도 미흡부진과제 개선계획: 해당없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억원)

		회계구분	'23	'24
재해대책				
① 재해대책(3443)	농특회계	80	500	
▪ 양식등재해대책비(302)		80	500	
친환경양식육성				
① 친환경양식육성(에특(3140))	에특회계	222	219	
▪ 친환경에너지보급및용수관리(410)		222	219	
수산관측				
① 수산물가격안정(3043)	농특회계	35	47	
▪ 수산관측(300)		35	47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① 수산물가격안정(3043)	농특회계	3	38	
▪ 양식장관리실태조사(301)		3	38	
수산물가격안정				
① 수산물가격안정(3065)	수산물발전기금	32	41	
▪ 수산물자조금지원(301)		32	41	
양식장 임대				
① 귀어귀촌지원(3347)	농특회계	-	4	
▪ 양식장임대(367)		-	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양식업의 지속가능성 증대 (가중치: 70%)	신규	신규	신규	100	- 양식업 신규인력 유입을 위한 임대형 양식장 최초 도입·운영 - 양식장 면허정보 디지털 통합관리 체계 구축	A*50 + B*50 A: 참여인력 10명 B: 양식장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자료
② 지속가능한 양식수산물 생산체계 마련 (가중치: 30%)	신규	신규	신규	100	- 의무자조금 조기 전환 지원(8개 단체 → 9개) - 재해복구 계획 확정시기 단축	A*50 + B*50 A: 의무자조금 1개 단체 전환 목표 달성 B: 복구계획 확정시기 단축(20 → 15일)	행정자료

④ 깨끗하고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기반 조성(IV-3-④)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25 / 5623 / 5620)

□ 추진배경 (목적)

- **어장환경** 영향에 따른 양식수산물 생산성 저하, 양식장 피해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양식어장 환경관리** 필요
-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과 해외 질병 유입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양식생물 생산을 위한 **수산생물질병 관리** 필요
- 건강한 양식산업을 위한 질병예방(백신)·진단(진단키트)·치료(의약품)를 위한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개발 제조·생산·유통·사용단계 안전관리

⇒ **어장환경 개선과 수산생물의 질병 및 의약품 사용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기반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어장환경 개선**) 반폐쇄성 만(灣) 단위 내 어장들을 묶어 동시에 정화하는 **청정어장 재생사업 확대**(계속 6개 + 신규 2개, 50억 원)
 - 어장환경 악화로 인해 생태적 자정능력을 상실한 어장의 특별 관리를 위해 **어장관리해역 제도 활성화** 추진
- (**어장관리 강화**) 어장환경평가, 양식장 관리실태를 토대로 양식업 재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면허 심사·평가제**' 도입 기반마련
 - 어업인·지자체 대상 홍보 실시(설명회 등) 및 효율적인 평가 제도 운영을 위한 평가 대상에 대한 DB 구축 등
- (**질병관리**) 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양식시설·낚시터 상시 예찰 확대* 및 양서류 전염병 관리 등 체계적인 질병 관리

* 상시예찰율 : ('23) 3,596개소(25%) → ('24) 3,736개소(26%)

- (청정국)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전염병 5종*에 대한 청정국 지위 유지 및 1종(새우 노랑머리병, YHD) 추가 획득 추진
- * 전염성연어빈혈증(ISA), 자일로닥틸루스증(GS),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AbHV),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IHHN),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SAV)
- (전문가 양성) 수산생물 질병관리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면허시험 관리와 수산질병관리사 자질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 * (일정)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시험 시행(24.2) 및 면허증 발급(24.4) / 수산질병관리사 교육(연 2회)
- (新통상규범 대응) 수출국 현지실사 및 해외생산시설 등록 제도 시행(24.6)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등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4.2~3) → 규제 및 법제처 심사(24.2~5) → 시행(24.6)
- (시설등록) 국제적 질병관리기준 이행을 위한 수출수산물생산시설 등록제도 시범사업 추진* 및 해외시설 등록(24.6)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
- * 생산시설의 무병보증을 위해서 최소 2년연속 표적예찰(WOAH, 수산동물위생규약 제1.4.13조) 필요
- ** 수산생물질병 방역, 수입위험분석 및 등록시설 현장점검 전담 전문인력 확충(14명)
- (국제협력) 세계무역기구(WTO) SPS 위원회*,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수산동물 위생검역 규약 및 청정국 지위 논의 대응(24.5)
- * 한.인도 양국 상존 새우 질병에 대한 검역관련 특정무역현안 대응 등(인도측 제기, '23년 3회)
- (동물용의약품) 약사(藥事)감시, 안전사용기준 설정 확대, 양식장 지도·점검 등 제조·유통·인허가·사용단계에 대한 관리, 제도보완 개선 지속
- (감시·점검)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한 약사감시*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인식고취를 위한 양식장 지도·점검
- * 지도·단속을 통한 제조·유통·사용 단계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 처방대상 의약품 전면확대 시행(24.7.)과 전자처방시스템 사용을 제고, 기록관리 지도·점검으로 약품사용이력관리
- (약품정보 제공·관리) 의약품 사용자에게 안전사용기준 연구·확대, 약품 정보제공, 처방기록관리(전자처방시스템)로 수산질병에 대한 효과적 대응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수산물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시행	'24.2월	
	수산물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 지도·점검 계획 수립	'24.2월	국정 73-3
	청정어장 재생사업 신규 2개소 선정	'24.3월	
2/4분기	수산물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확대 시행	'23.4월	국정 73-3
	수산물생물질병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24.6월	
	양식장 면허 심사·평가제 권역별 설명회 추진	'24.6월	
3/4분기	수산물질병관리사 대상 수산물 의약품 안전사용기준 교육 시행	'23.7월	국정 73-3
	수출수산물생물질병관리기준 고시 제정	'24.7월	
	청정어장 재생사업 현장 점검	'24.9월	
4/4분기	수산물동물용의약품 관련 업계 간담회	'23.11월	국정 73-3
	수산물생물전염병 1종 청정국 지위 추가 획득	'24.12월	
	양식장 면허 심사·평가제 세부기준 마련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어장환경개선) 어장환경 개선 정책을 지자체·관계기관과 공유하여 정책 효과를 높이고 신규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의견수렴
- (전문가 양성) 수산물 생물질병관리 전문인력 육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수산물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정비를 위한 학계 등 의견수렴
- (수출지원) 수출수산물생산시설 등록하여 생물질병관리기준 충족 시 수출검역 간소화 등 제도 시행(24.6)에 대한 관련 업계 홍보 및 현장 소통
-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기술지원)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소 현장점검과 영세제약 업체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과 현장소통

구 분		내용	세부일정
1/4분기	회의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정책설명회 및 협의	'24.1월
2/4분기	간담회	수산물질병관리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24.6월
3/4분기	현장방문	수출수산물생산시설 등록제도 시행 관련 설명회	'24.7월
	현장방문	수산의약품 제조업체 현장 점검	'23.8월
4/4분기	회의	어장관리해역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24.12월

□ 기대효과

- 건강한 어장환경 조성과 어업인의 책임 있는 양식 활동을 유도하여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기반 마련
- 청정어장 재생사업,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도입 등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과 양식장 관리 책임성 강화
- 체계적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를 통한 질병 발생 저감으로 양식어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수산물 제공으로 국민 신뢰 제고
- 의약품 개발로 양식현장의 질병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약품 안전관리 감시강화로 건강한 양식수산물 생산지원

□ '23년도 미흡부진과제 개선계획 : 해당없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Ⅱ-2-일반재정②)				
① 수산물가격안정(3043)				
■ 양식장관리실태조사(301)	농특회계	-	27	
안전한 수산물 공급관리 (Ⅱ-2-일반재정③)				
① 안전한 수산물 공급관리(3041)	농특회계	66 (66)	59 (59)	
■ 수산생물 질병관리(310)	농특회계	66	59	
친환경양식육성(Ⅱ-3-일반재정③)				
① 친환경양식육성(3140)				
■ 친환경양식어업육성(301)	농특회계	101	5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① 사업 전후 저서동물지수 개선도(%) (가중치 : 50%)	신규	신규	10	10	청정어장 재생사업지 생태계 회복률 10% 상향	재생 전후 저서동물지수 개선도	조사자료
②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기준 지도·점검률(%) (가중치 : 50%)	55.3	60.0	46.2	50.6	최근 전국 지자체의 지도·점검률의 평균을 집계하여 설정	전국 지자체별 지도·점검 수행완료 비의 평균/ 0.01	전국 지자체 지도·점검 결과 제출 실적을 취합

(1) 주요 내용

□ 안전하고 질 좋은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생산자 및 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환경 조성

- 올바른 원산지 정보제공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도록 연중 상시·특별점검 실시 및 온라인 판매 감시활동 강화
- 위생환경을 주요 평가 요소로 포함(현행 경영실적 위주)하고, 위판장 의무 위생기준 마련 및 위판장 수익구조 다변화 등 추진
-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산물 판매를 희망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주문·배송·재고관리 서비스 일괄 제공 추진
- 수산물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유통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이력 등 관련 정보도 철저하게 관리
- 안전성조사 건수 확대*, 품종별 중점 관리를 실시하고, 최근 5년 내 부적합 판정이 반복된 양식장은 집중 관리(연 1회 조사)

* ('21) 18,764건 → ('22) 19,551건 → ('23) 25,398건

-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을 위하여 기존 육상양식장 중심의 HACCP을 해수면 양식장까지 확대 추진*

*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개정 추진

□ 수급관리를 통해 물가안정을 기하고 수산물 소비활성화

- (물가관리) 대중성 어종 등은 생산량·수급예측 모형을 고도화하고, 재고조사 시스템 개발을 통한 재고량·수출입량 파악으로 수급관리

- (소비촉진) 참여 업체·규모를 늘려 행사(연 10회, 최대 40~50% 할인)를 지속 개최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역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도 추진
- 학교·軍 등 단체급식은 국내수산물 우선 구매 등을 지원, 학생·장병 입맛을 고려한 간편 레시피 11종도 개발

□ 수산식품 수출기업·품목 및 제품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수출전략형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초보-성장-고도화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 컨설팅 지원 등 경쟁력 확보 지원
- 유망 수출국 무역지원센터 신규 개소와 'K-Seafood관' 입점기업을 확대하고, 라이브 방송 마케팅 등 지원으로 수출시장 외연 확대

□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마련

- 가공·R&D·수출을 연계한 '수산식품 클러스터' 권역별 조성을 위해 전남권 공사 추진 및 부산권 기본·실시 설계, 총사업비 협의
 - * (전남) '22~'25년, 1,200억원, (부산) '22~'25년, 813억원
- IoT·AI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을 위해 전북권 및 경북권 기본·실시 설계, 총사업비 협의 추진 등
 - * (전북 새만금) '22~'25년, 433억원 (경북 영덕) '23~26년, 392억원
- 글로벌 김 산업발전 선도를 위해 김산업 진흥구역 추가 지정(2개소) 및 김 등급제 기준항목 마련 추진

□ 수산정책 대국민 소통강화를 통한 수산업활성화 추진

- 주요 수산정책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현장 중심의 상향식 정책발굴을 위해 대국민 소통 기회 지속 확대 추진
- 수산업 체질 개선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수산식품산업 인프라 구축률 (%)	11.1	21	29.4	40.7	「수산식품산업법」 제13조에 의거, 전남권·부산권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 중으로, 사업계획*에 따른 연차별 공정률을 목표치로 설정 * 전남권 클러스터('20~'25), 부산권 클러스터('22~'26)	(연도별 예산 누적 투자액 / 총사업비) × 100 * (총사업비) 전남 1,200억원, 부산 813억원	내부보고자료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에 대한 소비 급감, 업계 경영위기 발생 가능
 -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가 생산·전파되고, 정부의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질 우려
 - 오염수 방류 후 수산물 전반에 대한 단기 소비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며, 대응의 효과성에 따라 소비 회복탄력성은 상이할 전망
- ☐ 주변 수입국 수산물 무역분쟁 등 수출 여건 변화에 신속한 대응 필요
 - 수산식품 수출·가공업체 대상 현장소통과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여 현안사항 발굴 및 해소방안 논의를 통한 수출 확대 지원
- ☐ 대국민, 지자체, 전문가 및 언론 등에 대해 수산정책분야 중점 추진과제 설명회 및 간담회 등으로 현장이해도 증진 추진
 - 현장 건의사항 등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이행조치 노력

(4) 기타

- ☐ (관련 정보제공 누리집) 수산물수출정보포털(<http://www.kfishinfo.net>)

☞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유통경쟁력 강화로 국민이 공감하는 유통생태계 혁신 도모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수산물 수급·물가위기 관리체계 구축 및 안심 유통환경 조성(IV-4①)

유통정책과 (044-200-5441 / 5442)

□ 추진배경 (목적)

○ 대내외 수급 불안 요인 발생으로 수산물 수급 변동 심화

-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日 원전 오염수 방출 등 대내외 수급 불안정 요인 발생으로 물가·수급 상황 대응 필요

○ 전체 수산물 생산량 40%(연근해 수산물 82%)가 위판장*을 경유하나, 시설이 노후한 위판장이 많아 위생확보에 한계

* 연근해 수산물이 생산되어 유통되는 첫 단계로서 산지 위판장에서 수산물은 양륙-선별-위판-배송단계를 거쳐 도매시장 등으로 유통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수급·물가관리) 비축·수매, 할인행사 등을 적기 시행하고, 수급 불안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 수급관리 역량 강화 추진

- (정부비축) 수급 불안 또는 가격 상승 품목 중심으로 비축 확대, 가격 상승 품목 발생시 선제적 수급·물가 관리 추진
- (할인행사) 수산물 소비자물가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참여 유통업체·시장 및 행사 규모·횟수 확대 추진
- (모니터링) 물가 관리 품목*의 가격을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물가 안정대책 추진

* 대중성어종 6종(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등

○ (위생·안전관리)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유통물량 상위 100개소를 선정, 순차적으로 위판장 현대화 추진

- 시설·운영 현황 등을 분석하여 유형별 현대화 전략을 수립하고, 양륙-경매 등 위판 소과정 자동화 기술개발* 추진

* 전자경매 및 자동선별 시스템 개발 등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설 특별전 할인행사 개최	'24.2월	국정 73-2
	수산대전 2월 특별전 개최	'24.2월	국정 73-2
	저온·친환경 위판장 사업자 공모	~'24.2월	국정 73-2
2/4분기	수급예측모형 개발연구 사업자 선정	'24.4월	국정 73-2
	저온·친환경 위판장 사업자 선정	'24.5월	국정 73-2
3/4분기	추석 특별전 할인행사 개최	'24.9월	국정 73-2
	수급예측모형 개발연구 전문가 자문	'24.9월	국정 73-2
4/4분기	김장철 특별전 할인행사 개최	'24.11월	국정 73-2
	수급예측모형 개발 완료	'24.12월	국정 73-2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물가·민생 현장 점검을 통한 정책 환류 추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1/4분기	현장방문 설 특별전 할인행사 현장 점검	'24.1월
	현장방문 설 맛이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현장 점검	'24.2월
	현장방문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현장 점검	'24.3월
2/4분기	현장방문 천일염 산지 현장 방문	'24.5월
3/4분기	현장방문 추석 특별전 할인행사 현장 점검	'24.9월
	현장방문 추석 맛이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현장 점검	'24.9월
4/4분기	현장방문 김장철 특별전 할인행사 현장 점검	'24.11월
	현장방문 대형마트 등 물가·민생 점검	'24.12월

□ 기대효과

- 수급·물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위생적인 유통환경 조성 등으로 소비촉진 및 어업인 소득증대 유도

□ '23년도 미흡부진과제 개선계획: 해당없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수산물 유통개선(농특) (Ⅱ-2-일반재정②)				
① 수산물유통개선(3040)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317)	농특회계	97	138
	직거래 등 신유통망 구축(319)	농특회계	25	-
		농특회계		
안전한 수산물 공급관리(농특) (Ⅱ-2-일반재정③)				
① 안전한 수산물 공급관리(농특)(3041)	수산물이력제(302)	농특회계	24	45
		농특회계	24	
수산물어촌알리기 (Ⅱ-2-일반재정⑤)				
① 수산물어촌알리기(3044)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제고(340)	농특회계	660	1,363
		농특회계	660	
수산물가격안정(기금·융자) (Ⅱ-2-일반재정⑧)				
① 수산물가격안정(기금·융자)(3066)	비축사업(302)	수발기금	1,750	2,065
		수발기금	1,750	
수산물유통자금지원(기금)				
① 수산물유통자금지원(기금)(3068)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300)	수발기금	1,187	1,187
		수발기금		
수산물연구개발				
① 수산물연구개발(3433)	수산물 신선유통 스마트 기술개발(319)	농특회계	85	47
		농특회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① 할인혜택을 받은 소비자수 (쿠폰발행건수) (천명)	신규	신규	18,222	11,000	1인당 할인 한도(1, 2, 4만원)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숫자 10,005천명이 적정 목표이나, 10% 상향된 소비자수를 목표로 설정	할인혜택을 받은 소비자수 * 행사별 쿠폰발행 실적	사업결과 보고서

②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IV-4②)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1 / 5482)

□ 추진배경 (목적)

- '24년 선진국 중심의 저성장·고물가 지속 및 중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수출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출 확대 지원 추진 필요

* 수산식품 수출실적(억\$): ('20) 23.1 → ('21) 28.3 → ('22) 31.6 → ('23) 29.97

- '23년 김 수출 수산식품 최초 1조원 돌파, 해외 수요 확대에 따른 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 산업육성** 추진

*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현황 : ('23년) 3개소(신안, 해남, 서천), ('24년) 2개소(미정)

**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23~'27), 김산업 진흥 시행계획('24)에 따른 육성 추진

- 원물 생산, 단순가공 중심에서 맞춤형 상품 기획·개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고차가공 등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인프라 조성

* 수산식품 클러스터 : (전남) '20~'25년, 1,200억원, (부산) '22~'25년, 813억원,
스마트수산가공종합단지 : (전북) '22~'25년, 433억원, (경북) '23~'26년, 392억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수산식품 수출기업·품목 및 제품 해외 경쟁력 강화

- 기업 수출역량에 따른 성장형 바우처 지원 확대(35→62개사), 해외 대형유통망 연계 등 수출 유망상품 개발 추진(24→25개사)
- 국제박람회·무역상담회 수출기업 참가(248→383개사) 및 국제인증(할랄, 코셔 등) 취득(5천만원/업체당→7천만원/업체당) 등 지원 확대

- K-Seafood 수출시장 외연 확대 및 물류 인프라 확충

- 유망 수출국 무역지원센터 신규 개소(프랑스 파리, '24下) 및 라이브 방송 마케팅 홍보(신규) 및 K-씨푸드관* 입점 확대(175→200개사) 등 추진

* 미국·호주(아마존), 미국(H-프레시), 중국(타오바오), 태국·말련·싱가포르(쇼피)

- 해외 물류센터 추가 지정(70→73개소) 및 보관료 지원(17→25개사), 안정적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다각화(콜드체인, 폴필먼트 등)

○ 수산식품산업 가공 인프라 조성 및 성장 기반 마련

- 가공·R&D·수출을 연계한 대규모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남권 공사 추진 및 부산권 기본·실시 설계, 총사업비 협의 추진 등

* (전남) '20~'25년, 1,200억원/ 공사기간('24.3월~'25.12월)
 (부산) '22~'25년, 813억원/ 기본·실시설계('24.1월~'25.6월)

- IoT·AI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을 위해 전북권 및 경북권 기본·실시 설계, 총사업비 협의 추진 등

* (전북 새만금) '22~'25년, 433억원/ 기본·실시설계('24.1월~11월)
 (경북 영덕) '23~'26년, 392억원/ 기본·실시설계('24.1월~11월)

- 수산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을 위한 새싹기업 도약지원 사업, 체계적인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사업 추진

* (새싹기업 도약지원) '24년 12억원/6개 지자체(부산, 경남, 전남, 경기, 경북, 충남) 사업 추진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24년 3.4억원/ 대학 선정 및 학생 모집(6월), 학과 운영(하반기)

○ 글로벌 김 산업 발전 선도를 위한 김산업 육성기반 마련

- 김산업 진흥구역 추가 지정(2개소)을 통해 생산부터 수출까지 종합지원하여 한국 김 품질·위생 강화 등 해외소비자 수요에 대응

* (진흥구역 지정) 공고(2월), 선정(3월), 사업 추진(4월~)

- 김 등급제 도입을 위한 기준항목을 마련*하고, 가격 안정과 유통 경쟁력 확보를 위한 김 거래소 운영 계획 수립

* (등급제 마련) '24~'26년, 45억원(과기부)/ 공고(3월), 선정(4월), 지표 개발 및 1차 실증(~12월),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계획 수립	'24.1월	국정 73-2
	김산업 진흥구역 2개소 지정	'24.3월	
2/4분기	국제박람회 한국관 운영 및 수출기업 참가 지원	'24.5월	국정 73-2
	김산업 진흥구역 실행계획 집행상황 평가	'24.6월	
3/4분기	전북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추진상황 점검	'24.7월	국정 73-2
	국제박람회 하반기 참가업체 선정	'24.8월	국정 73-2
4/4분기	해외바이어 무역상담회 개최	'24.11월	국정 73-2
	한국 수산식품 홍보주간 개최	'24.12월	국정 73-2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수산식품 수출·가공 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 하여 현안 및 애로사항 발굴, 해소방안 논의 등 수출 확대 지원 추진

* (간담회 5회) 황태 수출업계 현안 간담회(2월), 중국 현지 바이어 간담회(2월), 수산식품 수출실적 중간 점검(8월), 참치 업계 간담회(10월), 주요 수출품목 업계 간담회(11월), (현장방문 2회) 수산식품 클러스터 추진상황 점검(5월), 경북 스마트 수산가공종합 단지 추진상황 점검(9월)

구 분		내용	세부일정
1/4분기	간담회	황태 수출업계 현안 간담회	'24.2월
	간담회	중국 현지 바이어 간담회	'24.2월
2/4분기	현장방문	수산식품 클러스터 추진상황 점검	'24.5월
3/4분기	간담회	수산식품 수출실적 중간 점검 및 간담회 추진	'24.8월
	현장방문	경북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추진상황 점검	'24.9월
4/4분기	간담회	참치 관련기업 현안 간담회	'24.10월
	간담회	주요 수출품목 업계 간담회	'24.11월

□ 기대효과

- 세계적인 고물가, 저성장 등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수출 기업 육성, 해외 시장 확대 등을 추진하여 수출 확대
- 수산식품 맞춤형 개발 지원, 인력 양성 강화, 인프라 구축으로 수산식품산업 기반 육성 및 수출 확대 기반 마련

□ '23년도 미흡부진과제 개선계획 : 해당없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수산물 수출지원(Ⅱ-1-일반재정③)				
① 수산물 수출지원(2837)	농특회계	429	515	
▪ 수산물해외시장개척(300)		429	515	
품목별 경쟁력 강화(Ⅱ-1-일반재정④)				
① 품목별 경쟁력 강화(2838)	수발기금	1,324	1,324	
▪ 우수수산물 지원(융자)(302)		1,324	1,324	
식품산업육성(Ⅱ-1-일반재정①)				
① 식품산업육성(2832)	농특회계	194	223	
▪ 수산식품산업육성		83	72	
▪ 수산식품수출단지조성(301)		111	151	
수산연구개발(Ⅲ-2-R&D⑤)				
① 수산연구개발(4145)	농특회계	52	70	
▪ 수산식품산업 맞춤형 기술개발(300)		52	36	
▪ 대체해조육 및 수산배양육 기술개발(300)		-	3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수출전략산업 육성 추진율(%) (가중치 70%)(공통)	신규	신규	신규	100	수출 대표품목(김)의 현안 대응과 수출확대·다변화, 유망품목 수출 진출로 확보 등을 감안하여 성과지표를 설정	㉠김 수출 8억불 달성(50%) ㉡김 수출 국가수 130개국(50%)	관세청 수출통계 관세청 수출통계
② 수산물 수출 다변화 및 수출 확대 추진율(%) (가중치 30%)(공통)	신규	신규	신규	100	'수산물 수출 활성화(국정과제)' 이행 관련 대표성 강화, 신뢰성 확보(공식통계)를 감안하여 성과지표를 설정	수출 국가 수 155개국 달성(100%)	관세청 수출통계

③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정책 지원 강화 (IV-4-③)

수산정책과 (044-200-5421 / 5422)

□ 추진배경

- 日 원전 오염수 방류로 친환경·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고금리, 고유가, 전기료 인상 등이 지속될 전망으로 경영비용 상승 압박, 수산물 물가도 상승 우려
- 정부는 수산업 진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규제를 개선 중이지만, 현장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는 낮은 상황
- 수산·어촌의 당면 현안(소비 활성화, 물가안정, 경영여건 개선) 해결과 함께 위기상황을 전환하기 위한 터닝포인트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현장의 정책만족도 제고, 공동체 활성화로 어촌소멸 대응
 - (현장 중심 정책) 수산인의 날 행사, 대국민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규제 혁신 등 애로사항 해소
 - (공동체 활성화) 우수어촌계 선정 등 어촌계를 활성화하고, 허베이조합 운영 정상화 등을 통해 주요 갈등을 해결하여 수산 공동체 활성화 유도
- 수산의 미래전략·아젠다 발굴 및 민간 중심 생태계 조성
 - (미래전략 발굴) 중장기 수산물 식량주권 강화방안 마련 등 미래전략 발굴 및 국정 아젠다 주도
 - (창업·투자 확대) 펀드 신규결성, 창투센터 운영 등을 통해 수산분야 민간 금융투자 활성화 유도 및 창업·일자리 확대
- 안정적으로 수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 (금융안전망 구축) 정책자금 공급, 재해 발생 시 긴급자금 지원, 금융 부담 경감방안 마련 등을 통해 어업인의 고금리 극복 지원

- (경영안전망 구축) 전기료, 유류비 등 생산원가 감소,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어업인의 생업기반 유지 도모
- (대외안전망 구축) IPEF 등 대외 위협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제도 개선 및 어업인 지원방안 마련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어업인 금융 부담 경감방안 시행	'24.1월	
	긴급경영안정자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	'24.3월	
	수산분야 시도정책협의회 및 현장설명회 개최	'24.3월	
2/4분기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24.4월	
	'24년 수산분야 세제 개선사항 발굴 및 감면 건의	'24.5월	국정 73-5
	수산분야 창업관련 토크콘서트 개최	'24.6월	국정 73-6
3/4분기	'24년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결선	'24.9월	국정 73-6
4/4분기	우수어촌계 선정 및 지원	'24.10월	
	어업인 지원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정부안 반영	'24.10월	국정 73-5
	수산분야 신규펀드 결성	'24.10월	국정 73-6
	'23년 수산업·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국회)	'24.12월	
	수산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24년 수산정책과 연안·어촌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국민 정책 이해도 증진 및 현장 소통 강화

구 분		내용	세부일정
1/4분기	현장방문	수산정책 현장 민생투어(경북/전북·충남·충북/강원)	'24.2월
		수산정책 현장 민생투어(부산·울산·경남)	'24.3월
		수산정책 현장 민생투어(전남)	'24.3월
		수산정책 현장 민생투어(인천·경기)	'24.3월
		수산정책 현장 민생투어(제주)	'24.3월
	정책협의	수산분야 시·도 정책협의회	'24.3월
3/4분기	현장방문	수산정책자금 현장 방문 및 합동 검사	'24.9월
		수협 조합원 및 어촌계 관리실태 점검	'24.9월

☐ 기대효과

- 수산정책에 대한 어업인 등 현장의 만족·체감도 제고

- 어촌계, 조합 등 공동체 활성화 및 수산분야 유입 증가
- 미래전략 수립으로 아젠다 주도 및 미래 산업생태계 조성
- 금융·세제·재정 지원 등을 통해 경영안전망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수협경제사업활성화(Ⅱ-4-일반재정①)				
① 수협경제사업활성화(3431)	일반회계	50	28	
▪ 수산지도경제사업활성화(301)		50	28	
수산산업창업투자(Ⅱ-4-일반재정②)				
① 수산산업 창업투자(3432)	일반회계	55	55	
▪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300)		55	55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Ⅱ-4-일반재정⑤)				
①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3450)	농특회계	1,238	1,233	
▪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301)		1,238	1,233	
어업경영자금(기금)(Ⅱ-4-일반재정⑩)/용자사업				
① 어업경영자금지원(3465)	수발기금	270	1,190	
		(426)	(1,333)	
▪ 재해등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303)		200	1,000	
▪ 수산모태펀드출자(370)		70	190	
직접피해지원(기금)(Ⅱ-4-일반재정⑪)				
① 직접피해지원(3467)	수발기금	27	18	
		(27)	(18)	
▪ 피해보전직불금(300)		18	10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302)		9	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수산분야 규제혁신과제 발굴(건) (가중치 : 40%)	-	-	46	48	'23년 발굴된 규제혁신과제 46건의 4% 상향된 48건으로 목표치를 설정	이해관계자 및 정책고객과의 소통강화 간담회, 설명회 등에서 발굴된 규제혁신과제 건수	정책협의회 결과보고 (메모보고)
② 수산분야 금융 지원액(억원) (가중치 60%)	41,747	43,311	45,344	46,613	전년도 수산정책자금 지원 실적(4조 5,344억원) 대비 2.8%('24년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 상향한 4조 6,613억원을 목표치로 설정	수산분야 금융 (이자보전+융자) 지원액(억원)	수협은행의 정책자금 지원현황 보고자료 / 수협은행 및 해양수산부

IV. 협업과제

1. 항만물동량 분석을 통한 안정적인 항만 운영 도모

항만운영과(044-200-5792), 항만물류기획과(044-200-5754)

□ 항만물동량 분석 (협력수행 시 성과 제고 과제)

- (통계 작성)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 매달 신고되는 전국 무역항 처리 화물 실적 자료를 기초로 물동량 추이 분석
 - (화물) 전국 화물에 대한 물동량의 증감 수치를 분석해서 항만별 주요 화물 처리 동향 파악, 자료 점검*, 오류수정 등으로 통계의 신뢰성 향상
- * (점검) 신고 누락자료 정비 및 오신고 의심건 확인 조치 등
- (컨테이너)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94.5%를 처리하는 주요 3개 항만*의 물동량을 비교·분석하여 대내외적 리스크 파악 및 대응 가능, 특히 PORT-MIS 자료를 통한 물동량 추이 점검이 가능해 정확도 제고

* ('23년도) 부산항(23,151천TEU), 인천항(3,460천TEU), 광양항(1,863천TEU)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항만운영과) PORT-MIS를 통해 신고된 전국 무역항의 선박입출항, 항만시설사용신고 자료를 기초로 매월 항만물동량 통계 작성
 - 전월대비 통계 비교 및 검증하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컨'화물에 대한 항만별·품목별 증감원인 분석을 위해 상세정보*를 항만물류기획과에 제공
- * 항만별, 화물품목별, 주요국가별, 해외지역별로 전년 동기 비교자료 등
- (항만물류기획과) 항만운영과를 통해 제공받은 PORT-MIS 정보를 토대로 주요 항만별 수출입, 환적 컨테이너 화물의 증감 추이 분석
 - 특히, 항만별 수출입, 환적 물류 흐름에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만공사의 담당부서(마케팅부)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대응

□ 추진계획

- 물동량 분석 메모보고(항만운영과·항만물류기획과 합동, 매달)
- 물동량 분석 보도자료 배포(항만운영과·항만물류기획과 합동, 매분기)

2.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항만경쟁력 강화

항만정책과(044-200-5918/5919), 항만물류기획과(044-200-5753/5754)

□ 과제 목표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유럽-동남아-동북아-미국을 잇는 해운항로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물류허브항에 대한 경쟁 강화 전망

* 미·중 갈등 등에 의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대, 자국 공급체계 강화 및 최근 해운동맹 변화 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

- ⇒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을 기점으로, 부산항의 동북아 물류허브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

□ 주요 내용

- 대규모·대수심의 매가포트로 개발되는 진해신항의 적기 개장을 위한 개발·운영전략 마련

- 진해신항 1-1단계 하부부지조성 완료 전, '컨'터미널 통합운영을 위한 운영방안 마련 및 운영사 선정 추진

* 진해신항 1-1(3선석) : ('23~'27) 하부 → ('27~'29) 상부 → ('29) 개장
진해신항 1-2(6선석) : ('26~'30) 하부 → ('30~'32) 상부 → ('32) 개장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항만정책과) 단계적인 진해신항 개발사업 주체(민자, 항만공사 등)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부산항 신항·진해신항을 아우르는 운영계획 필요 (항만물류기획과 협조)
- (항만물류기획과) 진해신항의 상하부 개발시기·규모 등을 고려(항만정책과 협업)한 진해신항 운영사 선정계획을 포함한 운영전략 마련

□ 추진계획

- '컨테이너 항만경쟁력 강화방안'('24.상/비경) 및 '스마트메가포트 미래 비전'('24.상/비경) 수립에 맞춰, 진해신항 개발·운영 전략마련(필요시 통합안전 동반 상정도 검토)

3. 외국인 원양어선원 인권침해 문제 개선

선원정책과(044-200-5743/5744), 원양산업과(044-200-5361/5362)

□ 과제 목표

- 외국인 원양어선원 인권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이행방안 마련

* 국제사회에서 확대 재생산되는 원양어선원 인권·강제노동 이슈에 선제 대응
△NGO 인권보고서(EJF/어필, '23.5.31), △美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23.6.15),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공동서한('23.9.27), △AP뉴스 기사('23.11.16) 등

- 우리 측 인권 개선 노력을 NGO 등에 적극 홍보하여 인식 전환

□ 주요 내용

- 주요 인권침해 요소*를 구조적으로 차단·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차별대우, 임금 체불·불법차감, 장기 승선, 노동시간 과다, 익명신고 곤란 등

- 이해관계자(원양 노사 등), NGO 등과 적극 소통하여 해결방안의 수용성과 이행력을 확보하고, 우리 측의 상황개선 의지 피력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선원정책과) 이해관계자, NGO 등 소통을 바탕으로 인권침해 차단 시스템, 실질적인 제재조치* 등을 담은 인권개선 이행방안 마련

* 「선원법」상 처벌 규정, 선원근로감독관 조사, 어획할당량 제한 등

- (원양산업과) 인권 개선사항 발굴, 이해관계자 소통 등 협력·지원

- 원양 선사·노조, 국제옵서버 등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이행방안 수용·참여 등 협력 독려, 현장 여건을 고려한 대안 조율 등 지원

□ 추진계획

- 이해관계자, NGO 등과 인권침해 현황, 개선 방향 등 논의('24.1분기)

- 외국인 원양어선원 인권개선방안 마련('24.2분기)

4. 탄소중립 항만 인프라 구축계획 및 기반기술 기준 마련

항만정책과(044-200-5918/5919), 항만기술안전과(044-200-5951/5952)

□ 과제 목표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 범정부 차원의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저탄소 항만 구축 추진
- 항만 내 친환경·저탄소 전환의 친환경 연료 밸류체인 구축 지원을 위한 항만분야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계획 및 기반기술 기준 등 마련

□ 주요 내용

- (시설계획) 항만 내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위한 동력전환, 신재생 에너지 확대 방안과 함께, 안정적인 친환경 에너지 공급체계 확보를 위한 인수·저장시설, 생산시설 등 검토
- (기술기준) 수소 수입을 위한 계류시설, 항만 터미널 등 인프라 조성 시 요구되는 기술기준 및 안전관리 지침* 마련 중

* (예시) 수소 등 친환경에너지 저장·제조시설의 경우, 현재까지 항만구역 내 개발·운영된 사례가 적어, 안정적인 개발,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 확보 시급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항만정책과) 항만 내 도입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관련 시설 선정 및 이를 위한 평면배치 검토 시, 이에 따른 제반 안전기준 검토 필요(항만기술안전과 협조)
- (항만기술안전과) 실효성 있는 기술기준 및 시설 안전관리 지침 마련을 위해 항만 내 도입되는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종류 및 규모 고려 필요(항만정책과 협조)

□ 추진계획

- 탄소중립 항만 인프라 구축 및 기반기술 기준 용역 최종보고회(‘24.9)
- 탄소중립 항만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24.12)

5. 연안여객선 운송 전기차 화재 예방

해사안전정책과(044-200-5846/5817), 연안해운과(044-200-5738/5737)

□ 배경

- 전기차의 보급이 증가하며, 전기차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
 - * 1만대당 화재 : 일반차 ('17) 2.21 → ('22) 1.84건 / 전기차 ('17) 0.4 → ('22) 1.1건
- 국내 여객선의 전기차 운송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선박 내 인명 안전을 위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예방적 대책 필요
 - * 제주·완도·여수 항로는 전기차 운송 비중이 20% 이상 차지(타 항로도 10% 내외 수준)

□ 주요 내용

-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선내 충전금지, 사고차량 선적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위험성 관리를 위해 충전율 제한* 적용
 - * 충전율(State Of Charge)(SOC)이 높을수록 발화 속도가 빨라 초기대응이 어려우며 화재·폭발 위험성 증가
-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 보급, 정기적인 소화·대피 훈련을 통해 자체 화재대응 역량을 키우고, 유관기관 간의 공조체계 등 강화
 - * 소방서에서 전기차 화재 진압에 사용 중인 상방향 물 분사장치, 질식소화포 등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해사안전정책과) 연안 여객선에 전용 소화장비를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장거리 항로(제주, 울릉)의 전기차 충전율 50% 제한** 적용 추진
 - * 충전율 별 열폭주 전이 시간 : 100% → 7분 50초 / 50% → 31분 59초
- (연안해운과) 운항 중 전기차 배터리 충전금지, 전기차 충전율 확인 절차 등 실무 적용단계 검토 및 선사별 홍보관리 강화

□ 추진계획

- 장거리항로 전기차 충전율 50% 제한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24.上)
- 해상 전기차 화재사고 안전 종합대책 발표 및 이행('24.上~)

6. '23년도 추진 항만·어항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합동점검

항만기술안전과(044-200-5972/5684), 어촌어항과(044-200-5657)

□ 과제 목표

- 항만 및 어항 시설물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3년도 추진한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사업 12건에 대해 설계도서·성능평가 결과 적정성 및 내진보강공사 품질 등 종합점검 실시

□ 주요 내용

- (점검 대상) '23년도 추진한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사업 12건
- (점검 방법) 설계도서/ 성능평가결과 서류 검토, 현장점검 등
- (점검 내용) 시설물 내진보강 실태 및 추진상황 등 종합점검
 - 내진보강대상 시스템 입력 현황, 내진보강사업 추진실태(체크리스트) 등
 - * (점검자 / 점검기간) 항만기술안전과, 어촌어항과, 전문가 등 / '24.3.11.~29.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항만기술안전과) 내실있는 내진보강사업 실태점검을 위해 어항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실태점검 시 전문인력* 및 비용 지원
 - * 우리부 저유동성 모르타르 주입공 시험시공 관련 자문위원 중
 - 항만기술안전과의 내진보강 전문가 풀을 활용하여 항만·어항 공공 시설물에 대해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는 실태점검 추진
 - * (항만기술안전과) 전문인력 지원 및 전문가 자문비 지급
- (어촌어항과) 항만기술안전과 소관 점검 시설물 중 일부에 대한 점검 인력 지원

□ 추진계획

- 내진보강사업 추진실태 자체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24. 3.)
- 내진보강사업 추진실태 자체점검 결과 제출(행안부, '24. 4.)

7.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해양생태과(044-200-5327/이다은事), 어촌어항과, 해양레저관광과

□ 과제 목표

- 해양보호구역, 갯벌 등 주요 해양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인프라, 운영 방식, 인력양성 등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관광 도입
- 갯벌생태마을, 갯벌생태해설사 등 신규 추진 과제뿐 아니라, 보호 구역 관리(생태과), 어촌체험휴양마을, 해양치유 및 해양레저(레저과) 등 기존 제도와의 연계 방안 모색

□ 주요 내용

- ① (생태관광·인프라) 권역별 해양생태공원 조성과 해양생태관광지역 및 갯벌생태마을 지정 등 생태관광 거점 마련
 - 갯벌 및 철새서식지 복원, 생태관광 노후시설 관리·보수(탐방로·전망대 등) 등 장기적인 해양생태관광 자원 확보
- ② (프로그램·인력) 지역생태여행루트 개발 및 트래킹·감상·교육·수중 레저 등 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지역별·테마별 특화 콘텐츠 개발
 - * 어촌체험휴양마을 및 해양치유 프로그램과의 연계, 해양레저단지 활용 등 추진
 -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관리 및 해양생태관광 전문인력 발굴·양성
- ③ (추진기반) 관계부처 협력체계 운영 및 해양생태관광 통합플랫폼 구축, 한국관광공사와 연계 홍보 등 장기 추진기반 마련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해양생태과)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총괄
- (어촌어항과·레저관광과) 해양생태관광 관련 기존·신규사업의 인프라,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연계·활용방안 모색
- 어촌체험휴양마을, 수중레저활동, 해양치유시설, 복합 해양레저관광 도시 등과 연계

□ 추진계획

- 부서 간 협업 거쳐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연중)

8. 공간 기반 해양수산 입지정보 고도화

해양공간정책과(5267/5297), 해양보전과(5861), 수산자원정책과(5540),
어선안전정책과(5524), 지도교섭과(5561), 해사안전정책과(5821)

□ 과제 목표

- 해양공간 이용수요의 다변화·대형화*로 국내·외 해양이용자 간 대립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공간 관리의 필요성 증대
 - * (해역이용협의 건수) '22년 기준 3,093건으로 '10년 1,852건 대비 약 167% 증가
- 해양수산 입지정보를 고도화, 공간화하여 대규모 해양공간 개발·이용 행위의 입지 적정성 분석·평가를 위한 데이터 기반 구축

□ 주요 내용

- 해양환경, 어획량·자원량, 해상교통로 등 해양수산 입지정보를 고도화하고, 해양수산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제공 체계를 구축
- 해양공간 이용계획 수립, 환경보전, 관리에 관한 종합적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개별 운영 중인 시스템* 간 연계 강화
 - * ①해양공간통합관리시스템(MSP), ②연안관리정보시스템, ③해양환경정보(MEIS)
- 정책 평가 및 시사점 도출 등에 활용이 가능한 핵심정보(통계, 관측 데이터 등)의 융합·분석을 통해 보유 데이터의 활용 가치 재창출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해양공간정책과) 분야별 해양수산 정보 수집·검증과 융합·중첩 정보 생성,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전략 수립·운영
 - *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 '18년~ / '24년 14억원
- (해양보전과) 대규모 해양 개발·이용 행위의 해양환경영향 요인 조사·예측·평가방법을 마련*, 해양환경 정보 활용 지원
 - * 과학기술기반 해양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 사업 / '21~'25 / 총사업비 265억원

- (수산자원정책과) 연안(400개 정점) 수산자원 조사·분석*('24~'26)을 통해 연안 수산자원량 공간정보 활용 지원

* 자율적 연안 수산 자원관리 기반 구축 / '24~'26 / 총사업비 211억원

- (어선안전정책과) 공간 단위 어획분포(어장도) 구축을 위해 어선 안전조업관리시스템* 상 어선위치, 조업, 어획정보 활용 지원

* 안전조업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 '18~ / '24년 7억원

- (지도교섭과) 위치·어획 보고를 의무화하는 「연근해어업발전법」 제정, 정보시스템 구축('22~'24)을 통해 어획정보 고도화·활용 지원

- (해사안전정책과) 전국 연안의 선박 통항 밀집도가 높은 해역을 주요 해상교통로로 식별*하고 해상교통 정보 활용 지원

* 연안해역 디지털 해상 교통망 구축 사업 / '23~ / '24년 18억원

□ 추진계획

- (TF) ①해양환경, ②수산·어업, ③해상교통반으로 구성된 '해양공간 계획 개선 TF(차관 주재)' 정례회의(반기별 1회 이상) 개최
- (자문단) TF 반별 세부사항 논의, 전문가 그룹 자문 등을 위해 업무담당자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 전문가 자문단 운영(수시)

< TF 구성 현황 >



9. 해양수산 창업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044-200-6225)/최수경事, 수산정책과(044-200-5427/최완홍事)

□ 과제 목표

-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창업도전~집중보육까지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초기창업기업 성장지원

□ 주요 내용

-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창업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창업 가능성 확인하고, 액셀러레이터의 전문보육, 사업화 컨설팅 등으로 역량 강화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액셀러레이터가 해양수산분야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사업모델 개발, 제품판로 지원 등 초기창업기업에 대해 전문 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업 발굴 및 선정 애로
 - (수산정책과)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중 유망기업 발굴 및 시상하나, 후속지원 부족
- ⇒ (과학기술정책과+수산정책과 협업) 액셀러레이터가 보육기업 선정시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입상 이력을 반영함으로써 콘테스트에서 발굴된 유망기업에 대해 사업모델 개발 등 전문보육 지원

□ 추진계획

- '24년 액셀러레이터 보육기업 선발 시 '21~'23년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입상자에게 가점(3점)을 부여하여 선정우대 및 연계보육 실시

10. 어업경영체 정보 이용자 확대

소득복지과(044-200-5465/5466), 수산직불제팀(044-200-5455/5456)

□ 과제 목표

- 각종 정책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자체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를 위해 해수부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지속 요청
- 지자체 담당자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정보 기능 등 개발 및 권한 부여 추진
 - 지자체의 수산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통계 정보 관련 시스템 기능 개발
 - 지자체 담당자가 어업인·어업법인의 어업경영체 등록 현황을 통계 정보*로 조회할 수 있도록 어업경영체 시스템 권한 부여

* 시·도·군별, 분기별, 경영주 연령별, 어업별, 여성어업인 등 경영체 수 확인

□ 주요 내용

- 어업경영체 등록 정보 공유 범위 설정
 - 수요조사를 통해 지자체에서 필요한 정보 및 공개 가능한 정보를 선정하고 정보공유 가능한 업무관리 기능 구현
- 지자체 시스템 공유 및 권한 부여
 - 보조금 관리 등으로 정보를 이용한다는 추가동의서를 받은 지자체 담당자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추가 및 관리 기능 구현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소득복지과)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중 공유 가능한 범위 설정
 - (수산직불제팀) 기존 운영 중인 수산정보통합시스템 내 어업경영체 시스템에 지자체 통계정보 공유 기능 개선
 - 수산정보통합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시 어업경영체 기능개선 과업 추가
- * (예산) 270백만원 (사업기간) '24. 5~11

□ 추진계획

- 어업경영체 통계 자료 지자체 수요 조사 및 공개정보 선정(소득복지과)
- 수산정보통합시스템 개선 사업 시 관련 기능 개선(수산직불제팀)

11. 한국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어업 인증(MSC) 취득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3/5484), 원양산업과(044-200-5368/5361)

□ 과제 목표

- 지속가능한 어업활동으로 생산된 수산물의 국제인증 취득 지원을 우리 원양선사를 대상으로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 확대

□ 주요 내용

- (친환경 어업) 우리 원양선사의 남획·불법어업 방지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조업 활동을 유도하여 MSC 국제인증 취득을 위한 자격 확보

구분	인증명	취득구분	지원한도	지원조건	내용
생산인증	MSC	예비	70백만원	예비심사 조건부 통과	○ MSC : 예비심사 결과 60점 이상인 업체
		신규	70백만원	인증서 취득	○ MSC 본 심사를 통과하고 인증서를 취득한 업체
		갱신	50백만원		

- (수출 확대) 미국·EU 등의 선진국과 글로벌 대형유통망이 선호하는 MSC 국제인증 취득 지원을 통해 상품 차별화 및 수출 확대

¹ * 미국 대형유통망(코스트코, 월마트 등)은 MSC 인증 참치로 가공된 상품 선호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수출가공진흥과) 원양선사를 대상으로 MSC 국제인증 취득 전문 컨설팅 및 취득비용을 지원 및 EU·미국 등 해외선진시장 진입 지원
- (원양산업과) 취득지원 대상 업체 인증 취득심사 시 인증(MSC) 지지 서한 발송, 대면 인터뷰 지원 등 심사 지원 추진

□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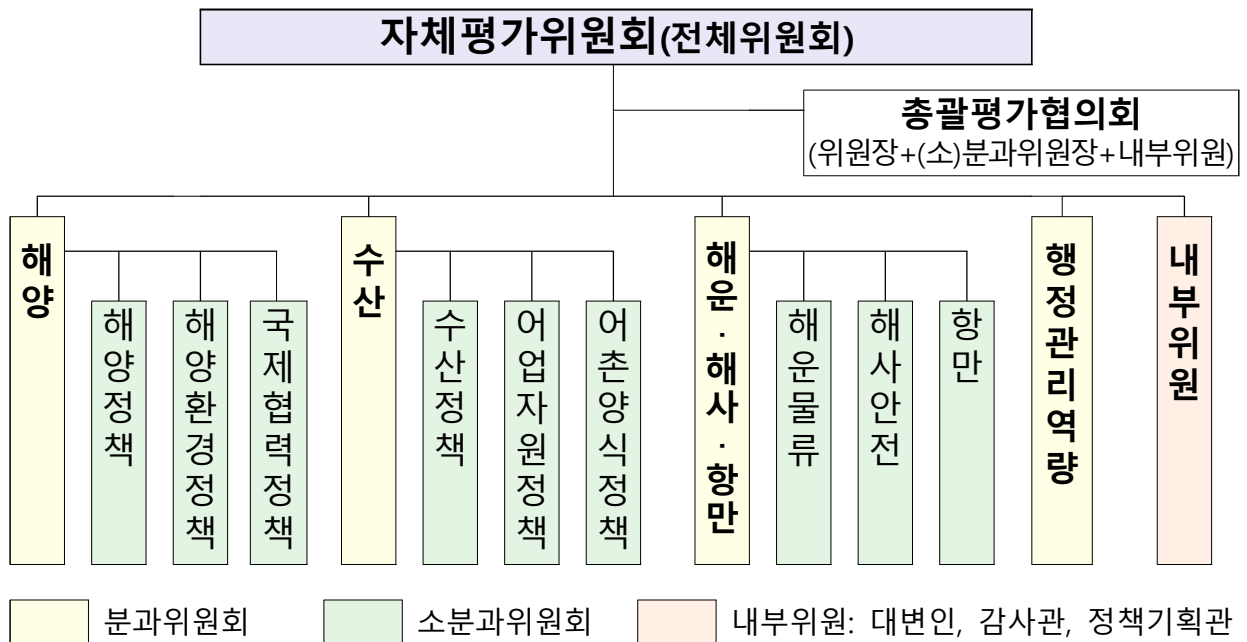
- MSC 취득지원 사업대상자 선정('24.3월) 및 취득비용 지원(~'24.12)
- 원양어선 MCS인증 심사를 지원을 위한 민·관 협의회('24.12월)

V. 환류 등 관련계획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①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조직 구성 및 운영체제

- (전체위원회) 성과관리전략계획·성과관리시행계획·자체평가계획 심의, 자체평가 대상 과제 추진상황 점검, 자체평가결과 심의·확정
- (분과위원회) 전문 분야별 분과를 설치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및 분과 소관 관리과제 평가
- (총괄평가협의회) 위원장, (소)분과위원장 및 내부위원으로 구성, 분과별 평가결과 조정 및 자체평가 운영을 위한 사전 조율 등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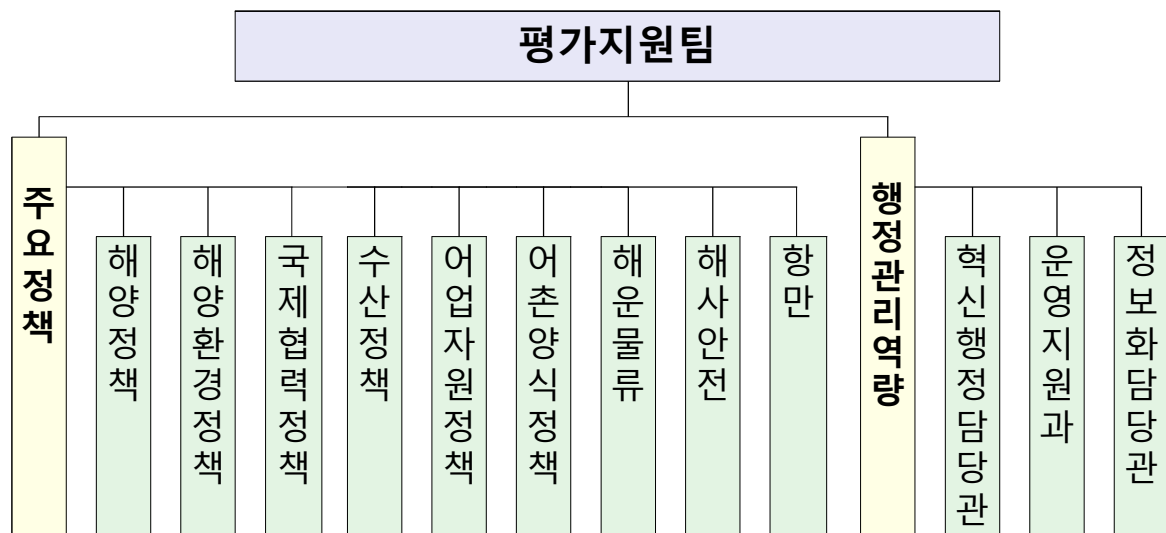


※ 재정사업평가부문은 별도 구성·운영

○ 평가지원팀 구성 및 운영

- 전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자체점검 실시 및 환류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총괄지원팀과 분과별 지원팀을 구성·운영

- (지원총괄팀) 혁신행정담당관을 팀장으로 구성, 자체평가 시행계획 작성, 평가위원회 운영 등 평가지원팀 총괄 및 추진현황 점검
- (분과지원팀) 국(정책관)별 주무계장을 팀원으로 구성, 평가위원 정책 현장 방문 및 정책자료 제공 등 업무지원과 분기별 자체점검을 실시



※ 총괄 : 혁신행정담당관

※ 소분과별 지원팀은 각 국(정책관)의 기획 또는 관리계로 구성

② 자체평가 방법 및 일정

○ 평가 방법

- 관리과제별로 정책 추진과정 전반을 점검·평가하되, 성과 지표 달성도·정책효과 중심으로 평가
- 평가 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하여 심의·의결 후 최종 결과 확정

○ 추진실적 점검

- 자체평가위원회 주관의 과제평가 및 과제 추진실적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에 결과를 제공

○ 평가 결과 공개

-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평가결과(안)을 정부 업무평가위원회(국조실)에 제출하고, 누리집을 통해 공개
- 관리과제 중 매우 우수·부진과제 평가 결과를 부내 공유하고, 우수등급을 받은 관리과제는 모범사례로 전파

< 자체평가 주요일정 >

구 분	추진일정	주요 내용
○ '24년도 계획 수립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위원회(전체회의) 개최 * '24년도 자체평가계획 심의·확정
○ 중간점검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 점검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
○ 계획 수정(필요시)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위원회 보고
○ 평가위원 정책현장 방문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정책 추진현황 파악(분과위)
○ 서면 평가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위원회 개최 * 추진계획의 충실성, 성과지표의 난이도 등 평가
○ 대면 평가 및 평가결과 최종 확정	'25.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위원회 개최 * 자체평가, 분과별 과제 등급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평가협의회 개최 * 분과별 평가결과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회의 개최 * 평가결과 심의·확정
○ '24년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국무조정실 주관)	'25.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

2. 평가결과 환류체계

① 기본원칙

- 평가 결과는 정책, 예산, 조직, 인사 등에 반영하는 등 성과관리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 제고
-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매우 우수과제는 적극 홍보, 미흡·부진과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성과 향상 도모

②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최종 평가결과를 예산, 조직담당 부서 등에 통보하여 관련 사업 예산 편성, 조직 재설계 등에 활용
- (주요정책 부문) 평가결과를 다음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반영, 정책의 연속성 및 정책성과 향상 도모
 - 상반기 점검 및 자체점검을 통해 지연과제, 효과 미흡과제를 발굴하여 점검회의 등을 통해 추진 현황을 지속 점검·관리
 - 최종평가 결과 미흡·부진과제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다음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관리
 - 재정사업평가 결과(미흡사업 성과관리 개선대책 등)를 주요정책 추진 상황 점검에 반영하여 자체평가 부문 간 연계 강화
- (조직 부문) 주요정책 평가 결과 및 조직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조직개편, 인력증원 및 중기인력운영계획 등에 반영
 -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정책 및 대국민 현장서비스 강화 등 집행부문에 대해서는 조직 및 인력 우선확충 추진
 - 특히, 조직 및 인력 부족에 따른 미흡·부진과제에 대해서는 조직 차원의 분석을 통해 인력증원 소요제기 등 추진체계 강화

- (행정관리역량 부문)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조직·인사·정보화) 세부 지표에 대한 운영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관리 역량 제고
 - 특히, 자체평가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 계획 수립 및 성과 지속 점검을 통해 정책 환류를 도모하고,
 - 타기관의 행정관리역량 자체평가 운영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체평가 운영의 충실성 제고

③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활용 계획

- 최종 평가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성과평가 시스템 등을 통해 인사, 개인 성과급 등에 반영
- (인사 부문) 승진·보직·직위공모 등 각종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
 - 미흡·부진과제에 대해서는 업무량 대비 인력 배분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전보·승진 등 인사 운영에 반영
 - 성과평가 우수자 점수를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심사 참고자료로 제공하여 성과달성도를 인사고과에 활용
- (포상) 주요정책과제의 우수 부서에 장관 표창, 포상금 및 부서 성과평가 가점 등을 지급(연말 표창)
 - * 장관 표창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 우수부서 표창 활용
- (성과급) 성과평가 시스템을 통해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된 모든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개인 성과급 지급에 반영
 - 자체평가 결과를 부서단위의 평가항목에 반영(과제평가 40%)하고, 부서단위 평가결과를 개인평가에 반영*

* 부서장(과.팀장급 이상)은 부서평가를 100%, 부서원(복수직 4급 이하)은 60%

4 평가결과 공유·확산 방안

- 각 부서별 관리과제 중 매우 우수·부진과제를 중심으로 평가결과를 부내에 공유
 - 평가결과 매우 우수 관리과제와 지표의 난이도, 정책효과 등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관리과제를 모범사례로 전파
 - 미흡과제는 핵심 미흡원인의 요인을 분석하여 사례로 전파

1. 총괄현황

(단위: 개)

구 분		성과지표						
		소계	정량화		지표성격			
			정량	정성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전략목표	4	5	5	0	0	0	2	3
성과목표	15	15	15	0	0	0	11	4
관리과제	50	94	83	11	5	2	33	54

2.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전략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8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 I.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물류강국으로 도약한다.	원양 선복량 (만TEU)	연도별 원양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	130	정량	결과	
전략목표 II.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해양·항만을 조성한다.	해양사고 인명 피해(사망·실종, 명)	해양안전심판원 통계	92	정량	결과	
전략목표 III.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행복을 키우는 해양공간을 구축한다.	극지 및 대양탐사 진척도(%)	①실제 조사 정점 수 /조사 목표 정점 수(%)	100	정량	산출	
	극지 및 대양연구 분야 논문발행 수(건)	②극지 및 대양분야 연구 논문 발행건수 집계	74	정량	산출	
전략목표 IV.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활력넘치는 어촌을 조성한다.	수산물 수출액(억불)	관세청 수출통계	45	정량	결과	

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 I.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물류강국으로 도약한다.						
1. 국적 선대 확충 및 선화주 상생을 통해 안정적인 해상 수송망을 구축한다.	①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실적(백억원)	국적 해운선사의 선박 발주, 터미널 확보 등에 대한 정책 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실적	190	정량	산출	
2.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물류서비스 고도화하고 항만경쟁력을 제고한다.	①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별 하역능력 합산(만TEU)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하역능력	2,131	정량	결과	
3.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시장을 주도한다.	① 공공선박 친환경선박 전환 실적(척)	공공선박 친환경 전환 척수	27	정량	산출	
4.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해상물류인력을 양성한다.	① 국적 해기사 양성 및 취업 연계(명)	외국인 선원 대체고용 지원 실적 및 미취업·비전공자 대상 교육양성 인원	343	정량	산출	
전략목표 II.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해양·항만을 조성한다.						
1. 연안·항만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① 신규 재개발사업 추진	항만재개발 사업 직접 공모 또는 제3자 제안 공모 공고문, 기본구상안	1	정량	산출	
2. 재해·기후위기에 안전한 연안·항만을 조성한다.	① 재해대응 안전항만 구축 추진율	(실적공정률 / 계획공정률) X 100	94	정량	산출	
3. 해상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① 해양사고 발생 건수	3년간('21 ~ '23년) 평균 해양사고 발생건수(2,892건)를 기준으로 2% 감축	2,834	정량	결과	
전략목표 III.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행복을 키우는 해양공간을 구축한다.						
1. 해양선도경제를 조성하고 해양영토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① 해양신산업 상용화 기반 구축율	(차세대 선박해양 플랜트 산업 인프라 구축율 +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노력도 + 친환경선박 보급 기반 마련율) ÷ 3 × 100	100	정량	산출	
2. 국민 행복을 위해 해양레저관광·해양문화 강국으로 도약한다.	① 국민 해양레저관광 체험률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약 4천여명)으로 해양레저관광 체험율을 측정	68.2	정량	결과	국가승인 통계를 근거로 작성
3.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경제영토 확장 및 관리역량을 강화한다.	① 해양영토 관련 학술연구 성과	'24년 지원 사업을 통해 발표한 해양 영토 관련 국제 학술논문 건수	11	정량	결과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4. 해양환경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및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이용기반을 마련한다.	① 해양수질 개선을	(WQI 1등급 정점 수) ÷ (전체 연안 해역 조사정점 수 375개) × 100%	49.6	정량	산출	
전략목표 IV.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활력넘치는 어촌을 조성한다.						
1.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	① 귀어귀촌 정책자금 수혜자 수(명)	귀어 창업·주택 자금 지원 대상 선정자 수	724	정량	산출	
2.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어업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① 수산자원 직접 조사 정점 수 목표 달성율(%)	'24년도 수산자원 직접조사 정점수/수산자원 직접조사 목표 정점수 500개] × 100%	100	정량	산출	
3. 친환경·스마트양식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생산 환경을 조성한다.	① 양식 생산량(천톤)	KMI 관측 자료 또는 통계청 통계	2,320	정량	산출	
4. 신선수산물 유통·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① 수산식품산업 인프라 구축률(%)	(연도별 예산 누적 투자액(국비)/총사업비) × 100	40.7	정량	산출	

4.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 I.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물류강국으로 도약한다.							
1. 국적 선대 확충 및 선화주 상생을 통해 안정적인 해상 수송망을 구축한다.							
	①해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입물류 활성화	① 정책금융기관 금융지원을 통한 해운·항만자산 확보 실적(건) (가중치 50%)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정책금융(투자, 보증 등) 지원을 통한 국내기업의 해운·항만 관련 자산(선박, 터미널 등) 확보 실적	37	정량	결과	
		② 수출입 물류지원 추진율(%) (가중치 50%)	{{(중소화주 전용선적공간 75TEU 이상 제공(항차별)×0.5)+ (장기운송 60TEU 이상 제공(항차별)×0.5)} × 100	100	정량	결과	
2.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물류서비스 고도화하고 항만경쟁력을 제고한다.							
	①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규제개선	① 자율운항시스템 을 탑재한 선박 실증운항	자율운항 선박 건조 완료(50%), 국제항로 시범운항 1회 (50%) * 측정방법 : (실적건수/목표건수)× 100%	100	정량	결과	
	②물류거점 항만개발과 스마트항만 구축으로 항만경쟁력 강화	① 신항만 인프라 확충률(%) (가중치 50%)	신항만인프라 확충률(%) = 신항만인프라 투자(누적) / 신항만기본계획상 필요 투자(16.1조원)('19~'40) × 100	100	정량	과정	
		② 스마트항만 도입 추진율(%) (가중치 50%)	④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자동하역장비 사업착수율 = 착수 건수 / 3건 장비사업× 100 (가중치 30%) ⑤부산항 진해신항 외곽시설 착공률 = 착공 건수 / 4개 사업* × 100 *남방파제, 투기장호안 1·2공구, 방파호안 2공구 (우선시공분) (가중치 20%)	100	정량	과정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③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항만 실현	① 중장기 항만정책 수립 및 국제협력 (가중치 50%)	항만시설 추가소요 판단기준(적정하역 능력) 개정 자체안 확정 (20%), 규제개선 등 수요자 관점의 항만법 하위법령 개정(20%, 항만 분야 국제적 이슈 대응을 위한 동북아 협력 프로젝트(10%)	100	정성	결과	
		② 탄소중립 항만 구축 기본계획 수립 (가중치 50%)	항만의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발표(20%), 친환경에너지 도입 등 주요항만별 평면배치계획 마련(30%)	100	정성	결과	
	④항만 물류서비스 경쟁력 강화	① 항만물류 활성화 추진율(%) (가중치 60%)	㉠ 주요 항만 컨물동량(TEU) (1~11월) 목표 대비 달성률 (70%) * '24년 목표 : 2,632TEU ㉡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만족도 조사 결과 목표 대비 달성률 (30%) * '24년 목표 : 70점	100	정량	결과	
		② 해외물류인프라 지원 만족도(점) (가중치 40%)	기업대상 설문조사 시 100점 만점의 70점 기준	70	정성	결과	
	⑤민간참여를 통한 항만 고부가가치 창출 및 해외협력 기반 마련	① 항만 민자사업 추진율(%) (공통) (가중치 50%)	(신규 민자사업 추진 실적건수/목표건수)× 100%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1건), 민자부두 착공(1건)	100	정량	결과	
		② 해외항만개발 협력 지원체계 구축추진율(%) (공통) (가중치 50%)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추진실적건수/목표건수)× 100% *해외항만개발 타당성조사 착수(4건)	100	정량	결과	
	⑥항만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항만운영의 안정성 확보	① 친환경 선박연료 빙커링 실증 실적 달성률(%) (가중치 60%)	친환경 선박연료 빙커링 실증 건수(3척), 친환경 선박연료 빙커링 관련 제도 개선 건수(2건)	100	정량	결과	
		② 선박 저속운항 참여율(%) (가중치 40%)	대상 항만 및 선종에 해당하는 입항선박 중 저속운항 참여선박 (저속운항 참여척수/입항척수)*100%	73.5	정량	결과	
	⑦선진형 항만안전 및 항만보안시스템 구축	① 민간의 자율적 항만안전관리 능력 강화 (가중치 50%)	항만사업장 재해예방시설 지원 사업 실집행률(60%)+항만 안전 위해요인 시정조치 이행률(40%)	92	정량	산출	
		② 항만보안사고 저감율(보안사고 건수, 하향) (가중치 50%)	[1 - ((실적치- 목표치) / 목표치)] * 100 * 목표치 : 7.35건	100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3.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시장을 주도한다.							
	①디지털 해상교통정보 (바다내비) 제공 및 신산업 육성	①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신산업 육성 및 지원(%) (가중치 60%)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전년대비(MOU체결 2건) 국내기업-해외기업간 수출계약·MOU 체결 지원 비율	200	정량	결과	
		②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 비스 이용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가중치 40%)	전년대비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 순증률(10%), 통신강도 강화 개소(5건)	100	정량	산출	
	②차세대 해양 위치정보(PNT) 및 디지털 위치정보 제공	① 고정밀 위치정확도 제공 달성도(%) (가중치 70%)	고정밀 위치 정확도(<5cm) 전국망 달성도= [목표정확도(5cm)/측정값(cm)]*100	100	정량	결과	
		② 스마트 항로표지 실효율 증진 및 해로드 앱 활성화(%) (가중치 30%)	이용자 만족도(87.0점 이상) 달성도= [만족도 점수/ 목표치(87.0점)*100%]	100	정성	결과	
	③그린 쉬핑(Green Shipping) 생태계 기반 확충	① 친환경선박 전환척수(%) (가중치 50%)	공공·민간선박 친환경 전환 척수(44척)(100%)	100	정량	결과	
		②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계획 수립 추진율(%) (가중치 50%)	이해관계자 컨소시엄 구성, 공동연구를 통한 이행계획 수립, GHG-SMART 프로그램 개최, 국제행사 대외 발표	100	정성	산출	
4.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해상물류인력을 양성한다.							
	①양질의 국적선원 공급 및 두터운 선원복지 제공	① 임금체불 예방 특별근로감독 임금체불 해소율(%) (가중치 50%)	특별근로감독기간 임금체불 해소 사업장 / 특별근로감독기간 임금체불사업장	60.5	정량	결과	
		② 선원복지수혜자 만족도(점) (가중치 50%)	선원복지 수혜자 중 5%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면담 또는 전화 조사방식으로 리커트 5점 척도의 100점 만점 기준 만족도 측정	82.5	정성	결과	
전략목표 Ⅱ.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해양·항만을 조성한다.							
1. 연안·항만 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①항만 및 연안공간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조성	① 항만 재개발 추진율(%) (가중치 50%)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항만재개발 제도개선 방안 마련	100	정성	산출	
		② 연안침식 관리강화 추진율(%) (가중치 50%)	연안정비사업 추진율 : (연안정비사업 집행금액 / 연안정비사업 총사업비) × 100 / 22%	100	정량	투입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부산항 북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①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추진율(%) (가중치 60%)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방안 마련(투자유치 전략 수립, 실시협약 변경)	100	정성	산출	
		② 북항 2단계 재개발 추진율(%) (가중치 40%)	자성대 부두 기능 이전 및 철거공사 착수(사업수익성 제고 방안 마련, 사업계획 수립용역 재착수)	100	정성	산출	
2. 재해·기후위기에 안전한 연안·항만을 조성한다.							
	①기후변화 대비 등을 위한 안전항만 구축 추진	① 재해안전항만 사 업 집행률(%) (가중치 50%)	재해안전항만 사업 집행률(집행액/ '24년 예산 현액, 50%)	94	정량	투입	
		②항만건설현장 안 전점검 지적 조 치율(%) (가중치 50%)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지적 조치건수/지적건수)	100	정량	결과	
3. 해상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①국가 해양수산 재난관리체계 선진화	①국가 해양수산 재난관리체계 선진화 추진율(%) (가중치 70%)	실적/재난 예방·대비 추진과제(43) X 100%	100	정량	산출	
		②해양수산분야 중대재해 예방활동 이행율(%) (가중치 30%)	이행건수/추진과제건수(46) X100%	100	정량	산출	
	②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범정부 해사안전대책 시행	① 해양사고 피해 저감실적(지수) (가중치 50%)	(당해연도(1~11월) 사망·실종인원수 ÷ 선박등록척수 x 1,000) + (당해연도(1~11월) 주요사고 발생척수 ÷ 선박등록척수 x 100)	3.58	정량	결과	
		② 취약선박 집중관리 (케어쉽프로그램) 추진실적(척) (가중치 50%)	나홀로조업어선, 안전취약선박 등 고위험선박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 실적	650	정량	결과	
	③연근해어선 안전관리 체계화	① 어선 1만 척당 주요어선사고(건)	(당해연도 주요 어선사고 건수 / 국내 등록 연근해어선 수) x10,000	118	정량	결과	
전략목표 Ⅲ.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행복을 키우는 해양공간을 구축한다.							
1. 해양 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여 해양선도 경제를 조성한다.							
	①해양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	①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가중치 50%)	전기추진선 실증(6회)+해상테스트베드 구축율(실증선박 조기건조)	100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해양신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한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②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발전기반구축율 (가중치 50%)	해외진출타당성조사지원 (2개기업), 한·인니 수출상담회, 시장설명회(1회)	100	정량	산출	
		① 해양수산생명 자원주권 강화율(%) (가중치 50%)	유용자원 확보 및 분석 30종, 자원 등급화 80종	100	정량	산출	
		②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노력도(%) (가중치 50%)	해양바이오뱅크 분양 건수 350건	100	정량	산출	
	③해양산업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① 해양수산 분야 창업·투자지원 업체 수(개소) (가중치 70%) (공통)	지원업체 수	364	정량	산출	
		② 투자유치액 (억원) (가중치 30%) (공통)	지원업체의 투자 유치금액 합계	600	정량	산출	

2. 국민 행복을 위해 해양레저관광·해양문화 강국으로 도약한다.

① 권역별 해양관광명소 조성 및 해양관광 콘텐츠 확산	① 해양레저관광 수요창출 노력도(%) (가중치 40%)	① 크루즈선 입항 향차 달성률(50%) : '24년 크루즈선 입항 향차 /172 * 100 ② 전시회, 대회 등 해양관광 중대 행사 추진실적(50%) * 연 2회 장·차관 참석 행사 개최 추진 실적 ** 장·차관 참석 행사 실적/2 * 100	100	정량	산출	
	②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 추진율(%) (가중치 60%)	총사업비 누계 집행실적: '16~(당해년도-1년) 집행금액 합계 + 당해연도 집행실적 *총사업비 대상사업('16~): 17개소	100	정량	산출	
	② 해양교육문화 콘텐츠 확충 및 향유기회 확대	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제도 강화율(%) (가중치 50%) ② 신규 추진과제 이행 여부 : 고교 해양교과 교과서 교육청인정, 지역해양교육센터 시범운영, K-오션MOOC 신규 콘텐츠 12개(가중치 40%) ③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체험 참가자수(만명) : 8.8만명 이상 (가중치 30%) ④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체험 참여자 만족도(%) : 90.5% 이상(가중치 30%)	100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③ 해양문화시설 인프라구축 및 운영 효율화(%) (가중치 50%)	㉠ 해양문화시설 건립사업 예산대비 공정률(가중치 30%)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목표 공정률 : 100%,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목표 공정률 : 75% ㉡ 해양문화시설 관람객수 : 80만명(가중치 25%) ㉢ 해양문화시설 관람객 만족도(%) : 90.5% (가중치 25%)	100	정량	결과	
3.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경제영토 확장 및 관리역량을 강화한다.							
	①독도 등 섬 관리강화 및 대국민 인식제고	① 무인도서 관리 강화(%) (가중치 50%)	무인도서 관련 제도개선 총 2건(회) 달성, 30개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	100	정량	산출	
		② 독도 연구성과 활용 확대(건) (가중치 50%)	해양수산부를 제외한 정부부처 및 지자체, 학교, 공공기관, 민간기업, NGO,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한 어촌계 및 기타 법령에 규정된 민간 조직에 연구성과를 제공한 건수	9	정량	결과	
	②해양영토의 과학적 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	① 동해 해양과학기지 구축률(%) (가중치 50%)	동해 해양과학 기지 구축 예산 실행률	93%	정량	투입	
		②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성과 만족도(점) (가중치 50%)	참가자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 측정 (5점 척도 기준)	77점	정성	결과	
	③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분야 통상협상 대응	①규범 협상 대응 (가중치 50%)	주요 쟁점에 대한 제안서 제출 또는 발언 건수(1건 이상) /WTO 및 IPEF 회의 참석건수	100	정량	산출	
		②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지원 (가중치 50%)	(타결 FTA 상대국 개방률)/(목표 개방률) x 50(점) + (대일 김 수출 계약물량)/(목표 계약물량) x 50(점)	100	정량	결과	
	④해양수산 ODA 확대 및 양자협력 증진	① 해양수산 ODA 사업 예산 (가중치 50%)	해양수산 ODA 신규+계속 사업 예산 합계	500	정량	산출	
		② 외국 정부와의 해양수산 분야 협의회 횡수 (가중치: 50%)	당해연도 참석/ 개최한 정부간 협의회 횡수 합계 * 단순면담이나 일반국제회의는 제외	3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⑥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상력 강화	① 국제수산물기구 제안서 제출비율(%) (가중치 70%)	전체 제안서 제출건수/11 × 100 * 우리부 단독/주도 제안은 1건, 타국 주도 공동제안 참여는 0.5건으로 산정	145	정량	산출	
		② 국제협상 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실무 참여율(%) (가중치 30%)	④ 협상 전문가 대상 필수교육 실시(50%) * 교육이수 인원 / 전체인원 × 100 ⑤ 협상 전문가의 주요 국제수산물 기구 워킹그룹 또는 전문가그룹 등 실무그룹 논의 참여(50%) * 협상 전문가가 실무그룹 논의에 참여한 주요 국제수산물기구 회의 / 11개 주요 국제수산물기구 회의 × 100	100	정량	산출	
4. 해양환경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및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이용기반을 마련한다.							
	①해양쓰레기 전(全)주기 대응 및 보전·개발이 조화로운 해양 관리 강화	① 해양쓰레기 수거량 (가중치 70%)	최근 3년('21~'23년) 침적쓰레기 및 청항선 부유쓰레기 수거물량의 평균	9,377	정량	결과	
		② 해양이용 영향평가법 하위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 제·개정 건수 (가중치 30%)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하위법령 및 해양 환경성 검토 제도 운영에 필요한 필수 지침 개수	8	정량	결과	
	②지속가능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해양환경안전망 구축	① 해양오염감시망 강화 (가중치 70%)	④ 해양방사성물질 결과 정보공개 건수 8(60%) ⑤ 해양오염 위기 관리 대응 훈련 건수(40%)	④858 ⑤5	정량	산출	
		②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구축 (가중치 30%)	④ 특별관리해역 '중음' 수질 달성률(60%) :(특별관리해역 WQI 1·2등급[중음 이상] 정점 수) ÷ (특별관리해역 내 최근 3년간 WQI 1·2등급 정점 수, 96개) × 100% ⑤ 해양환경교육 전·후 인식변화율(40%) :(사후인식점수-사전인식 점수) ÷ (사전인식 점수) × 100%	④100 ⑤9.2	정량	결과	
	③개발과 보전의 상생 및 공존을 위한 해양공간관리 체계화	① 해양공간의 공공성 강화 (가중치 50%)	공유수면 이용실태조사 (전라·남해권) 조사완료 개소수/27개소 × 100%	100	정량	결과	
		② 해양수산물 빅데이터플랫폼 데이터	해양수산물 빅데이터플랫폼 데이터 통합창구를 통한 정보 제공건수	50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제공창구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 실적 (가중치 50%)					
	④해양자산 관리 강화 및 해양생태계 보전	① 해양생물 멸종위기 위험도 평가 달성률(%) (가중치 50%)	연차별 평가 종수(누계) / 평가대상 종 수(5,000종)	4	정량	산출	
		② 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수 (개소) (가중치 50%)	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수	38	정량	결과	
	⑤해양 기후변화 대응 강화	①(국내)민간대상 온실가스 감축 사업 확대 (가중치 50%)	민간 대상 온실가스 감축 지원 건수	10	정량	산출	
		②(국제) 해양부문 국제감축사업 발굴 (가중치 50%)	예비타당성조사 건수	2	정량	산출	
전략목표 IV.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활력넘치는 어촌을 조성한다.							
1.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							
	①어촌·어항 개발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	① 관광소득 5억 원 이상 어촌체험휴양마을 수(개소) (가중치 50%)	마을별 체험마을 관광소득(체험, 숙박, 음식, 특산물 판매 등) 5억원 이상 마을 수	12	정량	결과	
		② 국가어항 개발사업 추진률(%) (가중치 50%)	국가어항 누계 투자실적('22~) ÷ 국가어항 총사업비(25,116억원) × 100(%)	32.4	정량	투입	
	②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기반 확보	① 어촌활력지역 변화율(%) (가중치 : 60%) (어촌뉴딜 대상지)	사업대상지의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의 부분 값을 정규분포화하여 등급을 구분하고, 4.5등급이 2개 이상 해당되는 어촌 비율 측정	42	정량	결과	
		②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착공개소 (개소) (가중치 : 40%)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착공 개소 수	10	정량	산출	
	③어업인의 생활·복지 지원 강화 및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	① 3톤 미만 어선원 보험 가입률(%) (가중치 50%)	3톤 미만 어선의 어선원재해보험 가입자 / 3톤 미만 어선의 어선원재해보험 가입대상	11.8	정량	결과	
		② 여성어업인 검진인원 증가 달성률(%) (가중치 50%)	{('24검진인원-'23검진인원) / 23검진인원/연평균증가율 (50%)} *100	100	정량	결과	
	④수산업·어촌 공익증진과 연계한 어가 소득 기반 강화	① 수산 공익직접지불금 의무 준수율(%) (가중치 100%)	준수한 의무 건수 / 직불금 수령자의 준수사항(의무) 건수*100	85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⑤연안해운 공공성 및 안전관리 강화	① 연안여객선 수송실적(천명) (가중치40%)	연안여객선 이용객수(1~11월)	12,440	정량	결과	
		② 연안여객선 안전 관리 강화율(%) (가중치60%)	④여객선 안전관리 개선도: 개선이행건수/ 특별점검지적건수)×0.5 ⑥여객선 안전제고방안 마련: 방안 마련 및 지침 개정×0.5	100	정량	결과	
2.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어업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①수산자원 조성 및 자원관리체계 고도화	① 연안생태계 건강성 향상 실적	당해연도 건강성 향상률(%) / 전년도 건강성 향상률(%) * (건강성향상률) 해역별 종다양성 지수의 평균 * (생물종다양성 산식) $-\sum_{i=1}^S P_i \ln P_i$ Pi = i번째 종의 개체수 / 총 개체수	7.19	정량	결과	
	②어선어업 구조개선 추진	①근해어선 감척 이행률(%)	(근해어선 실제 감척수 /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 상 감척 목표)×100	85	정량	결과	
	③어업 안전 보장 및 조업질서 유지 역량 강화	① 국내 IUU어업 예방·근절을 위한 육·해상 검색률(%) (가중치 50%)	(고위험 어선 및 양륙항 육·해상 검색건수 ÷ 전체 연근해 어선 척수)×100	12.0	정량	산출	
		② 중국어선 불법 대응건수(건) (가중치 50%)	우리수역 내 입어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직접 승선조사 건수	1,250	정량	투입	
	④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①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 대상 수(개) (가중치 50%)	당해연도 사업 참여단체 수 측정	2	정량	결과	
		② 어선청년임대 사업 청년어업인 지원 건 수(건) (가중치 50%)	청년어업인 지원 건 수 측정	25	정량	결과	
	⑤지속가능한 국제 수산물 공급 여건 조성	① IUU어업 예방을 위한 원양어선 점검 실적(건) (가중치 60%)	국내 입항 원양어선 대상 현장점검(검색) 건수 + 국외 조업 중인 국적 원양어선 대상 원격 점검(검색) 건수	90	정량	산출	
		② 원양 정책 서비스 만족도(점) (가중치 40%)	원양 정책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6.5	정성	결과	
3. 친환경·스마트양식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생산 환경을 조성한다.							
	①첨단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① 친환경 수산물 인증건수(건) (가중치 60%)	유기수산물 인증건수+무항생제 수산물 인증건수+활성처리제비사용 인증	160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고부가 양식품목 전략적 개발 육성 및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② 친환경·첨단양식 기술이전 교육자(수) (가중치 40%)	친환경양식 창업지원(양식기술이전교육) 건수 집계	222	정량	산출	
		① 양식 전략품목 생산금액(백억원) (가중치 60%)	전략품목(핵심품목) 양식생산금액	230	정량	결과	
		② 배합사료 직불제 참여율(%) (가중치 40%)	('24년도 배합사료 직불제 참여여가수/ 지원대상 여가수)×100	15.6	정량	결과	
	③지속가능한 양식산업 경쟁력 확충	① 양식업의 지속가능성 증대 (가중치: 70%)	임대형 양식장 참여인력(10명), 양식장통합관리 정보시스템구축	100	정량	결과	
		② 지속가능한 양식수산물 생산체계 마련 (가중치: 30%)	의무자조금 1개 단체 전환 목표 달성.; 복구계획 확정시기 단축(20 → 15일)	100	정량	결과	
	④깨끗하고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기반 조성	① 사업 전후 저서동물지수 개선도(%) (가중치 : 50%)	재생 전후 저서동물지수 개선도	10	정량	결과	
		②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기준 지도·점검률(%) (가중치 : 50%)	전국 지자체별 지도·점검 수행완료 비의 평균/ 0.01	50.6	정량	산출	

4. 신선수산물 유통·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①수산물 수급·물가위기 관리체계 구축 및 안심 유통환경 조성	① 할인혜택을 받은 소비자수 (쿠폰발행건수) (천명)	할인혜택을 받은 소비자수 * 행사별 쿠폰발행 실적	11,000	정량	결과	
	②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① 수출전략산업 육성 추진율(%) (가중치 70%)(공통)	김 수출 8억불 달성, 김 수출 국가수 130개국 달성	100	정량	결과	
		② 수산물 수출 다변화 및 수출 확대 추진율(%) (가중치 30%) (공통)	수출 국가 수 155개국 달성(100%)	100	정량	결과	
	③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정책 지원 강화	① 수산분야 규제혁신과제 발굴(건) (가중치 40%)	이해관계자 및 정책고객과의 소통강화 간담회, 설명회 등에서 발굴된 규제혁신과제 건수	48	정량	산출	
		② 수산분야 금융 지원액(억원) (가중치 60%)	수산분야 금융 (이차보전 + 융자) 지원액(억원)	46,613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전략목표 I.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물류강국으로 도약한다.		
1. 국적 선대 확충 및 선화주 상생을 통해 안정적인 해상 수송망을 구축한다.		
	①[민생]해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입물류 활성화	국정 40-1,2
2.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물류서비스 고도화하고 항만경쟁력을 제고한다.		
	①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규제개선	국정 40-4
	②[민생]물류거점 항만개발과 스마트항만 구축으로 항만경쟁력 강화	국정 40-3
	③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항만 실현	국정 40-3
	④[민생]항만 물류서비스 경쟁력 강화	국정 40-2
	⑤[민생]민간참여를 통한 항만 고부가가치 창출 및 해외협력 기반 마련	국정 40-3
	⑥항만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항만운영의 안정성 확보	국정 40-4
	⑦선진형 항만안전 및 항만보안시스템 구축	
3.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시장을 주도한다.		
	①디지털 해상교통정보(바다내비) 제공 및 신산업 육성	국정 40-4
	②차세대 해양 위치정보(PNT) 및 디지털 위치정보 제공	국정 40-4
	③그린 SHIPPING(Green Shipping) 생태계 기반 확충	국정 40-4
4.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해상물류인력을 양성한다.		
	①양질의 국적선원 공급 및 두터운 선원복지 제공	국정 40-5
전략목표 II.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해양·항만을 조성한다.		
1. 연안·항만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①[민생]항만 및 연안공간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조성	국정 41-5
	②[민생]부산항 북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정 102-3
2. 재해·기후위기에 안전한 연안·항만을 조성한다.		
	①기후변화 대비 등을 위한 안전항만 구축 추진	국정 41-5
3. 해상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①국가 해양수산 재난관리체계 선진화	업무 3-2
	②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범정부 해사안전대책 시행	국정 40-4
	③연근해어선 안전관리 체계화	국정 41-7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전략목표 Ⅲ.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행복을 키우는 해양공간을 구축한다.		
1. 해양 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여 해양선도경제를 조성한다.		
	①해양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	국정 41-1, 73-6
	②해양신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한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국정 73-6
	③해양산업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국정 73-6
2. 국민 행복을 위해 해양레저관광·해양문화 강국으로 도약한다.		
	①권역별 해양관광명소 조성 및 해양관광 콘텐츠 확산	국정 73-7
	②해양교육문화 콘텐츠 확충 및 향유기회 확대	업무 6-3
3.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경제영토 확장 및 관리역량을 강화한다.		
	①독도 등 섬 관리강화 및 대국민 인식제고	국정 41-1
	②해양영토의 과학적 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	국정 41-1
	③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분야 통상협상 대응	
	④해양수산 ODA 확대 및 양자협력 증진	업무 7-1
	⑤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상력 강화	
4. 해양환경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및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이용기반을 마련한다.		
	①해양쓰레기 전(全)주기 대응 및 보전개발이 조화로운 해양 관리 강화	국정 41-6,7
	②지속가능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해양환경안전망 구축	국정 41-6, 7, 73-3
	③개발과 보전의 상생 및 공존을 위한 해양공간관리 체계화	국정 41-6
	④해양자산 관리 강화 및 해양생태계 보전	국정 41-7
	⑤해양 기후변화 대응 강화	국정 41-7
전략목표 IV.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활력넘치는 어촌을 조성한다.		
1.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		
	①어촌·어항 개발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	국정 73-4
	②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기반 확보	국정 73-4
	③어업인의 생활·복지 지원 강화 및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	국정 73-4,5
	④수산업·어촌 공익증진과 연계한 어가 소득 기반 강화	국정 73-5
	⑤[민생]연안해운 공공성 및 안전관리 강화	국정 41-4
2.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어업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①수산자원조성 및 자원관리체계 고도화	국정 41-7, 73-1
	②어선어업 구조개선 추진	국정 41-7
	③[민생]어업 안전 보장 및 조업질서 유지 역량강화	국정 41-1, 73-1
	④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국정 41-7
	⑤지속가능한 국제 수산물 공급 여건 조성	업무 7-1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3. 친환경·스마트양식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생산 환경을 조성한다.		
	①첨단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국정 73-1,5
	②고부가 양식품목 전략적 개발 육성 및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국정 73-1,5
	③지속가능한 양식산업 경쟁력 확충	국정 73-4
	④깨끗하고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기반 조성	국정 41-7
4. 신선수산물 유통·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①수산물 수급·물가위기 관리체계 구축 및 안심 유통환경 조성	국정 73-3
	②[민생]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국정 73-2
	③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정책 지원 강화	국정과제 73-5,6